기본연구 2006-2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Ⅱ)

2006. 12

남정호 · 장원근 · 신철오 · 최지연 · 육근형
최희정 · 이구성 · 이지선 · 이원갑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내역

◈ 연구책임자
- 남 정 호

◈ 연 구 진
- 장원근, 신철오, 최지연, 육근형
최희정, 이구성, 이지선, 이원갑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강 대 석(부경대학교 교수)
◈ 김 선 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변 병 설(인하대학교 교수)
◈ 서 병 문(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 이 정 철(숭실대학교 교수)
◈ 정 영 훈(현대아산 변호사)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연안국가로, 옛날부터 바다는 민족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삼면의 바다가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색깔을 자랑하는 동해, 섬과 바다의 절묘하게 어울려 절경을 이루는 남해, 세계적인 갯벌을 안고 있는 서해는 우리의 자랑거리이자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름다운 해양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은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개발사업으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오히려 연안환경과 해양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노랑부리 백로, 저어새, 점박이 물범 등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들에게는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의 정주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수산자원도 줄어들어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로 시각을 넓혀 보면, 이 지역은 개성~김포~인천시로 이어지는 경제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벨트는 남한과 북한에게 사회경제 발전의 기회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백령도~연평도~강화도・한강하구를 연결하는 생태벨트라는 씨줄과, 경제벨트라는 날줄이 엮여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주제인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은 지역의 사회경제, 정치군사, 생태환경 특성과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제안한 남북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입니다. 2005년 6월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생태계 조사, 공동어로 실무회담, 골재자원 공동이용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고, 새로운 이용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육상의 비무장 지대(DMZ)와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해양평화공원 사업은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협력모델인 '해양평화공원'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남북회담에서는 공간적으로는 육상을 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고, 경제분야를 중심의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동향과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경제와 환경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 5개년 사업으로 구성된 이 연구의 제1차년도(2005년) 연구에서는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이용개발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운영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양평화공원 지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6년에 남한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차년도인 2006년에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역사, 문화를 조사하였고, 자연환경 및 이용개발 실태를 보완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을 백령권역, 연평권역, 강화·한강하구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문헌조사와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터를 잡아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과 서해연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주민의 모습을 DVD 영상으로 담아낸 것도 큰 성과입니다.

2007년부터는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대안을 남북회담에서 의제화하여 북한과 실질적인 논의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남한의 정부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남정호 부연구위원, 장원근 책임연구원, 신철오 책임연구원, 최지연 책임연구원, 육근형 연구원, 최희정 연구원, 이구성 연구원,

이지선 연구원, 이원갑 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베를린 자유대학 Mark Suh 교수, 부경대학교 강대석 교수, 숭실대학교 이정철 교수,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국토연구원의 김선희 연구위원, (주)현대아산의 정영훈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해해양평화공원 추진 국제자문단에 참여하여 정책적・기술적 자문을 해주셨던 IUCN Mr. Treveor Sandwith, Mr. Peter Shadie, NOWPAP Dr. Jeungsook Park, UNESCO Mr. Salvatore Arico, YSLME Mr. Yihang Jiang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正 煥

목 차

ABSTACT ——— i

요 약 ——— v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해양평화공원의 개요 및 추진 필요성 ····· 5
   1)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 5
   2) 해양평화공원 지정요건 및 서해연안 추진 필요성 / 6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방법 ····· 10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10
   2) 연구의 지리적 범위 / 12
   3) 연구의 내용적 범위 / 14
   4) 연구의 특징 및 수행 방법 / 18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21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 21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 22
   2)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29
   3) 역사·문화 현황 / 35

2.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48
1) 백령·대청권역 / 49
2) 연평권역 / 68
3) 강화·한강 하구 권역 / 79

제3장 남북한 교류협력 및 국제사회 동향 ——— 96

1.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 96
1) 현황 및 여건 / 97
2) 전망 / 103
2. 국제사회 동향 ····· 107
1)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현황 / 107
2) 주요 국제기구 접경보호구역 정책 / 109
3) 동북아시아 정치지형 / 110

제4장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인식 ——— 112

1. 인식분석의 목적과 범위 ····· 112
2.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 115
1) 북한 관련 일반 인식 / 115
2)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 119
3) 남북한 간 협력관리에 대한 견해 / 125
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견해 / 128
5)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 / 132
3. 설문조사 결과 종합 ····· 137
1) 전국조사 결과 / 137
2)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비교 / 138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 140

1.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 140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 141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 150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162
   1) 전략 1 : 해양정책분야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확보 / 163
   2) 전략 2 : 개발과 보전수요의 조화 메커니즘 구축 / 168
   3) 전략 3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 173
   4) 전략 4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182
   5) 전략 5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18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4

1. 결　론 ····· 194
2. 정책제언 ····· 196
   1) 경제협력 분야 / 198
   2) 환경보전 분야 / 200
   3) 긴장완화 분야 / 201

참고문헌 ——— 205

부록 A 서해연안 접경지역 문화재 분포현황 ——— 210

부록 B 강도전도(江都全圖) ——— 212

부록 C 북한의 환경정책관련기관 ——— 213

부록 D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 215

부록 E 국제자문단회의 초청편지 ——— 245

부록 F 국제자문단회의 의향서(Terms of Reference) ——— 260
부록 G 기구별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임명 관련 수신메일 ——— 267
부록 H 기구별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임명 공식편지 ——— 273
부록 I 제1차 국제자문단회의 회의자료 ——— 278
부록 J 감사편지(Thanks Letter) ——— 351

표목차

<표 1-1> 환경 및 자원관리 남북협력관리 선행연구 현황 ····· 11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 13
<표 1-3>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 15
<표 1-4> 약점・위협요소 및 기본원칙에 근거한 2006년 정책제안(안) ··· 17
<표 2-1>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갯벌 면적 ····· 23
<표 2-2> 서해연안 접경지역 조류 분포 현황 ····· 24
<표 2-3>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27
<표 2-4> 서해연안 접경지역 관련 행정구역 ····· 29
<표 2-5> 서해연안 접경지역 공업지구 현황(북한) ····· 31
<표 2-6> 개성공단 개발계획 ····· 32
<표 2-7> 서해연안 접경지역 주요 무역항(북한) ····· 33
<표 2-8> 개풍공동개발구 계획 ····· 34
<표 2-9>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화재 현황 ····· 44
<표 2-10> 백령・대청권역의 지리적 개관 ····· 50
<표 2-11> 백령도・대청도 특정해안식물을 이용한 보전가치 평가표 ···· 58
<표 2-12> 백령도・대청도 구역별 식생 보전가치 평가표 ····· 59
<표 2-13> 백령도・대청도의 보호구역 지정 현황 ····· 60
<표 2-14> 백령・대청권역의 인구 현황 ····· 62
<표 2-15> 백령・대청권역의 토지이용 현황 ····· 63
<표 2-16> 백령・대청권역의 어촌계 현황 ····· 63
<표 2-17> 백령・대청권역의 어업권 현황 ····· 64
<표 2-18> 연평권역의 지리적 개관 ····· 68
<표 2-19> 연평도 구역별 식생 보전가치 평가표 ····· 73

<표 2-20> 연평권역의 인구 현황 ····· 74
<표 2-21> 연평권역의 토지이용 현황 ····· 74
<표 2-22> 연평권역의 어촌계 현황 ····· 75
<표 2-23> 연평권역의 어업권 현황 ····· 75
<표 2-24>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지리적 개관 ····· 80
<표 2-25>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경과 ····· 86
<표 2-26> 강화·한강 하구 권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87
<표 2-27>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인구현황 ····· 89
<표 2-28>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토지이용 현황 ····· 90
<표 2-29>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어촌계 현황 ····· 91
<표 2-30> 개성공단 및 개풍공동개발구의 사업 개요 ····· 92
<표 3-1> 해양수산분야 협력 합의문 채택 및 남북장관급회담 현황 ···· 99
<표 3-2>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합의서('05. 7.25~27) ····· 101
<표 3-3> 대륙별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현황(2005년) ····· 108
<표 3-4> 국가별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면적(2005년) ····· 109
<표 4-1> 조사의 개요 ····· 113
<표 4-2> 설문대상자 응답특성 ····· 114
<표 4-3> 해양평화공원 연계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 ····· 137
<표 5-1> 국제기구 및 국가별 해양보호구역 용도구역 구분 ····· 170
<표 5-2>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소권역별 특성 ····· 171
<표 5-3> 연안 및 해양환경에 활용 중인 위성영상 보유 현황(남측) · 176
<표 5-4> 서해연안 접경지역 공동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 ····· 181
<표 5-5>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추진 현황 ····· 188
<표 5-6> NOWPAP 지역활동센터 현황 ····· 191
<표 6-1>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요 ····· 19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지리적 범위 ····· 14
<그림 2-1> 연구의 지리적 범위 ····· 21
<그림 2-2> 남한 꽃게 생산 추이(1996~2005년) ····· 26
<그림 2-3>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28
<그림 2-4> 서해5도 조업구역도 ····· 31
<그림 2-5>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화재 지역별 분포 ····· 42
<그림 2-6>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측의 3개 권역 ····· 49
<그림 2-7> 백령도 두무진 전경 ····· 53
<그림 2-8> 백령도 사곶해수욕장(좌) 및 잔촌리~남포리 방조제(우) ··· 54
<그림 2-9> 백량도 콩돌자갈(좌)과 콩돌해안 ····· 54
<그림 2-10> 대청도 옥죽포 해안사구(좌 : 전경, 우 : 방풍림 식재) ····· 55
<그림 2-11>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쉬고 있는 점박이물범(좌)과 무리(우) ·· 57
<그림 2-12> 백령도·대청도의 생태자원 분포도 ····· 61
<그림 2-13> 백령도·대청도 인근 해역의 어장도 ····· 64
<그림 2-14> 연평도 꽃게 위판 현황 ····· 72
<그림 2-15> 연평도 인근 해역의 어장도 ····· 75
<그림 2-16> 북방한계선과 북한주장 해상경계선 ····· 77
<그림 2-17> 연평도 내 방치 해양폐기물 ····· 79
<그림 2-18> 강화도 해안선 변화 ····· 83
<그림 2-19> 한강 하구 COD 변화추이(층별) ····· 85
<그림 2-20>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내용 ····· 86
<그림 2-21> 한강 하구 및 강화연안의 개발계획 현황 ····· 95
<그림 3-1> 남북한 인적 교류 추이 ····· 97

<그림 4-1>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115
<그림 4-2>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 ····· 116
<그림 4-3> 실현 가능한 남북한 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 117
<그림 4-4>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 118
<그림 4-5> 대북한 인식변화의 구체적 양상 ····· 118
<그림 4-6> 접경지역 권역 구분 ····· 119
<그림 4-7>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 120
<그림 4-8>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 ····· 120
<그림 4-9>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권역구분 ····· 121
<그림 4-10> 서해연안에서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 121
<그림 4-11>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 ····· 122
<그림 4-12>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관한 견해 ····· 123
<그림 4-13> 향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견해 ·· 124
<그림 4-14>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 군사적 충돌의 원인에 대한 견해 ····· 124
<그림 4-15> 남북협력관리의 공간적 비중 ····· 125
<그림 4-16> 해양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견해 ····· 126
<그림 4-17> 협력관리를 위해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에 대한 견해 ····· 127
<그림 4-18> 서해연안에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남북협력 ····· 127
<그림 4-19>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에 대한 견해 ····· 128
<그림 4-20> 해양평화공원 지정시 전제조건에 대한 견해 ····· 129
<그림 4-21>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주체에 관한 견해 ····· 130
<그림 4-22> 해양평화공원 지정 관련 주무부처에 대한 견해 ····· 130

<그림 4-23> 남북관계와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관계에 대한 견해 ·· 131
<그림 4-24> 해양평화공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 ····· 132
<그림 4-25> 서해안 경제벨트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견해 ····· 133
<그림 4-26> 개성공단 가동과 이에 따른 환경대책에 대한 견해 ····· 134
<그림 4-27> 접경해역의 골재채취에 따른 생태계 훼손에 대한 의견 ·· 135
<그림 4-28> 유휴·잉여 연구기자재 북한 전달사업에 대한 견해 ····· 136
<그림 5-1>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SWOT 분석 결과 ····· 143
<그림 5-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 ····· 151
<그림 5-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목표 ····· 156
<그림 5-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원칙 ····· 159
<그림 5-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163
<그림 5-6> IKONOS를 활용한 서해5도 지역 3D GIS 구현 화면 ···· 176
<그림 6-1>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에 기초한 정책제언('07～'08년) ··· 195
<그림 6-2> 연평도 북부 NLL 북측 수역 내 미력리도 및 중국 어선 ··· 203
<그림 6-3> 연평도 주변 NLL 이견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 ····· 203
<그림 6-4> 미력리도 제외 연평도 주변 NLL 이견지역 지정 ····· 204
<그림 6-5> 남북측 관할 해역에서 연접한 동일 면적을 지정 ····· 204

ABSTACT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very valuable natural resources for present and potential uses because the area has been closed off to socio-economic use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limited human access to the area has prevented th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 from being degraded by irreversible developments elsewhere in both Koreas. At the core of two military clashes in 1999 and 2002 lie the fishery resources represented by blue crabs, as well as the politico-military aspect.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Chinese fishing vessel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factors threatening the livelihoods of local residents and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area. Land-based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Song-do development project, also pose threats to the health and productivity of the ecosystem in the area.

In this regard, coastal management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area can be identified as followings:

- Relaxation of the politico-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and
- Establishment of a firm bas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Agreements on various cooperative activities in economic, political, military and cultural sectors have, however, provided a new opportunity for the two Koreas to transform their “hostile and unstable relationship” into a peaceful and constructive on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of the ROK proactively reviewed COMPAS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from mid-2004. The Commission adopted it into the draft Initiatives, recognizing that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important in this area for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PCSD reported the Initiatives to the President of ROK in June 2005. The President, Roh Moo-hyun, ordered relevant ministers to incorporate and implement the Initiatives into National Polic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in the governmental policies of the ROK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Peace Park, inter-Korean meetings held in 2005 at ministerial and working group levels have produced meaningful outcomes for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Peace Park in the area,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he two Koreas' Navigation Agreement of 2004 and the agreement on setting up a joint fishery zone in the west sea of Korea.

Despite of recently achieved outputs regard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above three major issues in the transboundary area have not yet been resolved. Especially,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deteriorat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of foreign vessels in recent years and are supposed to be adversely affected by land-based activities along the recently burgeoning economic belt from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to Gimpo City and to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lead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Han River and the Imjin River estuaries.

There are many cases in the ROK providing explicit evidence that marine environmental degradation has been caused by land-based activities such as reclamation, landfill, and coastal development, without taking marine environmental capacity and ecological values into account. The current approach focused on land-bas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lead to further degradation of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and ultimately undermine the potential for sustainable utilization of the coastal/marine-oriented services and values of the transboundary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roject aims to establish a “Marine Peace Park” based on proactive cooperation with the DRRK and support fro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itiative is expected to enable the two Koreas to achieve a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precious marin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roject is being conducted from 2005 to 2009 and is now in its second year. The purpose of the project in the second year is to suggest applicable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between the two Koreas in a sustainable manner.

The work undertaken during the first year was mainly devoted to the acquisition of basic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and a

feasibility analysis by using a SWOT framework. On the other hand, major efforts in the second year were put into the update and collation of natur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of the area, the analysis of other social and political issues regarding the “Marine Peace Park” initiative through a national survey, and the development of basic direction and strategies toward establishing the “Marine Peace Park”.

Methods applied to carry out the above work are as followings:

-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published materials, and statistics from a variety of resource suppliers, including universitie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dedicated to th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and regional seas.
- Conducting a national survey on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nd related issues between the ROK and DPRK. 700 people from 7 large cities of ROK participated in this survey.
- Formul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The first IAG meeting was held in June 2006, Seoul. Representatives from the IUCN, NOWPAP, UNSECO, and YSLME are members of IAG and they will give strategic and technical advi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Peace Park.”
- Operation of the Domestic Expert Group: Experts specialized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rom research institutions, academia, NGOs, and civic society are serving as domestic expert group members. The meeting has been held twice a year.

Incremental, iterative, integrated and non-political approaches suggested

by the Domestic Expert Group and the IAG are basic principles to push forward “Marine Peace Park” as a strategic model for achieving “Peace”, “Protection”, and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Based on the condition analysis and principles, five strategies are applicable to realizing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as follows:

- To revis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marine and coastal management sector
- To establish a coordination mechanism between coast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 To strengthen the knowledge-base for supporting decision-making processes
- To formulate an Advisory Council for promoting relevant stakeholders' participation, raising public awareness within the ROK, and
-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eek financial/technical/ political support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e strategies, this report contains policy recommendations to relevant ministries and major stakeholders, considering the recently suggested development projects and current politico-military tension. The restoration of the historical navigation channel, the development of eco-culture tourism cruises, the activation of a sea-route agreed to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4, the renovation of Haeju harbor in the DPRK, the application of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formulation of an oil-spill contingency plan were suggested.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designation of a pilot site called “peaceful waters” for Marine Peace Park and joint fishery.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해양환경, 생물자원, 생태계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여전히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이 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연안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할 경우 교류와 협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상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여건이 양호한 서해연안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2009년까지 추진할 연구에서 제2차년도인 2006년의 연구에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이용개발 현황을 종합하고, 관리여건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2005~2009년)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을 지정 ·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6년 연구사업의 목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및 남북한 협력의 추진여건에 기초하여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추진을 위한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함

2.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및 추진 필요성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은 평화정착과 생태적 가치의 보전에 충실하면서도□□낙후한 지역경제의 발전, 안보불안 해소를 통한 남북경제의 공동번영(Prosperity)'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발전 전략임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접경연안의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을 보호하고(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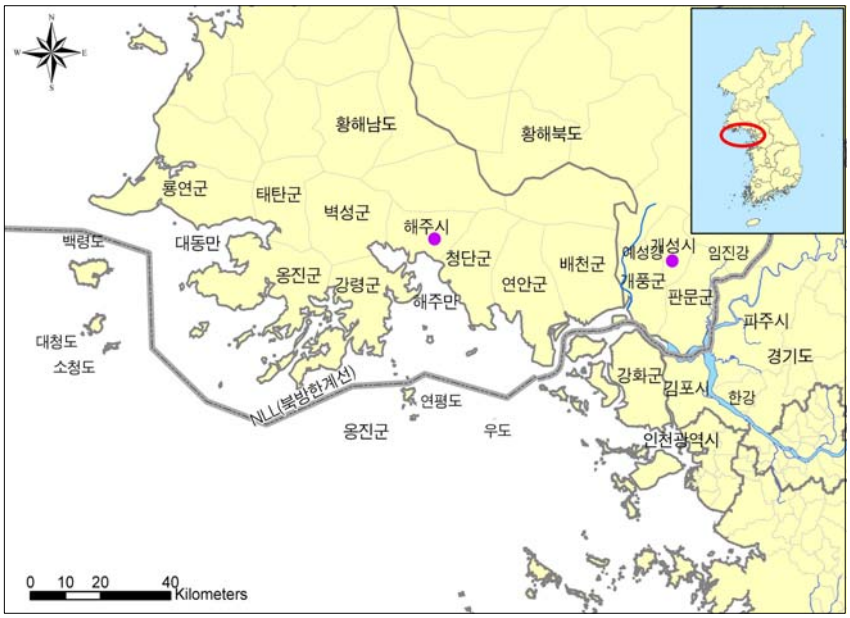
○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i) 한강 하구에서 백령동에 이르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높은 생태적 가치의 보호, ii) 개성~김포~한강 하구에 이르는 경제벨트와 생태계 보전의 조화, iii) 서해상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 iv)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협력 촉진, v) 지역발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임

3. 연구의 범위

○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해역과 이 해역과 관련한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안도서, 접경연안해역의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안 비무장지대임

– 남한은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전역,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일부, 북한의 행정구역은 황해남도 룡현군, 옹진군, 대탄군, 강령군, 벽성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개성시, 판문점임

〈요약 그림-1〉 연구의 지리적 범위



○ 이 사업은 「해양평화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연구사업」과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분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수행할 주요 연구사업은 ⅰ) 서해연안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종합, ii) 사회경제 현황 및 이용개발 계획 수집 및 분석, iii) 남북한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iv)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 종합, v)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 개발, vi)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련 이해상충 조정방안 개발 등임

– 실무분야 추진사업으로는 ⅰ)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국제자문단 구성 및 운영, ii)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남북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iii) 국제기구 및 지역해 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등임

〈요약 표-1〉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비 고
'05년	**<접경지역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기반 확보>** **[연구분야]** 접경지역 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현황 분석 **[실무분야]**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국제세미나 개최
'06년	**<주제별 협력방안 제시 및 국제자문회의 구성 · 운영>** **[연구분야]** ○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련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및 추진여건 종합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발 **[실무분야]** ○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기반확보, 국제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 홍보자료 개발, 뉴스레터 발간 - 3D-GIS, 영상홍보자료 개발 ○ 해양평화공원 지정 자문회의 구성 협약서 체결	국제기구 1st IAG
'07년	**<서해 해양평화공원 추진체계 제시>**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위상 정립 ○ 소권역별 정책방향 개발 ○ 연차별 추진체계 제시 ○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남북회담 의제로 채택	남한, 북한, 국제기구
'08년	**<서해 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개발>** ○ 해양평화공원 지정 의향서 채택 ○ 해양평화공원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지구환경금융(GEF) PDF 사업 제안서 작성	남한, 북한, 국제기구
'09년	**<서해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이행 방안 개발>** ○ 해양평화공원 협력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해양평화공원 PDF 사업 추진	남한, 북한, 국제기구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1. 자연환경 현황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한반도 서해 중부해역에 있으며, 서해의 특징인 복잡한 해안선, 갯벌, 해안사구, 큰 조차 등의 자연환경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 지역의 갯벌 면적은 총 1,445㎢로 한반도 갯벌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음. 북측의 갯벌은 남북한 전체 갯벌의 약 17.3%(958㎢), 남측의 갯벌은 8.7%(487㎢)임

○ 황해남도 연안의 영양염류는 질산염 0.020㎎/ℓ, 인산염 0.0233㎎/ℓ, 규산염 0.350㎎/ℓ으로 조사되었음. 남한해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2003년 이후 Ⅲ등급으로, 총질소는 등급외, 총인은 Ⅲ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 접경지역은 대규모 연안사구와 같은 중요한 자연환경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의 번식 및 산란지임. 또한 노랑부리백로 · 대청부채 · 물범 등 주요 생물지리학적 대표종이 서식하고 있음

○ 총 69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중 남한은 25개, 북한은 44개로 북한의 지정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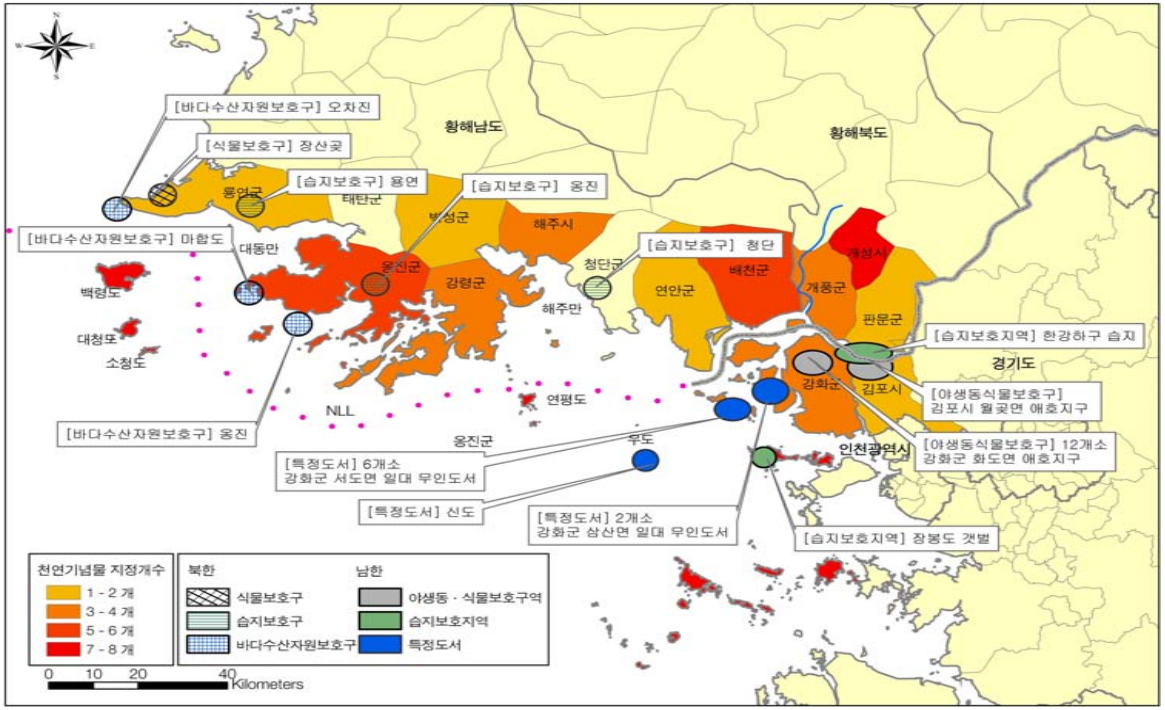
2. 사회경제 현황

○ 남한의 인구는 291,292명이고, 지난 5년간 전체지역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4.68%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의 백령면 · 대청면 · 연평면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각각 −0.87%, −0.17%로 감소하고 있음

○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 · 군별 인구 데이터는 없었고, 1993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그 당시 개성직할시)의 인구는 2,345,386명임

x

〈요약 그림-2〉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이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시가지역 면적의 증가율은 황해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산업의 경우 북한은 양식업 위주이고, 남한은 어선 · 양식어업이 주를 이루며 꽃게와 기타 수산물 조업에 치중하고 있음. 2001년에 비해 옹진군의 수산물 생산량이 약 20%, 특히 꽃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각류의 생산은 86%가 감소하였음

○ 남측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없지만 도시와 항만이 발달하였음. 북한은 해주공업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가 있으며, 해주시는 중공업 중심, 개성시는 경공업 중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개성공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개풍군 공동개발구상, 골재채취, 도시개발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상단계에 있음

○ 이 지역은 신라시대부터 군사 및 교역의 요충지였으며, 한국전쟁 전까지 연평도 풍어제, 강화도 대동굿, 곶당제 등 동일한 토속문화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특히 청동기시대에서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역사 · 문화유산이 시대별로 잘 보존되어 있음

3. 권역별 특징

○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하여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남북협력과 지역현안 해결을 추진하도록 함

○ 백령권역은 물범 등 보호생물종의 보호와 관광개발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고, 연평권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강화 · 한강 하구 권역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지역현안임

○ 백령권역과 연평권역은 상대적으로 남북한 긴장이 높은 지역이므로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장 서해연안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

○ 남북한 협력에 관한 교류와 협력은 대부분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차원의 주민 상봉, 문화교류에 집중되어 있어 해양분야 협력은 미흡한 실정임

○ 2000년대 이후 북한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은 도입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안이 남북한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서해상 평화정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

○ 해양환경관리, 생태계 보호, 연안관리 등 해양환경보전 분야 교류협력은 우선순위가 낮아 향후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해상 평화정착에 대한 기본합의는 해운합의서, 수산실무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의 해양환경보전 분야 협력도 가능할 것임

○ 특히 북한의 지역해 프로그램과 교류 및 협력이 2~3년 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은 PEMSEA 외에 YSLME(황해광역생태계관리사업)에 2007년부터 참여할 전망임

○ 「물범 · 저어새 · 노랑부리백로 등 생태계 보전」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현안이며, 「전문가 교류, 교육훈련」이 실현 가능한 해양평화공원 관련 남북 교류 · 협력 분야가 될 것임

○ NLL 관련 갈등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할 때 제약요소이지만,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경제협력이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제4장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인식

○ 2005년 제1차년도 연구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7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에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조사를 통해 살펴본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협력과 지원대상이라는 견해와 경계 및 적대대상이라는 견해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은 돌발변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26.9%로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 남북한 간 긴장강도를 조사한 결과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서해연안 지역에서는 백령 · 대청도 인근 지역과 연평도 어장 인근이 가장 긴장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중국 어선의 문제와 서해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해양분야 남북협력에 있어서는 다수가 해양자원개발, 공동어로, 수산자원 협력, 해운 · 물류와 같은 경제 분야와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관해서는 지정이 쉽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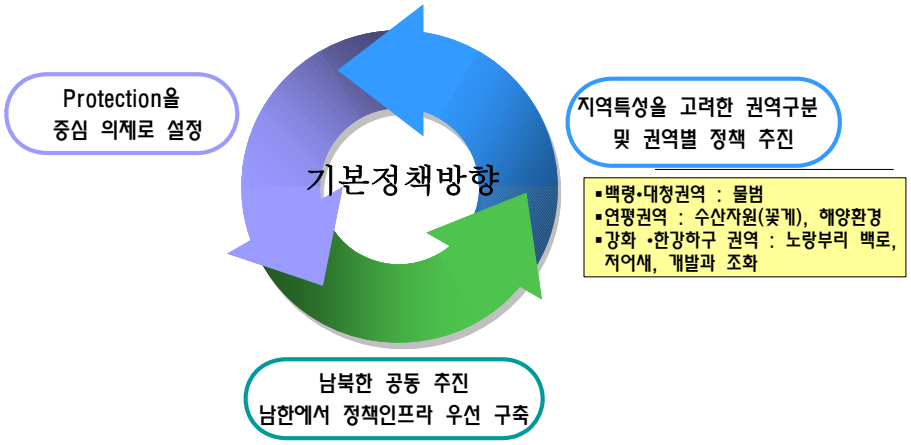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1.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은 여건분석 및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2005년 말 이후 달라진 국내외 정세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출하였음

○ 기본정책방향은 ① 「생태계 및 자원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 추진, ③ 남북한이 공동 추진주체가 되며, 남한에서 정책 인프라 우선 구축 등임

〈요약 그림-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



○ 해양평화공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① 1단계 목표-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② 2단계 목표-남북한 합의문 채택 및 구체적 추진방안 공동개발, ③ 3단계 목표- 지리적 범위 획정 및 재원확보로 설정하였음

〈요약 그림-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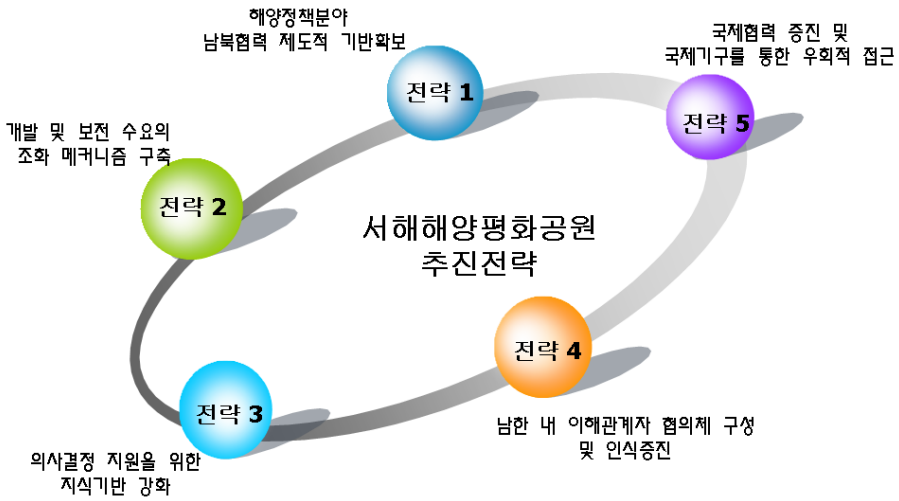
○ 해양평화공원의 단계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i)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 ii) 소규모의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의 원칙, iii) 점진적, 반복적 접근의 원칙, iv)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의 원칙, v) 지역주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의 목표(output)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수단임

○ 추진전략은 현재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약점요소를 강점요소로, 제약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어야 함. 추진여건과 기본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추진전략은 「해양정책분야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확보」, 「개발 및 보전수요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등 5개로 제시할 수 있음

〈요약 그림-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1) 전략 1 : 해양정책분야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확보

○ 해양평화공원 추진구상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접경지역 관련 다른 법률과 관계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핵실험 후 북한과 관계 재정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이 구상의 안정성, 지속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건임

○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대상은 공간관리, 자원관리, 생태계 및 환경관리, 항만개발, 해운 활성화 등을 포괄해야 하며, 해양수산분야 전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환경생태, 평화정착, 경제적 번영이라는 목표를 종합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류협력의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항만, 해운까지 포괄하는 i) 남북해양수산분야 협력 공동위원회(가칭)’ 를 구성하고, ii)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서해연안 남북협력 국가 아젠다를 확립

하며, iii)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선언문 채택을 추진하도록 함

○ 남북한 간 단일부처 사이의 일대일 대화 구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 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해양정책, 수산, 해운항만 분야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운영하도록 함

2) 전략 2 : 개발과 보전수요의 조화 메커니즘 구축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보호구역이 69개소에 이를 정도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크지만, 향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개발수요가 집중될 것임

○ 개성~김포~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제벨트가 향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

○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i) 생태적 · 경제적 가치 통합을 위한 용도구역제(Zoning)를 도입하고, ii) 향후 추진할 연안개발사업에 대해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전략 3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과 육상환경에 대한 조사자료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자료의 경우 '문제해결 지향성'이 부족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남북한의 지식기반강화를 위한 관리 여건은 세계화 · 정보화 추세와 남북한의 해역조사에 대한 관심수준에 비추어 열악한 실정은 아니므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식기반강화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남북공동조사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문제해결 지향성을 높이고, 조사자료와 정보의 통합성을 확보하도록 함

○ i) 개성시에 남북 해양수산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 ii) 권역별

관리목표에 기초하여 공동조사 추진 체계 마련, iii) 남한-북한 연안 · 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등을 세부 추진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음

4) 전략 4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서해연안접경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남북협력의제 개발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부처 사이에 접경지역의 관리와 남북협력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일관된 장기전략이 부재한 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동향, 남한 내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정책은 남한 내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남한 내부에 i)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 또는 연석회의를 구성 · 운영하고, ii) 남한 내 지역주민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5) 전략 5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직접교류는 경제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특성과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정치 ·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큰 진전이 없음
- 그러나 해양환경분야 국제기구 사업 및 국제협약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매우 높고, 북한을 참여시키려는 국제기구의 의지도 매우 높은 점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기회요인으로 기능함
- 따라서 i) 국제자문단회의를 활성화하고, ii) EABRAN, YSLME, PEMSEA, NOWPAP과 같은 국제기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iii)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와 같은 국제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음

〈요약 표-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요

추진전략	주요 내용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 확보	○ 남북해양수산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 해운항만, 수산, 해양정책분야 실무위원회 구성 ○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 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차관 남북관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서해연안 남북협력 국가 아젠다 확립 ○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선언문 채택 ○ 해양평화공원 및 공동어로 시범해역 지정 추진
개발 및 보전수요 조화 메커니즘 구축	○ 생태적, 경제적 가치조화를 위한 용도구역제 도입 ○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 남북 해양수산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개성시) ○ 권역별 관리목표에 기초하여 공동조사 추진 –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남북한 연안 · 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 /연석회의 구성 ○ 남한 내 지역주민 참여협력 및 인식 제고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국제자문단 회의(IAG) 활성화 ○ 국제기구 프로그램 활용 – EABRN, PEMSEA, YSLME, NOWPAP ○ 동북아시아 정부간 협의체 활용 –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또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평화정착(Peace), 생물종다양성 및 환경보호(Protection),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일경제 기반조성(Prosperity)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틀임

○ 공간적으로는 육상중심, 내용상으로는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구조가 해양수산 분야, 특히 해양환경보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한계임

○ 반면 북한이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국제기구 또한 북한사회가 국제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은 강점이자 기회요인임

○ 또한 개발압력과 보전수요의 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의 질을 고려한 발전', '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조화시키는 틀(framework)로서 기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평화, 개발, 보전 사이의 상충을 최소화하되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을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하여 남북회담의 의제로 상정하여 추진해야 함

2. 정책제언

○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기초할 때, 현재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군사적 긴장'임

○ 현 단계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서해 남북 경제벨트(수직 벨트)와 생태벨트(수평 벨트)의 공존이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임

○ 남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동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함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패키지에는 경제 외에 생태, 역사,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도록 함

○ 제5장에서 제안한 추진전략은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서해연안 접경지역

에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 장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은 2007년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남북회담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임

○ 이를 경제협력 분야, 환경보전분야, 긴장완화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1) 경제협력 분야

○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 · 환경 · 역사문화 소재 연안 크루즈 도입
- 강화도~한강 · 임진강 ·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삼각크루즈(Triangle Cruise) 항로를 개발하는 것은 평화정착의 상징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한강 하류 신곡 수중보 하부에 중급규모 출항지를 관광 어메너티, 생태 워터프런트와 연계하여 건설하고, 선박 운항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남북한 정부당국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 크루즈 선박의 생태문화 관광을 강화군, 예성강 하구, 개풍군일대 등 육상관광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성~해주~옹진군을 연결하는 육로관광' 및 '북한↔백령도 연계 관광'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함

○ 남북해운협력 합의서 상의 서해항로 활성화 및 해주항만 개발 지원
- 북한산 모래의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선박운항 증가 및 접경지역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항로를 활성화하고, 거점 항만으로서 해주항만을 확충 ·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선박수송과 남북교역 지원 등을 위한 항만활성화는 북한의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 이익을 북한에 줄 것이며,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임
- 해주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주항만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

(waterfront)으로 조성하고, 다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쟁력 있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함

- 배후지의 해주공업단지 개발 및 남포항 개발지원과 연계하고, 해양관광 거점기능 및 남북교역 · 무역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과정에서 갯벌 및 연안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선박운항 및 육상활동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방지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2) 환경보전 분야

○ 남한 모래 수급 안정화 및 한강 하구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대체개발 지역 발굴

- 남한과 북한은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년 6월)에서 홍수피해 예방과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한강 하구 모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합의하였음
- 그러나 남북한 한강 하구의 모래를 공동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의 토착생물, 희귀생물, 습지 등 생태계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모래수급 문제해결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방지를 위해서는 i) 환경생태 친화적 골재자원 개발을 위한 정밀조사 및 종합환경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ii) 하천기인 연간 모래 유입량 및 외해 유출량을 조사하고, 대체 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육상지질 조사를 병행함

○ 남북공동 유류사고 대비 긴급계획(contingency plan) 및 실행계획 수립

- 중국의 환황해 경제블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향후 남북한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유류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류오염사고 대비 긴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긴장완화 분야-남북 공동 관리 평화수역 지정 및 공동어로 시범 실시

○ 남북한 서해상 평화정착 선언문(가칭)을 구체화하고, 수산실무회담 합의 사항인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해 연평도 주변 해역의 북한주장 해상 일부 및 NLL북방 일부 구역(남북 각 20㎢, 총 40㎢)을 평화수역(해양평화공원 1단계구역 및 공동어로 시범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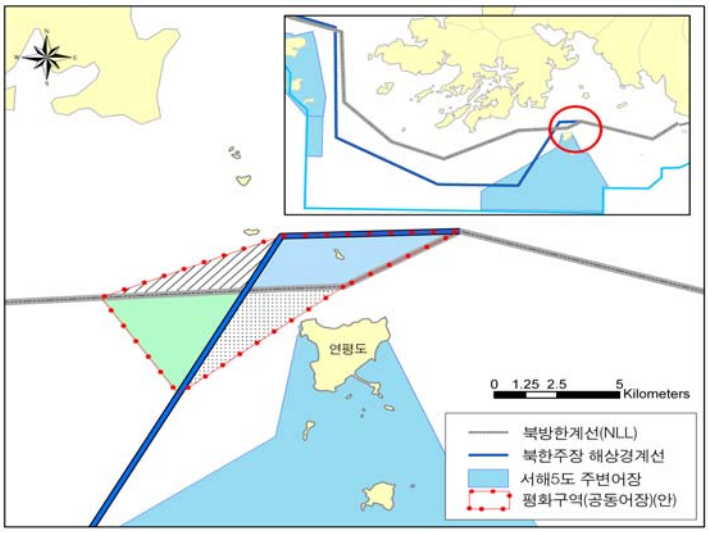
○ 서해상 공동어로, 바다모래 채취, 해운합의서 이행 등 남북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설문대상 국민의 65.7%가 NLL에 대한 북한의 입장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이 중 68.3%의 응답자가 남북한 상호 양보를 통한 '평화수역' 지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서해상 평화정착이라는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내용과 수산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통합할 경우 이 지역 중 일부 해역은 평화정착과 연계한 공동어로 시범해역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어로 시범해역을 남북합의에 기초하여 지정하고, 민간인(어민) 및 조사연구 목적의 전문연구자(공동연구개발센터 소속)만 출입하도록 하여 평화적 이용만 가능하도록 관리함
  - 안보불안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클 경우 주변 해역에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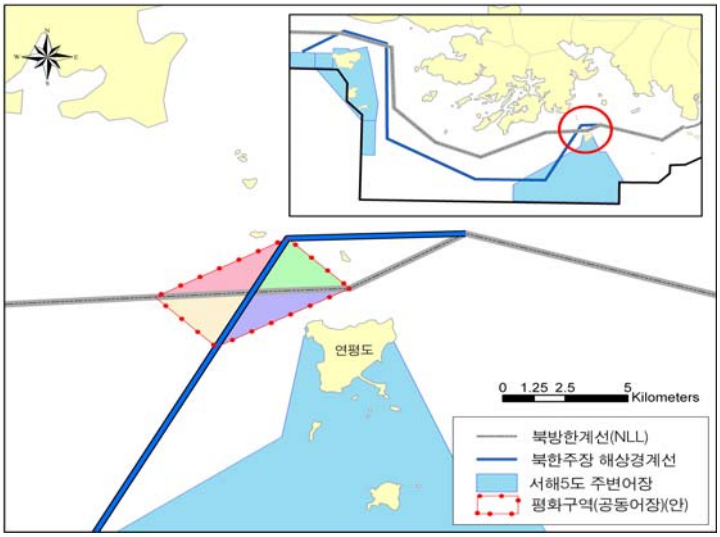
○ 평화수역(해양평화공원 및 공동어로 시범해역)을 지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으며, 수역면적은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분야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함
  - i) 연평도 주변 남북한 이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총 면적 40㎢), ii) 미력리도를 제외한 연평도 주변 남북한 이견지역(총 면적 18.4㎢)을 지정하는 방식, iii) 남북측 관할 해역에서 연접한 동일한 면적을 지정(총 면적 44㎢)하는 방안이 있음

〈요약 그림-6〉 연평도 주변 이견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하는 방안(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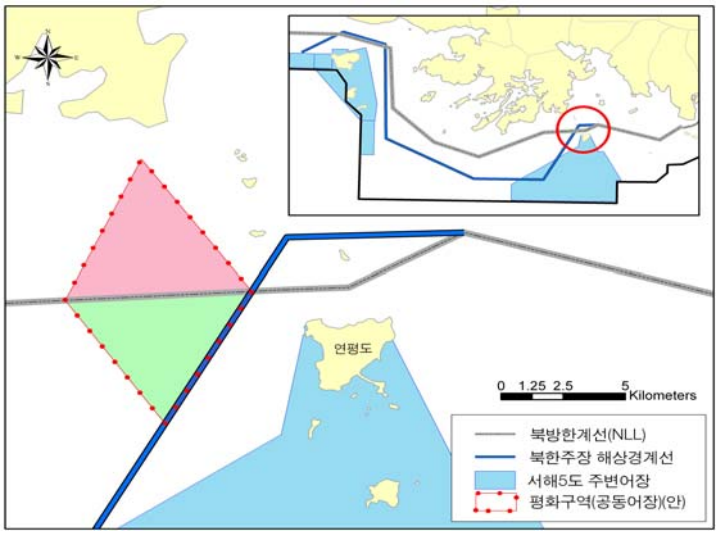
주 : 남북한 이견 지역(녹색 및 청색지역) 각 13㎢ 및 현재 관할구역 각 7㎢

〈요약 그림-7〉 미력리도 제외 연평도 주변 남북이견지역 지정방안(18.4㎢)



주 : 4개 구역의 면적은 각 4.6㎢

〈요약 그림-8〉 남북한 관할 해역에서 동일한 면적을 지정하는 방안(총 면적 44㎢)



주 : 남북 각 22㎢를 지정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바다는 국가간 경계, 행정구역, 어업구역 등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유체의 특성이 있다. 국제사회가 국제협약, 지역해 관리프로그램, 국가간 협약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양자원, 공간 및 환경을 관리하려는 것은 이러한 유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1] 최근 들어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해양의 무경계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사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공유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에 대한 국가 간 협력관리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 관리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for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과 평화공원재단(Peace Park Foundation)의 평화공원,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등의 틀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남정호 · 강대석, 2003). IUCN이 주관하여 개최한 제5차 세계보호구역회의(World Park Congress)에서

1) 오염물질과 해양생물은 행정구역과 같은 인위적 경계로 차단할 수 없고, 해류의 흐름, 자연환경의 계절적 변화, 생물체의 생체적 특성에 따라 이동함.

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경계를 초월한 협력관리'를 채택하였다.[2] 경계를 초월한 협력관리는 21세기 자연환경보호와 자원관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리적으로 가장 연접해 있고 동일한 해양학적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관리는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환경, 생물자원, 생태계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꽃게 자원과 관할 영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두 번의 군사적 충돌(1999년, 2002년)로 여전히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3]

이와 달리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개발, 경의선 철도복원공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 경제 분야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접경지역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인해 서해연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하여 독특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생태계의 보전에 대해 남한과 북한 모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환경측정망도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지만 자료의 부

---

2)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한 이 회의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서 모두에게 이익을(Benefits beyond boundaries)'이었음.

3) 이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역사적 연원이 매우 깊은데, 남북한이 38선의 경비를 직접 맡게 되는 1949년부터 38선을 중심으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개성, 옹진, 의정부를 중심으로 나타났음. 특히 옹진은 남북한의 충돌이 가장 빈번했던 곳이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전투가 시작된 곳임. 남한은 옹진을 방어하기 위해 1949년 6월 5일 옹진지구 사령부를 설치했음(임영태, 「북한50년사 1」, 들녘출판사, 서울, 1999, p. 217).

족, 이로 인한 비전의 부재가 이 지역 자원과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하는데 한계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잠재적 이용가치가 크고, 보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인 '평화공원(Peace Park)'을 해양 및 연안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추진하였다.

2)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이 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연안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질환경도 양호하고 서식지도 거의 훼손되지 않아 상업적으로 유용한 수산생물의 서식과 산란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한반도 전체 연안지역 중 해양환경보전, 자원의 합리적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관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할 경우 교류와 협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상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여건이 양호한 서해연안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남정호・강대석, 2003; 남정호 외, 2005).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김포시~인천광역시(송도)를 잇는 연안경제벨트가 활성화될 경우 연안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한 간척과 매립,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과 같은 물리적 영향(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영향(수질환경 오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정치・군사적 특성, 지역주민 거주 도서가 연안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지역주민 경제활동 및 생활영위 기반이 농업과 수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때문에 지역발전이 다른 연안지역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활동 강화, 저인망 등을 이용한 중국 어선

의 불법 남획어업, 해양쓰레기 침적으로 인한 생태·환경 악화 등으로 수산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치·군사, 자연환경,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한만의 노력으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지역의 환경·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연접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보호, 평화정착,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접경국가 간의 공동협력관리 모델인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까지 추진할 연구에서 제2차년도인 2006년의 연구에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이용개발 현황을 종합하고, 관리여건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의 목적(2005~2009년)**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6년 연구사업의 목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및 남북한 협력의 추진여건에 기초하여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추진을 위한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함

2. 해양평화공원의 개요 및 추진 필요성

1)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가 간 협력관리의 기본 틀인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남정호・강대석(2003)의 연구를 통해서다. 해양평화공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지역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생물종다양성, 천연자원, 문화자원의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비롯한 관리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접경보호구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4]을 연안・해양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즉, 생태적・문화적 보호가치가 높은 접경 연안・해양에서 국가 또는 지역 간 갈등이 존재할 경우 접경보호구역의 틀을 평화 정착까지 확대한 것이다.[5] 해양평화공원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은 '생태적 가치, 천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protection)'와 '평화와 협력의 증진(peace)'에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해양평화공원의 틀을 그대로 남한과 북한에 도입・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특수 관계, 접경 연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은 평화 정착과 생태적 가치의 보전에 충실하면서도 '낙후한 지역경제의 발전, 안보불안 해소를 통한 남북경제의 공동번영(Prosperity)'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발전 전략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현황, 남한과 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4) An area of land and/or sea that straddles one or more boundaries between states, sub-national units such as provinces and regions, autonomous areas and/or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sovereignty or jurisdiction, whose constituent parts are especi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managed cooperatively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IUCN, 2001).

5) Parks for peace ar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hat are form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to the promotion of peace and cooperation(*Ibid.)*.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접경연안[6]의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을 보호하고(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

2) 해양평화공원 지정요건 및 서해연안 추진 필요성

(1) 해양평화공원 관련 국제기구 프로그램

접경연안에 대한 협력관리의 틀은 IUCN 및 평화공원재단(Peace Park Foundation)뿐만 아니라 UNESCO의 생태계 보전 전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7] 해양평화공원 개념은 IUCN의 접경보호구역 개념을 분쟁, 갈등지역에 적용한 것으로,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Transfrontier Bioshpere Reserve)[8]도 국가간 갈등이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IUCN의 접경보호구역은 IUCN의 6가지 보호구역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지정한 보호구역 중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지정한 보호구역을 의미한다.[9] IUCN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은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단에 의해 보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Kelleher and Recchia, 1998). IUCN의 해양보호구역은 별도의 특별한 지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법률에 기초하여 지정한 보호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6) 현재는 서해연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해연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의 영문 명칭은 'The Marine Peace Park'이 아니라 'A Marine Peace Park'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함.

7) IUCN과 UNESCO의 접경지역 협력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05. 9. 29~30일간 진행한 국제워크숍 자료집이나 첨부한 CD를 참조할 것.

8) http://www.unesco.org/mab/nutshell.htm(2005. 9. 21)

9) 남정호·강대석(2003)은 이에 대해 transboundary reserv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adjoining protected areas,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음.

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습지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구역 모두 IUCN에서 규정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한 접경보호구역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Zbicz(1999)의 연구에 국가간 협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접경보호구역은 1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일반적인 해양보호구역의 개념보다 지정기준이 엄격하다.[10] 또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지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선정한 후보지역에 대해 UNESCO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공동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the MAB)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생태계가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분포할 경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심숙경(2003)에 따르면, 앞으로 25개 이상의 지역에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해양평화공원 지정 요건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은 엄격한 지정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협력관리가 반드시 UNESCO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IUCN의 접경보호구역 수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수보다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평화공원은 접경지역의 보호가치만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육상 평화공원이나 동유럽의 '철의 장막(Iron Curtain)' 시절 지정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모두가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11] 즉, 해양평화공원은

10) i) 주요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할 것, ii) 보전이 필요한 경관, 생태계, 동식물종이 있을 것, iii) 지정대상이 속해 있는 전체 지역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 iv)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일 것, v) 핵심보전구역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와 장기간의 보호,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의 명확한 구분 등 적절한 용도구역제를 가지고 있을 것(http://www.unesco.org/mab/nutshell.htm; 남정호·강대석, 2003 참조).

11) 철의 장막 접경 보호구역 사례는 남정호・강대석의 *Op. cit.*를 참조할 것.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되는 경직된 형태의 보호구역전략이라기보다는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부터 일반적인 보호구역을 포괄하는 유연한 보호구역 관리전략이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은 홍해해양평화공원이나 다른 나라의 접경지역 보호구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지정요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만 만족할 경우 해양평화공원의 틀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경계선을 따라 존재하고 있고, 시급히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 관련 국가(economy)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 선린관계보다는 갈등해결의 현안을 안고 있는 관계에 있을 것

▷ 대상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을 것

(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필요성

한반도 서해연안의 상황을 앞서 기술한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요건과 연계할 때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물범, 사구, 갯벌 등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과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고, 꽃게, 까나리 등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다(제2장 참조). 따라서 이 지역의 생물종, 생태계, 수산자원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유지・관리돼야 할 대상이다.

둘째, 개성공단-김포시-인천광역시로 연결되는 경제벨트는 차세대 경제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접경연안의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서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가 경제협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해안 유일의 자연형 하구인 한강 하구와 연결된 접경지역 생태계와

환경은 앞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의 틀로서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는 육상의 경우 금강산 개발,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해양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해양공간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1차 수산분야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공동어로를 포함하여 해양공간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전략적 틀로서 해양평화공원은 의미가 있다.

넷째,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협력이 전무한바, 해양환경분야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조사 등을 비롯하여 해양환경보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해양경계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만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어획 방지, 수산자원 육성, 해양환경개선사업 시행, 육상경제벨트와 조화 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잠재력은 이 지역의 안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접경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생활기반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이 지역의 평화정착이 지역발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투자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방법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협력관리를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는 2004년까지는 강대석・남정호(2002), 남정호・강대석(2003, 2004), 김영봉 외(2004)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 남정호(2005a, b), 육근형(2005), 장원근・최지연(2005), 최희정(2005), Park(2005), Lee and Kim(2005), Nam *et al.*(2005) 등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향후 남북한 연안・해양자원의 협력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국내연구 현황은 크게 ⅰ) 남한과 북한의 환경과 자원의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 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환경・생태계 보호 및 활용방안 연구, ⅲ)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1-1> 참조).

국제적으로 접경지역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협력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는 접경보호구역(transfrontier or transboundary protected area)을 주제로 이루어졌다.[12] 접경지역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육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안과 해양에 관한 접경지역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는 Crosby *et al.*(2002)이 홍해해양평화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

12) 접경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관한 협력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IUCN의 세계보호구역위원회(World Committee on Protected Areas)가 1997년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Cisneros and Carrere(1997), Hamilton(1997), Shine(1997)을 비롯한 20여 개의 연구, IUCN(2000)의 “Protected Areas - Benefits Beyond Boundaries”, World Bank(2000)의 “Transboundary Reserves-World Bank Implementation of the Ecosystem Approach”, Hamilton *et al.*(1996), Zbicz(1999), Singh(2002), Van Dyke *et al.*(2003) 등이 있음(남정호・강대석, *Op. cit.* 재인용). 생태계 보호관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로 MacKinnon(2002) 등의 연구가 있으며, 경계를 초월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Fall(2003)의 연구가 있음.

〈표 1-1〉 환경 및 자원관리 남북협력관리 선행연구 현황

분 야		선 행 연 구
접경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분야 선행연구		강대석・남정호(2002), 남정호・강대석(2003, 2004), 김영봉 외(2004)
남북협력 선행연구	환경 및 자원 관리	정회성 외(1996), 북한경제포럼(2001), 변병설(2001), 변병설・윤갑식(2001), 손기웅(2001), 김경술(2001), 김정인(2001), 임삼진(2001), 강광규 외(2002), 손기웅(2002), 정회성 외(2003)
	비무장지대 보전	김영봉(1999), 제성호(1996, 1997), 전성훈(1999), 김정수(2001), 김영봉 외(2002), 손기웅(2000), 통일부(2002), 전성우 외(2003). 김영봉 외(2004)
	해양수산분야	한국해양연구소(1993), 신영태(1998), 최정윤(2000), 해양수산부(2000), 남성욱(2001), 안국전・홍성걸(2001), 이광남(2001), 홍성걸・임경희(2002)
2005년 연구현황		남정호(2005a, b), 육근형(2005), 남정호 외(2005), 장원근・최지연(2005), 최희정(2005), Park(2005), Lee and Kim(2005), Nam *et al.*(2005)

남한과 북한의 협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경제협력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접경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접경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접국가 간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육상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고, 경제체제가 상이한 국가 간의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는 동유럽의 철의 장막(Iron Curtain) 주변 육상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남정호・강대석이 2003년도에 수행한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이 지역의 생태・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특성에 기초하여 협력관리의 필요성과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봉 외(2004)가 수행한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보전, 이용,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국토관리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정호・강대석(2003)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연구의 결과가 실행 가능한(workable) 형태로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련 국제기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해양환경보전 분야, 연안관리분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관련 부처를 지원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해양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용도별 구획조정 방안(zoning plan)까지 제시하고, 이를 국제기구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서(PDF)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도 선행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표 1-2> 참조).

2) 연구의 지리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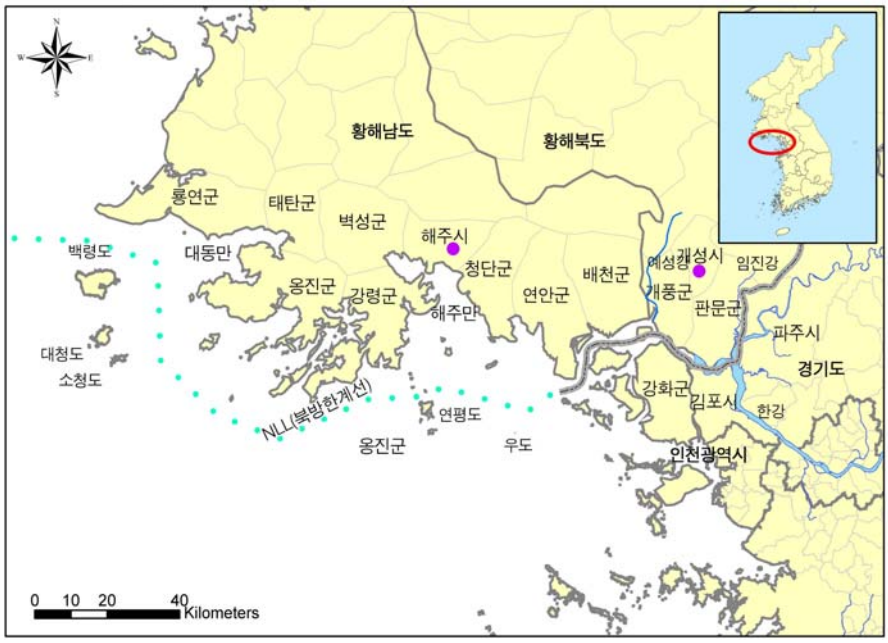
이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해역과 이 해역과 관련한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안도서, 접경연안해역의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안 비무장지대이다(<그림 1-1>참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남한은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전역,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일부를 포함한다. 지리적 범위에 포함된 북한의 행정구역은 황해남도 룡현군, 옹진군, 대탄군, 강령군, 벽성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개성시,[13] 판문점이다.

13) 개풍군과 판문군은 2004년 12월까지 개성직할시에 속해 있었으나 2005년 1월부터 개성직할시가 개성시로 행정구역이 축소되면서 독립하였음.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연구 - 연구자: 남정호·강대석(2003) - 연구목적: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필요성 검토 및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제시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 PSR을 이용한 관리여건 종합분석 -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검토	- 서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관리여건 분석 - 접경지역 협력관리의 기본개념 정립 - 외국 접경지역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협력관리 방안제시
	2	- 과제명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 - 연구자 : 김영봉 외(2004) - 연구목적 : 접경지역 국토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서해접경지역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향 및 전략
본 연구		- 접경 연안 보호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현장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국제기구와 실질적인 협력과정이 중요함. - 따라서 문헌연구 중심의 연구로는 현장성과 국제성이 요구되는 접경연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 - 연구목적 :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제시와 실질적인 토대 구축	- 국제기구 자문 및 세미나 개최 - 전 국민 대상 설문 -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해 연구분야와 실무분야 병행 추진**	**[연구분야]** - 실태조사 및 관리현황 심층 분석 - 매년 남북협력 정책방향 제시(단계별 정책방향) **[실무분야]** - 접경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지원 - 해양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체계구축

〈그림 1-1〉 연구의 지리적 범위



3) 연구의 내용적 범위

(1) 연구사업 개괄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 장기 연구과제다. 따라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연차별 연구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해양평화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연구사업」과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실무분야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까지 수행할 주요 연구사업은 ⅰ) 서해연안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종합, ⅱ) 사회경제 현황 및 이용개발 계획 수집 및 분석, ⅲ) 남북한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ⅳ)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 종합, ⅴ)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 개발, ⅵ)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련 이해상충 조정방안 개발

등이다. 연구사업과 함께 실무분야 추진사업은 ⅰ)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국제자문단 구성 및 운영, ⅱ)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남북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ⅲ) 국제기구 및 지역해 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3> 참조).

〈표 1-3〉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비 고
’05년	**<접경지역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기반 확보>** **[연구분야]** 접경지역 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현황 분석 **[실무분야]**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국제세미나 개최
’06년	**<주제별 협력방안 제시 및 국제자문회의 구성・운영>** **[연구분야]** ○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련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및 추진여건 종합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발 **[실무분야]** ○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기반확보, 국제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 홍보자료 개발, 뉴스레터 발간 - 3D-GIS, 영상홍보자료 개발 ○ 해양평화공원 지정 자문회의 운영규칙(TOR)확정	국제기구
’07년	**<서해 해양평화공원 연차별 추진체계 제시>** ○ 소권역별 정책방향 개발 ○ 연차별 사업 추진체계 제시 ○ 해양평화공원 남북회담 의제로 채택	남한, 북한, 국제기구
’08년	**<서해 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개발>** ○ 해양평화공원 지정 의향서 채택 ○ 해양평화공원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지구환경금융(GEF) PDF 사업 제안서 작성	남한, 북한, 국제기구
’09년	**<서해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이행 방안 개발>** ○ 해양평화공원 협력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평화공원 PDF 사업 추진	남한, 북한, 국제기구

(2) 제1차년도(2005년)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제1차년도 연구(2005년)에서는 서해연안에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였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수질, 생태계, 경관 등), 사회경제 현황, 남한과 북한의 관련 법제도, 국제협력 관계 등은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한 실태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자료는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2005년 연구에서 기초 자료의 확보는 핵심 연구주제였다.

이와 함께,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관련부처, 전문가의 인식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는 해양평화공원 추진방향을 도출하는데 남한 내의 이견이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제1차 년도에 수행했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해연안 접경지역 연안상태 분석

▷ 서해연안 이용개발 현황 분석

▷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운영사례 심층 분석

▷ 접경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여건 분석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남북한 법제도 비교, 국제기구의 사례분석을 기초로 해양평화공원 지정 여건을 SWOT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약점요인(weakness)을 극복하여 장점(strength)이나 기회(opportunity)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년 추진할 정책과제와 2007년 이후에 추진할 과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2005년도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파악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분석에서 약점요인은 ‘서해연안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정보의 부족, 남북한 해양환경분야 인적교류 경험 부족, 경제벨트와 생태벨트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유인책 취약, 우발적 군사충돌의 가능성, 해양평화공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나타났다.

〈표 1-4〉 약점 · 위협요소 및 기본원칙에 근거한 2006년 정책제안(안)

<table>
<tr><th>약점요소</th><th>원칙</th><th>2006년 추진 정책과제(안)</th></tr>
<tr><td>기초 자료 및 정보의 부족</td><td rowspan="5">○상호신뢰 및 존중
○점진적 · 지속적 접근
○전문가 중심 접근
○국제기구 지원</td><td rowspan="4">[2006년 추진 정책과제]

○ 해양환경측정망 확대
○ 장관급회담 및 수산실무협의회 의제 채택
○ 남북협력팀 확대
○ 국제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
○ 지역주민, 지자체 인식증진 사업</td></tr>
<tr><td>해양환경분야 인적교류 경험 부족</td></tr>
<tr><td>경제벨트와 생태벨트 조정체계 미흡</td></tr>
<tr><td>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td></tr>
<tr><td>해양평화공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td><td>[2006년 준비 정책과제]

○ 해양환경공동연구센터 추진 기반 조성
○ 한반도 연안 · 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구성 준비
○ 기술장비 지원 및 교육훈련 준비</td></tr>
</table>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① 해양생태계 조사 및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서해연안 접경지역 확대
②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2006년 장관급 회담 및 수산실무협의회 의제로 준비
③ 다른 분야 남북협력사업과 유기적 연계확보를 위해 남북협력팀 기능 확대
④ 국제 전문가 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Group) 구성 및 운영
⑤ 한반도 연안 · 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구성 준비
⑥ 해양환경 공동연구센터 설치 · 운영 추진기반 조성
⑦ 기술 · 장비 지원 및 교육훈련 추진 기반 구축

위 정책제안 중 국가해양조사 확대는 2006년부터 시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반영되었다.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었으며, 6월 29~30일 기간 동안 제1차 국제자문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4) 연구의 특징 및 수행 방법

(1) 연구의 특징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물리적 접근이 제약된 서해 5도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의 교류 및 협력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와 특징이 있다.

첫째,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군사적 특수성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연안과 해양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해양환경자료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매년 4회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환경측정망에 강화군 일부 3개 정점만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지역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14]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한 자원과 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환경상태 자료는 2003년도에 UNEP, UNDP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가 유일한 실정이다 (DPRK · UNEP · UNDP, 2003).[15]

셋째, 이 연구는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현안인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이해상충 해결이나 정치적 · 군사적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이 남한-북한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적 효력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대상해역의 자원과 환경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NLL과 관련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16]

---

1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게재된 서해지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자료의 경우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ㅎ>>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COD 농도는 일반적인 농도형태가 아닌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기방법을 사용하고 있음(고영명 · 최호정, 조선서해 <<ㅎ>>만에서 여름철 자체감쇠 특성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1권 제9호, 1995, pp. 91~93).

15) DPRK · UNEP · UNDP, *State of Environment*, 2003.

16)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해양환경과 자원을 관리하는 협력관리체제 구축과정에서 경계선은 때로 부차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남정호 · 강대석, 2003).

넷째, 이 연구는 그동안 남한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 또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정책제안(policy suggestion)'을 최종 결과물(outcome)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물적 토대(practic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결과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현장연구(in situ operational research)'로 명명할 수 있는데,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연안자원연구소(Coastal Resources Center)가 남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다섯째, 앞서 제시한 현장연구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부터는 실무분야 정책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 내 관계부처, 산업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도출 및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이 연구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이 현안에 대해 초기부터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

(2) 연구 수행방법

① 국내외 다양한 분야 관련 자료 수집 · 분석

관련 자료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공개된 북한 학술지 자료, 외국 기관에서 발간한 북한 관련 자료, 북한이 발간하여 남한에서 판매가 허용된 자료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접경연안 지역의 남한과 북한 관련 자료의 균형을 위해 남북협력 및 통일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각종 토론회 자료, 남북당사국회의 결과 자료, 국제기구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하였다.

② 전 국민 대상 전문기관 의뢰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일반 정책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도 중요하지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2시간 소요되는 심층면담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에 제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006년에는 일반 국민으로 설문대상을 확대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③ 국제전문가 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Group) 구성 및 운영

해양평화공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에 개최한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 국제기구에 제안했던 국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제1차 자문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향후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하여 해양평화공원의 추진, 지정,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과 정치적 지원(political support)을 국제자문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국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남북협력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연구자와 민간단체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매년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제1차 국제자문단회의에도 참석하여 통합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전문가 자문단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전문가가 북한의 내부자료 확보 및 전문가 접촉을 지원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 경희대학교, 부경대학교의 관련 전문가가 주제발표 등을 통해 자문을 수행하였다.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해역과 이 해역과 관련한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안도서, 접경해역의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안 육지를 포함한다(<그림 2-1>). 이 장에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상태, 사회경제 현황, 역사 및 문화 자산 현황 자료를 종합하였다.

〈그림 2-1〉 연구의 지리적 범위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1) 개관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한반도 서해 중부해역에 있으며, 서해의 특징인 복잡한 해안선, 갯벌, 해안사구, 큰 조차 등의 자연환경을 보인다. 이 지역으로 유입하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유역범위가 큰 하천에서 운반·퇴적된 모래가 저질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일대는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랑의 영향으로 해식애 등이 발달한 반면, 내륙에 가까운 강화도 일원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산성 구릉지가 발달하였다. 옹진반도 해주와 대청도에는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큰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나 백령도의 콩돌해안과 같이 잔자갈로 해안이 형성된 곳도 있다.

연구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0.1-11.2℃, 강수량은 940-1,300㎜로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증가하고 기온은 높아진다. 맑은 날씨가 많은 편이나 바람이 강하고, 5~7월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정기선이나 어선 등의 운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동만, 해주만, 강령만으로 갯벌 형성과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한은 강화만 주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고, 산재한 도서 주변에 갯벌이 발달해 있다(남정호 외, 2005). 이 지역의 갯벌 면적은 총 1,445㎢로 한반도 갯벌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북측의 갯벌은 남북한 전체 갯벌의 약 17.3%(958㎢), 남측의 갯벌은 8.7%(487㎢)이다. 북한의 간척사업은 '4대자연개조사업(1981. 10)'의 일환으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준공된 간척지의 내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 상태이다. 지금까지 총 4만 2천ha의 간척실적(계획면적의 약 14%)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도별로 추진하는 토지정리사업이 우선시되면서 잠정적으로 연기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이 끝나는 대로 간척사업을 재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 일대의 갯벌 생태계는 주변 수도권 개발, 공항 건설 등 개발압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갯벌 면적

구 분		면적(㎢)	우리나라 갯벌* 대비	비고
서해연안 접경지역	북측	958	17.3%	북한 갯벌의 약 30%
	남측	487	8.7%	남한 갯벌의 약 20%
소 계		1,445	26.0%	

주 : 한반도의 갯벌면적은 북한의 30만ha와 남한의 2,550㎢를 합한 5,550㎢로 추정됨.
자료 : 해양수산부(2003), 남정호 외(2005).

(2) 하천 및 해양환경

북한 황해남도 연안의 영양염류는 질산염 0.020㎎/ℓ, 인산염 0.0233㎎/ℓ, 규산염 0.350㎎/ℓ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인산염이 0.0027-0.0035 ㎎/ℓ로 이전 측정값의 1/10 수준으로 나타나 수질측정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한에도 가용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염하수로와 강화남단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은 2003년 이후 Ⅲ등급으로, 총질소는 등급외, 총인은 Ⅲ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다.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는 Ⅲ등급보다 악화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양염류의 주요 유입원인 한강에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 하구에서 떨어진 서해 접경해역의 해양 수질은 이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해역에 유입하는 3개 하천(한강, 임진강, 예성강) 중 한강은 남한 내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유출(189억㎥)하며, 임진강은 삼화교를 기준으로 연평균 약 36억㎥을 배출하고 있다. 한강은 우리나라 중부지역 최대 하천으로 유역면적이 25,954㎢(북한지역 9,816㎢)이며 유로연장은 494㎞에 이른다.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1㎜로 전국 평균 1,274㎜보다 많지만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 특성은 동일하다. 임진강을 통한 연간 유사(流砂)량은 810만㎥으로 추정된다.

(3) 생태계 현황

조류자료는 남북한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풍부하다. 국제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황새, 두루미와 같은 섭금류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에 서식하다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인 한강과 임진강 하구, 강화도 주변 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므로 접경지역이 이들의 생활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남한과 북한 모두 흰두루미, 재두루미, 백로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표 2-2〉 서해연안 접경지역 조류 분포 현황

구분		조류 분포 현황
남한	한강 하구	· 멸종위기종 Ⅰ급에 해당하는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4종과 멸종위기종 Ⅱ급에 해당하는 22종의 생물이 관찰되는 등 생태적 다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저어새 번식지 ·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50호) 및 개리(천연기념물 제325호)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지역을 중심으로 삼각주가 발달한 지역)
	백령도	·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맹금류를 비롯하여 도요새 등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음 ·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장산곶매(천연기념물 제243호) 등 다양한 철새 관찰
	강화도	· 남서부 연안의 86.6㎢에 이르는 갯벌을 중심으로, 36종의 섭금류 및 조수류가 관찰 · 노랑부리백로,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개꿩, 좀도요, 민물도요, 붉은어깨도요, 흑꼬리도요, 큰뒷부리도요, 마도요 등 희귀조류가 포함됨.
북한		· 저어새: 평안북도의 서해안부터 황해남도까지 연안과 도서를 중심으로 약 200마리가 서식하고 있음('98년 현장 조사에서 황해남도에 총 163마리의 저어새 관찰)

자료 : 남정호 외(2005) 자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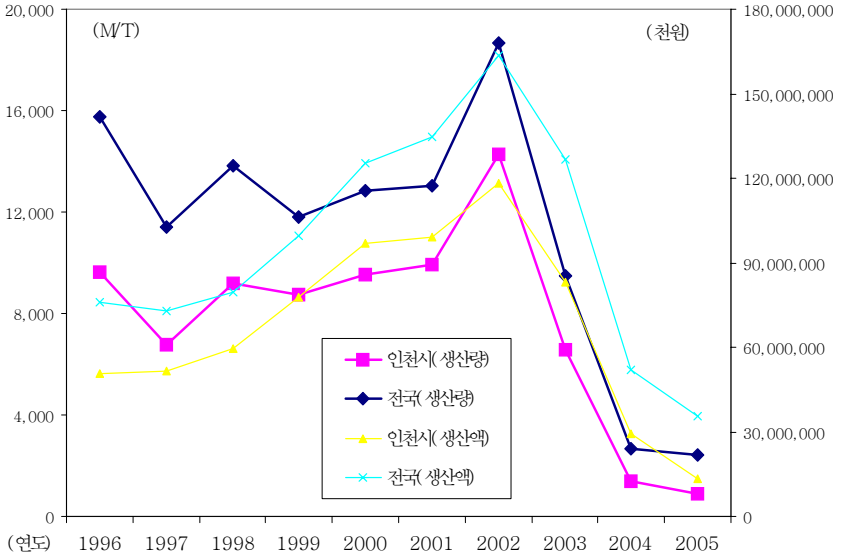
서해연안 접경해역에 출현하는 포유동물은 주로 고래류와 물범이다.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물범은 백령도 근해에서 300여 마리까지 발견되었다. 물범은 본래 북극해와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 서식하는 종으로 백령도 물범은 이들의 최남방 서식지이다. 주 서식지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생물지리학적인 가치가 크며, 향후 물범을 이용한 생태관광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고래류가 관찰되고 있는데, 주로 돌고래와 상괭이류이다. 과거 백령도 일원에서 까나리 조업이 활발할 당시 연간 100마리 이상의 상괭이가 혼획되었다고 한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주변에 습지와 기수역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어장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꽃게는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국 생산량의 약 75%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전국 생산량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36%에 불과할 정도로 이 지역의 꽃게 생산량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 지역에서 꽃게 잡이를 하고 있는데, 잡은 꽃게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게 생산량은 연간 약 3,000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꽃게 생산통계[17]가 1998년 기준으로 당시 남한 생산량 13,843톤의 1/4 수준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자료가 부족하여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꽃게 분포의 자연적 요인은 저층수온과 퇴적상으로, 이 지역은 대부분 저질이 사질(沙質)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상보다는 저층수온의 변화에 따라 꽃게 분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꽃게 조업의 영향과 중국 어선의 꽃게 잡이로 인한 꽃게 자원량의 감소 가능성도 높아 자원량 변화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17) 북한의 꽃게 잡이는 외화벌이 사업의 하나로, 북방한계선(NLL)이 인접한 서해연안 접경해역에 출현하는 선박은 북한군(해군사령부)에 소속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남정호 외, 2005.).

〈그림 2-2〉 남한 꽃게 생산 추이(1996~2005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남정호 외(2005).

마지막으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식생을 살펴보면, 남한의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은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위치한 도서 군(群)으로서 식물구계상(植物區系, floral region) 한반도 중부아구에 속하며, 군계 수준에서는 냉온대 중부에 해당하나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남방계와 북방계의 식물이 공존하는 특이한 지역이다. 대청도에서만 볼 수 있는 대청부채(Iris dichotoma Pallas)[18]와 대청도 서남쪽 사탄동의 동백나무는 동백나무 자생지의 북방한계선으로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륙에 접해있는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세한 식물조사 자료가 많지 않으나 장단반도에 15목 21과 42속 41종 9변종, 초평도에 6목 7과 9속 6종 4변종의 다양한 관속식물이 보고되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갈대와 갯버들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북측의 식생자료는 매우 제

18) 멸종위기 야생 식물 II급.

한적이지만 북한의 박우준 외(2001)의 「위기 및 희귀식물 연구」에 따르면 총 37과 46속 54종 3변종이 조사되었다. 이 중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은 소나무 곰솔 1종, 노가지나무과 섬향나무, 갯노가지나무 2종으로 룡연군과 옹진군 바닷가의 제한된 지역에 드물게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접경지역은 대규모 연안사구와 같은 중요한 자연환경,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의 번식 및 산란지, 노랑부리백로·대청부채·물범 등 주요 생물지리학적 대표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연안의 사회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생물, 유용수산자원, 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과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남한과 북한 모두 개별 관련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식물보호구, 습지보호구, 천연기념물, 바다수산자원보호구로 지정하고 있고, 남한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 있다 (<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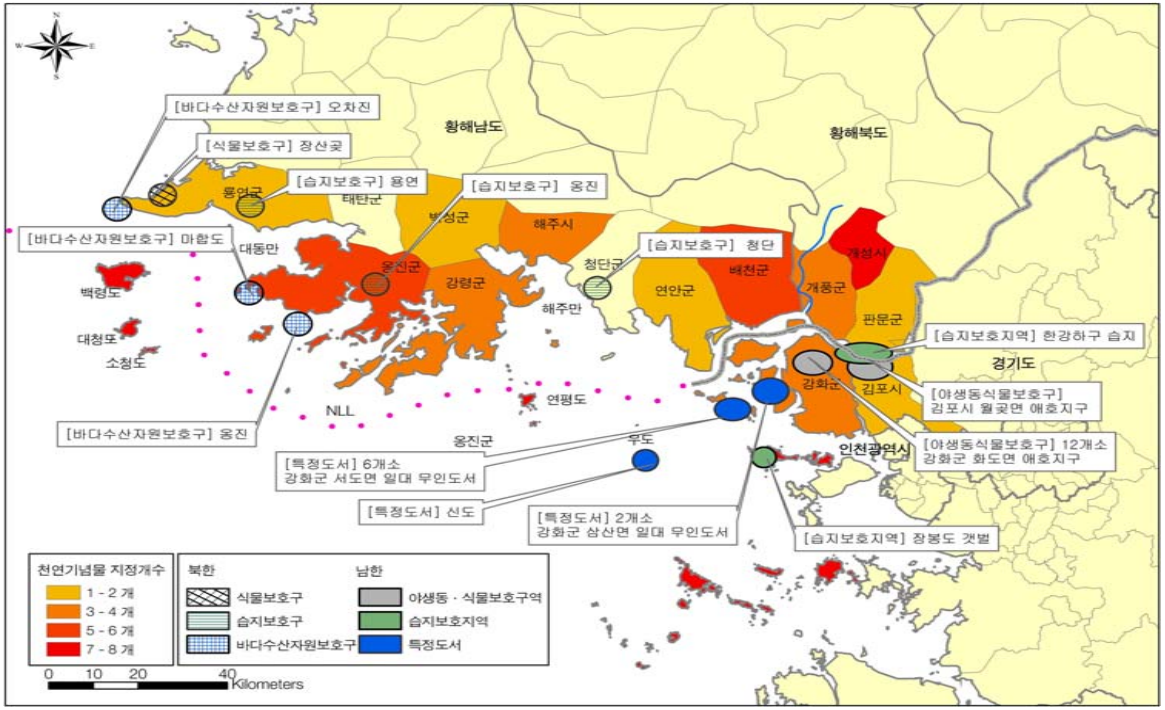
2006년 현재 <표 2-3>과 같이 이 지역에 총 69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중 남한은 25개, 북한은 44개로 북한의 지정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개성시·배천군·옹진군, 남한의 옹진군에는 천연기념물이 5개 이상 지정되어 있으며, 조류, 지형, 식물 등이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다.

〈표 2-3〉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남 한		북 한	
명 칭	지정건수	명 칭	지정 건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	식물보호구	1
습지보호지역	2	습지보호구	3
천연기념물	12	천연기념물	37
특정도서	9	바다수산자원보호구	3
소 계	25	소 계	44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총 69개소			

자료 : 남정호 외(2005).

〈그림 2-3〉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2)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1) 인구 및 토지이용 현황

연구지역은 남한 서해5도와 북한 옹진반도(대동만-해주만) 주변의 해역과 육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광역지자체는 남한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북한의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이다. 관련 해당 시·군은 남한의 김포시, 강화군, 옹진군이고, 북한의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해주시, 룡연군, 태탄군, 옹진군, 강령군, 벽성군, 천단군, 연안군, 배천군으로 총 15개이다.

〈표 2-4〉 서해연안 접경지역 관련 행정구역

구 분		행정구역
남 한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경기도	김포시(월곶면, 대곶면, 하성면)
북 한	황해남도	해주시, 룡연군, 태탄군, 옹진군(3), 강령군(1), 벽성군, 청단군(1), 연안군(1), 배천군 ※ 노동자구 6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주 : ( ) 안의 숫자는 노동자구 수임. 북한의 노동자구는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장, 공장, 탄광, 어촌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 설치한 리급 행정구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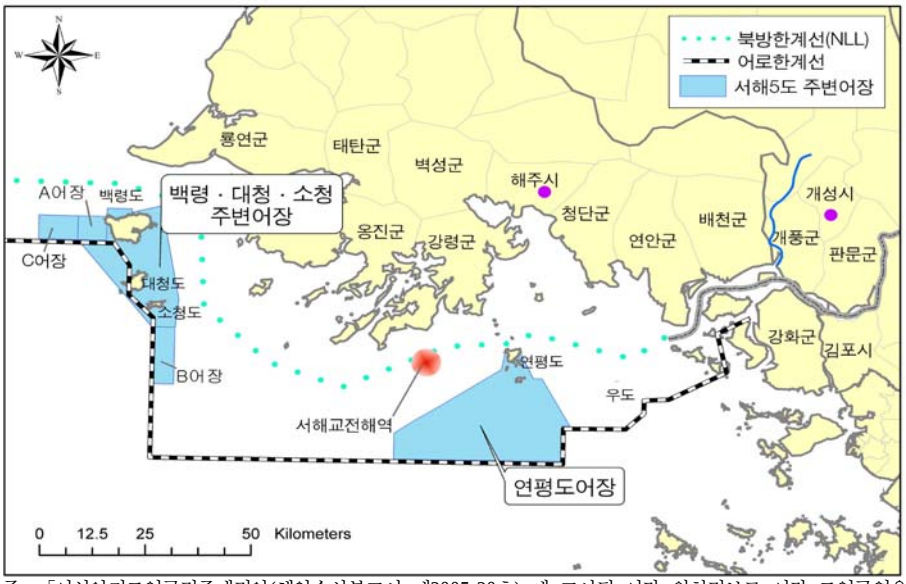
남한의 인구는 291,292명이고, 지난 5년간 지역전체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4.68%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반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백령면·대청면·연평면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각각 -0.87%, -0.1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군별 인구 데이터는 없었지만, 1993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당시 개성직할시)의 인구는 2,345,386명이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시가지역 면적의 증가율은 황해북도, 인천광역시, 경

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기 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역의 면적은 황해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자료 분석 결과 서해연안 접경지역 연안육지부의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고, 오염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산업 현황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수산업의 경우 북한은 양식업 위주이고, 남한은 어선・양식어업이 주를 이루며 꽃게와 기타 수산물 조업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수산업은 1990년대 들어 간척으로 인한 어장의 감소, 환경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 어선부족 등에 의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이나 연근해 어업보다는 연안에서 기르는 어업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2006)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수산업 생산동향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 사정의 악화와 농업 관련 정책의 지원에 따라 어선 출어에 필요한 유류공급이 부족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통일부, 2006). 남한의 수산업은 어로한계선, NLL 등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그림 2-4> 참조). 연구지역 중 남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총 4,702톤(옹진군 2,573톤, 강화군, 2,129톤)이고, 이 중 백령면의 수산물 생산이 2,011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옹진군의 수산물 생산량은 약 20%, 특히 꽃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각류의 생산이 86%나 감소하였다. 제1차년도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 감소의 이유를 연안의 환경오염, 생태계 변화, 불법남획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4〉 서해5도 조업구역도



주 : 「어선안전조업규정중개정안(해양수산부고시 제2005-20호)」에 고시된 어장 위치정보로 어장 조업구역을 도면화하였음.

(3) 공업 및 항만현황

남한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없으나, 북한[19]은 해주공업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가 있으며, 해주시는 중공업 중심, 개성시는 경공업 중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서해연안 접경지역 공업지구 현황(북한)

구분	특성	주요업종	전력	공업용수	교통
해주	· 최대 시멘트기지 · 국제무역항	시멘트	해주화력	광석천	장연-옹진간 철로, 해주항
개성	· 인삼 재배 중심지	식음료		예성강	평양-개성 고속도로

자료 : 이상준 외(2004).

19) 현재 북한에는 5개의 대공업지구(평양, 신의주, 함흥, 나진 · 선봉, 강계)와 4개의 중소공업지구(해주, 안주, 원산, 개성)가 있고, 북부 내륙지역에는 군수산업이, 남포 · 신의주 · 해주 · 개성에는 경공업이 주로 입지하여 있음.

북한은 정치・경제・외교적 여건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어려움이 있지만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제도정비와 기반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에 공단구역(800만 평)과 배후도시(1,200만 평)를 포함한 총 2,000만 평(66.1㎢)의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1단계 100만 평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 평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표 2-6〉 개성공단 개발계획

구 분	면적	유치업종
1단계	100만 평(3.3㎢)	-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양말 - 식품(인삼가공 등), 음료 - 전기, 전자 조립 - 금속, 기계 조립 및 기타
2단계	300만 평(9.9㎢)	- 전기, 전자 - 의약품, 화장품 - 금속, 기계 - 정보통신, 컴퓨터 - 자동차 부품 및 조립 - 소프트웨어 및 기타 - 정밀화학
3단계	400만 평(13.2㎢)	
합계	800만 평(26.4㎢)	

주 : 1단계 사업에서 2003년 11월 현재 1,400여개의 업체가 입주를 신청하였고, 이 중 기계 및 금속업체가 1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류 17%, 섬유 16% 순으로 나타남.
자료 : 이상준 외(2004).

해주공업지구는 해주항에 인접해 있고, 시멘트의 생산 및 출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해주공업지구는 이 지역 연안의 환경과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20]

북한의 연해항로는 용암포, 다사도, 장송, 남포, 몽금포, 구미포, 해주 등을 연계하고 있다. 1974년 개항한 해주항은 서해안에서 남한과 가장 인접한 무역항이라는 점에서 남북 교역에서 중요하다. 해주항은 남북한 선박운항의 증가로

20)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자본집약적인 장비산업, 내수위주산업, 공업산업의 특성이 있어 오염원 배출이 많은 산업임.

일반 교역상품과 수산물의 반출입을 처리[21]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의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북한산 모래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7〉 서해연안 접경지역 주요 무역항(북한)

항구명	하역 능력 (만 톤)	접안 능력 (천 톤)	수심 (m)	주요 취급화물	대외항로	대외무역 취급비중	비 고
해주항	240	10	10	시멘트, 광석		9.8%	내항 : 연안화물 외항 : 무역화물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남북물자 교역의 증가는 남북한 항로의 활성화로 이어졌는데, 2000년대 들어 남북 해운교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남북 해상운송, 항로개설,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해양 사고시 상호협력, 선원 및 여객의 상륙, 정보교환 및 기술 교류,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통신망 확보를 포함[22]하는 「남북해운합의서(2004. 6. 5)」가 채택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산 모래의 반입 활성화를 위해 모래 운송선박의 인천-해주 간 운항항로 단축, NLL을 통과하는 모래운송 선박수를 1일 최대 10척까지 확대하여 승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4) 개발 계획 현황 : 개풍공동개발구 및 한강 하구 모래 채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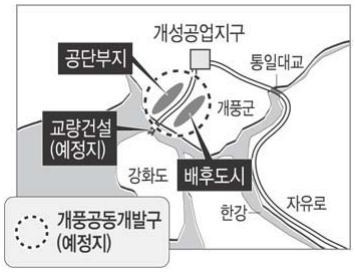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이용과 개발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서해5도보다는 내륙과 접해 있는 한강 하구 및 강화도 주변 연안이다. 개성공단 사업, 개풍공동개발구 조성 계획, 골재채취 사업의 합의 등과 같은 사실에서 이러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

21) 남북한의 선박 운항은 1998년의 600여 회에서 이듬해 1,700여 회로 증가하였으며, 선박 수송 수요의 증가는 남북을 오가는 선박의 출항지도 다변화시켰음. 특히 북쪽은 군사적 요충지였던 장전항이 금강산 관광용 항만으로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입출항지가 되었고, 일반 교역상품과 수산물 반출입의 주 창구였던 남포, 흥남 외에 해주, 신의주, 나진 등의 역할도 크게 활성화되었음(정회성, 2003, p. 43).

22) 통일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서명 및 교환」, 2004.

〈표 2-8〉 개풍공동개발구 계획

<table>
<tr><td>개 요</td><td colspan="3">-위치 : 개풍군 일대(개성공단 남쪽)
-규모 : 약 2,000만 평(배후단지 1,200만 평, 공단조성 500만 평, 물류센터 및 기타 300만 평)
 
</td></tr>
<tr><td rowspan="2">추진
방안</td><td>전기('06-'10)
인프라 구축</td><td>중기('10-'18)
공단건설</td><td>후기('14-'20)
개발특구 건설</td></tr>
<tr><td>- 인천-개풍 간 교통, 물류 인프라 확보
- 관광 인프라 개발
- 기존 개성공단 내 인천제조업체 진출 지원
- 북미관계 개선 등 각종 정책적 노력</td><td>- 개풍지역에 대규모 인천전용공단 건설
- 전용공단 입주업체 지원방안 마련</td><td>- 인천(물류기지)의 연계망 확립
- 개풍의 독립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 특구화</td></tr>
</table>

자료 : 경향신문(2005. 11. 8.); 인천광역시, 「인천-개성 연계발전 추진전략」, 2005.

먼저 '개풍공동개발구'는 개성공단 후속사업의 성격이 있으며, 남한과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중계지, 남북 교류 확대 및 경제공동체 형성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개풍군 일대에 총 2,000만 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고, 개성공단 조성규모의 2.5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개성시의 산업・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첫 시도로 인천전용공단을 포함해 1,000만 평을 개발하고, 북한에 강화군 철산리에서 개풍군 고도리간 길이 1.4km(4차로)의 연육교 건설을 제안한 상태이다.

올 6월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한강 하구의 골재채취 사업도 머지않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은 남북한 중립수역에 위치한 한강 하구의 골재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며, 군사

관할 지역인 만큼 군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또한, 모래 채취를 통한 골재난 해소는 물론, 준설로 인한 남측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수로 이용,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은 130㎢ 면적에 양질의 모래 1,080,000,00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연간 100,000,000㎥의 국내 모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업의 진행시 고려해야 할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및 긴장완화 등의 결과뿐만 아니라 골재채취로 인한 해역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다. 이미 이 지역은 수해예방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설선이 실트를 걷어내 건축자재로 활용하였으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23] 그동안 인접지역인 옹진군은 바다골재 채취로 수도권지역의 골재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들어 골재채취로 인해 이 주변 지역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옹진군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 공동이용을 위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 생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역사 · 문화 현황

(1) 지명 변천[24]

① 강화

강화의 지명은 갑비고차(甲比古次), 혈구군(穴口郡), 해구군(海口郡), 강화현(江華縣), 강도군(江都郡), 강화부(江華府)로 변해왔다. '갑비고차'란 지명에서 '갑비(甲比)'는 고유어 '갑'을 표한 것으로 '겹, 중복, 둘'을 의미하고 '고차(古次)'는 고유어 '곶(串)'을 의미한 것으로 이를 현대어로 표시하면 '갑곶이'가 된다. 이는 '두 갈래로 갈라진 물가에 있는 곶으로 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혈구(穴口)의 혈(穴)은

23) 서울신문(2006. 6. 7).
2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섬 - 3. 강화군의 섬」, 2004 재정리.

강(江)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구, 강화 등 모두는 '물(바다, 강)'을 의미한다.

② 교동

「삼국사기」에 따르면 교동도는 달을참(達乙斬) 고목근(古木根) 교동(喬桐)으로 바뀌었고, 「고려사」에서는 읍호(邑號) 이외의 별칭으로 대운도(戴雲島) 혹은 고림(高林)으로 나타나 있다. 달을참(達乙斬)에서 달을(達乙)은 고(高), 대(大)를 의미하고, 참(斬)은 '벌, 불'을 나타내는데 '불'은 곧 '부리'로 파생되어 모가 난 산(山)으로 봉(奉)을 가리킨다. 삼국통일 이후의 지명인 교동(喬桐)에서 교(喬)는 고(高)나 대(大)를 의미하고 동(桐)은 오동나무 이외에 '고을, 마을'의 뜻으로 '크고 높은 산이 있는 고을'로 볼 수 있다.

③ 삼산

여러 섬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제도면(諸島面)이라 하며 석포도, 매음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등 5개 섬을 포함하였다. 이 중 석모도는 석모로도(席毛老島)로 불렀는데, 석(席)의 옛 뜻은 '돗'으로 '물이 돌아 흐르는 곳'이라는 한자 지명이다. '돌다'의 어간 '돌'과 '모퉁이'의 뜻인 '모루'가 합쳐져 '돌+모루'를 한자로 표기하면 석모로(席毛老)가 된다. 미법도는 시대에 따라 매잉도(買仍島: 「고려사」, 미법도(彌法島:「세종실록」), 며법도(旀法島:「호구총수」)로 불렸다. 미(彌)나 매(買)는 '물'을 뜻하고, 잉(仍)은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풀어 쓰면 '물 많은 땅', '물과 산줄기가 길게 뻗은 섬'이 된다.

서검도는 고려 때 금음북도(今音北島)라 했고, 조선중기 이후 서검도라 불렀다. 고려 말이나 조선조에 이르러 중국 상인이나 사신이 해상으로 입국하려면 석모도와 서검도 사이의 갯골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였을 것이다. 즉 서편의 검문소 역할을 했다고 해서 서검도라 불렀다고 한다.

④ 서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를 합쳐 서쪽에 있는 섬이란 뜻이다. 주문도(注文

島)에서 '주(注)'는 '붓, 붇, 부리, 북, 부'에서 파생한 것으로 '산' 또는 '산봉우리'의 의미며, 문(文)은 'ᄀᆞᆯ'의 훈차(訓借)로 '크다, 높다'라는 뜻이다. 이를 현대어로 바꾸면 '붓갈섬'이 되는데 그 의미는 '산 높은(큰) 섬'이란 뜻이다. 조문도는 본래 크지 않은 섬이지만 중심에 '본구산'이 있어 '높은 산이 있는 섬'이 되었다. 아차도의 지명은 「세종실록」에서 소도(小島),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소도(少島), 「강도지」의 아차도(阿次島)에서 「여지도서」에서는 아차도(阿此島)로 변하였다. 결국 아차도는 주변에 있는 주문도와 비교해서 작은 섬이란 뜻이다. 볼음도는 파음도(巴音島), 보음도(甫音島), 망도(望島), 보을음도(甫乙音島), 볼음도(乭音島)로 칭하였다. 파음도(巴音島)는 'ᄇᆞᆯ은셤' 혹은 'ᄇᆞᆯ음섬'을 표기한 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섬'이란 뜻을 갖는다. 임경업 장군이 풍랑을 만나 이 섬에 기거하면서 보름달을 보았다 하여 만월도라고도 하였고 보름이 볼음으로 변했다고도 한다.

⑤ 백령도

백령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백령도 본고구려 곡도(白翎島 本高句麗 鵠島)"라 칭하였고, 「고려사(高麗史)」에서는 곡도를 고려 초에 백령도(白翎島)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곡(鵠)자는 '따오기 홀', '고니 혹', '과녁 곡' 등으로 풀이된다. 백령도 지형이 둥글고 섬 중앙에는 조수가 들어와 마치 활이나 총을 쏘는 연습을 할 때 목표물을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곡도'로 칭하였다. 고려초에 개칭한 백령도(白翎島)도 '흰 날개'와 관련된 두루미, 고니 등을 가리키는 지명이 된다. 백령도의 지형을 보면 두무진 쪽이 새의 머리와 주둥이 부문이고, 가을리와 북포리, 진촌리는 오른쪽 날개, 남쪽의 연화리와 남포리는 왼쪽 날개를 이루며 간척지는 몸통이 된다.

⑥ 대청도

대청도(大靑島)는 '푸른 섬'으로 칭하였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따르면 "대청서(大靑嶼)는 멀리서 보면 울창한 것이 마치 눈썹을 그리는 검푸른 먹과

같다고 하여 고려인들이 붙인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한편 이 마을을 포을도(包乙島)라 하였는데 이는 ‘푸른 섬’이라는 우리 음을 한자로 기록한 것이며, ‘암도(岩島)’라 칭한 것은 대청도 섬 주변이 절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⑦ 연평도

연평도는 원래 황해도 해주군 송림면이었으나, 해방 후 연평리면 옹진군으로 편입되었다. 연평도(延坪島)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을 보면 연평(延坪), 연평평(延坪坪)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연평도는 지형이 높고 낮음이 없이 대체로 평탄하고 길게 뻗은 형태의 섬에서 연평이 되었다. 소연평도는 모든 선박에 표적(標的)이나 방위(方位)를 알려주는 섬이라 해서 ‘산연평도(山延坪島)’로 표기하기도 하였고, ‘새’로 불리는 띠풀, 억새풀, 새풀 등이 많아 ‘새연평’이란 별칭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25]

⑧ 개성시[26]

고대 개성은 청목령(靑木嶺)으로 불리었는데,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부소압(扶蘇押)과 동비홀(東匪忽) 두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부소압은 송악군(松岳郡)[27]으로, 동비홀을 개성군(開城郡)으로 개편했다. 개성은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양한데 919년에는 개주, 960년에는 황도(皇都), 955년에는 개성부 또는 개경(開京), 황성(皇城)이라고 했으며 조선시대 때는 송도(松都), 송경(松京), 중경(中京)이라 불렸다.

---

25) 이 섬이 대연평도에 대고 하는 말이 ‘덩치만 크다고 대연평이냐, 무게로 달면 내가 대연평이다’라고 해서 ‘쇠연평’이란 별칭이 있음.

26) 송경록,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북한이야기」, 푸른숲, 2000.

27) 개성의 유래와 관련하여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의 8대조인 성공장군 호경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의 아들 강충도 이 집에 살았다고 함. 신라의 각간으로 팔원이라는 풍수 잘 보는 사람이 “만약 고을을 부소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산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 산등의 바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이곳에서 장차 삼한을 통일할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였음. 이에 강충은 군내 백성과 의논하여 마을을 부소산 남쪽으로 옮기고 온 산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함. 산 이름도 송악산으로 고치고, 고을 이름도 송악군으로 칭함.

⑨ 해주시, 황해남도[28)]

해주는 고구려 때 '내미흘군(혹은 지정 장지)'이라 하였으며 신라 경덕왕 때 폭지군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 때 해주라고 하였다. 해주(海州)란 남쪽으로 큰 바다와 접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1417년 해주목, 1914년 해주군, 1939년 해주면이 해주부로 승격되었고 1957년에 해주시가 되었다. 황해도는 1417년 풍해도를 개칭한 명칭으로 황주와 해주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 중 황해남도는 1499년 당시 황해 좌・우도로 나누어질 때 황해 우도 지역 대부분이 오늘날 황해남도가 된 것이다.

(2) 역사적 변천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 강화군 연안에는 쌍날집게,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 무문토기, 패총 등 석기시대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해남도 연안과 백령도, 대연평도 남쪽에서는 신석기 유물이 발견・조사되었는데 몽금포 조개무지, 해주시 용당동과 영양동 일대 돌도끼, 백령면 진촌리에서 발견된 말등패총[29)] 등이 있다.

고구려시대 때는 황해연안은 고구려 남방진출을 위해 해주에 수양산성을 쌓았을 정도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4세기 초에는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킨 후 백령도를 고구려 영역에 편입시켰고,[30)] 강화에 혈구군을 설치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발해가 건국되었기 때문에 신라는 당나라와 교역을 위해 가장 안전한 요동연안항로(발해만 산둥반도)를 이용하지 못하여 황해를 횡단하

---

28) 양태진, '북한지명의 사적 고찰',「북한학보」, 29, 2004.

29) 백령도의 말등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병행사단선문(竝行斜斷線文)의 빗살무늬토기편, 빗살무늬토기계 민무늬토기원형, 긁개와 간돌토기 등의 타제 및 마제석부, 갈판과 냇돌석기와 같은 역석기, 격지석기와 같은 박편석기, 연석봉, 기타 골편이 출토됨. 말등패총은 패각층의 두께가 60-100㎝, 그 길이가 15-20m인 남한 최대의 패총으로 이 지역에서 인류가 거주했다는 실증적인 자료임(문창현, 2005).

30)「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시대의 곡도 이래로 국방상 요충지로 기능하였는데, 現 화동(化洞) 오군포(五軍浦)에 오군장(五軍長)을 주둔시켜 당군과 교전한 기록이 있음(문창현, *Ibid.*).

는 항로를 이용하였다. 황해 남부 연안은 신라에게 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신라는 강화에 대외적 방어와 지방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혈구진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강화는 당과 신라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북부 연안 항로와 중부 횡단 항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지점인 동시에 예성강과 임진강・한강의 하구에 해당하는 요충지로서 역할이 매우 컸다. 또한 백령도는 신라와 당의 교통상 중간기착지로 중요하였으며, 이 당시 골대도(骨大島)라고 불렸다고 전한다. 후삼국시대에 들어서도 백령도를 둘러싼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끝에 후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는데, 중국과 교통로에서 백령도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 황해 남부 연안은 예성강 하구를 기점으로 한 해상무역의 중간기지로 해상교역로의 주요 통로였다. 또한 강화는 1231년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직면하자, 지리적 조건상 방어에 유리한 전시 수도로서 항몽 투쟁을 주도하게 되면서 강도(江都)로 지칭되었다. 한편 대청도는 유배지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원의 귀족과 황태자가 대청도로 자주 유배를 오자 이 섬에 대한 고려의 관심도 높아졌고 주민 수도 증가하였다.[31]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대청・소청지역은 백령도와 함께 관서・호남・호서지역에서 한강 하구로 들어오는 조운선을 약탈하는 해적의 소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종 10년(1428년)부터 백령도에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고 대청도에 소를 방목하는 목우장이 설치되는 등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조선 초기에는 황무지 개간사업, 윤작법 등이 발전하여 논농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황해 남부 연안의 경지면적당 논농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김영봉 외, 2004). 조선시대 중반에는 옹진・강령지방의 모시풀, 배천・연안지방의 목화・양잠재배, 장연과 해주에는 철, 해주의 납, 장연의 동 등 광물생산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 조기가 처음으로

31) 계모의 모함으로 대청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소환되어 황제(元 順帝)로 즉위했다는 원 태자의 전설은 유배지에 온 사람들이 대청면 형성과 밀접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인천광역시, 2004).

발견됨[32]에 따라 조기 어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황해 남부지역에서는 상업적 농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여러 곳에서 목화와 담배를 많이 재배하였고 배천・연안지역은 왕골자리 수공업 제품이, 해주는 중요한 상업지로 성장하였다.

19세기 후반 강화도는 조선과 서구세력이 충돌한 전장이 되었고, 1875년 8월 강화해협을 무단으로 통과하려는 일본 군함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문호가 개방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는 일본이 '토지조사령'을 공표하고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식민회사를 설립해 황해남부 연안지역의 쌀과 각종 자원을 약탈하였다. 1930년대 들어서는 해주를 거점으로 한 해주제련소, 해주시멘트공장, 해주화학공장 등을 건설하여 자원과 공업제품을 수탈하였다. 일제강점 기간에 서해 도서지역 주민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는데 주로 장연읍(현, 장연군 장연읍)으로 일상생활용품, 의료혜택 등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분단 후에 백령・대청도 주민들은 장연에 갈 수 없어 옹진 5일장을 이용했고, 연평도 주민은 부포를 중심으로 소규모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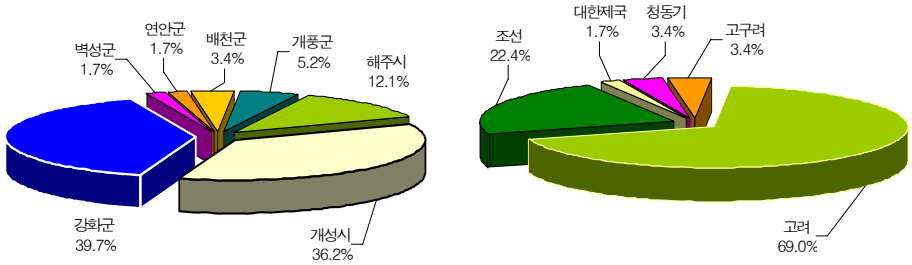
(3) 문화재 현황

서해연안 접경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이 시대별로 잘 보존되어 있다.

---

32) 향토지 「연평도」와 나이 많은 지역주민에 따르면, 조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634년 5월 27일(음력) 임경업 장군에 의해서임. 「연평도」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의주부윤이었던 임경업 장군이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구출하기 위해 마포나루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중 연평도에 정박한 것이 인연이 됨. 실제로 연평도에는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유적과 설화가 많음. 주민들은 임경업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충민사'라는 사당을 세웠고, 조기를 처음 발견한 장소로 알려진 안목이 대표적임. 안목에 대해 "임경업 장군이 가시나무를 찍어 간조시 이곳에 꽂게 하여 수많은 조기가 가시나무의 가시마다 걸렸다고 하며 이것이 연평도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었다고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오마이뉴스, 「연평도 역사와 사람들: 사람・돈이 몰리던 '황금시대' 연평도 어협 한 때 한국은행 일일 출납고보다 높았다」, 2002년 7월 10일자 기사 인용).

〈그림 2-5〉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화재 지역별 분포



전체 58점 중 강화군에 39.7%인 23점이 있고, 개성시에 36.2%인 21점이 있다. 강화군에는 단군유적 중 남한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첨성단과 삼랑성이 있으며, 고려와 연관된 전등사, 고려 고종홍릉, 17세기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축조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북한에서는 국보유적 187점 중 18.7%인 35점이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고려와 관련된 유적으로 왕건왕릉, 선죽교, 해주 다리니석당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 유물에는 강화군 강화지석묘(사적 제137호)[33]를 비롯하여 배천군 룡동리 1호 고인돌(북한국보 78호) 등이 대표적이다. 강화도 하점면 고인돌 부근의 주거지에서는 청동기시대 한반도 서북지방의 전형적인 유물인 팽이형 토기(角形土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이 고조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서영대, 1999).[34][35] 또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참성단은 「고

33) 지석묘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함. 강화군 하점면 부근에는 40여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이 중 부근리 고인돌이라 부르는 규모가 큰 탁자식 고인돌을 말함. 전체 높이는 2.6m이며, 덮개돌은 길이 6.5m, 너비 5.2m, 두께 1.2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음(문화재청 홈페이지).

34)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단군은 도읍을 평양,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으로 세 차례 옮겼음. 「고려사」에 따르면 여기서 아사달과 장당경은 황해도 문화현으로 유추됨(서영대, 1999). 각형토기의 존재는 단군 조선과 어떤 관련을 가진 서북한 주민의 한 갈래가 강화도로 이주해 왔음을 반영함.

35) 최근 북한에서도 고인돌과 팽이형 토기를 고조선의 指示的 유적·유물로 보고 있음(류병홍, 1995; 리순진, 1996; 서영대, 1999).

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고조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참성단을 단군의 제천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원종 5년(1264년) 풍수사 백승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고구려 유적으로는 연안군 연안읍에 있는 연안읍성(국보 86호)과 강화군 길상면의 삼랑성(사적 130호)이 대표적이다. 삼랑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 때문에 정족산성(鼎足山城)이라고도 하는데,[37] 조선 현종 1년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곳이기도 하며, 고종 3년(1866)의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을 물리친 곳으로도 유명하다. 고구려 시대에 황해연안의 풍부한 자원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고구려 남방 진출을 위해 해주 북쪽에 수양산성이 축조되기도 하였다(김영봉 외, 2004).

과거 고려의 중심이었던 것을 반영하듯이 고려시대의 유적들은 강화군, 개성시, 해주시, 개풍군 등지에 널리 산재해 있다. 개풍군 해선리에 있는 '왕건왕릉(국보 179호)'을 비롯하여 불교 경전의 총서인 「속장경(續藏經)」 출판에 크게 공헌한 대각국사 의천을 기념하여 1125년에 세워진 령통사대각구사비(국보 155호), 고려의 왕궁 터인 만월대(국보 122호), 포은 정몽주가 피살된 선죽교(국보 159호),[38] 해주다라니석당 등이 분포해 있다.

대표적인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강화도가

---

36) 참성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원종 5년(1264년) 풍수사 백승현이 왕에게 마리산 참성(塹城)에서 친히 초제(醮祭) 지내기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여 왕이 재초를 거행했다고 함. 당시 풍수도참가들이 고려가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로 천도하자 이를 단군과 연결시켜 현실 타개를 도모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서영대, *Ibid.*).

37) 성곽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경주의 명활산성처럼 삼국시대 성의 구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으로 추측(문화재청 홈페이지).

38) 이 다리는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최충헌이 전(傳)에 선지교(善地橋)라고 하였으나, 선죽교(善竹橋)라 불리어진 것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선죽교라 기술되었기 때문인데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바뀌었음을 알 수 있음. 선죽교는 일반적인 옛 다리와 마찬가지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다리 위 석조물은 1780년 정몽주의 후손이 다리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임(북한문화재자료관 홈페이지).

왕실의 보장처(保障處)[39]로 인식되면서 축조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와 같은 돈대(墩臺)가 있다. 돈대(墩臺)는 강화도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선(敵船)을 경계하고 적병의 상륙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유사시 강화도가 보장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어시설물이다(배성수, 2003). 또한 돈대는 바다와 갯벌이 선박의 접근을 저지하는 성곽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보조시설로 기능하였다.[40] 19세기 말 수차례에 걸친 서구 열강의 침략 당시에도 돈대는 해안을 방어하는 중요한 시설물로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었다.

〈표 2-9〉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화재 현황

지역		개수	문화재 명칭
강화군 (23)	강화읍	6	사인비구주성동종, 강화산성, 강화고려궁지, 고려고종홍릉, 갑곶돈, 성공회 강화성당
	하점면	4	강화하점면오층석탑,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강화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강화지석묘, 강화지석묘
	화도면	2	정수사법당, 참성단
	길상면	5	전등사 대웅전・약사전・범종, 삼랑성, 초지진
	불은면	2	덕진진, 광성보
	선원면	1	강화선원사지
	양도면	3	석릉, 가릉, 곤릉
개성시 (21)	송악동	4	만월대, 발어참성, 개성나성, 개성첨성대
	북안동	3	개성남문, 연복사종, 적조사쇠부처(철조여래좌상)
	박연리	2	관음사대웅전, 대흥산성
	방직동	5	개성 성균관(정몽주 집터), 홍국사탑, 불일사5층탑, 헌화사 7층탑, 헌화사비

39) 강화도가 국가의 보장처로 주목받은 이유는 강화도가 한강과 임진강・예성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도성에서 불과 100리 정도 떨어져 있어 육로 또는 수로를 이용한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 지세가 험하여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 고려왕조가 강화도에서 38년간 몽골군과 대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임.

40) 숙종 5년 강화도에 축조된 48개 돈대 중 27개 돈대는 갯벌이 펼쳐져 정박하기 힘든 서・남해안보다 염하와 조강이 흐르는 동・북 해안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돈대가 성곽의 지세가 약한 부분을 축조하는 보조시설이었음을 반영함(배성수, 2003). 또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적선의 방어보다는 육지에서 강을 건너 침입하는 외적의 방어에 있다는 점을 의미함(<부록 B> 江都全圖 참조).

〈표 2-9〉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화재 현황(계속)

지역		개수	문화재 명칭
개성시 (21)	선죽동	3	선죽교, 숭양서원(보리참성, 밀떡성), 표충비
	룡흥리	4	령통사5층석탑, 화장사부도, 오룡사법경대사비, 령통사대각구사비
해주시 (7)	부용동	1	부용당터
	옥계동	2	해주석빙고, 해주5층탑
	해청동	2	해주9층탑, 해주다라니석당
	영광동	1	순명문
	학현동	1	광조사 진철대사탑비
개풍군 (3)	해선리	3	공민왕릉, 광통보제선사비, 왕건왕릉
배천군 (2)	강호리	1	강서사 대웅전
	룡동리	1	룡동리 고인돌
벽성군 (1)	석담리	1	소현서원
연안군 (1)	연안읍	1	연안읍성
합계		58	

주 : 강화군과 옹진군의 문화재는 보물과 사적에 해당하고, 북한 지역의 문화재의 경우 국보유적에 해당함.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5; 북한문화재자료관(http://north.nricp.go.kr).

(4) 생활민속[41]

① 연평도 풍어제(배연신굿)

연평도는 조기잡이의 중심지로 대대적으로 파시가 형성된 곳으로 조기잡이와 관련된 '임경업 장군 신앙'의 출발지이다. 옹진군 일대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풍어굿을 '배연신굿'이라고 하는데, '연신'은 '영신(靈神)'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굿의 순서에 당으로 올라가 당할머니를 맞

41) 인천광역시, 2004.

아서 배에 모시는 과정이 있다. 이를 통해 '배연신굿'은 '배의 신을 맞아들이는 굿'이라는 뜻이다.

'배연신굿'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청나라로 갈 때 병사들이 굶주리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가시나무를 그물처럼 엮어 조기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 이후 뱃사람들은 그를 어업의 신으로 받들었고, 연평도에 사당(충민사)을 짓고 해마다 제를 올렸는데 배연신굿도 이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굿은 옹진군 일대를 비롯하여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도 성행하였다고 전한다. 배연신굿에는 조기잡이를 기원하는 대목이 있다. 소당제석 거리에서 무당이 제일 큰 조기를 들어 물동이에 넣고, 조기의 대가리 방향에 따라 장원(풍어)을 점치는 행동이나 영산할아범, 영산할멈굿에서 그물을 올리는 장면 등은 조기잡이와 관련된 생산 의례이다. 배연신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있다.

② 강화군 화도면 선수마을 대동굿

선수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성덕면 중촌마을 출신 주민들이 남하하여 새롭게 만든 마을이다. 본래 4-5호에 지나지 않은 한적한 어촌마을이었으나 황해도 출신 주민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대규모 포구로 변모하였다.

본당은 북한지역에서 내려온 만신의 현몽(現夢)에 따라 당을 지었다고 한다. 본당에 모신 신은 금성님, 장군신, 옥황상제, 아기씨, 용궁마마, 삼불제석, 칠성신장, 대감 등인데 그 중에서 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금성신은 바다를 지켜주는 신이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대동굿은 2월 한식, 3월 한식 등 한식이 드는 음력 절기에 따라서 변하는데 말날에 굿을 한다. 대동굿은 생활환경이 다르게 변한 황해도 주민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굿당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만으로도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요즘은 굿을 하지 않고 9월 9일 고사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③ 강화군 내가리 외포리 곶당제

외포리는 정포마을과 대정마을로 나뉘는데 정포마을은 어업이 주업이고, 대정마을은 농업이 주업이다. 대동굿은 이들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낸다. 제의는 3년마다 한번씩 음력 2월 초순에 길일을 택하여 산에 있는 당집에서 3~5일간 지낸다. 예전에는 굿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출어를 할 수 없었고, 굿이 끝나야 출어가 가능했을 정도로 엄격했다. 굿을 시작하는 것을 '초라제 핀다'라고 한다. 만신은 외부에서 모셔오는데 큰 굿일 경우 7~8인의 만신이 온다. 굿은 아침에 당집에서 절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후 바닷가에서 수살목이라고 하는 오리모양의 막대기(솟대)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꽂는데 이는 잡귀를 내쫓는 의식이다. 바닷가에서는 먼저 '한거리'라 부르는 굿을 올리고 동네를 돈다. 예전에 어민들이 많았을 경우 먼저 뱃기를 올리고 그 뒤에 대동기, 농기를 올렸다. 저녁이 되면 모든 깃발을 당집으로 올린다. 당집에서는 깃발 모두에 풍성한 수확과 배의 안녕을 기원하고 다시 기를 각자의 배로 가져간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제의가 쇠퇴함에 따라 내용이 축소되어 간단한 형식의 굿으로 변하였다. 그 후 인천시는 이 굿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였다.

④ 소청도 대감당과 서낭당제

소청도에는 임경업 장군을 모신 대감당과 서낭당이 있다. 대감당 제사는 정월대보름 들물 때 지내는데 선주집에서 각자 제물을 준비해 대감당 앞에 차려놓고 절을 하며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마을 뒷산에 있는 서낭당은 신성한 장소로 제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그곳을 찾지 않는다. 서낭당 안에는 임경업 장군의 영정이 있다. 마을에서는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9월 9일에 서낭당 제사를 지낸다.

⑤ 백령도의 심청전설

백령도는 고전소설 「심청전」과 유사한 '심청' 관련 설화가 전설처럼 구전되

고 있다. 고전소설에서 묘사된 심청이가 연꽃을 통해 환생한 이야기, 즉 바다 용왕과 조우(遭遇)하고 육지로 복귀한 후에 임금님의 도움으로 심 봉사와 해후(邂逅)하는 부분은 중국 상인들에 의해 심청이가 바다 풍랑 속으로 던져질 때 심청의 온몸을 감쌌던 비단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구명(救命)하게 되었고, 조류에 의해 황해도 덕동포까지 표류하여 그곳 고을 수령의 맹인잔치로 아버지를 만난다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 구성 및 맥락의 내용 전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최운식, 1996).

교원대학교 최운식 교수가 주도한 학술조사단이 1년간 확인작업을 한 결과에 따르면, 심청의 출생지는 황해도 황주이고, 심청이가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대가로 공양미 삼백 석에 용왕의 제물이 되어 치마폭을 뒤집어쓰고 뛰어든 인당수는 북한 장산곶과 두무진 사이에 위치한 황해도 장연 앞바다이다. 심청이 용궁으로부터 연꽃을 타고 조류에 의해 표류하다가 연꽃봉우리 형상의 바위에 걸렸다는 장소가 연봉바위와 연화리인 사실도 고증하였으며, 백령도가 「심청전」의 실제 무대임을 확인하였다(한국민속학회, 1998). 이에 옹진군은 효녀 심청의 효(孝) 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발굴・계승하며 실향민의 망향의 고통을 위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당수와 연봉바위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진촌리 일대의 야산 1,380평 부지에 심청각과 심청 동상을 건립하여, 「심청전」의 일대기를 묘사한 모형, 판소리 및 마당극, 영화, 고서적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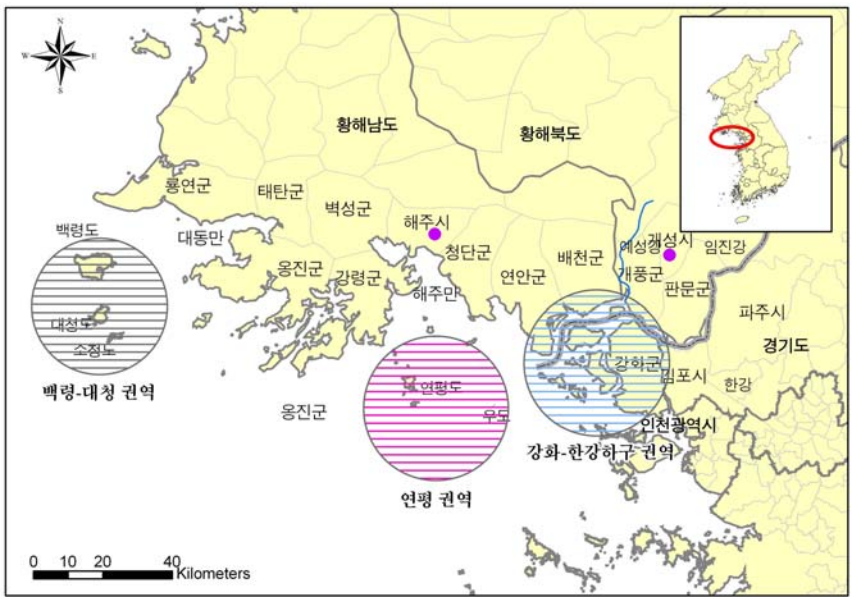
2. 권역별 현황 및 이슈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할 때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으로는 내륙 및 모도 주변에서 접근성, 남북이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해양생태자원, 문화・역사적 자원, 수산자원 분포 및 지역주민의 수산업 의존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현지 조

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백령·대청 권역, 연평 권역, 강화·한강 하구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중심으로 도출한 권역별 현황 및 쟁점 사항은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공간관리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림 2-6〉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측의 3개 권역



1) 백령 · 대청권역

(1) 지리적 개관

백령도는 동경 124°53′, 북위 37°52′에 위치한 남한 서해 최북단 도서로 인천과 222.2㎞, 황해도 장연에서는 직선거리 10㎞, 장산곶에서는 15㎞ 정도 떨어져 있다. 원래는 장연군에 속해 있다가 광복 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남한에

서 14번째로 큰 섬이었으나 최근 화동과 사곶 사이를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하는 간척사업 때문에 남한에서 8번째로 큰 섬이 되었다. 현재 백령도 면적은 46.35㎢, 해안선 길이는 56.75㎞이다.

대청도는 북위 37°48′, 동경 124°43′에 있고, 면적은 15.56㎢, 해안선 길이는 41.24㎞이며, 인천과 202㎞, 황해도 장산곶에서는 19㎞ 가량 떨어져 있다. 대청도 주변에는 소청도와 무인도서인 갑죽도가 있다. 대청도도 마찬가지로 1894년 황해도 장연군에 속하였고, 1928년 백령면에 예속되었다가 1974년 대청면으로 승격한 이후,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었다.

〈표 2-10〉 백령·대청권역의 지리적 개관

구 분	백령도	대청도·소청도
행정구역	옹진군 백령면	옹진군 대청면
위 치	동경 124°53′, 북위 37°52′	동경 124°43′, 북위 37°48′
거리	인천과 거리 222.2㎞ 장산곶과 거리 15㎞	인천과 거리 202㎞ 장산곶과 거리 19㎞
면적 / 해안선	46.35㎢ / 56.75㎞	15.56㎢ / 41.24㎞
무인도서	-	갑죽도

(2) 역사적 변천과정

백령도 진촌리 동쪽 해안에서 신석기 유적인 말등패총이 발견되었고, 출토된 토기와 석기를 분석해본 결과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출토품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령도에는 늦어도 신석기 말기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백령도의 거주민은 평남, 황해도 지방과 일정한 문화적 연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령도는 고구려 때부터 국방상 전략적 요충지로 당과 교전한 기록이 있고, 통일신라 때는 당과의 해상교역에서 중간기착지로 경제·정치적으로 중요하여

‘골대도(骨大島)’라고도 불렀다. 「고려사」에 따르면 현종 9년 옹진군 백령진을 설치하여 외적으로부터 백령도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령도는 고려와 원의 유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620년 저술된 「백령도지」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백령도에서는 한혈마(汗血馬)로 유명한 서역의 아라비아 말을 기르는 목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장연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국가안보상 전진기지로 고려되었고, 최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과 조업 중인 남한 어선의 나포로 현재 백령도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42)]

고려 전 시대를 거쳐 대청・소청도는 죄인의 유배지였다. 특히 대청도는 고려와 원의 유배지로 그 이용범위가 넓어졌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화된 지역으로 버려져 있었고, 백령도와 함께 해적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나 세종 10년 대청도에 소를 방목하는 목우장이 설치되면서 주민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3) 자연환경

① 기후

백령도와 대청도는 해류와 해수온도 등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서로 한서(寒暑)의 차가 크게 나타난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하며,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탁월하다. 최한월은 1월, 최난월은 8월이며 연강수량은 900mm 내외로 내륙지역 평균 강수량인 1,100-1,400mm보다는 낮은 편이다. 겨울의 강설량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맑은 날이 많지만 바람이 강하고 5-7월의 짙은 안개는 농업과 어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심한 지장을 주고 있다(홍성조・유호상, 1997).

---

42) 최악의 남북대치상황이 전개된 1966~1970년에는 -12.7%, 1970~1975년에는 무려 -39.8%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여 현저한 인구유출지역이 됨(국립지리원, 1984).

② 지질 및 지형

백령도는 제4기 빙하기 때에 황해도 옹진반도와 연결되었던 평원상에 돌출한 잔구상의 지형으로 후빙기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저지가 침수되어 육지와 분리되면서 형성된 섬이다(홍성조・유호상, 1997). 또한, 황해도의 옹진반도와 같이 선캠브리아기 원생대말에 형성된 상원계의 규암과 셰일,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기반암 외에 충적층, 현무암, 단층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나기창・이문원, 1987). 변성퇴적암류는 백령도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하부에서부터 셰일, 슬레이트 및 규암이 분포하고 있다. 규암은 백령도의 2/3를 점하고 있다. 현무암은 백령도 북동쪽의 진촌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부채꼴모양으로 노출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이다(나기창・이문원, 1987). 대청・소청도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경기편마암복합체로서 오래된 변성암이다. 외해에서 접근하는 파고가 높은 파랑과 겨울의 강한 북서계절풍은 독특한 지형경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윤순옥, 1999).

백령도의 전체적인 지형 윤곽은 'ㄷ'자 형으로 동단부는 소규모 만입지형의 갯벌이 있어 신라시대부터 중국과 왕래하는 선박들의 중간기착지나 해난시 임시피난처로 이용되었다. 남동쪽 연안을 제외하고 해안선은 비교적 출입이 단조로운 형태로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이 발달해 있다. 동북부 연안에 있는 용기포와 용기원산은 백령도와 분리된 섬이었으나 육계사주가 발달하여 본도와 연결된 전형적인 육계도이다. 또한 백령도에서 대표적인 해안침식지형으로는 두무진[43]을 들 수 있다. 두무진은 원생대 지층인 상원계 규암이 파랑과 북서계절풍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또한 암석해안에서 기반암의 일부가 바다로 돌출하거나 작은 바위섬으로 분리된 형태인 시스텍, 연암부가 심한 파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식동, 해안단구 등이 잘 발달해 있다. 두무진[44]에는 형제바위, 코끼리바위, 신선대, 촛대바위, 병풍바위, 등대바위 등 높이 50m 내외의 절벽이

43) '서해의 해금강' 혹은 '금강산의 총석정'이라 지칭되는 백령도의 두무진(명승 제8호)은 "뾰족한 바위들이 많아 마치 머리털 형상과 같이 생겼다"하여 두모진(頭毛津)이라 칭해졌음.

44) 고려시대 충신 이대기는 「백령지」를 통해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극찬하였음.

서북단 해안인 연화3리 일대의 4㎞ 해안선을 따라 잘 발달해 있으며, 그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그림 2-7〉 백령도 두무진 전경



사진 : 남정호(2005. 7. 13 촬영).

용기포 선착장 남서단 진촌리 일대의 사곶 해수욕장은 길이 2.5㎞, 폭 300m로 세립의 사질 내지는 규질의 실트로 구성된 조간대 지역의 대규모 해안퇴적지형이다. 사곶의 사빈은 세립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인 조수의 영향으로 장기간 치밀하게 다졌기 때문에 천연비행장으로 이용될 만큼 매우 단단하였다. 그러나 1975년 국방상의 이유로 시멘트 장벽과 방풍림이 조성되면서 사빈의 확장과 배후 사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생계계의 단절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1년 농지 538㏊(161만 평)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진촌리 사곶과 남포리 화동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820m의 방조제를 축조하는 잔촌지구간척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트가 대량으로 유입하여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물렁해변'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담수호에 염분이 다량유입[45]하여 수자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45) 1999년 완공한 담수호(담수용량 250만t)의 염도는 ℓ당 1만 2천~1만 5천㎎으로 측정되었다고 함. 이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염도(ℓ당 1천~1천 500㎎)보다 최고 15배 가량 높은 수치임(인천일보, 종이신문정보, "백령도 진촌간척지 농사 힘들 듯", 2005. 11. 28일자).

〈그림 2-8〉 백령도 사곶해수욕장(좌) 및 잔촌리~남포리 방조제(우)



사진 : 남정호(2005. 7. 13 촬영).



사진 : 강대균(2000. 8 촬영).

사곶해수욕장에서 남서쪽으로 2㎞ 떨어진 남포리 해안에 '콩돌해안'이라 불리는 자갈해안도 유명하다. 콩돌해안은 0.4~6㎝ 크기의 콩알 모양의 둥근 자갈로 이루어진 길이 1.5㎞, 폭 50m의 해빈이다. 둥근 자갈은 백령도의 모암인 규암이 장기간에 걸쳐 파식작용으로 마모되어 작은 콩과 같은 둥근 형태를 보여 콩돌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세립질 퇴적물 없이 돌들만 파도에 밀려왔다가 밀려가기 때문에 이 해안을 '단구상 미지형 발달 해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구해안에서는 파도의 강도에 따라 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수욕을 할 수 없다.

〈그림 2-9〉 백량도 콩돌자갈(좌)과 콩돌해안



사진 : 강대균(2000. 8 촬영).



사진 : 남정호(2005. 7. 13 촬영).

대청도의 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의 지형경관은 매우 대조적이다. 외해에서 접근하는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쪽 해안은 바다에서 공급한 모래가 겨울철 북서계절풍에 의해 배후 산지의 사면에 운반되어 대단히 규모가 큰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외해의 파랑이 직접 도달하지 않고 항구시설이 남동쪽으로부터 모래 공급을 차단하는 선진동 해안은 기반암이 노출된 파식대가 분포하고 있다. 섬의 북쪽 해안은 해발고도 30m 내외의 구릉지와 낮은 곡저평야로 경지와 취락이 밀집되어 있다. 북측해안의 양지동 북측연안과 옥죽동의 2㎞ 내외의 만입부에 사빈해안이 있다. 옥죽동에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길이 3㎞, 해발 40m에 이루는 거대한 모래언덕이 있다. 소청도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긴 섬과 헤드랜드 사이의 내만의 규모가 작아 사빈해안은 없고 대부분 해식애와 자갈해안으로 되어 있다.

〈그림 2-10〉 대청도 옥죽포 해안사구(좌 : 전경, 우 : 방풍림 식재)



사진 : 육근형(2005. 7. 13 촬영)

(4) 생태계 현황

① 점박이물범(spotted seal ; *Phoca largha*)[46]

점박이물범은 고래를 제외한 서해안 유일의 해양포유류이며 서해안의 깃대

46) 물범의 정확한 학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나 여기서는 Won and Yoo(2004)에 따라 *Phoca largha*, 점박이물범으로 통일함. largha는 빙하에 해당하는 시베리아 토착어인 퉁구스어를 라틴어 형식으로 표현한 것임. Common seal 또는 harbor seal로 알려져 있는 잔점박이물범은 *Phoca vitulina*로 그 서식지가 점박이물범과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빙하나 얼음 위가 아닌 open water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Wikipedia 백과사전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Phoca_largha).

종이다. 백령도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최남방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은 용기포구 동북방 3㎞ 지점의 물범바위를 중심으로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백령도 서측 두무진,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연봉바위, 갑죽도와 사탄동 해안가 등에서도 출현한다고 한다.

백령도 일원에 분포하는 물범은 캘리포니아 알류산해역과 캄차카 반도, 쓰시마, 북해도 및 혼슈 등과 같은 냉수대 해역을 따라 분포하는 잔점박이물범(harbor seal)과 유전학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생물지리학적 측면에서는 주 서식지에서 고립된 종으로 불 수 있어 향후 이곳 물범 서식지가 훼손되고 개체군이 영향을 받는다면 절멸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2000년부터 이곳의 물범서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에는 354마리, 2003년에는 298마리, 2004년에는 267마리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한다.[47] 물범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백령도 인근에서 자주 출몰하는 상어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물범의 번식지인 중국 랴오둥만의 밀렵과 온난화로 서식환경이 악화되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48]

이 곳 물범은 지역주민과 수산자원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관계에 있다. 지역주민이 노래미 등을 잡기 위해 어망을 바다 속에 놓으면 물범이 어망 속에 있는 수산물을 먹어치워 지역주민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물범과 같은 희귀 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희귀 동물의 보호와 지역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47) 중앙일보, “백령도 점박이물범 상어 무서워 도망쳤나”, 2006. 6. 21일자.

48) 중국 측에서는 밀렵을 부인하고 있음. 중국 점박이물범 국가중점자연보호구관리처의 장웨이는 “1970년대에는 매년 1,000마리씩 포획한 것이 사실이지만 92년 랴오둥 만 보호구역 설치 이후 밀렵을 철저히 막았다”고 밝힘(중앙일보, “백령도 점박이물범 상어 무서워 도망쳤나”, 2006. 6. 21일자).

〈그림 2-11〉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쉬고 있는 점박이물범(좌)과 무리(우)




사진 : 한국진 촬영(환경운동연합 제공).

② 연안 식생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의 자연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남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도서 군(群)으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특이한 생물상을 보여주는 곳이다. 특히 식물구계상(植物區系, floral region)[49] 한반도 중부아구(이우철・임양재, 1978)에 속하며, 군계수준에서는 냉온대 중부(Yim and Kira, 1975)에 해당하나 해류의 영향으로 남방계와 북방계의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와 인근 도서에 대한 식물조사는 1987년 자연보존협회, 1992년, 1997년 환경부 등이 수행하였다. 1987년 식물상 조사에서 박규하(1987)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산식물이 108과 332속 468종류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1992년 환경부 조사에서 김태욱 외(1992)는 백령도의 소산식물을 107과 357속 570종류로 보고하면서 모감주나무의 자생 가능성과 해안가에 입지한 군락의 분포를 밝혔다.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민병미・노병임(2000)은 백령도와 대청도의 식생조사를 통해 지역별 주요서식지와 생태적 보전가치에 관한 등급을 설정하였다. 백령도 중 남포1리 지역이 보전적 가치가 높은 Ⅳ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남포1리 지역은 만조선과 곰솔림과 사이에 경사가 약 5°, 폭 10m, 길이

49) 지구상 각지에 분포하는 식물종을 비교하여 그 식물상(植物相)의 특징에 따라 구분한 지역을 말하며, 기후와 생태적인 조건과 관계가 있으나 주로 지사(地史)에 의한 조건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600m인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파랑이 다소 작기 때문에 저질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만조선까지 식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순비기나무가 거의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군락은 폭 9m, 길이 60m, 높이가 40㎝, 피도가 100%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자연성이나 사구의 안정성 측면에서 서해안에서 보기 드문 자연식생지역으로,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평가하였다.

대청도 서남쪽 사탄동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66호인 동백나무는 동백나무 자생지의 북방한계선으로 생태적인 가치가 있으며, 현재의 보호 상태는 양호하나 어린가지의 발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요청된다(전승훈・석동임, 1997). 대청도 옥죽동의 해안사구에는 사구식생이 분포하는데 좀보리사초가 우점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그 외 통보리사초, 도꼬마리, 모래지치, 솔장다리가, 옥죽동 사구 주변에는 순비기나무, 갯뫼꽃, 갯쇠보리 등이 생육하고 있다(정홍락・양금철, 1997).

〈표 2-11〉 백령도・대청도 특정해안식물을 이용한 보전가치 평가표

구분		종명	중요서식지	생태적 특성
백령도	사구식물	*Elymus mollis*(갯그령)	사곶동, 남포 I	소규모의 patch
		Carex kobomugi(통보리사초)	사곶동	간헐적
		Vitex rotundifolia(순비기나무)	남포 I	대규모의 순군락
		Messerschmidia sibirica(모래지치)	중화동, 두무진	간헐적
		Glehnia littoralis(갯방풍)	남포II	간헐적
	염생식물	*Suada japonica*(칠면초)	사곶동, 화동	대규모의 혼합군락
		Salicornia herbacea(퉁퉁마디)	화동	소규모의 순군락
		Phragmites communis(갈대)	화동, 진촌리	중규모의 혼합군락
		Limonium tetragonum(갯질경)	화동, 진촌리	소규모의 순군락
대청도	사구식물	*Elymus mollis*(갯그령)	옥죽동, 양지동	소규모의 군락
		Carex kobomugi(통보리사초)	옥죽동, 양지동	대단위 군락
		Messerschmidia sibirica(모래지치)	옥죽동, 양지동	간헐적
		Vitex rotundifolia(순비기나무)	옥죽동, 양지동, 사탄동	소규모의 군락
		Phragmites communis(갈대)	옥죽동, 양지동	소규모의 군락

자료 : 민병미・노경임(2000).

〈표 2-12〉 백령도 · 대청도 구역별 식생 보전가치 평가표

구역		식생 특징	보전가치
백령도	사곶동	- 만조선 근처에 엉성한 사구식생 분포 - 갯그령이 가장 넓은 면적의 군락 형성 - 군락의 피도는 30% 이하 - 모래조간대의 사구 식생 복원 필요	Ⅲ등급
	화동리	- 과거 염전이었으나 매립으로 해수가 단절된 상태 - 칠면초의 피도 10% - 니질조간대의 전형적인 칠면조 군락 존재	Ⅱ등급
	남포1리	- 순비기나무 순군락 형성	Ⅳ등급
	남포2리	- 전형적인 어촌으로 모감주나무 자생 - 갯메꽃과 순비기나무 군락형성 - 인간의 간섭으로 자연성은 매우 낮은 상태	Ⅲ등급
	중화동	- 자갈이 많은 사질해안으로 해아식물이 정성적인 정도로 생육하고 있을 뿐 식생측면에서 보전가치 없음	Ⅱ등급
	가을리 (두무진)	- 염생식물 및 사구식물은 만조선 근처에 간헐적으로 분포 -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해수가 청정하여 해양생물상은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해안식물의 보전가치는 없음	Ⅲ등급
	진촌리	- 염생식물과 사구식물이 고루 분포 - 규모면에서 작고 파랑에 의한 교란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군락을 보임.	Ⅳ등급
대청도	선진동	- 해안선에 가까운 산지에 소사나무 군락 형성 - 해안식생 발달은 미비하지만 해양동물의 다양성에 따라 보전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	Ⅱ등급
	옥죽동	- 제방 안쪽 배후습지의 지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 - 갈대, 순비기나무, 칠면초, 모래지치 등 식물이 소단위로 군락형성 - 사구가 불안정하여 사구식생 발달초기단계로 볼 수 있음	Ⅱ등급
	양지동	- 해안선을 따라 300m 구간에 폭 10-25m 사구식생 형성 - 갯그령군락과 갈대, 순비기나무 군락형성 - 대청도내 사구식생으로 가장 자연성이 높은 지역	Ⅲ등급
	사탄동	- 만조선으로부터 6-7m 높이의 사구 형성 - 순비기나무를 중심으로 사구식생이 형성되어있으나, 현재 인간간섭으로 기존 식생이 파괴되는 실정	Ⅱ등급
	사탄동	-천연기념물 68호 동백나무군락의 북방한계지역	Ⅲ등급

주 : Ⅰ등급(보전가치 전혀 없음) → Ⅴ등급(보전가치가 매우 높음)
자료 : 민병미 · 노경임(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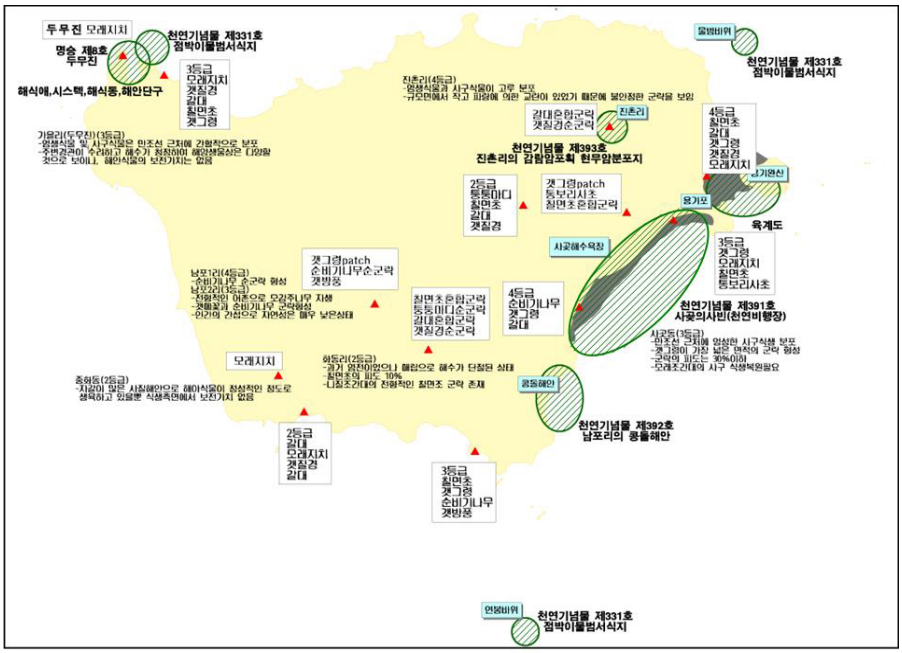
③ 보호구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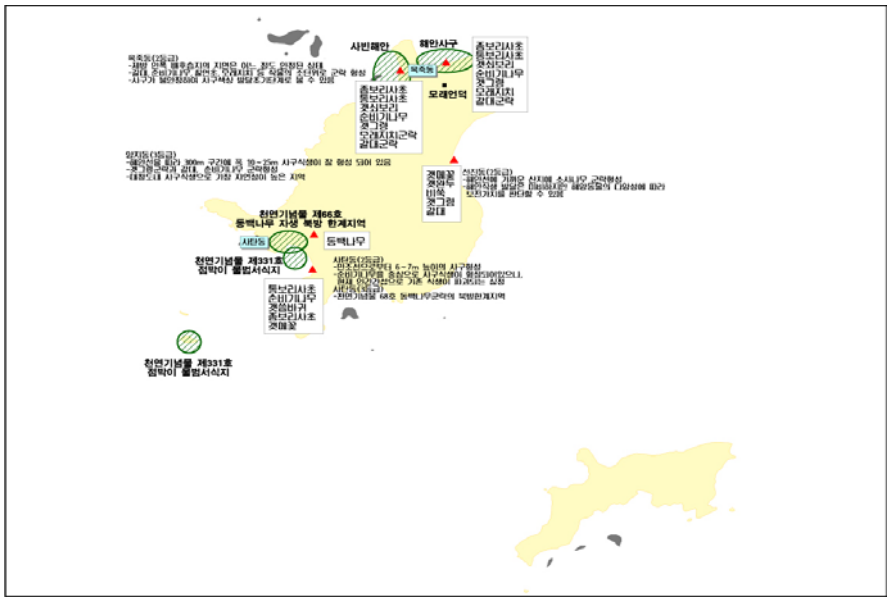
백령도와 대청도에는 대규모 모래해안, 해식애와 같은 중요한 지형경관에서부터 생물지리학적으로 대표종인 물범, 지질적 가치가 높은 현무암 분포지, 동백나무의 북방 한계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경관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6개소로, 천연기념물이 5건, 명승이 1개소가 있다. 이 중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된 물범의 분포지역은 전국 동해, 남해, 서해안 일원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물범의 서식지 및 번식지, 이동경로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1년까지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표 2-13〉 백령도·대청도의 보호구역 지정 현황

종목		명칭	규모	지정일자
천연기념물	제66호	대청도의 동백나무 자생 북방 한계지역	252,596㎡	62.12.3
	제331호	물범	전국	82.11.04
	제391호	백령도 사곶의 사빈 (천연비행장)	길이 2㎞ 폭 200m	97.12.30
	제392호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	길이 800m 폭 30m	97.12.30
	제393호	백령도 진촌리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6,307㎡	97.12.30
명승	제8호	백령도 두무진	318,544㎡	97.12.30

〈그림 2-12〉 백령도 · 대청도의 생태자원 분포도





(5) 사회경제적 이용현황

①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본래 장연군 소속이었던 백령도와 대청도는 1945년 이후 경기도 옹진군으로 편입되었고, 1995년에 다시 인천시로 편입되었다. 백령면은 2005년 현재 진촌, 북포, 가을, 연화, 남포 5개 리가 속해 있으며, 대청면은 대청리와 소청리가 있다.

백령·대청권역의 인구는 2005년 현재 4,931명, 인구밀도는 93명/㎢으로 남한 연안 인구밀도(406명/㎢)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1.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백령면의 면적은 46.35㎢이고, 인구는 2005년 현재 3,719명, 인구밀도는 92명/㎢이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1.4%로 감소추세에 있다. 백령면의 인구 중 48.6%는 진촌리에 거주하고 있다. 대청면의 면적은 15.56㎢, 인구는 1,212명, 인구밀도는 95.7명/㎢이다. 최근 10년간 인구는 연평균 2%씩 감소하고 있다.

〈표 2-14〉 백령·대청권역의 인구 현황

구분	면적(㎢)	인구수(명)			연평균증가율 ('95-'05, %)	인구밀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백령면	46.35	4,266	4,194	3,719	-1.4	92.0
대청면	15.56	1,489	1,395	1,212	-2.0	95.7
합계	61.91	5,755	5,589	4,931	-1.5	93.0

자료 : 통계청 총인구조사(1999, 2000, 2005).

② 토지이용 현황

백령·대청권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지목은 임야로 전체 면적 중 71.6%(3.58㎢)를 차지하고 있고, 전면적은 13.9%(8.44㎢,) 답면적은 7.9%(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백령면은 임야가 전체의 67.1%인 30.5㎢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면적은 15.1%인 6.87㎢, 답면적은 10.1%인 4.61㎢로 나타났다.

〈표 2-15〉 백령 · 대청권역의 토지이용 현황

구분		계	전	답	과 수 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기타
백령면	㎢	45.47	6.87	4.61	0.04	0.44	30.51	0.29	2.71
	%	100.00	15.10	10.15	0.08	0.96	67.12	0.63	5.96
대청면	㎢	15.38	1.57	0.21	-	0.03	13.06	-	0.51
	%	100.00	10.20	1.39	-	0.20	84.91	-	3.31
합계	㎢	60.85	8.44	4.83	0.04	0.47	43.58	0.29	3.22
	%	100	13.86	7.93	0.06	0.77	71.61	0.47	5.29

자료 : 인천시 통계연보(2005).

③ 수산업 현황

백령 · 대청권역의 수산업현황을 살펴보면, 어촌계는 총 6개로 계원수는 500명 정도이다. 대청면이 백령면보다 계원수와 생산량이 많은데, 백령면 절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농업을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6〉 백령 · 대청권역의 어촌계 현황

구분	어촌계 수	가구(호)		인구(명)		물량	금액 (백만 원)	계원수	호당평균 소득('03) (천 원)
		전체	어가	전체	어업				
대청면	3	451	261	1,180	564	316	1,120	324	42,800
백령면	3	1,526	206	4,171	459	224	1,115	176	47,000
합계	6	1,977	467	5,351	1,023	540	2,235	500	89,800

자료 : 수협중앙회(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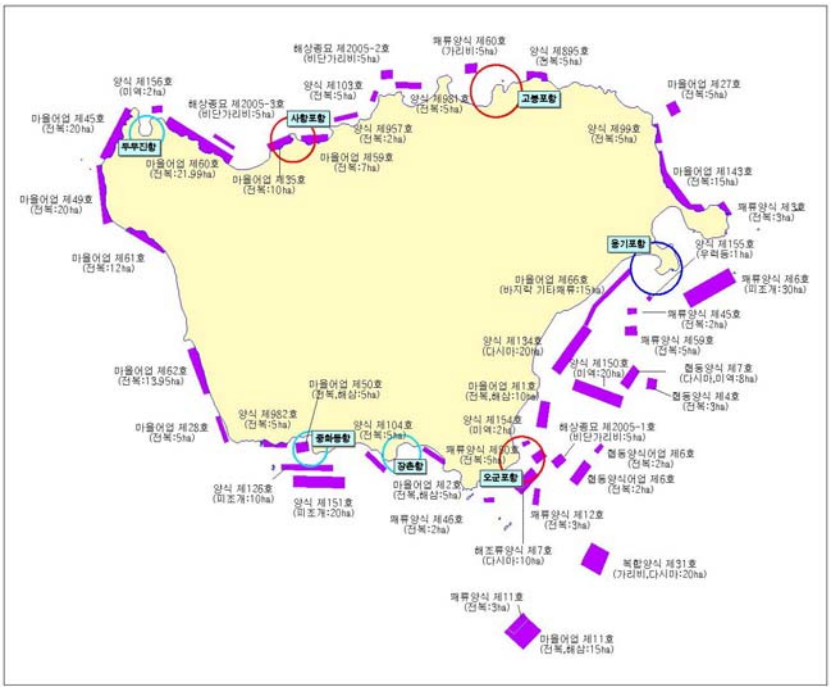
백령·대청권역의 어업권은 83건, 701ha이다. 백령도의 어업권은 44건, 397.9ha이며, 주요 어종은 전복, 해삼, 바지락 등이다. 대청도의 어업권은 39건, 303.4ha로, 전복, 해삼, 비단가리비 등이 주요 어종이다.

〈표 2-17〉 백령·대청권역의 어업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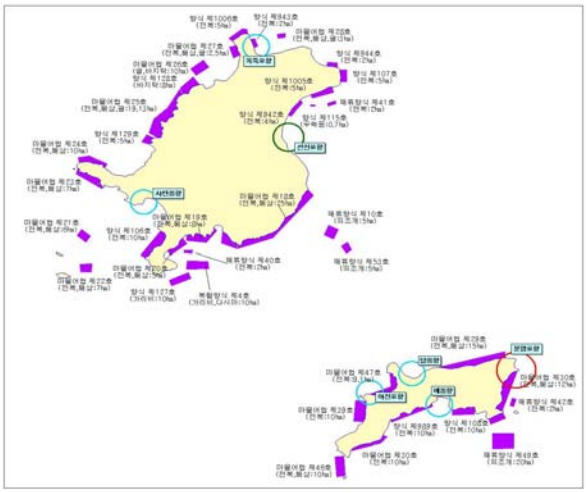
구분	합계		마을어업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협동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대청	39	303.4	18	175.7	1	0.7	19	117	-	-	1	10	-	-
백령	44	397.9	15	179.9	1	1	18	120	5	54	1	20	4	23
합계	83	701.3	33	355.6	2	1.7	37	237	5	54	2	30	4	23

자료 : 옹진군청 내부자료(2006).

〈그림 2-13〉 백령도·대청도 인근 해역의 어장도



자료 : 옹진군청 내부자료(2006).



자료 : 옹진군청 내부자료(2006).

백령·대청권역의 지역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그 원인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중국 어선의 조업뿐만 아니라 남획, 침적 폐어망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 등으로 해마다 어획량과 어획고가 감소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관리여건 및 현안

백령·대청권역은 남한 서해연안 최북단에 위치한 도서로 이루어진 권역으로 내륙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정치·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와 경관이 잘 보전·유지된 지역으로, 고고학적, 지형경관적, 지질학적, 생물지리학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 불안감,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와 무분별한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해 발생한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생활여건 저하, 육지지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나타난 상대적 박탈감 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① 점박이물범의 번식지 ·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북한 · 중국차원의 광역적 생태계 보호 협력체계 마련 필요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생물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캄차카 반도, 쓰시마, 북해도 등 냉수대 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잔점박이물범과 유전적으로 다르다.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은 백령도와 북한 서해연안, 중국 발해만 등을 오가며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로,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밀렵과 산업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현재 개체수가 350~400마리로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물범은 겨울철이면 중국 발해만 랴오둥 만 얼음 위에서 서식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얼음이 녹아 바다의 결빙구역이 줄어듦에 따라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중국 어민의 밀렵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1988년 점박이물범을 국가 1급 중점보호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1996년엔 물범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물범 보호에 나섰지만 밀렵은 근절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중국 랴오닝 성 정부는 물범의 서식지 보호구역인 창싱 섬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을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이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다.[50] 또한 장산곶이 보이는 군사적 대치상황 때문에 이곳의 군인들이 해안에 접근하는 물범을 오인 사격하는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물범이 해안을 기피한다. 백령도 주변의 관광과 어로행위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 서식지도 과거 물범바위에서 백령도 남쪽 연봉바위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서해의 깃대종인 점박이물범을 지속적으로 보호 ·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하여 광역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간척사업, 방조제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로 지형경관 훼손

사곶 해수욕장은 세립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기적 조수의 영향으로 다져져 천연비행장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단단하였다. 그러나 시멘트 장벽과

50) 한겨레, “물범 중국서 밀렵 성행… 20달러에 팔려”, 2006. 6. 29일자.

방풍림 조성 등 인위적인 생태적 단절로 실트가 대량 유입되면서 '물렁해변'으로 전락하였다. 사곶 해안 인근 바다는 해초가 많아 가자미의 산란·서식처였으나, 방조제 건설 이후 해류·조석이 변해 어족자원이 줄어들었고 어민소득에도 영향을 주었다. 백령도 사곶해수욕장 옆에 방조제를 축조하면서 건설한 백령호는 생활폐수가 유입하여 농업용 담수호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중요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보전적 가치, 현재 이용개발 특성, 미래의 보전·이용가치 등을 분석하여 기능에 따라 구획하는 용도구역제(Zoning)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③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지역토착문화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필요

백령·대청권역은 두무진, 콩돌해안 등 수려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정치·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심청전」의 실제 무대인 인당수, 연봉바위, 연화리가 있으며 몽금포타령의 발원지인 장산곶 등을 직접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한국 최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역사적 종교성지이며, 남한 최대의 패총인 말등패총은 고고학적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공해 농수산물을 표방한 까나리 액젓, 백령도약쑥 등은 백령도 특유의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아 지역 특산품으로도 부상하고 있다(문창현, 2005).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광개발전략이 필요하며, 전시 지향적 관광개발이 아닌 백령도의 지역토착문화가 반영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정부 등 지역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평권역

(1) 지리적 개관

대연평도는 동경 125°43′, 북위 37°40′에 위치한 남한 서해 도서로 인천과 145㎞, 황해도 부포리와 직선거리로 10㎞ 정도 떨어져 있다. 「고려지리지」에 의하면 연평도는 '안서대도호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해주목의 영역에 있었다. 1938년 황해도 백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경기도 옹진군으로 편입되었고. 1995년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인천시에 편입되었다. 2000년 7월 20일에 송림면에서 연평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 2-18〉 연평권역의 지리적 개관

구 분	연평도
행정구역	옹진군 연평면
위 치	동경 125°43′ , 북위 37°40′
거리	인천과의 거리 145㎞ / 황해남도 부포리과의 거리 10㎞
면적 / 해안선	7.29㎢ / 36.67㎞
무인도서	10개

(2) 역사적 변천과정

대연평도의 남쪽 해안과 주변 섬에서 1968년에 많은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토기와 석기는 해주시 용당포패총 출토의 빗살무늬토기문화와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9주의 하나인 '한주'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 이래 조선시대에 편찬한 각종 지리서와 읍지에서 연평도를 해주목의 일부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연평도에 목장과 봉수를 설치하였는데, 임진왜란 막바지에 달했던 선조 31년(1598)에 전마(戰馬) 징발을 명령한 목장에 연평도 목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평도의 조기잡이는「세종실록」지리지에 '석수어가 목(牧)의 남쪽에 있는 연평평에서 산출되는 춘하지교(春夏之交)에 제처(諸處)어선이 모두 여기에 모여 이를 그물로써 잡으며 관에서는 그 세금을 징수하여 국용의 재물로 삼는다'고 기록되어 있다.「임원십육지」에는 "호남 칠산탄에서 시작하여 연평바다에 이르는 어장에서 많이 잡히는 조기는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젓갈로 만들기도 하여 전국에 유통하였는데 귀천이 이를 모두 좋아하며 생선 가운데 가장 많고 가장 맛이 좋다"고 하였다. 조기는 그물을 이용해서 잡았고 어기(漁基)가 되면 조기 어업이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향토지「연평지」에 따르면, 임경업 장군이 1634년 5월 27일(음력) 연평도에서 처음으로 조기를 관찰했다고 한다. 실제 연평도에는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설화와 유적이 많은데, 이 중 충민사는 임경업 장군을 위해 세운 사당이고, 연평도 풍어제(배연신굿)는 임경업 장군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해방전의 연평도는 황금파시였다고 한다. 향토지「연평도」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해방 전 왜정시대는 그야말로 황금의 파시였다. 상업을 목적으로 한 많은 왜인이 몰려왔고 멀리 대만과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등 각처에서 수천 척의 어선이 대거 출동하여 연평 앞바다를 메웠으며 저잣거리가 형성되고 술집, 잡상인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대도시를 방불케 하였다. 2척의 연락선(등정환, 만리환)이 매일 운행할 정도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했으며, 그 당시의 어획고는 천문학적 수치로 연평어업협동조합의 일일 출납고가 한국은행의 출납보다 그 액수가 높았다고 하며, 노래에도 **'돈 실러 가세, 돈 실러 가세, 황금바다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세'라는 가사가 말해주듯이, 천혜의 연평도요 복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연평도의 황금시대는 해방과 함께 사라졌고 분단 이후 굴비의 주 소비지였던 북한시장과 단절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심하여, 한국전쟁 이후 연평도의 황금파시는 끝이 났다고 한다.[51]

51) 한겨레, "연평도역사와 사람들, 사람·돈 몰리던 '황금시대' 연평도 어협 한때 한국은행 일일 출납고보다 높았다", 2002. 7. 10일자.

(3) 자연환경

① 기후

연평도는 대륙성 기후와 해류, 수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한서의 차가 크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탁월하며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분다. 그러나 봄과 여름의 풍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해무는 4~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5~6시간씩 지속된다. 약 60일의 연평균 폭풍일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나타난다. 연평도는 해풍 때문에 봄철에 냉량한 편이나 가을철에는 다른 군에 비하여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강대균, 2000).

② 지질 및 지형

연평도는 선캠브리아 원생대말의 상원계에 해당되는 지층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들 변성퇴적암은 신생대 제4기의 분출물로 추정되는 현무암류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피복되었고 현생의 충적층이 일부 덮고 있다.

연평도는 섬의 북쪽에 127m의 최고 고지가 있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섬의 중앙은 고도가 낮다. 섬의 남서쪽 해안은 경사가 급한 해안절애가 있으며 그 바깥쪽은 암초가 둘러싸고 있다. 서쪽의 구룬나루 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500m 길이의 고운 모래사장과 깨끗한 자갈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구리동 해수욕장이 있다. 연평도 서쪽의 구리동 해수욕장에서는 맑은 날이면 북녘 해안이 보인다. 자갈이 퇴적된 길이 1km, 폭 50m 해변이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새마을해수욕장은 연평도의 중심취락지 앞에 있다. 자갈해안이 약 1.5km 펼쳐져 있고 그 전면에는 간조시에 조개, 낚지, 게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연평항 주변에는 해식애와 파식대가 발달하여 자라바위를 비롯하여 삼형제바위, 상여바위, 병풍바위, 소머리바위 등 독특한 형태의 시스텍과 개모가지낭, 문뱃낭, 삼태기낭 등 해식애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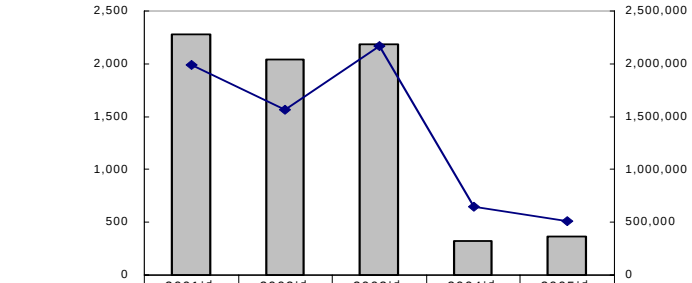
⑷ 생태계 현황

① 꽃게

남한에서는 충남 서산 앞바다와 연평도 사이가 꽃게의 최대 서식지이다. 꽃게는 산란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 양자강 하구에서 한반도 서해의 연안으로 이동하여 여름철에 산란을 한다. 정부에서는 산란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어 5월과 6월에 꽃게 어업이 가장 활발하다. 꽃게는 서해5도가 있는 인천광역시가 전국 생산량의 약 7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 지역의 꽃게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전국 대비 생산량이 50% 이하로 낮아졌고 2005년에는 36%에 불과할 정도로 이 지역의 꽃게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2004년과 2005년까지 이 지역의 꽃게 생산량은 2001년 생산량의 각각 14.3%와 15.9%에 불과해 최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게를 비롯한 저서갑각류의 서해상 분포 요인에 대한 홍재상・윤건탁(1998)의 연구에 따르면, 서해에서 갑각류의 분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저층수온과 퇴적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층수온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저층에 형성되어 있는 냉수괴를 따라서 갑각류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갑각류의 일종인 꽃게 역시 어획량 감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층수온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래에 등장한 중국 어선에 의한 자원량 변화 가능성을 포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2-14〉 연평도 꽃게 위판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어획량(톤)	2,281	2,043	2,182	327	363
어획고(만원)	1,987,000	1,568,700	2,170,300	644,800	507,500

자료 : 인천옹진수협 ; 조선일보 2006. 5. 25일자.

② 연안 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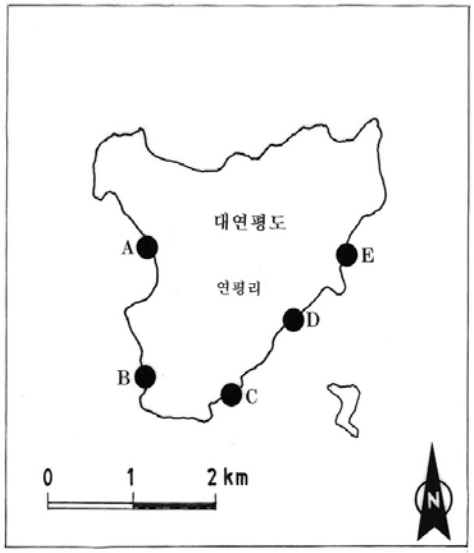
연평도의 해안은 암벽이 많지 않고 경사가 다소 있는 산지와 경계하여 만조선 부근에 매우 좁은 염습지가 있다. 그리고 사구 역시 구룬나루를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 분포하지만 대부분은 면적이 작다. 구룬나루는 백사장의 길이가 약 1㎞로 육지와 제방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당부분 군사시설때문에 자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민병미・노경임, 2000).

지역별로 보면 북쪽, 동쪽 및 서쪽 해안은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남쪽 해안은 촌락과 부두시설이 있고 대부분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남부의 제방 내측은 주거지나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식물이 분포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산지의 식생은 곰솔이나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침엽수림이 대부분이고 졸참나무, 굴피나무, 소사나무 등의 활엽수가 분포한다. 침엽수림의 수고는 약 5m 내외로 낮으며 수령 역시 10년 미만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부 지역에는 수고가 15m 이상이고 수령이 30년 이상인 곳도 있으나 면적은 매우 작다. 이처럼 육상의 삼림이 빈약한 이유는 아마도 오랫동안 인간의 간섭으로 인하여 교란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육지와 격리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연료로 목재를 이용했던 것도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9〉 연평도 구역별 식생 보전가치 평가표

구분	식생 특징	보전가치
A지역	- 연평도 내 가장 넓은 사질해안으로 육지방향으로 대단위 방조제가 축조되어 있고 내륙은 농경지로 이용 - 사구식생은 전혀 없고 조간대 패류가 다수 서식	II등급
B지역	- 작게 만입된 곳으로 해안선 주변이 모두 암석으로 구성 - 사구식생이나 염생식물로 구성된 식생이 없음	III등급
C지역	- 과거 사구가 다소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제방을 축조하여 농경지로 이용	II등급
D지역	- 간척한 지역으로 아직 탈염이 안 된 상태 - 간척 후 초기 2-3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교란지임	I 등급
E지역	- 해안에 작게 형성된 사구지역이나 육상에 제방 축조	II등급

주 : I 등급(보전가치 전혀 없음) → V등급(보전가치가 매우 높음).
자료 : 민병미 · 노경임(2000).



(5) 사회경제 현황

① 인구 및 토지이용 현황

연평권역의 인구는 2005년 현재 1,215명, 인구밀도는 166.7명/㎢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0.9%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0〉 연평권역의 인구 현황

구분	면적(㎢)	인구수(명)			연평균증가율 ('95-'05, %)	인구밀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면	7.29	1,334	1,364	1,215	-0.9	166.7

자료 : 통계청 총인구조사(1999, 2000, 2005).

연평권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목은 임야로 전체 면적 중 71.7%인 5.59㎢이고, 전면적은 9.1%인 0.67㎢, 답면적은 6.2%인 0.45㎢이다.

〈표 2-21〉 연평권역의 토지이용 현황

구분	계	전	답	과 수 원	임야	기타
면적(㎢)	7.29	0.67	0.45	0.02	5.59	0.28
비율(%)	100	9.14	6.20	0.33	76.71	3.79

자료 : 인천시 통계연보(2005).

② 수산업 현황

연평권역의 어촌계는 2개로 계원수는 349명이다. 연평권역의 어업권은 29건 295㏊이며, 주 어종은 전복, 해삼, 굴 등이다.

〈표 2-22〉 연평권역의 어촌계 현황

구분	어촌계 수	가구(호)		인구(명)		물량	금액 (백만 원)	계원수	호당평균 소득(03) (천 원)
		전체	어가	전체	어업				
연평면	2	535	325	1,370	380	100	450	349	3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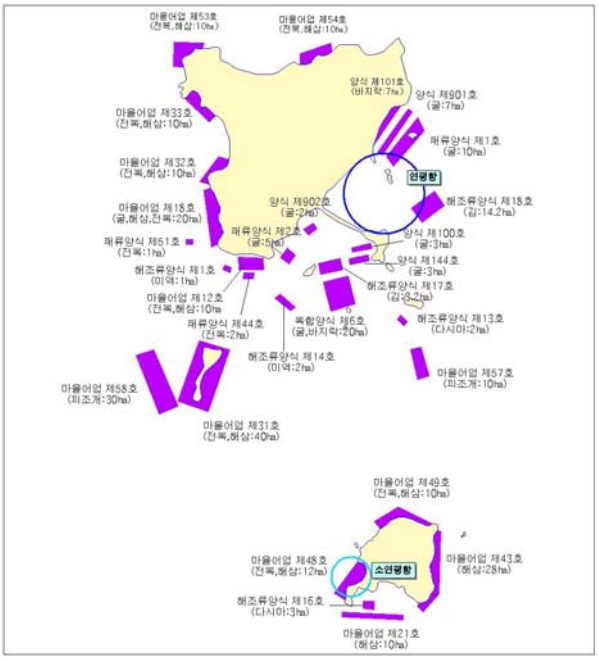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2004).

〈표 2-23〉 연평권역의 어업권 현황

구분	합계		마을어업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협동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연평	29	295.4	13	210	-	-	9	40	6	25.4	1	20	-	-

자료 : 옹진군청 내부자료(2006).

〈그림 2-15〉 연평도 인근 해역의 어장도



자료 : 옹진군청 해양수산과 내부자료(2006).

⑹ 관리여건 및 이슈

①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 형성

연평면 지역주민들은 두 번의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에서 서해 접경해역의 공동어로를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군사적 충돌에 대한 높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연평해역을 과거 10년 전에 비해 긴강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남북충돌의 가능성이 이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 꼽았다. 지역주민들은 남북한 충돌 원인에 대해 우발적 충돌보다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2006년 5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해상경계선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측은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절반으로 나누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하자고 제의했다.[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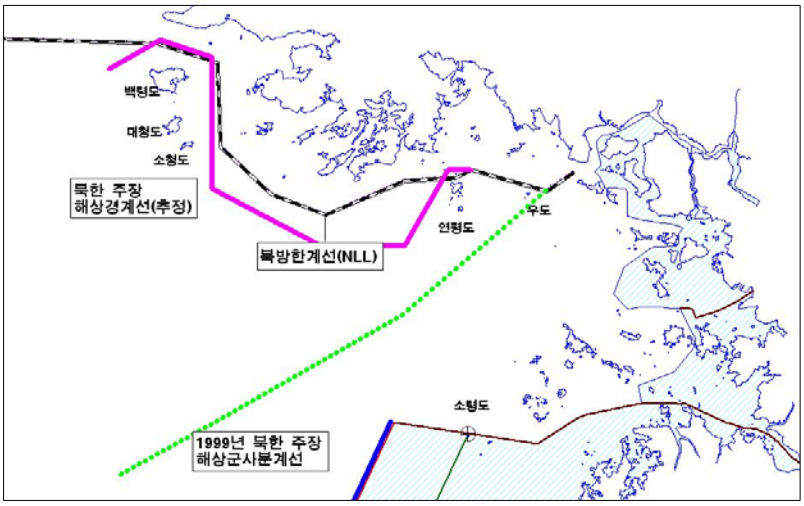
이 경계선은 서해5도 북쪽 해상에선 NLL과 대체로 일치하나,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섬이 없는 해상에서는 북한 해안가에서 12해리(22㎞) 남쪽까지 영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경계선에는 NLL 남쪽 10㎞의 우리 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은 1999년이나 2000년에 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남측의 영해권을 존중하고는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남

52) 북한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에서 남한 해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서부터 본격화되었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그해 9월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별도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포했음. 당시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을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가)-(나)선의 (가)점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유엔군 관할 하에 있는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31분00초) ▲북측 관할지역인 웅도와 유엔사 관할지역인 서격렬비열도·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분12초, 동경 124도55분)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 36도50분45초, 동경 124도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으로 선언했음.

측이 고수한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남측에서는 NLL 조정을 엄청난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유사시 북한 수송선이나 상선에 특수부대를 싣고 서해상에 들어와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서해는 북쪽으로는 NLL을, 서쪽으로는 우리 섬 바깥 먼 바다까지 우리 군의 작전인가구역(AAO)으로 설정하고, 그 안쪽으로 북한 함정과 상선 등 선박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53]

〈그림 2-16〉 북방한계선과 북한주장 해상경계선



② 중국 어선 싹쓸이 어업으로 지역경제 피폐

과거 '조기파시'로 유명했던 연평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로 꽃게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파산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54] 중국 어선들이

53) 북한의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이 적용되면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꽃게어장이 북한에 편입되어 우리 어민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중앙일보,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노림수」, 2006. 5. 18일자).

54) 연평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가구마다 빚이 많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함.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별자금지원 등 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2005. 7. 13일 지역주민 인터뷰 자료).

수백 척씩 북방한계선 북한측 수역에 모여 있다가 밤만 되면 남측 수역에 넘어와 마구잡이 어로행위를 하여 꽃게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4년간에 걸친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연평어장은 황폐해지고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되었다.[55]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들은 직접 중국 어선 나포에 나서는가 하면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역민심도 흉흉하다. 지역주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주민의 수산업 활동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남북이 각자 관할지역에 한해서라도 관리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남정호 외, 2005).

③ 침적 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

연평도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해양환경 오염을 꼽았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연평도 주변해역은 유류 및 꽃게그물의 해상투기로 해양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태이며 수산물 처리비용 및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물 수거[56]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57]

2002년 4월 연평도 소속 어선 56척이 연평어장에 꽃게를 잡기 위해 친 그물은 총 1천 120틀[58]로 길이로 따지면 201.6㎞ 달한다. 그물은 걸린 꽃게를 떼어낸 뒤, 소각 처리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어선이 그물을 어장에 그대로 방치,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59]

---

55) 바닥 밑바닥까지 긁어대는 마구잡이식 조업 탓에 바닥의 뻘흙이 다 일어나 암반에 대량 식생하던 수초는 모두 고사하고 조개들도 폐사하였음(한국일보,「연평도 꽃게전쟁」, 2006. 6. 25일자).

56) 지역주민에 따르면 수년전만해도 길이 180m 정도인 어망을 어장에 쳤지만, 최근들어 길이 300m, 500m짜리 어망을 좁은 어장에 서로 얽히게 설치, 꽃게의 이동통로가 막혀 예전처럼 연평어장에서 꽃게잡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함(연합뉴스,「연평도, 이탈조업 논란 속 어민간 갈등 조짐, 2002. 7. 3일자).

57) 해양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데는 어업생산구조의 영향이 큼. 주민들은 환경과 자원보호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인 어업행위를 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외지사람들로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함(2005. 7. 13일 연평면 지역주민 인터뷰).

58) 틀이란 그물을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말뚝으로 3월 꽃게철에 바다에 설치한 뒤 7월초 금어기에 철거하게 됨.

59) 옹진군이 9억 7천만 원을 들여 1999년과 2001년도에 연평어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벌여 바닷속에서 모두 520여t에 달하는 폐어망과 폐어구, 닻 등을 건져 처리했음.

어민들은 2000년 5월 어장을 서북방 1마일, 정서방 1.5마일씩 확장시켜 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일부 주민은 어장을 깨끗이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어장 확장은 의미가 없고, 어민 스스로가 어장 청결을 유지, 꽃게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일부 어민들은 북한 어선과 우리측 어선의 조업구역을 넘어선 불법어로행위가 많은 만큼, 차라리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민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7〉 연평도 내 방치 해양폐기물




사진 : 최지연(2005. 7. 13 촬영)

3) 강화 · 한강 하구 권역

(1) 지리적 개관

강화・한강 하구 권역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류를 경계로 북한의 연백군과 개풍군이 인접하여 있으며, 한강 하구에서 강화도 및 부속도서까지 갯벌과 하구지형이 분포하고 있다. 이 권역은 행정구역상 강화군과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김포시 북서쪽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월곶면, 대곶면, 하성면만을 지리적 범위에서 고려하였다. 수도권에 접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압력은 가장 큰 지역이나, 남북분단·대립상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는 자연상태가 잘 보전된 지역이기도 하다.

〈표 2-24〉 강화 · 한강 하구 권역의 지리적 개관

구 분	강화 · 한강 하구
행정구역	강화군~김포시(월곶면, 대곶면, 하성면) 일대
위 치	강화도와 한강 하구 일대
면적 / 해안선	560.7㎢ / 291.8㎞
무인도서	강화군(18개소), 김포시(4개소)

(2) 역사적 변천과정

강화도 고인돌이 말해 주듯이 강화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발달하였고, 역사와 문화 유적이 많은 지역이다.[60]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교동을 비롯하여 해안 곳곳에 진을 쌓았으며 그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고구려의 영토였던 400년경에는 혈구(穴口) · 갑비고차(甲比古次)[61]라고 하였다. 고구려 때는 이곳에 혈구군을 설치하고, 이후 신라는 대외적 방어와 지방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혈구진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혈구진이 설치된 강화는 당과 신라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북부 연안 항로와 중부 횡단 항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지점인 동시에 예성강과 임진강 · 한강의 하구에 해당하는 요충지였다.[62] 이를 토대로 고려를 세운 왕건의 해상세력은 강화의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전한

60) 강화에는 쌍날집게,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 무문토기, 패총 등 석시 시대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한 것으로 추측됨. 특히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은 하점면 부근리와 신삼리 등지를 중심으로 대략 150여기가 확인되었는데, 강화의 청동기인들은 비류계 백제인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61) 강화의 옛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였음. '갑비'는 고유어 '갑'을, 고차는 '곶, 곶이'를 표기한 것이며, 갑곶의 의미는 갑은 돌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을 '갑석(甲石)', 두 배를 '갑절', 겹창을 '갑창(甲窓)'이라 하는 것처럼 둘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임. 이것은 한강 하류의 조강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이 강화의 동북단에서 둘로 갈라져 강화의 북단과 강화 · 김포 사이의 염하로 나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이해됨. 곶(串)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한자음으로 강, 바다로 돌출한 지역이나, 내륙에서 벌판을 향해 길게 뻗어나간 지형에서 온 지명형태소임. 즉 갑비고차란 현대어로는 두 갈래로 갈라진 물(바다, 강)가에 있는 곶으로 된 고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강화군청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pub/inr/inrHtmInr02_02.jsp).

62) 혈구진의 설치는 중국 항로의 안전 확보와 국내 주요 통상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임.

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강화는 무역항의 기능보다는 예성강 벽란도로 들어가는 중간기항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직면하자 지리적 조건이 방어에 유리한 강화를 전시 수도로 삼아 항몽 투쟁을 주도하였다. 강화는 1895년에 강화군으로 개칭되었고, 1970년에 강화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김포시는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때 최초로 '김포'라는 지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고려시대에 경기해역[63]은 개경으로 접어드는 예성강이 경기북부해역으로 연결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한강을 통하여 내륙 중심부로 접근하는 길목이었다. 구한말에는 한강을 통하여 한양으로 들어가던 조운선이 경기해역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면서 황해도와 경기도를 하나로 묶던 해상통로가 단절되면서 한강의 강상루트도 단절되었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활발하였던 나루터와 포구가 사멸하였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로 이 지역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해변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인구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져 역사적 문화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3) 자연환경

① 기후

동 권역의 기후는 연교차가 심한 편이기는 하나, 서해에 접해있는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내륙지역에 비하면 온화한 편이다.

강화군[64]은 연평균 11.4℃이며, 강수량은 연평균 1,370.2mm이며, 김포시[65]는 연평균 12.9℃이며, 강수량은 1,413.3mm이다. 기후가 온화하여 남서부에 동백나무, 초피나무, 비목나무, 탕나무 등의 난대림이 자생한다.

---

63)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서해해역(상))」, 2002.
64) 강화군청, 「통계연보」, 2005.
65) 김포시청, 「통계연보」, 2005.

② 지질 및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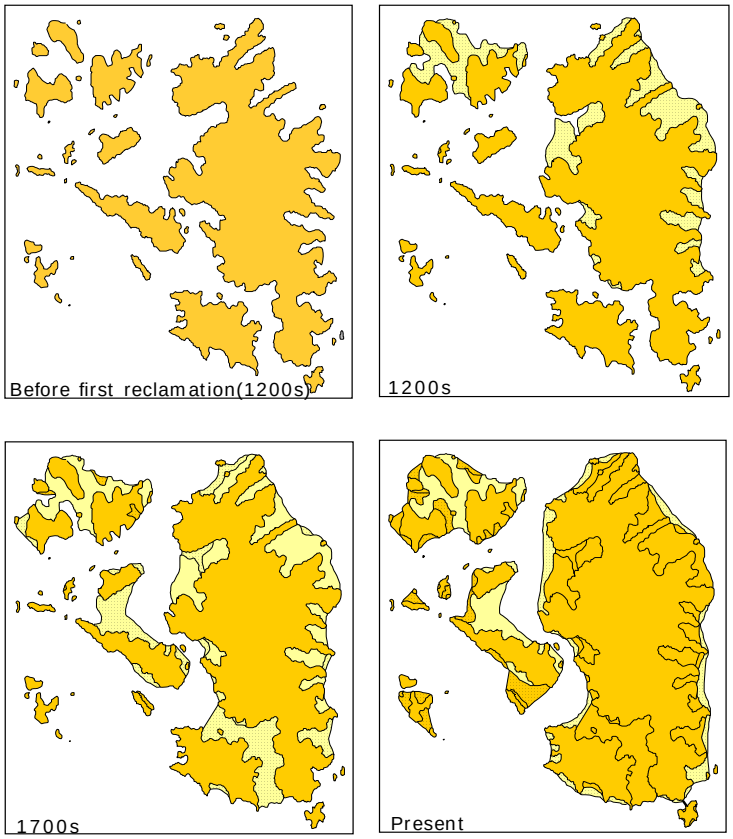
강화군의 지질은 결정편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포시의 기반암은 주로 시생대의 화강편마암과 대동계의 혈암 및 사암이다. 강화군은 원래 김포반도와 연결되었으나 침식작용으로 인해 구릉성 섬으로 분리되었다가, 한강・임진강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쌓이면서 다시 김포반도와 연결되었다. 그 후 염하(鹽河)가 한강에서 분류하여 김포시와 강화군 사이에 해협을 이루면서 다시 섬이 되었다. 한편, 이창희 외(2005)에 의하면 1985년과 2002년 한강 하구 일대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삼림이 줄고 나대지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안습지 감소와 해안선이 단순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퇴적환경을 살펴보면 강화도 우측의 염하수로[66]는 한강과 경기만을 연결하는 하구형 수로로서 한강과 임진강의 담수를 경기만으로 배출한다. 이와 함께 한강상부에서 유입하는 상당량의 물질이 하구에 퇴적하거나 외해역으로 빠져나간다.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해양서식지인 갯벌이 232.1㎢(전국 연안갯벌의 8.4%)가 분포하고 있다(이창희 외, 2005). 이렇게 넓은 갯벌면적과 함께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립으로 연안개발, 주거, 관광, 산업 등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행위와 사회경제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하구에 비해 보호해야할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6) 본래 강화도와 김포반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염하수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염하수로 지역이 침강하면서 여기에 수로가 형성된 침강성 하천유역이 형성되었음(이창희 외, 2005).

〈그림 2-18〉 강화도 해안선 변화[67]



자료 :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서해해역(상))」, 2002.

(4) 생태계 현황

①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해양환경 현황[68]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염분,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의 농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염분은 인

67) 간척으로 해안선의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난 사례, 강화도(최영준,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변화',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991, 292p. 재인용).

68) 이창희, *Ibid.*

근 하천의 유입으로 25-26psu을 나타내고 있으며, COD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표층이 평균 1.67㎎/ℓ, 저층이 1.88㎎/ℓ으로 해역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3년 저층의 농도가 2.65㎎/ℓ로 급격히 증가하여 III등급 수준을 나타낸 이후, 2004년에는 표층과 저층 각각 2.28, 2.86㎎/ℓ으로 III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다. 국가해양관측망 자료에 나타난 용존무기질소는 평균적으로 II등급 수준[69]이며, 용존무기인은 모든 해에 걸쳐 등급외 수준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강이 인천연안과 연결되는 염하수로의 오염이 인근 해역의 오염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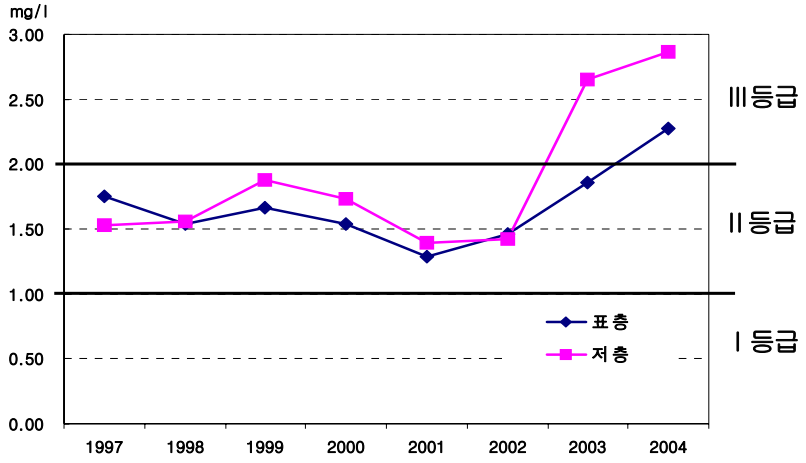
이 권역의 생태계 현황을 이 지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강 하구에서 출현·어획하는 지역특산 어종은 실뱀장어, 황복, 숭어, 참게이다. 이들 지역 특산어종에 대한 어획량은 한강 하구의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70] 특히 이 지역의 주 생산물은 황복, 뱀장어, 참게, 숭어 등이다. 이 중 황복은 한강 하구에만 서식하는 희귀어종일 뿐만 아니라 유용한 수산자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수질악화·댐건설수수중보 설치 등으로 황복이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은 임진강에서만 볼 수 있다.[71]

강화도 주변해역에는 총 22종의 자치어가 출현하며 지역적으로는 염하수로보다 석모수로에서 출현종과 개체수가 더 풍부하다.[72] 한강 하구의 해역쪽은 서해의 큰 조수간만의 차와 빠른 조류 이동으로 저서환경이 양호하여 다양한 저서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은 1980년대 후반에는 다모류인 *Tharyx* sp., 이매패류인 *Mactra veneriformis*, 다모류인 *Mediomastus* sp. 등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유기물오염 지시종으로 알려진 다모류인 *Heteromastus filiformis* 가 우점하였다.[73]

---

69) 환경기준은 2001년 1월 1일 개정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전의 기준으로 이 당시에 총질소와 총인 항목은 실제로 용존 무기 질소와 인이므로 여기에서는 과거 기준을 준용하여 비교하였음.
70) 이창희 외, *Op. cit.*
71) 동아일보 2000. 4. 26일자.
72) 박경수,「98년부터 '99년까지 강화도 주변해역에서 어류 자치어 조사결과」, 1990.
73) 이창희 외, *Op. cit.*

〈그림 2-19〉 한강 하구 COD 변화추이(층별)



자료 : 이창희 외(2005).

② 보호구역 지정 현황

최근 습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 권역의 갯벌 중 장항습지, 산남습지(고양시 소재), 시암리습지와 유도(김포시 소재) 등 한강 하구 습지 60.668㎢(약 1,835만 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74] 한강 하구는 서해에서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이 보전되어 있다.[75] 동 지역에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76]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와 재두루미, 개리 등 조류 16종, 금개구리 등 양서류 2종, 매화마름과 삵 등이 서식하고 있다.

74) 2004년 2월 전국하구역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주민토론회, 국방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2006. 4.17일 지정고시(환경부 제 2006-58호).
75) www.ggag21.or.kr
76) 김포시 월곶면 유도는 저어새의 산란지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음.

〈그림 2-20〉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내용

관련 시군별 지정 면적 현황			지정 범위
구 분	면적(㎢)	비율(%)	
김포시	22.984	37.9	
고양시	14.230	23.5	
파주시	14.536	23.9	
강화군	8.918	14.7	
합 계	60.668	100.0	
※ 소유현황: 국유지 97.8%, 공유지 0.5%, 사유지 1.4%, 기타 0.3% ※ 지목별 현황: 천 97.0%, 전 0.7%, 임야 0.5%, 기타 도로 등 1.8% 등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06.4).

〈표 2-25〉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경과

○ ’04.2-12: 한강 하구역 생태계정밀조사(전국 하구역 생태계정밀조사 일환)
○ ’05.1,2 : 환경부, 지자체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 2회
○ ’05.3.3 :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관계기관・전문가회의 개최 -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14명
○ ’05.5.4 : 김포시 의회 주최 시민대토론회 참석
○ ’05.6.17 : 생태계 합동조사 실시(, 전문가 등 50여명)
○ ’05.7.19, 21 :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05.10.7 : 지자체 등 관계부처 협의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중앙부처 : 재정경제부 등 8개기관 - 지자체 :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기관, 토지소유 103명
○ ’05.7.-’05.9 : 지적 및 지번확인, 지적도상 상세 경계선 설정
○ 국방부에 재협의 요청(’05.12,23) 및 습지지정 동의(’06.3.10)

습지보호지역 외에 천연기념물, 특정도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도 석모도 일대 394.41㎢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77]으로 지정하였다. 천연기념물은 강화군 갑곶리의 탱자나무(제78호)를 비롯하여 화도면의 탱자나무(제79호), 서도면의 은행나무(제304호)가 있다. 다음으로 이 권역에는 강화군 화도면의 우도를 비롯하여 8개 무인도서(비도, 석도, 수리봉, 수시도, 분지도, 소송도, 대송도)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에 12필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 1필지, 김포시 월곶면에 1필지, 김포시 하성면에 1필지로 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까치, 괭이갈매기, 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노랑부리백로, 소쩍새, 왜가리 백도, 기러기, 오리류 등의 생물종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통합관리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6〉 강화·한강 하구 권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명칭	상세위치
강화군	특정도서 (8개)	우도	서도면 말도리 산88, 산9096
		비도	서도면 말도리 산89
		석도	서도면 주문1리 산3
		수리봉	서도면 아차도리 산50
		수시도	서도면 주문1리 산2
		분지도	서도면 주문2리 산296
		소송도	삼산면 매은리 산 535
		대송도	삼산면 매은리 산534

77) 동물 제419호, 2000. 7. 6지정.

〈표 2-26〉 강화 · 한강 하구 권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계속)

구분		명칭	상세위치
강화군	천연기념물 (4개)	갑곶리의 탱자나무 (식물 제78호)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6
		강화사기리의 탱자나무 (식물 제79호)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2
		강화군 서도면의 은행나무 (식물 제304호)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 186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동물 제419호)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야생동식물 보호구 (2개)	애호지구 (2002-8) · 일반조수 : 까치, 꽹이갈매기 · 멸종위기종 : 두루미, 저어새 · 보호종 : 큰기러기, 알락꼬리마도요 ·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 노랑부리백로, 소쩍새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2필지 (11ha)
		유치지구 (2002-8) · 일반조수 : 까치, 꽹이갈매기 · 멸종위기종 : 두루미, 저어새 · 보호종 : 큰기러기, 알락꼬리마도요 ·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 노랑부리백로, 소쩍새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58 (16ha)
김포, 고양, 파주	습지보호지역 (1개)	한강 하구	고양시 구산동, 파주시 산남면, 김포시 전류리 일원 (60.668㎢) (2006.4.17지정)
김포시	야생동식물 보호구(2개)	애호지구 (경기 제35호) · 두루미, 왜가리 백로	김포시 월곶면 1개소 (11ha)
		집단번식보호구 (경기 제36호) · 일반조수 : 오리류 · 보호종 : 기러기 · 천연기념물 : 재두루미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외 5개리 수면 (1,145ha)
	천연기념물 (1개)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동물 제414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부, 김포시 한강변의 충적퇴적 지역

자료 : 남정호 외(2005) 재정리; 환경부 홈페이지.

(5) 사회경제 이용 현황

①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인구는 2005년 현재 79,886명, 인구밀도는 142명/㎢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1.04%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강화군의 선원면과 김포시의 대곶면을 제외한 관련읍면이 '95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인구현황

구분		면적(㎢)	인구수(명)			연평균증가율	인구밀도
			1995	2000	2005	('95-'05,%)	(명/㎢)
강화군	강화읍	25.0	22,146	21,600	19,899	-1.06	796
	선원면	21.4	4,376	3,984	6,480	4.00	303
	불은면	31.4	4,107	3,558	3,526	-1.51	112
	길상면	35.0	5,355	5,124	5,248	-0.20	150
	화도면	42.3	3,962	3,641	3,312	-1.78	78
	양도면	35.4	3,704	3,503	3,190	-1.48	90
	내가면	29.8	3,224	2,991	2,692	-1.79	90
	하점면	36.2	4,675	4,149	3,520	-2.80	97
	양사면	26.4	2,137	1,961	1,646	-2.58	62
	송해면	22.4	3,773	3,433	2,804	-2.92	125
	교동면	47.2	4,227	3,520	2,942	-3.56	62
	삼산면	45.6	2,234	2,143	1,903	-1.59	42
	서도면	13.1	775	682	543	-3.50	41
	소계	411.2	64,695	60,289	57,705	-1.14	140
김포시	대곶면	42.8	8,820	8,670	8,963	0.16	210
	월곶면	51.9	6,037	5,714	5,305	-1.28	102
	하성면	54.8	9,141	8,016	7,913	-1.43	145
	소계	149.4	23,998	22,400	22,181	-0.78	148
합계		560.7	88,693	82,689	79,886	-1.04	142

자료 : 통계청 총인구조사(1999, 2000, 2005), http://kosis.nso.go.kr/.

② 토지이용 현황

강화・한강 하구 권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목은 임야로 전체 면적 중 42.4%(237.9㎢)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답 면적은 29.4%(165.1㎢), 전 면적은 9.0%(50.3㎢) 순이다. 이 권역은 주로 평탄한 지역으로 답, 전의 비중이 높다.

〈표 2-28〉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토지이용 현황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김포시	면적(㎢)	149.4	11.5	37.6	0.6	54.9	44.9
	비율(%)	100.0	7.7	25.2	0.4	36.7	30.1
강화군	면적(㎢)	411.2	38.8	127.5	0.3	183.1	61.6
	비율(%)	100.0	9.4	31.0	0.1	44.5	15.0
합계	면적(㎢)	560.7	50.3	165.1	0.8	237.9	106.5
	비율(%)	100.0	9.0	29.4	0.1	42.4	19.0

주 : 김포시와 강화군의 면적은 이 권역에 해당하는 읍・면별 면적의 합임.
자료 : 해당시군 통계연보(2005).

③ 어촌계 현황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어촌계는 11개이고 계원수는 4,632명이다. 강화군의 길상면과 화도면의 어촌계 계원수는 각각 329명, 189명으로 강화군 다른 읍면의 어촌계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김포시 하성면의 한강어촌계에서는 한강과 임진강에서 황복을 어획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 최서북단에 위치한 강후어촌계[78]는 창후항을 중심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데, '황복 마을'로도 유명하다. 어촌계원들은 석모도와 교동도 주변 연안에서 주로 숭어와 농어, 새우, 황복 등을 어획하고 있다. 이 어장은 한강은 물론 임진강과 예성강 등이 합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78) 경향신문 2006.8.29일자 : 이상일 어촌계장은 "창후항 연안 어장은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며 "인근에 교동도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함.

〈표 2-29〉 강화 · 한강 하구 권역의 어촌계 현황

구분 (어촌계명칭)		어촌계수	가구(호)		인구(명)		물량 (톤)	금액 (백만 원)	계원수	호당 평균소득 (천 원)
			전체	어가	전체	어업				
강화군	하점면 (강후)	1	351	33	714	40	120	1,096	30	21,500
	내가면 (내가)	1	435	57	1,610	63	230	1,320	63	25,600
	화도면 (내리,홍왕)	2	729	211	2,349	214	550	3,110	189	57,600
	길상면 (동검,초지,선두)	3	840	341	2,486	376	480	5,630	329	74,600
	삼산면 (매음,사하)	2	720	160	1,829	166	340	2,280	104	42,500
	서도면 (볼음,서도)	2	207	104	556	116	210	1,940	88	44,800
	소계	11	3,282	906	9,544	975	1,930	15,376	803	266,600
김포시	하성면(한강)	1	367	101	1,111	110	80	820	74	21,100
	대곶면(김포)	1	983	143	2,730	150	490	3,750	116	29,500
	소계	2	1,350	244	3,841	260	570	4,570	190	50,600
합계		13	4,632	1,150	13,385	1,235	2,500	19,946	993	317,200

자료 : 수협중앙회(2003).

④ 이용 · 개발 현황

이 권역은 개성공단, 개풍공동개발구, 골재채취, 항만개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개발 및 이용 수요가 백령 · 대청 권역, 연평권역에 비해 높다. 북한은 여전히 정치 · 경제 · 외교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긴 하나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꾸준히 협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사업 규모는 공단구역(800만 평)과 배후도시(1,200만 평)를 포함한 총 2,000만 평(66.1㎢)이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100만 평) 개발계획은 개성시 봉동리 일원이며 계획기간은 2002~2007년, 사업시행자는 현대아산 · 토지공사

이다. 북측에게 토지를 50년간 임차하여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이미 시설물(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는 착수하였고, 기반시설(용수, 폐수,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 완료단계로 2005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79]

개성공단 사업의 후속사업의 성격인 개풍공동개발구 조성 사업은 인천광역시[80]의 주도하에 구상 중에 있다.

〈표 2-30〉 개성공단 및 개풍공동개발구의 사업 개요

구분	위치 및 면적	단계별 조성 내용
개성공단	위치 : 개성시 규모 : 약 800만 평(26.4㎢) (총 2,000만 평 : 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	1단계 : 100만 평(3.3㎢) 2단계 : 300만 평(9.9㎢) 3단계 : 400만 평(13.2㎢)
개풍공동 개발구	위치 : 개풍군 일대 (개성공단 남쪽) 규모 : 약 2,000만 평 (배후단지 1,200만 평, 공단조성 500만 평, 물류센터 및 기타 300만 평)	전기('06-'10) : 인프라 구축 중기('10-'18) : 공단건설 후기('14-'20) : 개발특구 건설

자료 : 남정호 외(2005)에서 재정리.

이 사업은 개풍군 일대에 총 2,000만 평 규모의 개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첫 단계로, 인천광역시는 인천전용공단을 포함해 1,000만 평을 개발하고, 강화군 철산리에서 개풍군 고도리간 길이 1.4㎞(4차로)의 연육교 건설을 북측에 제안하였다. 개풍공동개발구 개발로 건설관련 사업의 활성화, 접경지역·서해안의 교통망 확충,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남한사업의 구조조정 촉진, 북한지역에는 선진 건설기술 도입, 건자재 산업 활성화, 개성 및 개풍일대의 도시지역 개발, 교통망 확충,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효과로 예상하고

79)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2005. 4.

80) 한겨레신문(2005. 10. 2.)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음. 특히 대북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의 방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음.

있다.

현재 남한은 골재수급 여건 및 골재허가 금지로 인해 해주 지역 모래 반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 채택, 통일부의 북한산 모래 반입의 활성화 노력 등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1～4월 북한에서 반입한 모래량은 685,323㎥로 2004년 전체 모래반입량 286,920㎥의 배를 넘어서고 있어 향후 국내 모래수급이 환경적 요인으로 제한되면 북한 접경지역의 모래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81)]

여기에 올 6월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한 중립수역에 있는 한강 하구의 골재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골재난 해소는 물론, 준설로 인한 남측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수로 이용,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골재채취 사업은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및 파급 효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사업의 진행시 고려해야 할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및 긴장완화 등의 결과뿐만 아니라 골재채취로 인한 해역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안침식, 해수욕장 보호 등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 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태파악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6) 관리여건 및 현안

이 권역의 자연환경 및 이용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관리현안은 수질환경 악화 및 수산자원의 훼손, 연안의 이용・개발 심화 및 생태계 훼손 우려,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생태계 해양수질 환경 악화 및 수산자원의 훼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권역의 해양수질환경은 COD의 경우 대체로 II등급

81) 연합뉴스(2005. 5. 19).

을 만족하고 있으나, 염하수로는 3.2-4.4mg/L로 III등급 및 등급 외의 악화된 수질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화된 수질은 한강 하구의 범위 중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현상이지만, 염하수로는 한강 하구 해면부 중 인천연안과 직접 연결되는 공간으로 수질환경 보전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식물플랑크톤의 번식 및 부영양화과 관련이 있는 무기인 농도는 3.73mg/L를 보이는 지역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등급 외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권역은 수산자원 생산량의 감소하고 있고, 육상활동 및 해양활동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한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와 김포 사이의 염하수로로 들어오는 한강 하구의 수질은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돼 오염이 더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잡힌 어류의 20%가 등이 구부러지고 부스럼이 난 기형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82)]

② 연안 지역의 이용 · 개발 심화 생태계 훼손 우려

이창희 외(2005)의 '97-'01년 5년간 한강 하구 오염원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체 수가 약 49%, 대지를 포함한 개발지가 약 4.7%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 개발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택지개발(29.2㎢), 단지조성(산단 4.7㎢, 관광단지 3.0㎢), 도로확충(간선 259.2km, 국도 102.2km), 철도확충(128km) 계획 및 수변철책 제거, 서울항 개발, 개풍지구 개발에 따른 남북한 연결교량 건설 등이 진행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지역의 매립, 산업단지, 간척, 방조제 및 제방 건설 등으로 인한 자연해안의 인공 해안화는 주요 수산생물 및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어류생산량의 감소와 자연해안선 비율의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2) 인천일보 (2005. 9. 28일자) : 한강으로 떠내려 온 오염물질의 3분의 1 가량이 염하수로를 거쳐 바다로 유입함.

③ 강화 갯벌 및 한강 하구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사이의 갈등

이 권역은 우수한 자연환경보전과 이용개발 수요 사이의 갈등이 큰 지역이다. 2005년 1월부터 환경부가 추진했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자체 및 주민의 개발 요구와 갈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경제협력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한 한강 하구 골재채취사업, 개성공단-김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벨트가 활성화될 경우 서해연안 접경지역과 한강 하구를 연결하는 생태축 사이의 충돌은 궁극적으로 보전수요와 이용·개발 수요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남정호·강대석, 2003). 이러한 문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의 부재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을 비롯한 주요 경제주체들의 개발기대로 인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한다. 이 권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용 및 개발 압력을 지혜롭게 수용함과 동시에 마지막 남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83]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 관계기관·이해당자사 간의 갈등관리체계 구축, 남북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21〉 한강 하구 및 강화연안의 개발계획 현황



83) KEI 보도자료(이창희, 2006. 4).

제3장

남북한 교류협력 및 국제사회 동향

2005년도에 수행했던 제1차년도 연구에서 정리한 남북한 해양수산분야 협력과 국제기구의 잠재적 협력관계는 서해연안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데 고려할 중요한 조건이다.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동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해양수산분야 교류 협력의 현황뿐만 아니라 최근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정세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망을 도출함으로써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따른 여건을 분석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촉발된 시점은 2000년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이다. 교류협력의 대부분이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차원의 주민상봉, 문화교류에 집중되어 있어 해양분야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한 장관급회담, 실무회담,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연안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해양자원, 환경 및 공간을 이용·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포괄할 수 있다. 특히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이 해양환경, 생태계, 자원 및 공간을 남한과 북한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개념적 틀이라고 규정할 때, 다양한 통로에서 이를 어떻게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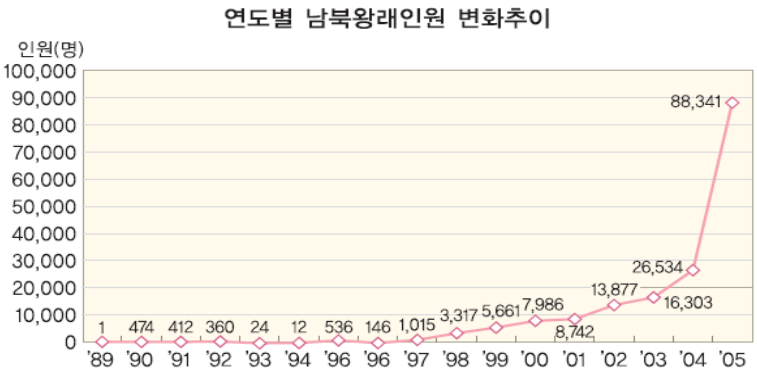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2005년 제1차년도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파악한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을 기초로 2005년 말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된 정세가 남북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인바 이를 토대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1) 현황 및 여건

(1) 2000년대 이후 북한 방문객 지속적 증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2005년 말 북한의 위조지폐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미사일 발사, 지하핵실험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랭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 개선이 답보상태에 있고, 외부적으로 정세악화라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객을 제외한 북한 방문자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총 81,470명이며, 2005년 방문인원은 88,341명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06). 2005년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북한 방문 기회가 공단조성 및 운영, 이산가족 교류, 경제 분야 협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 남북한 인적 교류 추이



자료 : 통일부(2006)

특히 남북한 관계 개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교역분야의 경우 현지 직접 투자 방식의 비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84]

(2)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은 도입단계

이 연구의 주제인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안이 남북한 공식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서해상 평화정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진행된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해양수산분야 관련 의제는 모두 5차례(제4차, 제5차, 제8차, 제13차, 제15차 회담) 논의되었다.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 공동어장 조성이 제안되었다.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수산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현재 남북한 장관급 회담의 내용, 다른 분야 실무회담, 민간분야 투자현황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경제 분야, 육상공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육상의 경제 분야 협력은 정착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2004년부터 남북한 사이에 해상을 통한 물자운송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택한 해운합의서 및 부속서의 발효, 북한산 바다모래 반입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에 해양수산분야 협력수준은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운분야 및 수산분야 협력은 현재 통일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에서 경제분야 협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여전히 해양수산분야가 북한에 대해 큰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85] 남정호 외(2005)에 따르면 경제, 문화, 학술, 체육 등 비정치적, 일반적 분야를 대상으로 협력을 추진했던 초기 장관급회담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

84) 개성공단개발, 금강산 관광활성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은 대표적인 비거래성 교역임. 일시적으로 2004년에 비거래성 교역이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85) 남정호 외(2005)는 해운 및 수산에 관련된 해양협력을 경제 분야 협력으로 분류하였음.

〈표 3-1〉 해양수산분야 협력 합의문 채택 및 남북장관급회담 현황

구분	일정 및 장소	내 용
제4차	’00.12.12-16 평양	○ 어업부문에서 상호협력, 북측이 남측에 대해 동해 북측어장의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고, 금강산에서 협의하기로 합의(제2호)
제5차	’01.9.15-18 서울	○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허용문제 협의를 위해 해운실무 접촉 합의(제3호 ⑤) ○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의 공동이용문제 협의를 위해 실무 접촉 합의(제3호 ⑧)
제8차	’02.10.19-22 평양	○ 남과 북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합의(제4호) ○ 남한 어민의 북측동해어장 이용관련 회의 개최 합의(제6호)
제13차	’04.2.3-6 서울	○ 남과 북은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제4호) ※ 2004년 5월 28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 남한정부는 2004년 12월 29일 국회비준
제15차	’05.6.21-24 서울	○ 서해해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7월 중에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 문제 협의·해결 합의(제7호) ※ 2005년 7월 27일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실무 협의 추진합의(제9호)

자료 : 남정호 외(2005).

(3) 해양환경분야 협력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의제

해양환경관리, 생태계 보호, 연안관리 등 포괄적으로 해양환경분야를 둘러싼 남북한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이나 현황,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남한과 북한의 일차적인 교류협력의 대상은 경제 분야 협력,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거나 상징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육상에 비해 해양분야 협력에서 남한과 북한의 실리적 차원의 이해관계

가 높지 않고,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으며, 교류협력 관련 이해당사자나 파급효과의 범위도 넓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분야 중 경제협력도 육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경제협력으로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분야의 우선순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의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4) 서해상 평화정착에 대한 기본합의 도출

서해 해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남북한 관련 의제는 변화를 거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옹진반도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후 해상경계는 남한과 북한에서 정책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이 지역은 남북관계에서 주요 현안지역으로 등장하였다. 1999년과 2002년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했던 군사적 충돌은 이 지역이 현안지역으로 등장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군사적 충돌은 남한의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수용・인정하지 않은 데서 근본적으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북한은 서해상 경계에 대해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남한과 북한의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현실적 차원에서 고찰하면, 서해의 꽃게 자원은 남한 주민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소득원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 획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은 어업자원 획득을 위한 갈등과 분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해상 남북한 관계의 주요 현안은 상징적 의미의 남북해상경계 설정에서 어업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경계설정으로 변하고 있고 군사적 충돌 후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고 있다.

평화정착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접근은 제15차 장관급 회담 및 이후 진행된 수산실무협의회가 출발점이 되었다. 수산실무협의회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범위를 거래나 유통이 아닌 공간에 대한 평화적 관리로 확장하였고, 경제 분야 협력의 범위를 어장의 공동 관리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남

정호 외(2005)는 제15차 장관급회담 및 수산실무회담의 근본적 의의를 1999년, 2002년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꽃게어업에 대해 평화적 방식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86]

특히 서해상에서 남한과 북한이 상호이해에 기초하여 합의한 사항은 공동어로의 목적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평화정착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의가 있다.[87]

〈표 3-2〉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합의서('05. 7.25~27)

내 용	세 부 사 항
협의의 목적 및 원칙	○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 실현 (평화정착 및 공동이익의 원칙)
공동어로(제1호)	○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 진행 <방법> - 공동어로 수역과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하여 확정 - 공동어로 기간, 어선 수, 어구이용,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중국 등 제3국의 불법어로 방지 상호협력(제2호)	○ 서해상의 정해진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 어선들의 어로활동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등 상호협력
수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 협력(제3호)	○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 협력 진행 ○ 구체적인 현안은 남북수산협력 실무접촉에서 협의
수산기술 교류(제4호)	○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품종의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진행
제3국 어장개방(제5호)	○ 남한과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 어장진출 협력

86)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한 장성급 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은 이 지역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남북한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경비항 공용주파수 운영, 경비함간 시각신호 제정 및 활용, NLL 주변 해역 중국 어선 불법어로 단속관련 정보교환을 합의하였음.

87) 남북공동합의서는 공동어로의 목적을 '남과 북은 서해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5) 저어새 및 노랑부리백로 등 조류보호 정책에 우선순위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만 분포하는 멸종위기종이며, 서식지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Coulter, 2006). 이 중 1,000여 마리가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저어새는 인간의 간섭이 극히 제한된 무인도서에 둥지를 틀고, 논이나 갯벌에서 먹이를 구한다. 노랑부리백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 시급한 생물종이다.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이며, 취식을 위해 갯벌 등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연안의 갯벌을 비롯한 자연환경은 저어새를 비롯하여 노랑부리백로 등 주요 조류의 서식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멸종위기종 및 보호생물종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관심은 매우 높다. 남한은 강화도 서쪽의 갯벌을 노랑부리백로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민간단체와 조류전문 연구기관, 해양생태계 연구기관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야조회의가 1996년에 발간한 「동아세아지역의 두루미류 중요서식지 보호계획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조류 현황은 북한 자체의 조사연구 결과이다. 북한에서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조류관련 자료이며,[88] 희귀조류 보호를 위해 바닷새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에 북한의 높은 관심

북한의 대외관계는 서방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경제 분야 및 사회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소수의 국가와 정치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고, 일부 유럽 국가에 한정

88) 림추련 외(2004)에 따르면 북한에서 노랑부리백로는 4월 중순부터 서해안의 무인도서에 출현하여 5월 중순에 번식한다고 함. 북한에 도래하는 노랑부리백로는 1,200-1,500마리로 추정됨. 저어새와 관련한 연구는 김광남 · 박우일(2001) 및 림추련 외(1998)의 연구가 있는데, 2001년 조사 당시 저어새 개체수를 200여 마리로 추정하였음. 김광남 · 박우일(2001)이 추정한 전 세계 저어새 개체수는 550여 마리였음.

하여 경제 분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대외관계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 분야에서 대외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북한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극적이며, 상대적으로 활발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1963년 최초로 IUCN의 회원국이 된 이래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통해 환경보호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9]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에 가입하였고,[90] IMO의 동아시아 지역해 관리기구인 PEMSEA의 회원국이 되었다. 2003년에는 UNEP과 공동으로 북한의 환경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환경분야 대외개방과 국제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DPRK · UNEP · UNDP, 2003).

또한 북한은 2000년 이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IMO/PEMSEA의 지원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연안전문가양성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제환경교육미디어프로그램(Environment Education Media Program, EEMP)의 협조를 받아 평양에서 환경교육 ·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해양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현황과 여건분석을

89) 북한 평양방송은 2003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는 인류의 사활적인 요구'라는 제하의 문답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환경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자연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과 세계자연보호연맹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남정호 외, *Op. cit.*).

90) 2004년 5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생물다양성협약기구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연합뉴스 2004. 6. 1; 남정호 외, *Ibid.* 참조).

토대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북한의 지역해 프로그램과 교류 및 협력 2~3년 현실화될 전망

북한은 PEMSEA 가입 이전에도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정부간 회의에 구성단계에서 2회 참여하였다. YSLME의 운영위원회(Programme Steering Committee)에 2005년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2006년 11월 중국 측에 YSLME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황해 광역생태계관리프로그램에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지역해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접근과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NOWPAP 활동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해프로그램이 대외관계 개선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북한이 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지역해프로그램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역해프로그램의 틀을 활용하여 해양평화공원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2) 「물범 · 저어새 · 노랑부리백로 등 생태계 보전」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현안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해양오염보다는 생태계 보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체제유지에 약점이 될 수 있는 오염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적어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양호한 생태계를 주요 교류현안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91] 이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비롯하여

91) 2003년에 발간한 보고서가 이전과 달리 하천오염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변화된 상황임이 분명함.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염개선분야지만,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인 '생태계 보전' 분야를 선호할 것으로 보임.

다양한 서식지와 경관을 천연기념물, 바닷새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교륙협력에서 '생태계 보전'이 접근이 용이한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도 최근 들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유인도서인 백령도의 물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의 접경지역 접근 및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태계 분야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식하는 물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는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해연안에서 남북한 해양환경분야 교류 및 협력의 대상으로 생태계 보전이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시사한다.

(3) 「전문가 교류, 교육훈련」이 실현 가능한 해양평화공원 관련 남북 교류·협력 분야가 될 전망

북한이 최근 들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유치와 시행에 관심이 있고,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국제기구(PEMSEA, EEMP)의 지원을 얻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언론과 통신 또는 주요 발표문에서 조사연구를 위한 장비확충과 인력양성이 언급된 이래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기구참여 및 행사개최에 관심이 많다.

특히 서해연안 해양환경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연구가 불가피한데 현재 북한 조사·연구 인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반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한 내적 요구는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에 수렴되고 있으며, 환경실태 파악을 위한 분석능력과 장비확충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관련 전문가 접촉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추진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분야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전문가 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장비확충 지원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NLL 관련 갈등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약점이자 기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

북방한계선(NLL)은 서해해상에서 남북한 갈등의 근본요소이며,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현안이다. 이는 군사적, 정치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남아있었던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NLL의 상징성 때문이다. NLL에 대한 양보는 결국 관할 면적에 대한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의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LL이 해양평화공원뿐만 아니라 남북한 해양환경분야 교류협력에서 약점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06년 5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된 후, 북한은 NLL 재설정에 남한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NLL이 남북한 정치, 군사, 경제 교류협력에서 언제든지 회담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LL 해결의 어려움, 갈등의 근본원인이라는 속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NLL 관련 갈등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최대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남북한 경계설정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해결이 어렵다는 NLL의 특징은 역으로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NLL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해양평화공원이라는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LL은 서해해양평화공원 추진과정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속도와 방향, 범위'와 상호작용하는 이슈이다.

(5) 당분간 남한 중심의 자료축적 및 전략개발이 우선될 것

현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이 남북한 사이에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을 개발하는 남북한 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에서는 해양평화공원 추진

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연안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태계 조사 실시,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연구 수행, 국제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하여 향후 남북한 협력에 대비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해양평화공원 추진은 남한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해양생태계 및 환경관련 자료의 축적, 합리적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남북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국제사회 지원과 협력 강화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철(2005)[92]은 현 단계 남북관계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가 평화체제 구축이므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 구축과 같은 현안은 큰 범위의 정치적 화해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서 발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회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여전히 남한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의의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사회 동향

1)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현황

접경지역의 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기원은 미국-캐나다 접경에 위치한 오대호 협력관리와 미국-멕시코 사이의 Big Bend 국립공원에서 찾을 수 있다(남정호・강대석, 2003). 그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보호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1970년대 UNESCO가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Biosphere, MAB)'을 수립하면서부터 적용되었

92) 이정철, 저자 개인교신(2005. 8).

다.[93] 그러나 구체적인 개념은 기존 보호구역 중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Zibcz and Green(1997)이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Internationally Adjoining Protected Area, IAPA)'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륙별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현황은 <표 3-3>과 같다. 총 보호구역 818개소 가운데 접경지보호구역은 총 1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3,168,836㎢에 해당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북미지역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1,458,9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남미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3〉 대륙별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현황(2005년)

지역	2005년 보호구역	접경지보호구역	면적(㎢)
북미지역	97	15	1,458,972.9
아프리카	186	33	640,160.7
중앙아메리카 및 남미	161	29	523,868.9
아시아	185	46	459,644.1
유럽	189	65	86,189.8
계	818	188	3,168,836.5

자료 : Mittermeier *et al.*(2005, p. 344).

보호구역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3-4>와 같이 그린란드가 가장 넓은 974,523.9㎢를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 다음으로 438,218.1㎢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이 유일하게 10대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94,9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3) MAB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http//www.unesco.org/mab를 참조.

〈표 3-4〉 국가별 접경지역 관련 보호구역 면적(2005년)

순위	국가	면적(㎢)
1	그린란드	974,523.9
2	미국	438,218.1
3	베네수엘라	262,808.1
4	러시아	166,670.5
5	캐나다	139,587.4
6	나미비아	108,320.6
7	잠비아	100,963.5
8	보츠와나	100,616.3
9	중국	94,919.4
10	볼리비아	63,905.4

자료 : Mittermeier *et al.*(2005, p. 344).

2) 주요 국제기구 접경보호구역 정책

IUCN, 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해당 국가가 보호구역 분야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963년 세계자연보호연맹에 가입한 이래 13개의 국제환경협약과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 최근 들어 지구환경금융(GEF),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IMO/UNDP/GEF의 지역해 프로그램인 PEMSEA는 현재 평양에서 연안통합관리 교육센터를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남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안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남정호, 2006). 또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사업의 성과로 결성된 국제자문단그룹(IAG)에는 UNESCO, IUCN, YSLME, NOWPAP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을 하고 있다.

3) 동북아시아 정치지형

동북아시아는 현재 상황에서 중동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지난 세기 냉전의 유산이 존속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 미국과 동맹관계를 확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의 중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최근의 핵실험을 통해 현재의 여건을 해결하려는 북한의 등장으로 동북아의 정치지형 및 구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종의 접경지역 보호정책인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이 성공적인 형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와 다자간 정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안보환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개발 노력에 따른 지역정세 불안정의 심화이다. 이러한 요인은 특히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의 정책방향의 하나로 자리 잡은 '테러와의 전쟁'과 맞물려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그간의 일방주의적 외교의 형태에서 벗어나 테러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북압박의 수위를 적극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김경호, 2002). 특히 지난 7월 9일에 있은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UN안보리 대북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94] 이러한 정세불안 요인은 내부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북한이 실리추구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고립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간 잠재적인 영토분쟁의 발생 가능성이다(박홍석, 2005). 한·중·일 및 러시아 간에 존재하는 영토분쟁의 실마리가 미래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요인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

94) 지난 7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일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도서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양안갈등도 지역 내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이와 같은 복잡한 갈등구조와 정치지형 하에서도 남한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긍정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동북아 역내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변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중・일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지지한다는 분석도 있다.[95] 이와 같은 상황은 NOWPAP, UNESCO, IUCN, YSLME, PEMSEA 등의 환경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북한지원과 남북한 교류협력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95) 손인섭,「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p. 49.

제4장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인식

1. 인식분석의 목적과 범위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진의 방향과 내용이 남북관계 및 국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 다수의 공통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전국 여론조사를 전문 설문기관에 의뢰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남북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나아가 해양평화공원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진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격적인 전국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설문의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본 설문조사는 ⅰ) 북한 관련 일반 인식, ⅱ)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ⅲ) 남북간 협력에 대한 견해, ⅳ) 서해연안 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일반 견해, ⅴ) 서해연안 평화공원지정 추진체계에

대한 견해, vi) 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 등 6개 분야 30개 문항에 대해 이루어졌다.

실제 조사는 2006년 9월 한 달 동안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주관 하에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선정은 각 지역별 할당 후 지역 내에서 대상자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3.7%이다. <표 4-1>은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조사의 개요이며, <표 4-2>는 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설문대상자의 응답특성을 보여주고 있다.[96]

〈표 4-1〉 조사의 개요

대상 및 지역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조사시기	2006년 9월(예비설문 : 2006년 7월)
조사방법	일대일 직접 면접조사
표본 수	700명(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내용	i) 북한 관련 일반 인식 ii)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iii) 남북간 협력에 대한 견해 iv) 서해연안 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일반 견해 v) 서해연안 평화공원지정 추진체계에 대한 견해 vi) 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
표본오차	±3.7%

주 : 조사작업은 동서리서치(www.dsrgroup.co.kr)가 실시하였음.

96) 전체 설문의 내용 및 주요사항에 대한 집계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4-2〉 설문대상자 응답특성

구 분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	응답률
세대주 여부	세대주	382	54.6%
	배우자	318	45.5%
성별	남성	350	50.0%
	여성	350	50.0%
연령대	20대	41	5.9%
	30대	262	37.4%
	40대	276	39.4%
	50대 이상	121	17.3%
거주지	서울	100	14.3%
	부산	100	14.3%
	대구	100	14.3%
	인천	100	14.3%
	광주	100	14.3%
	대전	100	14.3%
	울산	100	14.3%
직업	자영업	240	34.3%
	블루컬러	164	23.4%
	화이트컬러	146	20.9%
	주부	141	20.1%
	무직/기타	9	1.3%
학력	중졸 이하	55	7.9%
	고졸	353	5.04%
	대재 이상	292	41.7%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0	15.7%
	200만 - 299만 원	205	29.3%
	300만 - 399만 원	198	28.3%
	400만 원 이상	187	26.7%
가족수	2명 이하	113	16.1%
	3명	104	14.9%
	4명	404	57.7%
	5명 이상	79	11.3%
전 체		7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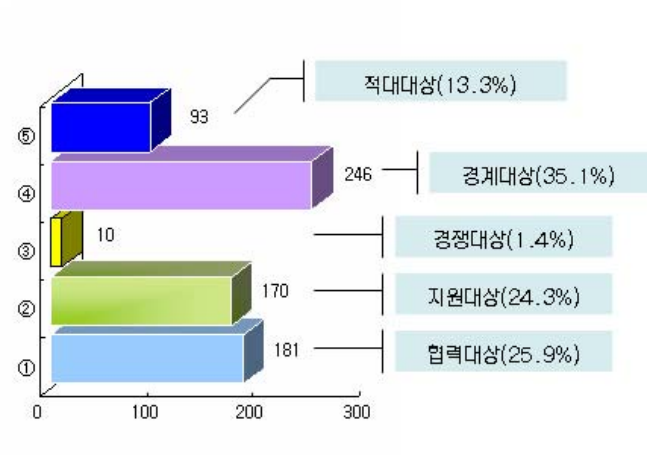
2.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북한 관련 일반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시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평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35.1%는 경계의 대상이라고 답하였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자는 25.9%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원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전체의 24.3%와 13.3%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인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협력 및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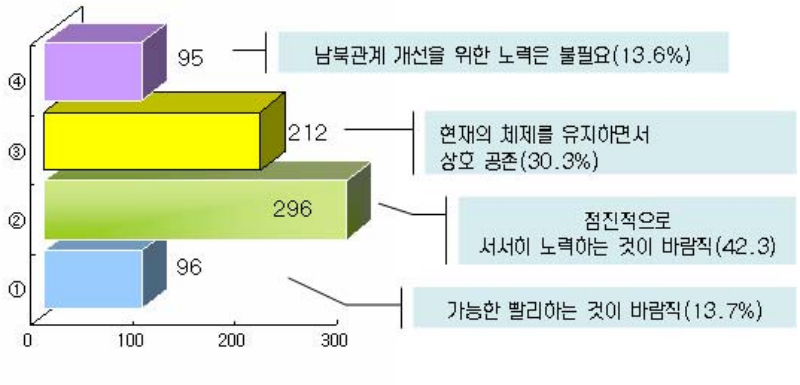
〈그림 4-1〉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각각 50.2%와 49.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서로 공존하고 있으므로 북한과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양분된 인식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의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6명인 42.32%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0.3%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3.6%로 낮게 나타나 상호공존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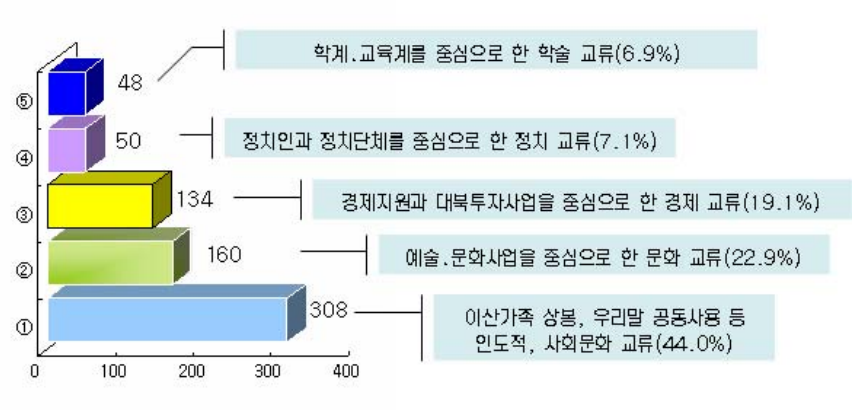
(2) 남북한 관계 개선 방안

실현 가능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44.0%가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등 인도적・사회문화적 교류'를 선택하였고, '예술・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교류'라고 응답한 비율도 22.9%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교류'와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7.1%와 6.9%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남북 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북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전체의 19.1%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남북관계의 흐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4-3〉 실현 가능한 남북한 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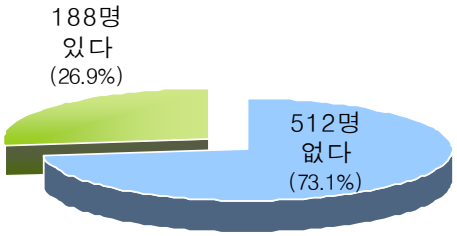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사건(2006년 7월 5일)을 계기로 평소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그림 4-4>와 같이 다수인 73.1%는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고 26.9%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영향을 받았다는 18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47.9%는 협력·지원 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했으며, 협력·지원 대상에서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도 19.1%에 달하였다(<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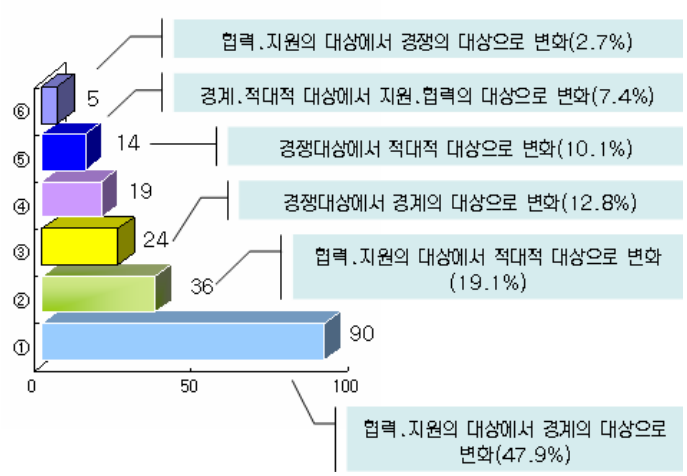
림 4-5>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군사조치가 일반 국민 다수에게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4〉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그림 4-5〉 대북한 인식변화의 구체적 양상



2)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1) 남북한 권역별 긴장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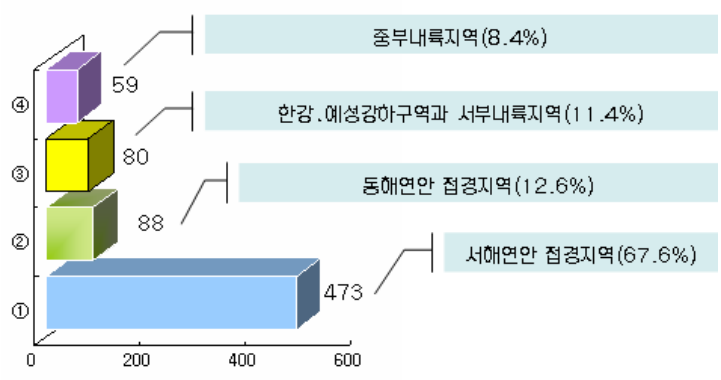
<그림 4-6>의 '서해연안 접경지역', '한강·예성강 하구역과 서부내륙지역', '중부내륙지역', '동해연안 접경지역' 4개 권역 중 남북간 긴장강도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해연안 접경지역'과 '한강·예성강 하구역 및 서부내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2.6%와 11.4%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서해연안의 긴장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7> 참조).

반면 지난 2005년 전문가 조사에서는 ①권역이 가장 긴장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문가들의 인식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접경지역 권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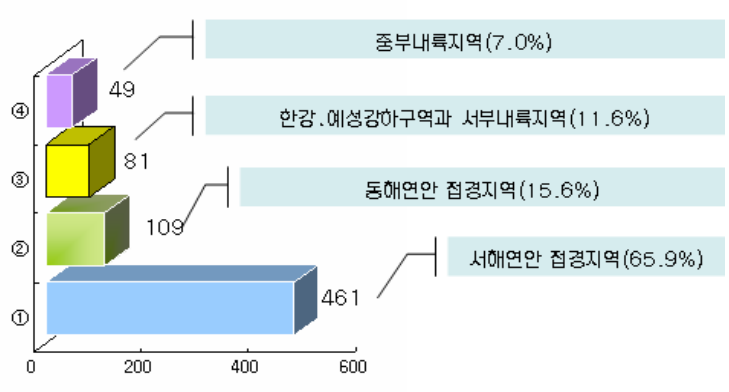
〈그림 4-7〉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10년 전과 비교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에 대해서도 <그림 4-8>과 같이 65.9%가 '서해연안 접경지역'이라고 답하였고, '동해연안 접경지역', '한강・예성강 하구역과 서부내륙지역'이라는 응답은 각각 15.6%와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한의 접경지역 가운데 서해연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긴장강도가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긴장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긴장강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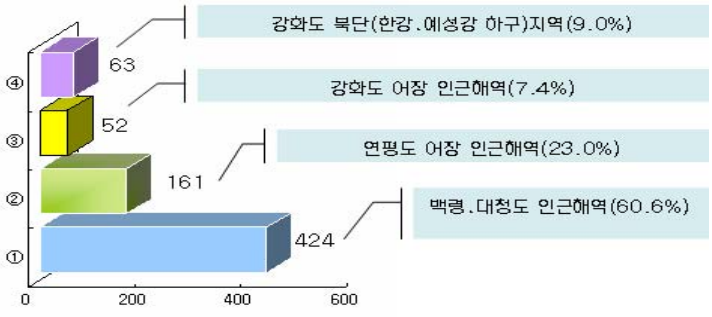
또한 <그림 4-9>의 ① 백령·대청도 인근 해역, ② 연평도 어장 인근 해역, ③ 강화도 어장 인근 해역, ④ 강화도 북단(한강·예성강 하구) 지역 중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4-9〉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권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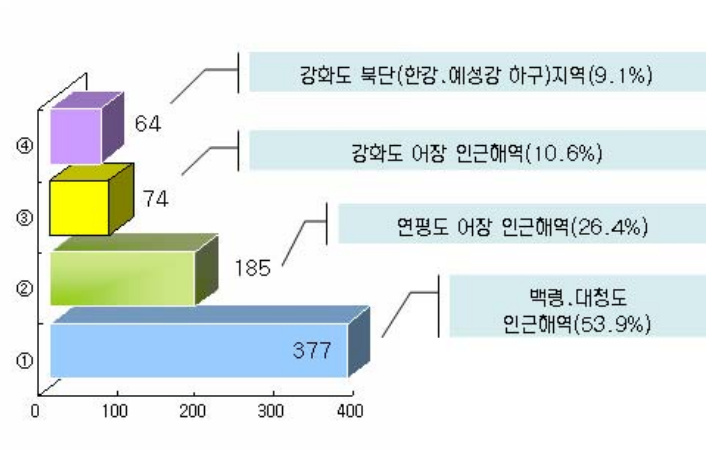
이에 대해 60.6%의 응답자가 백령·대청도 인근 해역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가장 긴장강도가 높은 권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0%는 연평도 어장 인근 해역을 꼽았다.

〈그림 4-10〉 서해연안에서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백령·대청도 인근해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53.9%로 조사되어 백령·대청 지역이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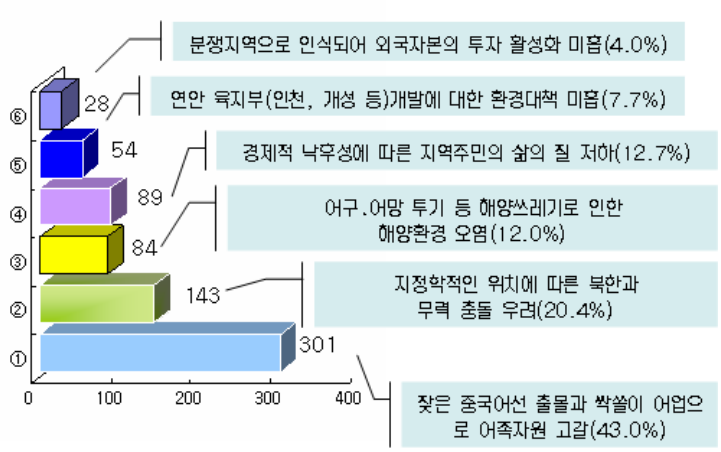
(2)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그림 4-12>와 같이 다수인 43.0%의 응답자가 '잦은 중국 어선의 출몰과 싹쓸이 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북한과 무력 충돌 우려'와 '경제적 낙후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각각 20.4%와 12.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투자 활성화 미흡'이나 '연안 육지부 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을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 문제, 환경관련 문제보다는 중국의 어로행위와 남북간 돌발적인 무력 충돌 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현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05년에 남북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의 인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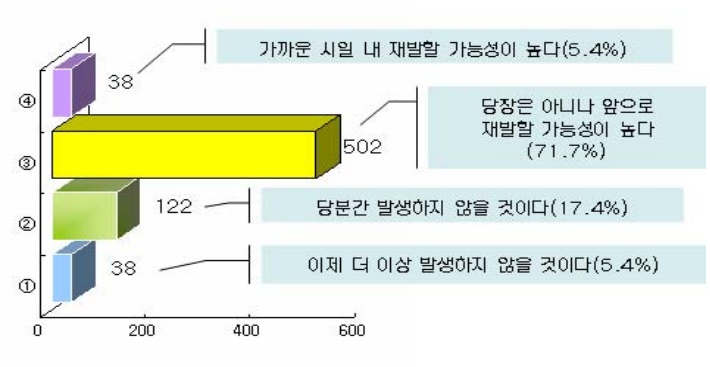
〈그림 4-12〉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관한 견해



또한 지난 1999년과 2002년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1.7%의 응답자가 당장은 아니나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반면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4%와 1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참조).

97) 남정호 외, *Op. cit.*, p.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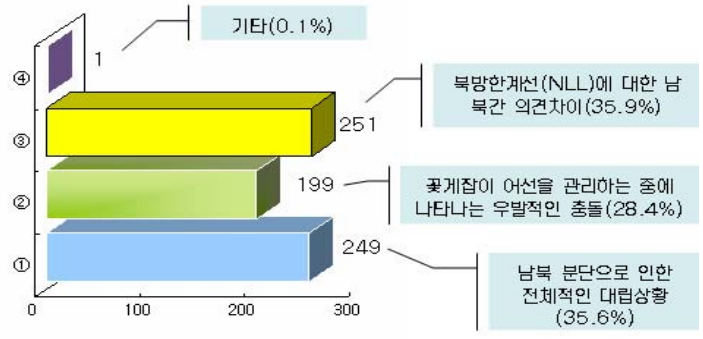
〈그림 4-13〉 향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견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림 4-14>와 같이 '북방한계선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 '분단으로 인한 대립상황' 때문이라는 견해가 35.6%로 거의 유사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꽃게 잡이 어선을 관리하는 중에 나타난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비율이 28.4%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한 대립상황에서 기인하는, 보다 근본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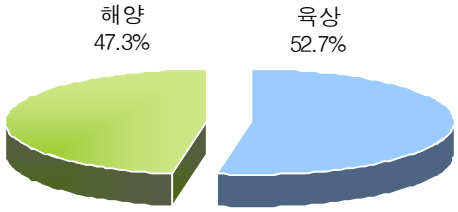
〈그림 4-14〉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 군사적 충돌의 원인에 대한 견해



3) 남북한 간 협력관리에 대한 견해

먼저 남북협력관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위해 협력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육상'과 '해양'으로 나누어 향후 중점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4-15>와 같이 52.7%의 응답자는 산업단지, 관광개발 등 경제협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육상 공간'이라고 응답하였고, 47.3%는 공동어로, 해운·항만, 수산자원 증·양식 등과 관련된 '해양 공간'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98] 그러므로 남북협력사업은 육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향후 '해양 공간'에서 남북협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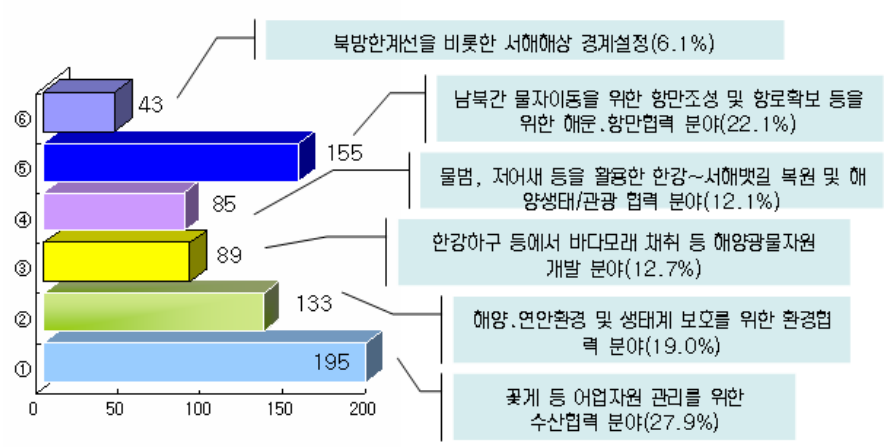
〈그림 4-15〉 남북협력관리의 공간적 비중



이번 조사에서는 해양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형태와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남북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꽃게 등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수산협력 분야'의 비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해운·항만분야'가 22.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해양생태/관광 협력 분야'와 '해사채취 등 해양광물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16> 참조).

98) 남정호 외(2005)에서 전문가 의견은 '육상'이라는 응답이 63.4%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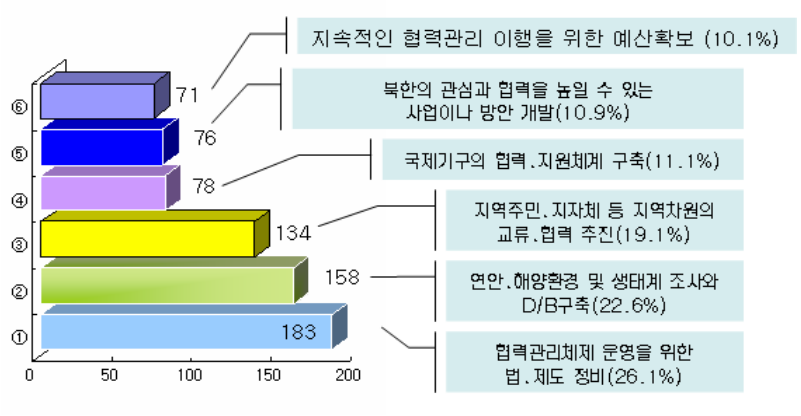
〈그림 4-16〉 해양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견해



만일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남북이 협력하여 관리하는 경우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림 4-17>과 같이 '협력관리체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선택한 비율이 26.1%로 집계되었다. '연안・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와 D/B 구축', '지역주민・지자체 등 지역차원의 교류・협력 추진'이 각각 22.6%와 1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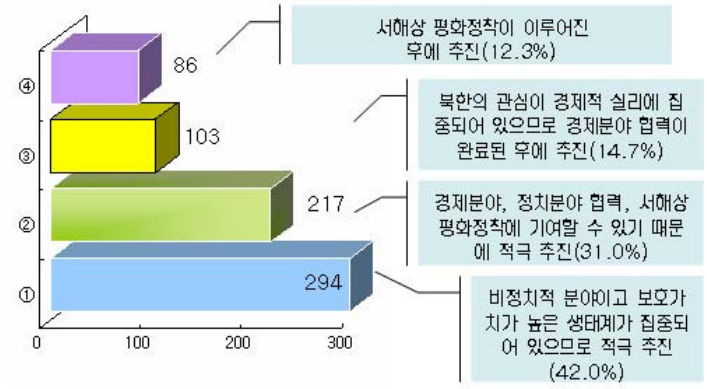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본격적인 협력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이 용이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산과 해운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되, 협력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협력관리를 위해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에 대한 견해



환경 및 생태계 보전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다수인 42.0%는 '비정치적 분야이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존재하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31.0%는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경제협력이나 평화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는 27.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그림 4-18> 참조).

〈그림 4-18〉 서해연안에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남북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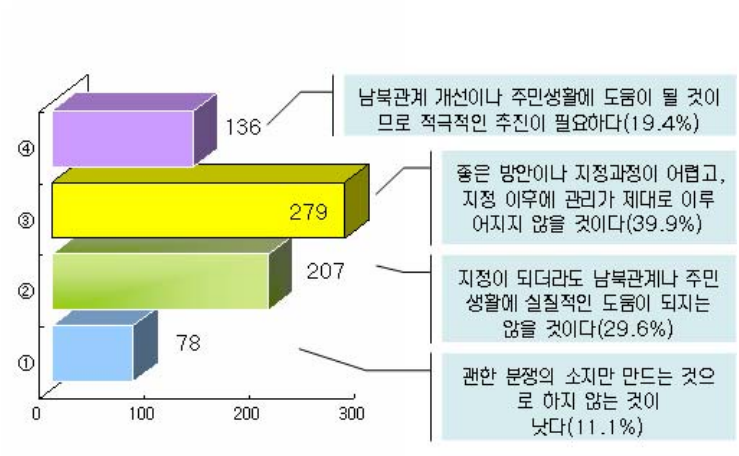


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견해

(1)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인식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좋은 방안이나 지정과정이 어렵고, 지정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견해가 가장 많은 3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응답자들이 아직은 해양평화공원지정에 대해 생소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9> 참조). 또한 '지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는 비율도 29.6%에 이르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에 대해서는 다른 남북협력사업에 비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북관계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19.4%,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다'는 견해가 11.1%로 나타났다.

〈그림 4-19〉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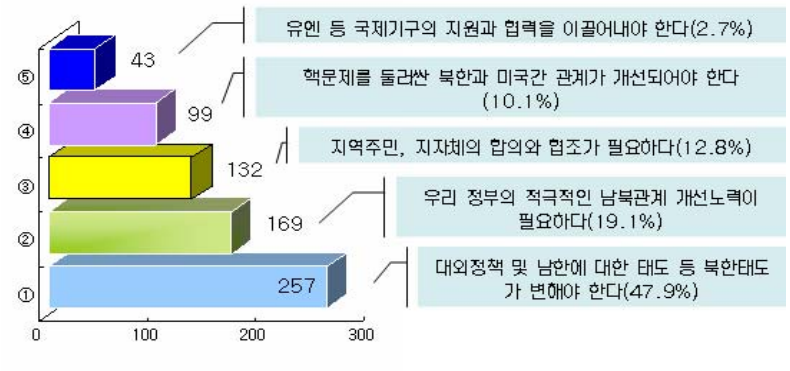


2005년 전문가 조사에서는 '남북관계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56.7%로 나타나, 해양평화공원 사업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99]

(2)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전제조건과 지정주체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할 경우 전제되어야할 사항은 대해서 47.9%가 '대외정책 및 남한에 대한 태도 등 북한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19.1%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0.1%와 2.7%로 비교적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20> 참조).

〈그림 4-20〉 해양평화공원 지정시 전제조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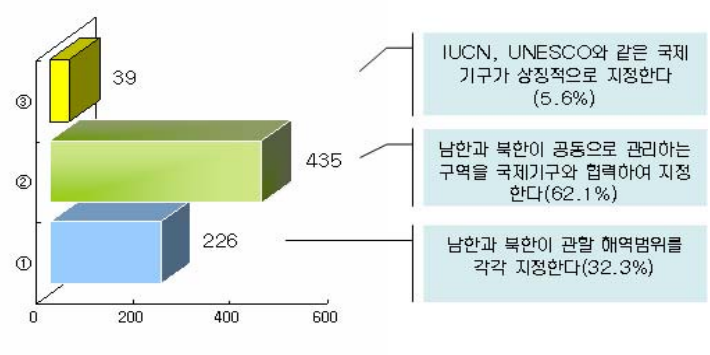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국제적 문제나 주변의 상황변화보다 남북간 관계 개선과 북한의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주체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지정하되, 국제

99) 남정호 외, *Ibid.*, 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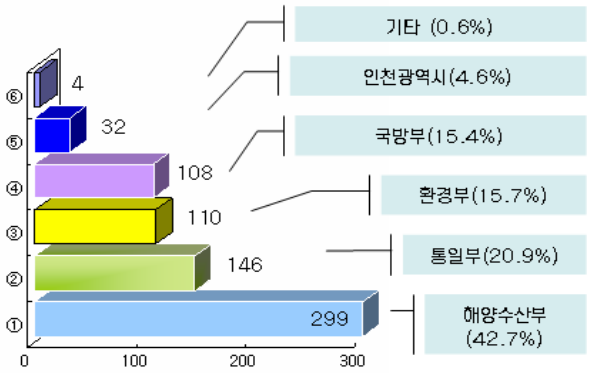
기구는 자문기구로 참여시킨다'는 견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북이 관할 해역범위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와 '남한, 북한,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3%와 5.6%로 조사되었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1〉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주체에 관한 견해



또한 해양평화공원의 지정과 관련한 주관부처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해양수산부로 응답하였으며, 통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20.9%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4-22> 참조).

〈그림 4-22〉 해양평화공원 지정 관련 주무부처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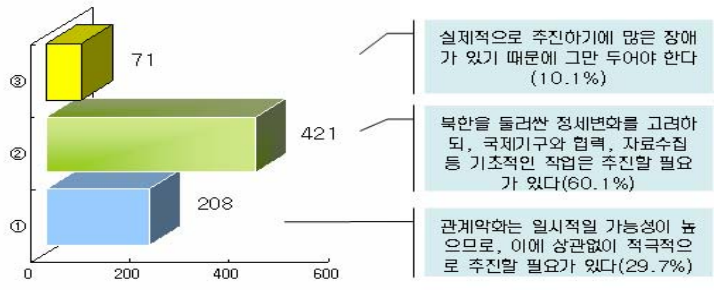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주무부처로 해양수산부를 선택하였으며,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서해연안 평화공원의 추진시 초기에 국민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와 해양평화공원

국제관계 및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의 변화가능성과 추진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만일 남북장관급회담이나 6자회담, 남북경제협력에서 큰 성과가 없이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를 집계한 결과는 <그림 4-23>과 같다.

다수인 60.1%의 응답자들은 '북한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고려하되 국제기구와 협력, 자료수집 등 기초적인 작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관계악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29.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일시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3〉 남북관계와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관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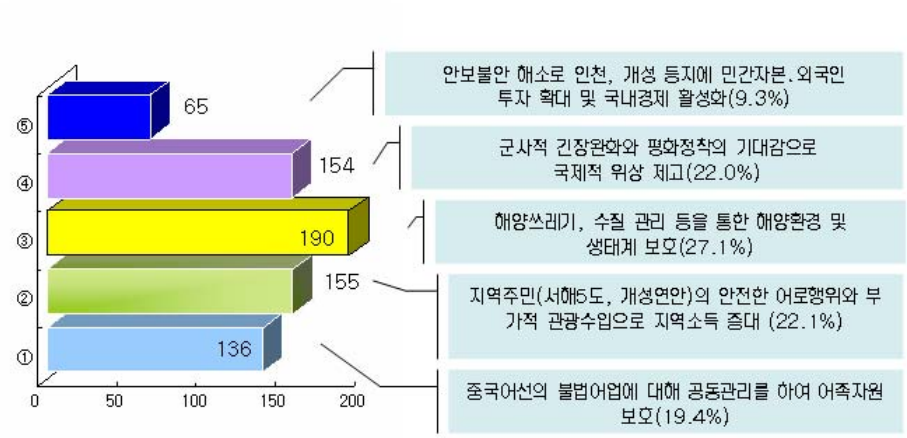
5)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

(1) 기대효과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그림 4-24>와 같이 27.1%는 '해양쓰레기, 수질 관리 등을 통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라고 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안전한 어로행위와 부가적 관광수입으로 지역소득 증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기대감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에 대한 견해가 각각 22.1%와 22.0%로 집계되었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19.4%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할 경우 해양환경 개선, 경제적 이득, 국제적 위상 제고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4〉 해양평화공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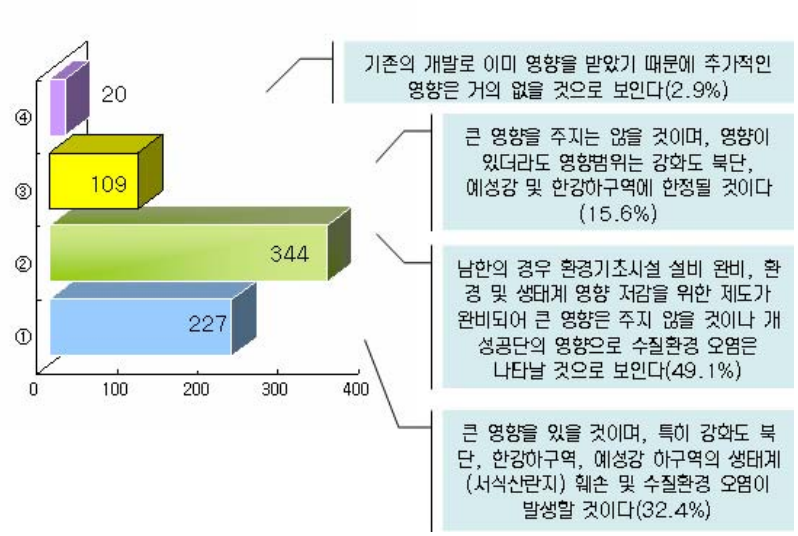
(2) 서해연안 환경·생태계 영향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개발·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시작

으로 개성-김포-인천으로 연결되는 경제벨트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서해안 경제벨트가 한반도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발전할 경우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4-25>와 같이 전반적으로 많은 의견이 서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9.1%가 '남한의 경우 큰 영향은 없으나 개성공단의 영향으로 수질환경에 대한 오염은 나타날 것이다'고 답하였다. 또한 32.4%가 '큰 영향을 주어 특히 강화도 북단, 한강 하구역, 예성강 하구역의 생태계 훼손 및 수질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추가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 혹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5〉 서해안 경제벨트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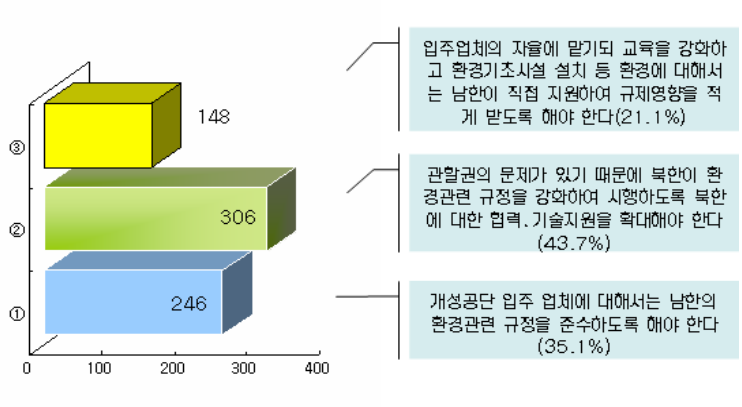


앞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산업단지 등이 확장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척·매립이 증가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서해해양환경이 오염될 경우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저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6>과 같이 다수의 응답자인 43.7%가 ‘북한이 환경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북한에 대한협력・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남한의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와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 SOC에 대해서는 남한이 직접 지원하여 규제영향을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선택비율이 각각 35.1%와 21.1%로 조사되었다.[100]

〈그림 4-26〉 개성공단 가동과 이에 따른 환경대책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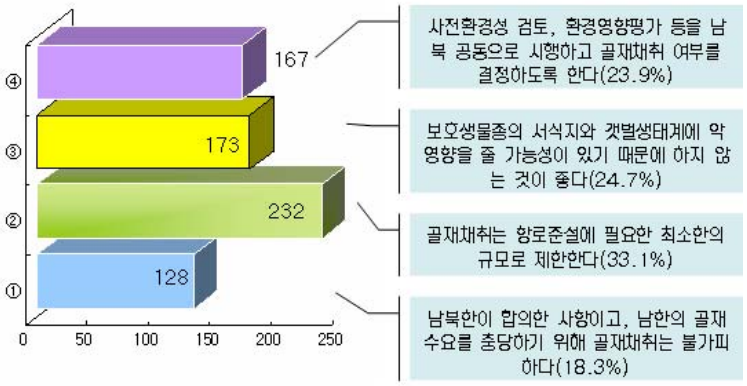


지난 2006년 6월에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을 비롯한 접경해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서식지이며, 보호어종과 넓은 갯벌이 분포하고 있어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서식지・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서해연안 접경해역에서 골재채취는 중요한 남북

100) 남정호 외(2005)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협력과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7%, 남한의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9%로 제시되었음.

경제협력 사업이지만 인근 지역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림 4-27〉 접경해역의 골재채취에 따른 생태계 훼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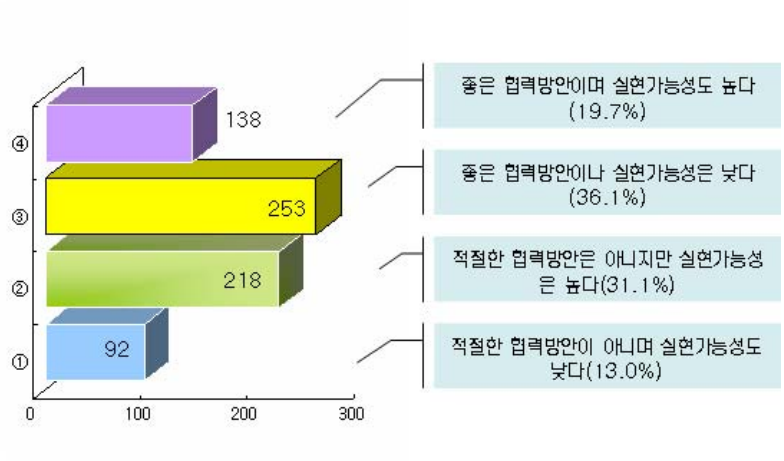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접경해역의 골재채취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3.1%는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24.7%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23.9%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여 다수의 의견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었다(<그림 4-27> 참조).

(3) 유휴 연구기자재 지원에 관한 의견

남측에 현재 유휴·재고로 남아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자재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36.1%가 '좋은 협력방안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반면 '적절한 방안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한 견해는 보다 낮은 31.1%로 나타났다. '적절치 못하며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응답을 13.0%였다(<그림 4-28> 참조).

〈그림 4-28〉 유휴 · 잉여 연구기자재 북한 전달사업에 대한 견해



유휴기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와 낮다는 견해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의 체계적인 마련과 지원의지가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평화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의 예를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남북협력사업의 예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4-3>과 같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관광 사업'과 '모래채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8.4%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불법어로 및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처'도 56.7%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평화구역 지정과 해주항 정비 · 확충 및 추가 항만 개발 지원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표 4-3〉 해양평화공원 연계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	실현 가능성
1.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관광 사업 추진	① 있음 ⇒ 68.4% ② 없음 ⇒ 31.6%
2. 모래채취	① 있음 ⇒ 68.4% ② 없음 ⇒ 31.6%
3. 강화, 연평, 백령 권역별 생태협력사업 추진	① 있음 ⇒ 54.9% ② 없음 ⇒ 45.1%
4. 평화구역 지정 및 민간기구 공동 관리	① 있음 ⇒ 40.6% ② 없음 ⇒ 59.4%
5. 북한에 해양연구 기자재 및 기술 지원	① 있음 ⇒ 55.4% ② 없음 ⇒ 44.6%
6. 해주항 정비·확충 및 추가 항만 개발 지원	① 있음 ⇒ 46.9% ② 없음 ⇒ 53.1%
7. 2004년 해운합의서상 항로 활성화	① 있음 ⇒ 48.9% ② 없음 ⇒ 51.1%
8. 불법어로 및 기름오염사고 남북공동대처	① 있음 ⇒ 56.7% ② 없음 ⇒ 43.3%

3. 설문조사 결과 종합

1) 전국조사 결과

전국조사를 통해 살펴본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협력과 지원대상이라는 견해와 경계 및 적대대상이라는 견해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예상보다 변화의 폭이 적었으며, 정치·학술 교류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 교류가 실현 가능한 관계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도 26.9%로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 추후 돌발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권역별로 남북한 간 긴장강도를 조사한 결과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중 백령·대청도 인근 지역과 연평도 어장 인근이 가장 긴장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가장 큰 실질적 문제점은 남북한 간의 충돌이나 갈등보다 중국 어선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과 서식지 훼손이라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중국 어선의 문제와 서해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분야 남북협력에서는 다수가 해양자원개발, 공동어로, 수산자원 협력과 같은 경제 분야와 해운·물류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해연안의 남북협력에서 경제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정이 쉽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정주체로는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일 지정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정세변화에 영향 받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이나 기초 자료 수집활동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앞서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해양평화공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일반 국민은 긴장완화보다는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같은 경제적·실질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비교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북관련 일반 사항에서는 견해 차이가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긴장강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경우 서해연안을 선택한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서해연안의 전략적 중요성과 내재적 긴장상태를 일반 국민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남북협력관리의 공간적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대해 일반 국민은 '육상'과 '해양'에 대한 응답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63.4%가 '육상'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그룹에 비해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육상 중심의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육상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해연안을 비롯한 해양중심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및 추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실현 가능성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응답이 많은 반면 전문가 그룹은 남북관계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과반수인 56.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101] 이러한 차이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본 정보의 수준과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북사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광범한 지지가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비정치적 분야, 경제적 분야, 제도적 기반확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102]

---

101) 남정호 외, *Op. cit.*, p. 151.

102) '좋은 방안이나 지정과정이 어렵고 지정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견해는 일반인의 경우 39.9%, 전문가 그룹의 경우 37.3%로 나타나 서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1.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서해연안 남북한 접경연안에서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2장의 추진여건 및 제3장의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남한 내 인식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하였다. 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은 2005년 제1차년도 연구결과의 내용을 수용하고, 2005년 말 이후 달라진 국내외 정세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였다.

2006년도 연구에서 '해양평화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정되는지,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공원이라는 개념이 적절한지 등'과 같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추진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 제1차 년도에 접경지역 주민에 한정하였던 설문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확대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을 확대한 것은 국민의 인식수준과 태도가 남북관계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03] 즉, 향후 남북관계 전반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지지정도와 여론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104]

---

103) 해양평화공원의 추진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태도와 인식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추진여건'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요소임.

104) 해양평화공원 추진 정책이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남북한 군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인접지역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금석이 되며,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이 정책의 추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06년도에 변화된 정세와 여건을 반영하고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을 '기본방향, 단계별 목표,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에 기초한 단계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은 별도의 절을 통해 제시하였다.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1) 2005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여건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제1차 년도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생태 및 환경을 비롯하여 5가지 분야이다.

▷ 생태 및 환경
▷ 남북한 해양환경보전 법제도
▷ 남북한 해양수산분야 협력 및 북한의 국제협력
▷ 북한의 사회경제 현황
▷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인식수준

생태·환경 현황은 추진 여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남북한이 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활용하였다. 생태 및 환경현황은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분야인 반면, 다른 분야의 여건분석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리적, 제도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북한의 남한 및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관계의 특징, 북한내부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북한의 현황과 여건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년도 연구에서 SWOT(strengths-weakness-opportunities-threat)분석에 기초하여 도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남정호 외, 2005).

① 강점요소와 기회요소가 약점 및 위협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

2005년 진행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 및 수산실무회담 등의 성과는 2005년 후반기 동북아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을 추진하는데 강점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강점요소는 약점 및 위협요소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가장 큰 제약요인

북한 핵문제, 위조지폐를 둘러싼 공방과 갈등은 남북한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될 경우 남북관계는 다른 외부요소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해양평화공원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해양평화공원과 경제 분야 협력중심의 남북교류 추진은 상충 가능

해양평화공원 추진방안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인접지역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경우 두 가지 교류협력 방안은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경제 분야 협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도 기업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포함한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실제 추진단계에서 남한 내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국제기구 중심의 해양평화공원 추진은 성과도출에 한계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한과 북한의 영해 관할권 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 지정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 지역해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DMZ를 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UNESCO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초기에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관련 중앙부처를 제외한 사적 영역의 관련 주체사이에 공감대 미형성

2005년 설문조사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 해양평화공원과 서해상 평화정착 및 환경보전이 대중적 차원에서 연계성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1〉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남북한 대화의 정례화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대한 북한의 높은 정책 우선순위 ▷남북한 수산·해운분야 협력기반확보 ▷해양평화공원 추진사업 국정과제 채택 ▷남한의 환경관리체계와 관리역량 ▷평화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필요성 인식	▷해양환경분야 인적교류 경험부족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정보부족 ▷경제 분야, 육상중심의 남북협력 및 환경보전과 조정체계 부재(개발과 보전의 갈등 잠재) ▷지역주민, 지자체의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개념 미정립
기회(Opportunities)	**제약(Threats)**
▷북한의 환경보전분야 대외협력 활성화 추세 ▷접경지역 협력관리에 관한 국제사회 관심증대 ▷동북아시아 지역해 해양환경 국제기구 활동강화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일본과 갈등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

자료 : 남정호 외(2005).

(2) 수용·반영이 필요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

제1차년도 연구결과와 이후 진행된 상황 및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면 2005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했던 추진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추진여건을 제시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년도 연구가 서해연안 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성 검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실체적 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변화된 연구의 초점을 고려할 때 수용·반영해야 할 추진여건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관계 답보상태 및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전망

2006년 개최한 남북한 사이의 회담 중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담은 무위로 끝났다. 그동안 동북아 정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올해 들어 북미,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색되는 국면에 있다. 6자회담을 통해 핵 현안에 접근하려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의 대립은 동북아시아 정치 및 군사정세를 좌우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외교적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수위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함에 따라 북미관계는 날카로운 예각을 형성하고 있다.

미사일 실험발사(7. 5) 후 유엔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지난 10월 9일 실시한 지하핵실험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핵실험 이전에는 핵실험의 시기, 규모, 실험 후 국제사회의 반응,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핵실험 후 이 현안에 대해 관련 국가가 적극적인 해결자세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실험 후 국

제사회와 남한 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남북한 교류협력 상황이나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점을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에 특별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이전에 비해 안정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핵실험 후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감에 기초하여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기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남북관계에서는 교류협력을 주요 현안으로 분리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남북회담의 기회와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05]

② NLL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제약요소이자 기회 요소

서해연안 지역은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공동어장 조성 등 평화정착이 가장 필요한 지역임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서해연안이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당장 실리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남북한 관계 개선에서 NLL 등 남북한 해상경계관련 현안은 2005년에는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활용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NLL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은 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6년 3월 2~3일 사이에 개최하였던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경계의 재획정이 평화정착 및 공동어로의 실현을 위한 '근원적 조치'임을 북측이 강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106] 또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을 취소할 때 북한이 '남북한 해상경계의 재획정'을 선결요건으로 명시한 것에서 재확인된다. 향후 서해연안을 대상으로 장관급회담, 실무회담, 장성급회담이 개최될 경우 NLL을 둘

105) 전 국민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들의 73.1%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남북관계 인식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외부의 돌발변수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106) 통일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판문각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했던 제3차 장성급회담의 원래 의제는 '서해상 우발충돌방지 조치 개선방안, 서해상 공동어로 수역 설정,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등이었음.

러싼 해상경계 획정은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한 실무회담에서 논의한 공동어로, 남북한 해운협력,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임진강 수해방지, 군사적 보장조치를 전제로 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합의되었다는 것은 양 측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편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상경계 현안이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해연안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근원적 문제'여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편익을 기대한 남북한 양측이 이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경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 전 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해상 남북경계에 대한 논의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해양평화공원 시범구역을 공동어로와 연계할 경우 본격 논의 가능

1차년도 연구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 및 국내 자문단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의 하나는 '해양평화공원의 지리적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특정한 목적의 관리공간인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범위설정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의제이다.

해양평화공원에 대해 북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에서 제기한 범위가 비록 제안수준이라 할지라도 NLL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에게는 해양평화공원 구상 자체마저도 부정적인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NLL이 남한과 미국의 일방적인 경계획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범위를 언급하는 것은 해양평화공원이 NLL을 고착하기 위한 계획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평화공원의 지리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이해정도와 필요성, 관리수준 및 여건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홍해 해양평화공원(RSMPP)과 같이 자국의 관할권에 한정하여 지리적으로 이격된 지점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공동의 관리구역과 독립적 관리구역을 혼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양평화공원

에 대해 남북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협력의 성과가 축적되 않은 상황에서 지리적 범위를 남한주도로 제시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NLL을 둘러싼 남북한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 북한의 관심, NLL 재설정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인식수준을 고려할 때 공동어로와 연계한 해양평화공원의 지리적 범위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평화공원의 지리적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이 남북한 회담의 의제로 상정되고,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가 가시화될 때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서 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공원'이 함의하는 상징적 내용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낮은 수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 공원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다. 공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쉬거나 휴양을 위하여 찾는 목초지'이다. 전통적인 공원은 도시 내 또는 근교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7] 한편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해양생태계와 환경의 가치를 인식함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최근의 다른 경향이다. 공원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원은 '일국 내에 지리적으로 획정된 특정한 공간'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보호구역의 다른 개념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향이고,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 그 의미를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의 본질적 개념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free access)한 공공의 공간, 그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재(common property)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해양평화공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와 생물종 및 서식지가 분포하며, 국가간 갈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와 갈등완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해양평

107) An area of land with grass and trees, usually in a town, where people go in order to relax or enjoy themselves(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화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국가간 갈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접근이 제약되어 있고, 대상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공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과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해양평화공원'이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이 공원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생태계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해양평화공원은 그 자체로 이러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평화공원에서 공원은 '지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접근, 갈등완화, 혜택의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원'에 대한 오래된 인식 때문에 해양평화공원의 실체적 개념과 이러한 합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상충조정 전략 개발이 주요 현안

2005년도 연구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이해가 합치하는 지역이다. 2005년도에 이미 해주산 바다모래를 비롯하여 북한산 모래 607만톤(384만㎥)을 반입하였고, 2006년에는 905만톤(600만㎥)의 북한 모래를 반입할 예정이다.[108] 또한 한강 하구의 모래자원 채취사업을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향후 한강 하구를 비롯하여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개발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합의 외에도 남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하구 항만 개발, 인천광역시가 주체가 되는 개풍군 개발사업 및 연육교 건설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접경지역의 멸종위기종 및 이들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위협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어새 및 노랑부리백로와 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희귀생물종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이 이러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남한과 북한

108) 통일부 보도자료(2006. 1. 5).

모두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환경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발압력으로부터 연안생태계와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경제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접경지역 개발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개발주체와 공동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할 때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다.

⑥ 해양평화공원 및 관련 개별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 필요

서해연안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여 남북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근의 북한 미사일 사태와 같은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협력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남한 주민의 인식수준과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109]

그러나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가 표출되어 앞으로 사업추진 시 국내 법제도의 정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10] 또한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한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되 상징성이 높은 사업을 병행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⑦ 국제사회의 관심제고 및 안정적 지원체계 기반 조성 중

2005년 9월에 개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관한 국제 워크숍은 서해연안 접

109)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50.2%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110)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9.4%가 적극추진, 39.9%는 지정과정이 어렵고 지정 후 관리에 한계가 있겠지만 좋은 방안이고 응답하였음.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9.6%였으며, 괜한 분쟁의 소지만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11.1%에 달했음. 이는 해양평화공원의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홍보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함을 반영함.

경지역을 대상으로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타당성 및 추진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기회였다. 이 국제 워크숍을 통해 서해연안에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대안인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제기구의 협력・지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회성 회의나 워크숍의 경우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2005년 워크숍에서 관련 참석자들은 국제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06년 초에 관련 운영규칙을 포함하여 국제자문단 구성에 관한 공식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응답한 IUCN, UNESCO, NOWPAP, YSLME 등 4개 국제기구는 자문단 구성원이 될 것을 수락하였으며, 6월말 제1차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자문단 회의를 구성함으로써 '해양평화공원은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 '국제자문단은 해양평화공원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자문(technical advice)을 수행한다는 것', '국제자문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것' 등을 합의하였다.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직간접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1) 기본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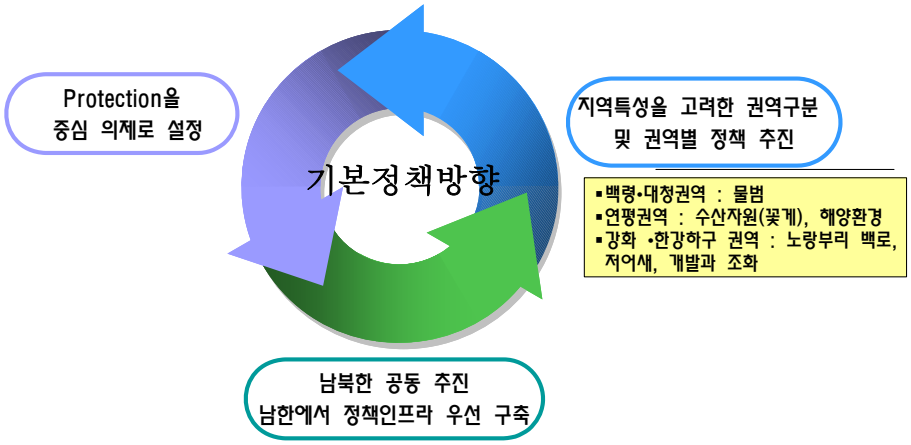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2005년의 연구결과 및 2006년에 반영・수용할 필요가 있는 여건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006년에 규명해야 할 현안이 새롭게 나타나고, 세부 여건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여건은 2005년도 연구에서 제시했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2006년도에 추가적으로 파악했던 추진여건은 2005년도의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推進)'의 개

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진'은 사전적으로는 '진척되도록 밀고 나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협의의 관점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관점에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평화공원 지정·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평화공원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둘러싼 여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의의 관점에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평화공원에 대해 남북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개별 현안 하나의 해결도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협의의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과 '추진'의 개념을 기초로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5-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



① 「생태계 및 자원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

2005년 연구를 통해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및 목표,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소개된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해양평화공원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의 보호(protection)에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도 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평화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와 관련이 있는 방안과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목표와 방향에 대해 별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중심의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설정할 경우 해양평화공원의 포괄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개의 목표·방향 중 무엇을 중심 의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다.

그러나 세 가지 목표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주체를 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남한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고 환경부의 지원과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북한의 경우 국토환경보호성이 주관기관이 될 것이며 수산청이 지원 및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것이다. 반면 서해연안 지역에 형성된 복잡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상기한 기관이 아니다. 국방부 또는 인민무력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경제발전 및 지역지원과 관련한 부처는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공원은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 역사, 경관자원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대외관계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의 기원과 서해연안에서 남북한 관계,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여건을 고려할 때 비정치적이고, 북한사회가 쉽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및 자원보호(protection)를 중심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111] 보호자원의 대상은 일반적인 해양생물자원, 경관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한 것이 평화(peace), 발전(prosperity) 의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집중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 추진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현황, 지역 경제 활동 특성, 육상에서 접근성, 지역의 사회문화 및 역사 등을 기준으로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크게 백령・대청권역, 연평권역, 강화・한강 하구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을 대상으로 한 관리방향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의 자연,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리 또는 정책시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즉 한 지역에서 성공한 모델이라 할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철저하게 지역특성(site-specific)과 지역의 현안(issue-dependent)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원리를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적용할 때 그 지역은 3개 소권역별 특징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바, 지역특성 및 현안을 고려하여 권역별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령・대청권역은 지역경제가 농업・관광업・수산업이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범, 사구를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과 경관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연평권역의 경

111)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양공간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자원관리 등 수산협력 27.9%, 생태계 보전 등 환경협력 19.9%로 나타났음. 따라서 생태계 및 자원보호에 관한 응답자의 비율은 47.8%로 매우 높은 수준임.

제는 어업의존도가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주요 어종은 꽃게를 비롯한 갑각류이다. 이와 함께 연평권역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꽃게자원을 둘러싸고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지역이다. 육지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고,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와 같은 멸종위기종, 넓은 갯벌 서식지, 높은 개발압력은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차원에서 고려할 때 각 권역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먼저, 백령·대청권역에 유일하게 서식하는 물범은 춘계 및 하계에 서식하다 북한의 서해안을 경유하여 중국 발해만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백령·대청권역에서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핵심 정책방향은 물범의 보호와 관리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연평권역의 경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보호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지 않지만 어업자원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꽃게자원을 중심으로 어업자원의 남획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 어업자원 공동 관리가 정책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한강 하구 권역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갯벌서식지를 산란, 번식에 필요한 먹이 취식장소로 이용하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한강 하구(강화도 북단)의 개발을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남북한이 공동 추진주체가 되며, 남한에서 정책 인프라 우선 구축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지정대상 지역은 잠정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영해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관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의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평화공원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복잡하고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부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할 때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이를 주도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한반도 내부문제나 특수 관계에 익숙하지 않고 이해도가 낮은 외부의 주체가 필

요이상으로 개입할 경우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이해와 신뢰, 협력에 기초하여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남한과 북한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양평화공원은 현재 남한만의 의제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의 당사자인 북한이 이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은 당분간 남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해양평화공원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남한 내부의 법률이나 제도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와 공감대를 획득하여야 한다. 공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 북한이 합의할 경우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이 우선적으로 구축할 정책 인프라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북한의 역량강화 및 지원도 포함된다.

(2) 단계별 추진목표

해양평화공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 북미관계의 악화 등 외부 여건에 매우 민감하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상안이다. 일시적으로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한 사이에 서해연안을 대상으로 합의문이 도출되더라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과 같이 해양평화공원이라는 아젠다가 남북관계에 매우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해 해양평화공원 의제가 해상경계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궁극적 목표인 평화정착, 생태계 및 환경보호, 경제발전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당면 목표'는 평화정착에서 긴장강도를 수치로 표현하거나 생태계 및 환경보호 달성정도와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대해 정량적 형태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법정 중장기 국가계획에서 관리목표는 정량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목표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도달여부를 평가하는 실질적 성과(outcome)'보다는 '남북한 간 의제상정 여부, 교류협력 횟수, 합의문 채택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 실적(outcome or performance)'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준년도의 자연환경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남한과 북한의 목표에 대한 기대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해양평화공원 관리를 위해 투입된 노력(input)과 산출물(output)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해양평화공원의 추진목표를 외형적 실적(outcome or performance)으로 제시하고, 관련 정부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5-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목표



① 1단계 목표 :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의 핵심은 남한 내, 남북한 사이, 남북한과 국제사회에서 이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공감대 형성범위가 넓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체 역량과 북한의 공간・자원 관리역량은 이에 비례하여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정책 인프라에는 남북한 해양 및 연안조사 능력, 의사결정 및 관리능력, 접경연안에 대한 지식축적, 해양평화공원의 원활한 추진 및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한 사이의 다층적인 당국자회담에서 의제화 작업, 국제자문단회의 안정화를 통한 국제사회 지지강화도 함께 실현되는 단계이다. 1단계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정책추진 사항은 2005년도 보고서의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제약요소이자 기회요소인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경계 현안을 2005년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 서해연안 경제 분야 교류협력방안과 연계하여 패키지(package)형태로 제안하여 남북한 회담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② 2단계 목표 : 남북한 합의문 채택 및 구체적 추진방안 공동개발

남한과 북한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외부의 불안정한 정치지형이 정지작업을 거치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문은 상징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합의문 채택 후에는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공무원,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와 국제자문단(IAG)이 추진방안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③ 3단계 목표 : 지리적 범위 획정 및 재원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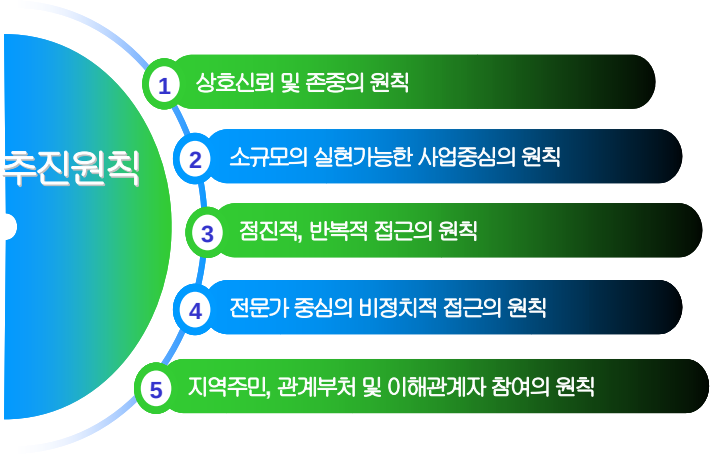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의 추진목표는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합의된 위상을 토대로 지리적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지리적 범위의 획정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는 과정인데, 남북한 사이에 제도적으로 특정 공간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평화공원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리적 범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해양평화공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합의문을 채택하고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궁극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명목상의 해양평화공원(paper park)'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추진원칙

해양평화공원의 단계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원칙은 남한 및 북한, 또는 국제사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남한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기본원칙은 남북한 사이의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적용할 일반 원칙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남정호 외, 2005).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남정호・강대석(2003)이 제시한 남북협력관리 원칙에 토대를 두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의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및 이후의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이 원칙을 5가지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5-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원칙



①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을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현대아산과 북한사이의 관계가 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원칙이다. 신뢰와 존중은 남북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사이에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분야의 교류협력의 경험이 전무한 현실에서 초기단계에 북한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때, 체제경쟁으로 인한 상호불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한다.[112]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평화공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② 소규모의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의 원칙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특수성 때문에 남북한 관련 접촉 및 합의문 채택

112) 남정호(2005)에 따르면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당국자 및 실무자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일방적으로 강조할 경우 북한의 교류 당사자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함.

등은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의 경우 북한의 정책당국이나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큰 흥미를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및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협력사업에서 북한의 실리주의적 접근이라는 최근의 경향은 외형의 규모가 큰 사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자나 실무자의 경우에도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하여 북측의 다른 입장에 있는 정책당국자의 입장 및 실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내부적 요구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위험성이 없고,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예, '해양환경조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점진적, 반복적 접근의 원칙

체제 경쟁과정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상호불신과 교류협력 경험의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사항이다. 특히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 관계 및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에 많은 영향을 받는바 일시적으로 긍정적 상태에 있을 지라도 부정적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 또는 구상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단계 또는 본격적 논의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외부조건이 변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1차년도 보고서에서 기술하였듯이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갖거나 선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단계별로 축적해야 할 성과물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반복적(incremental and iterative)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진적, 반복적 접근이 확인되었는데, 응답자의 60.1%는 '정세변화를 고려하되 국제기구와 협력 및 자료수집 등 기초작업은 추진 필요', 29.7%는 '관계악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필요'라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④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의 원칙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도주의 차원의 인적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13]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남북한 사이의 당국자 회담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정착의 방안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는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장성급회담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는 경계획정(지리적 범위설정)이 아닌 해양환경보전 일반에 관한 교류와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정착이나 경계획정은 정치적 속성이 강한 분야인 반면 해양환경보전 일반에 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 추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protection)가 비정치적 속성으로 인정받고, 외부 정세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분야 회담과 다른 별도의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역주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하나이다. 이 의제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거나 사안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강하지 못할 경우 협의절차에 쉽게 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절차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입장과 정책에 기초하여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부처의 참여는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평화공원은 서해연안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남북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민간단체,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이익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113) 남한 주민들은 실현 가능한 남북관계 개선 분야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예술문화 교류, 경제지원 및 대북투자 등' 인도적 접근, 사회경제 분야 교류를 중요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음. 설문조사에서 정치교류 및 학술교류를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각각 7.1%, 6.9%에 불과했음.

지방자치단체 등도 이해관계자이다. 현재 지역주민,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지지와 인지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견해나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책임있는 추진주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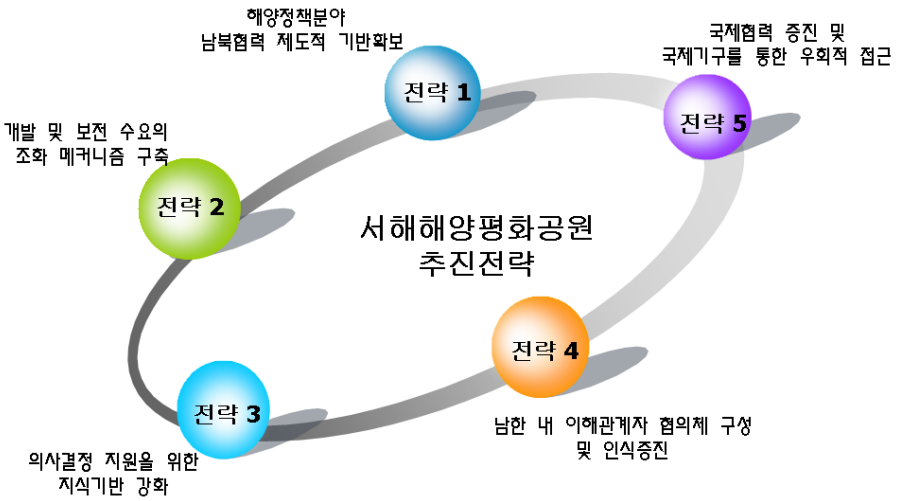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의 목표(output)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위상이 있다. 추진전략은 앞서 기술한 기본정책방향 및 추진원칙에 부합해야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추진전략은 현재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약점요소를 강점요소로, 제약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추진전략 도출의 일반적인 방법과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을 「해양정책분야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확보」, 「개발 및 보전수요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 증진」 등 5개로 제시하였다(<그림 5-5>).[114]

개별 추진전략 도출의 근거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14) 남정호 · 강대석(2003)은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전략으로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보', '보호구역 관리체계화와 최적의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비무장지대 보호 · 관리체제와 통합', '개발과 보전의 통합', '이해당사자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교류 · 협력 추진',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협력관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제시하였음.

〈그림 5-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1) 전략 1 : 해양정책분야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확보

(1) 배경 및 여건

2005년 6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남한의 「연안·해양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이 구상이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의 성격상 법률이나 경성 제도(law or institutional mechanism)와 같이 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하고,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와 관련 있는 「접경지역 지원법(2000년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도 조정·극복해야 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분야의 공간과 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한 법률과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도 해양평화공

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요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현재 남한 내부에서 북한과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현재의 협력과 지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구상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이 구상의 안정성, 지속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115] 특히 2000년 이후 진행한 19회의 남북한 장관급 회담 중 15차 회담에서 서해상 평화정착이나 공동어로가 구체적 회담의제로 상정된 것을 제외하고 접경지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의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북관계에서 제도정비가 필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해양평화공원은 접경 연안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 보호, 서해상 평화정착, 연안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의 대상을 환경분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 항만의 개발, 해운항로의 확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대상에 공간관리, 자원관리, 생태계 및 환경관리, 항만개발, 해운활성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의 확보는 해양수산분야 전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는 남한과 북한 쌍방이 합의해야 진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체결한 합의문, 선언문 등 '합의서'와 관련한 정비도 필요하다.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중 법제도 정비에 가장 많은 응답(26.1%)이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남한 또는 북한이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 맺은 협약(쌍방, 다자)은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현안이므로 정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

115) 남정호・강대석(2003)에 따르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해양관련 협력과 교류가 일회성 또는 단기성 사업에 그치는 것을 막고, 점진적・지속적으로 협력관리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함.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지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추진방향

① '남북 해양수산 협력 공동위원회' (가칭)의 설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제22조는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 육상의 경제협력 교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운분야와 수산업분야의 의제를 장관급회담에서 4회에 걸쳐 다루었고, 해운합의서를 채택하고 수산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연안관리 분야는 현재까지 진행한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1992년의 남북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해양수산분야에 특화'하여 설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접경지역만을 다룰 새로운 기구나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부문별 공동위원회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생태, 평화정착, 경제적 번영이라는 목표를 종합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류협력의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항만, 해운까지 포괄하는 '남북해양수산분야 협력 공동위원회(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편, 남한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분야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북한은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국토환경보호성, 수산성, 해운성, 수문기상국 등 여러 기구가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부처 사이의 일대일 대화

구조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 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해양정책, 수산, 해운항만 분야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서해연안 남북협력 국가 아젠다 확립 등

2005년 12월 19일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정한 주요 정책수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제10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제14조) 등이 있다.

이 중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이 법률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통일부 장관이 수립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 기본계획의 해양수산분야 부문계획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앞서 제시한 '남북해양수산분야 협력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 해양수산분야 주요 의제를 종합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해운, 항만, 수산, 해양정책 분야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바, 이를 별도로 다루기 위한 국가아젠다를 확립함으로써 관련 분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에 해양수산부 차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및 관계 발전을 체계적

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③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선언문 채택 추진

남한과 북한은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식 교류를 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정례화되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만나 합의한 내용의 기본적인 의제는 "평화정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05년 6월 21-23일 개최한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 문제의 협의'의 목적은 「서해해상에서 평화정착」으로 상징화된다.[116] 이는 서해상에서 2번의 비극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해해상에서 평화정착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1%가 서해상에서 군사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서해상 평화정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먼저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 현재의 NLL을 북한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해상 평화정착은 NLL에 대한 남북한 갈등수준이 완화되거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동안 상징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평화정착'을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낮은 단계의 남북합의와 이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징적 수준의 합의문일지라

116) 제15차 장관급회담 합의문 제7항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으로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문(가칭)'을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한다. 이 공동합의문에는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 친환경적 항만개발 및 자원개발,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 공동어로 등 수산업 협력 등과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도록 한다.

2) 전략 2 : 개발과 보전수요의 조화 메커니즘 구축

(1) 배경 및 여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대규모 해안사구를 비롯하여 저어새, 물범, 노랑부리백로 등의 산란·서식지로서 지형적, 생물지리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갯벌과 하구역이 양호한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이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보호구역이 69개소에 이른다는 것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자연 생태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이미 사회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이미 보전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개발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비무장지대보다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총 2,000만 평의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의 2배 규모인 개풍공동구개발구사업, 한강 하구 골재채취사업 등은 연안접경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 지역은 해주항과 인천항 등 항만시설이 입지하여 해로·육로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간접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개성~김포~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제벨트가 향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117] 특히 연안경제벨트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토지확보를 위한 간척과 매립,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같은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영향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령도~연평도~한강 하구~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생태벨트와 개성~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 간의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18]

설문조사에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해 수질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의견이 49.1%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있을 것이며 하구역(한강, 예성강) 생태계 및 산란・서식지 훼손과 수질환경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32.4%라는 사실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조정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진방향

① 생태적・경제적 가치 통합을 위한 용도구역제(Zoning) 도입

일반적으로 용도구역제는 생물자원의 가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용도구역제는 공간을 자연환경현황, 사회경제적 이용특성, 미래의 공간관리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여 기능(function)에 따라 구획하여 개별 용도에 적합한 이용행위와 행위제한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해양수산부, 2005). 형태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IUCN,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미국,

117) 해역수질오염,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변화, 해양 지형변화, 서식지 훼손, 수산생물자원 감소 등.

118) 현재 북한당국은 식량 및 에너지 확보,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확보와 같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1997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거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리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까지 진행한 남북장관급회의의 현안은 경제 분야 교류협력에 치중되어 있는바, 앞으로 해양환경보전 분야의 교류협력 수준은 여전히 해운분야와 수산분야에 비해 높지 않을 것임.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구역제를 활용하고 있다.[119]

해양평화공원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핵심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서식지, 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개발이 필요한 구역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면서 해양평화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다.[120]

〈표 5-1〉 국제기구 및 국가별 해양보호구역 용도구역 구분

구분	용도구역
IUCN	절대보호구역(Ⅰ구역), 국립공원구역(Ⅱ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Ⅲ구역), 서식지 및 종 관리구역(Ⅳ구역), 경관보호구역(Ⅴ구역), 자원보호구역(Ⅵ구역)
UNESCO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미국 플로리다 해양보호구역	야생동식물관리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보전지역, 기존관리지역, 특별이용지역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해양보호구역	절대보전구역, 서식지보호구역, 특별목적구역, 일반이용구역

주 :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 관리체제 구축 연구」, 2005, pp. 188-193.

119) IUCN과 Cardif 대학이 작성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침에서는 해양보호구역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는 목적을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호, 보호가 필요한 생태계와 사회경제활동의 분리, 지역주민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문화적 가치 등 보호, 사회경제적 이용에 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태계의 보호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120) 해양보호구역 용도구역제 도입 효과는 1)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역을 명확하고 다른 지역과 구분함으로써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2) 구역별 행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이나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3) 과학적 기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임(해양수산부, 2005).

〈표 5-2〉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소권역별 특성

소권역	자연환경 현황	사회경제적 이용	정책수요	주요기능
백령·대청 권역	물범서식지, 두무진, 콩돌해안 등 수려한 자연경관 및 중요한 생태·문화자원 보유	농업과 어업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관광활동의 지속적 추진	관광개발의 지속적 추진	물범 번식·서식지, 콩돌해안 등 중요한 지형경관 보전 어업·농업기능 유지 관광개발 추진
연평 권역	꽃게 최대 서식지	대부분 지역주민은 어업활동에 의존	군사적 긴장감 완화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근절 어장환경개선	꽃게서식지 보호 어업기능유지
강화·한강 하구권역	저어새 번식·서식지 특정도서 8개 천연기념물 5개 야생동식물보호구 4개 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개성공단 조성 관광개발·이용 골재채취사업 등	개성공단 및 개풍공동개발구 개발 한강 하구 골재채취사업 추진 관광개발사업 추진	저어새번식·서식지보호 공업단지 개발 각종 남북개발사업 추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이용, 제도, 문화, 지역적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백령·대청권역, 연평권역, 강화·한강 하구권역별로 독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권역별로 용도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용도구역제는 남한과 북한의 관할 연안을 단일한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 북핵문제, 남북한 법제도 차이, 주민의 인식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수 년 내에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용도구역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관할지역에 한정하여 남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용도구역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남한의 법률로 「연안관

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121]」을 들 수 있다.

②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실시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은 경제 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보전 현안과 공간관리 및 자원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은 정식의제로 채택된 바 없다. 공간적으로는 육상, 기능적으로는 경제 분야 협력이 중심이 됨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은 개성공단의 활성화, 개풍공동개발구 조성, 한강 하구의 골재채취 사업, 해주항 개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민간단체나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과 실익을 중시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배려한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로 인해 발생할 해역수질오염, 주변 해역의 생태계변화 등을 우려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산업단지가 확장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척・매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1차년도 전문가 설문조사 및 금번에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에서 제시되었다. 골재채취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81.7%의 응답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거나 채취사업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항로준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해양・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안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경제성, 사회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성을

121) 해양생태계법은 단일공간 내에서 행위제한, 금지사항, 허용행위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의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다른 보호구역 형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122]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풍공동개발구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연안·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여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훼손을 우려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개발초기단계부터 경제적 타당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한다면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전략 3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1) 배경 및 여건

자연환경, 자원, 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작업에 해당한다. 제1차년도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미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과 육상환경에 대한 조사자료와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23] 또한, 기존 남북관련 연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접근성' 및 '문제해결 지향성(problem solving oriented)'이 부족하

122) 전략환경평가는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전략영향평가의 실시는 국가계획을 수립・이행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처음부터 NGO, 관계기관, 주민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음(윤성순 외, 2004)

123) 남정호・강대석(2003)은 남북 접경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이유로 첫째,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자료 조사의 물리적 접근의 제약과 정보보안의 이유로 정보 접근의 제약이 있으며, 둘째 남북한의 조사방식 및 정보관리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자료의 해석에 따른 신뢰성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환경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은 남북교류・협력에서 우선순위가 낮고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124]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것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자료 조사 및 정보 확보를 위한 물리적 접근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대부분 과거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의 시의성 및 활용성이 낮고, 주로 내륙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던 것도 원인이다. 설문조사에서 서해연안 지역협력관리를 위해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법제도 정비(26.1%) 다음으로 '연안해양 환경 및 생태계 조사와 D/B 구축'(22.6%)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지식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남북한의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여건은 세계화·정보화 추세와 남북한의 해역조사에 대한 관심수준에 비추어 열악한 실정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상용화, GIS 및 RS 등을 통한 정보 취득 기술 발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북한 자연환경 조사, 남북한의 해양환경 조사 및 정보화 수준 등과 관련한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상용화 및 GIS·RS 등을 통한 정보 취득 기술 발달

최근 들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및 RS(Remote Sensing : 원격탐사) 관련 기술 및 연구가 증가하였고 최근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이미 국토자원 분석에서 수십 년간 다양한 정부 담당자, 연구자, 환경학자가 위성영상[125]을 활용하고 있

124) 자료의 접근의 어려움과 보안상의 이유로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해양환경 원 자료의 확보 및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북한은 환경분야에서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다자간 교류협력에서도 공동조사 등 자국의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참여를 주저하고 있음. UNDP 사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북한이 농림분야의 환경보호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발휘하지만 두만강 수질 개선사업, 서해 해양 생태계 보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이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환경 협력사업 과정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연구·조사 활동이 아닌 장비와 자원임(강광규 외, 2002).

125) 위성영상자료는 직접 조사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분광특성에 따른 식생, 수문, 토양의 요소들을 쉽게 파악하여 안정적인 감시 활동, 지역변화 자료의 조사 분석에 용이함(구자용, 2000).

다. 위성영상은 원거리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접경지역에 유용하고,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면 변화를 쉽게 탐지하고 예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높은 해상력을 지닌 상업적 고해상도 위성 영상[126]들은 현재의 환경감시 능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127]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관측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영상은 저해상도 영상에서부터 고해상도 영상까지 다양하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위성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i) 해양수산부의 연안지역 IKONOS 위성영상, ii) 환경부의 위성영상자료, iii) 국립수산과학원의 위성영상 자료, iv)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해 위성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위성영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128] 등이 있다(<표 5-3> 참고). 이러한 위성영상은 DEM 작성, 자연자원, 습지의 변화 탐지, 자연재해에 활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가 '01-'03년까지 남한의 전 연안에 대한 IKONOS 영상을 구입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129]은 동북아 해양위성영상 자료를 DB화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시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99년 아리랑 1호(6.6m) 발사에 이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아리랑 2호[130]가 발사되어 1m 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126) 현재 상용되고 있는 것은 IKONOS, QuickBird 등임.

127) 위성영상을 통해 클로로필-a 분포량 추정 등 해양환경 현황, 토지피복 등을 파악할 수 있음.

128) ・ http://simc.ngii.go.kr.
・ 서비스 일시 : 2006년 5월 5일(금)
・ 서비스 영상 : LANDSAT영상, CORONA영상, IKONOS영상 등

129) 과거 10년간 수신된 NOAA(미국해양대기청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위성), GMS(해양기상관측자료, 지진해일정보 전달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운영 중인 위성), MODIS(미국 NASA의 지구감시계획에 의해 발사된 지구관측 위성 TERRA 위성의 고분해능 해양기상센서) 등의 위성영상정보를 DB화 할 예정임(부산일보, 2006. 6. 5).

130) 국민일보(2006. 8. 29).

〈표 5-3〉 연안 및 해양환경에 활용 중인 위성영상 보유 현황(남측)

보유기관	위성영상
국립수산과학원	과거 10년간 수신된 NOAA(미국해양대기청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위성), GMS(해양기상관측자료, 지진해일정보 전달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운영중인 위성), MODIS(미국 NASA의 지구감시계획에 의해 발사된 지구관측위성 TERRA 위성의 고분해능 해양기상센서) ※ 현재,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중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연안의 IKONOS 영상, 이와 함께 Landsat, Spot 영상도 보유 ※ 연안관리정보시스템(www.coast.go.kr)에서 제공
위성영상 통합시스템	한반도 전역을 1960년대에서부터 2003년까지 위성자료 • LANDSAT(1973-2002년) • IKONOS(2000-2003년) • CORONA(1960년대 말) • SPOT, JERS1, EO1 등임. ※ 위성사진 구입 시의 사용권계약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공급(http://simc.ngii.go.kr).
환경부	• Landsat TM(대분류 토지피복도 작성에 활용) • IRS-1C (중분류 토지피복도 작성에 활용)

〈그림 5-6〉 IKONOS를 활용한 서해5도 지역 3D GIS 구현 화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2006).

② 국제기구의 북한 관련 자료 증가

’9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자료 및 정보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자국의 정보와 통계를 외부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정보와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131] 유엔환경계획(UNEP)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작성한 ‘2003년 북한의 환경상태[132]’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환경실태 전반을 공개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밖에 국제기구의 북한 관련 자료 수집 채널은 북측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북한과 관련해 활동하는 타 단체들과 협조하여 작성한 자료 등이 있다.

③ 해양생태계 조사 및 연안습지 보전계획에서 접경지역 관리 추진 중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구’를 통해서 생태계 조사의 기본 프로토콜을 정하고, 2006년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안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관할의 연안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될 전망인데, 서해연안 접경지역조사와 한강 하구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를 10년 주기로 조사하는데, 2006년에는 서해 북부 해역(37°N 아산만-38°N 최북단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해북부 조사정점은 NLL을 따라 지정되어 있고, 경기만 안쪽의 조사 정점이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던 시화호, 영종도 갯벌, 해사채취 영향을 받는 옹진군 해역, 한강 하구 등이 주요 대상지역이다. 올해 조사 후 이 지역 생태계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연안습지 보전계

131) 국토연구원,「북한포럼 정기세미나 : 북한의 자료·통계수집 및 관리」, 2006.

132) 보고서 작성은 유엔환경계획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주도 아래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등의 정부기관과 과학아카데미, 산림과학아카데미 등의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이 방콕과 평양의 유엔환경계획과 유엔개발계획 사무소의 지도에 따라 참여하였음.

획[133]를 통해 한강 하구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 한반도 연안습지의 생물종다양성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및 동북아 지역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습지에 관한 생태계 조사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134]

④ 북한의 해양환경 및 수산분야 정보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북한도 정보관리 및 위성영상 자료활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수산성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각 어장의 어선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어장의 해수온도, 기상 등을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안・해양자료 관리를 위한 연안해양자료의 기지화(D/B화)를 진행하고 있다. 연안해양자료 기지화는 연안구조물건설, 간석지 건설, 연안지대 양식, 양식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안해양자료의 기지화에는 1958년 2월-1987년 12월 기간 조선 동해 및 서해의 17개 정규연안관측소에서 관측한 모든 항목들에 대한 년, 월, 일, 시각별 자료들과 이 요소들의 통계값이 포함되어 있다.[135] 북한에서도 위성영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청천강 하구 일대의 문덕철새보호구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을 위성자료(Landsat 5)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136]

(2) 추진방향

지식기반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남북공동조사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문제해결 지향성을 높이고, 조사자료와 정보의 통합

133) 이 계획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5대 실천목표는 i) 연안습지 관리제도 기반 구축, ii)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 활용도 제고, iii) 연안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기반 조성, iv) 연안습지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v) 남북한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등임.

134) 연합뉴스(2006. 4. 13).

135) 김기환, “우리나라 연안해양자료묶음 형성과 자료의 기지화”,「기상과 수문」, 1992년 제2호.

136) 김정 외(1999).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현황 및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남북 해양수산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서해연안지역의 해양수산분야 현안은 항만개발, 해운항로 확보, 어업 및 증양식, 골재채취,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한 여건분석에서 이 지역에 대한 과학조사 자료의 부족, 북한의 낙후한 실험조사장비 등이 한계로 제기되었다. 또한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 및 수산기술 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공동조사, 전문가의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다. 북한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정책적 관심이 높은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략물자통제로 인해 북한에 조사, 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동연구개발센터는 항만, 수산, 연안관리,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지원, 훈련, 공동조사, 장비의 공동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에게 실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연구센터 설립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과 장비확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해양환경연구공동센터의 위상, 기능, 운영방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권역별 관리목표에 기초하여 공동조사 추진 체계 마련

제2장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이용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백령·대청권역, 연평권역, 강화·한강 하구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권역은 물범, 꽃게, 저어새 등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홍해 사례에서 보듯이 아카바 만은 산호 생태계의 공동 관리를 목표로 한 홍해 해양평화공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국제적 수준의 자료집 발간,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자료관리의 공동지침마련, 합동회의와 워크숍 개최, 공동현장조사, RSMPP 웹 사이트 개설, 국제회의의 주요의제로 선정 등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제시한 세부 권역의 공동관리 목표를 정하고 각 특성에 따른 운영조직 구성,[137] 조사분야(합의를 통한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정보 및 자료 관리프로토콜 마련, 공동조사 실시),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138]

그러나 북한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북한의 협조를 구해 남측의 군사지역부터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139] 개발에 대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부분과 연안환경보전 및 개발 이후 발생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지역 해양환경·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단계별 공동조사 방향은 <표 5-4>와 같다. 공동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조사단 구성 및 항목을 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 진 후에 남북한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7) 북한은 90년대에 들어 국토환경보호성 아래 지방환경행정조직 및 관련 기관, 각 도에는 '환경감독과를 두었으며, 그 산하에는 지방환경관측·감시소와 도시환경 및 기방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동물협회', '식물협회, '원림협회', '산림협회', '수산자원협회' 등이 있음. 또한, 환경보호와 관련 연구기관은 환경보호연구소이며,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동해해양연구소 및 서해해양연구소임(통일교육원, 2004, 2005 통일교육지침서).

138) 이 후에 이용행위 조정기반 구축,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39) 제1차년도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Workshop에서 남북한 학술교류의 최고 단계가 공동조사이므로 북한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할 것이 논의되었음.

〈표 5-4〉 서해연안 접경지역 공동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

1단계 : 사전 준비 단계	- 공동연구와 관련한 전문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 이를 통해 기존연구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확보
2단계 : 계획 수립 단계	- 공동조사 목표 설정 - 공동조사단 구성 : 남북한 정부당국, 해양환경 조사기관, 각 분야별 전문가 - 공동조사 항목 • 육상환경 : 한강, 예성강, 임진강 등의 하천의 특성(유량, 염분) • 해양환경 : 수리물리적특성(조위, 해수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단기 조류관측요), 수온, 염분, 해저지형 • 퇴적특성 : 표층퇴적물 분석 • 해양생태 : 난자치어조사, 저서생물, 부유생물 등의 조사 필요
3 계 : 조사 결과 관리 단계	- 조사결과 DB화 - 연안 및 해양환경 상태보고서 발간 - 지속적인 모니터링

③ 남한-북한 연안 · 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해양평화공원을 비롯한 포괄적인 해양환경, 연안관리 분야 협력체계의 구축은 인적교류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보다는 남북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고, 자료의 수집과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정호 외, 2005). 이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남북한 서해연안접경지역의 간행물, 연구논문, 학술지, 국제기구의 자료 등 정보・자료 및 기술교환과 환경전문가 간 학술 교류를 추진하도록 한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관련 남한의 자료는, 통일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환경부 등 정부 및 연구기관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자료는 북한당국 공식발표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 북한내부에서 활동 중인 외부기관이나 관찰자들이 북한 당국 또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수집한 정보 등이다.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국내 기관 간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D/B화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남북간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인 자료를 취합・교환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론하고 웹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략 4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1) 배경 및 여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생태 및 환경자원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는 연안・해양 보호구역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남정호 외, 2005).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저어새(*Platalea minor*), 노랑부리백로(*Egretta europhotes*), 흰두루미(*Grus japonensis*) 등 희귀 조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또한 물범류와 다양한 종류의 무척추동물이 대량 서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생태・환경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DMZ 육상 생태계, 한강 하구생태계 및 연안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140] 다양한 개발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지닌 자연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거나 육상 물류기지의 대안으로 항만을 활용하여 남북한 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해연안접경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남북협력 의제 개발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낙후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국가정책이 상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부처 사이에 접경지역의 관리와 남북협력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일관된 장기전략이 부재한 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입장차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태도-포용 對 압박-를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정세와 맞물려 남한 내부에서는 현재의 대 북한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

140) 2006년 제2차 국회 DMZ 포럼에서 한강 하구, 강화도, 연안 생태계를 생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깊게 논의함.

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남정호(2006)는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의 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방적 포용정책이 아닌 압박정책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동향, 남한 내부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남한 내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방향

①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 또는 연석회의 구성

해양환경보전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남정호(2006)의 연구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부문별로는 '남북해양수산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성 전에 이러한 갈등과 이견을 사전에 조정·조율할 절차와 기구'로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하였다.[141]

정책협의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이해관계자가가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연석회의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 이 협의체는 남정호·강대석(2003)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해5도 관계자,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연석회의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는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높은

141) 정책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책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함. 정책협의회에는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가그룹, 민간단체로 구성함(남정호, 2006).

수준의 정책을 협의・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연석회의 방식의 연성 구조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② 남한 내의 지역주민 협력관계 형성 및 인식 제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록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정 방향으로 경도된 목적만을 강조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추진 체계도 개선될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좁은 범위에서는 남한 내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나,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해관계자가 이 구상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우선 대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해양평화공원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5) 전략 5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1) 배경 및 여건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직접교류는 경제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특성,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정치・군사적 특수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만강환경협력사업(Tumen-net),[142]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142) 두만강 환경협력사업은 UNDP의 주관 하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참여한 연구사업임. 프로젝트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년이며 대상지역은 두만강지역(중국 길림성, 북한의 함경북도, 량강도, 러시아 프리몰스키지역), 다우리안 초원지대(몽골 켄티, 도노드, 치티스카야 오블라스트), 만주 초원지대(도노드, 수크바타르, 내몽골 자치구)임.

(NEASPEC),[143] NOWPAP, 2003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의 「동북아 황사방지 특별회의」 등 동북아지역 다자간 환경협력과 UNESCO의 「동북아 생물권보전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주관으로 진행된 환경관련 사업에서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간접 접촉이 모색되었다. 또한 북한이 해양환경분야 국제기구 사업 및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국제기구도 북한을 참여시키려는 의지가 높은 점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데 기회요인으로 기능한다.

특히 지역해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프로그램과 생태계 및 환경보전분야 국제기구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PEMSEA 외에 2007년부터는 YSLME 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핵실험 후에도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보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개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으로는 NOWPAP, PEMSEA,[144] YSLME 등이 있으며, 협력관리체제 구축과정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기구로는 IUCN, UNESCO, UNDP, UNEP 등을 들 수 있다. IUCN, UNESCO는 접경지역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평화공원의 필요성을 북한에 전달하고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UNDP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고, 현재 두만강 환경협력사업(Tumen-net)의 주관기관이므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남정호・강대석, 2003).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은 남북한 직접 교류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전 국민 표본조사에서 '해양평화공원 지정 주체'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143) NEASPEC: 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144) PEMSEA : 동아시아해양환경협의회-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2) 추진방향

① 국제자문단회의 활성화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남한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서해연안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자문단회의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남북협력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한 대화채널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6월 27~2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국제자문단회의에 참가한 IUCN, NOWPAP, UNESCO, YSLME의 대표자들은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지속적 정책조언과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국제자문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계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자문단회의는 국제기구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② 기존 국제기구 프로그램 활용

가. 동북아 생물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145]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EABRN의 주요 활동은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보전활동을 통한 국가간 협력증진, 각국의 생물권보전지역 정보 및 관리경험 교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담

145)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당자에 대한 GIS 교육훈련 전개 등이다(<표 5-5> 참조).[146] EABRN은 지난 시기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기여하였다. 1~2년 간격으로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네트워크 회의에서 남북한 관계기관 대표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147] 북한의 관련 책자 발간 사업을 지원하여 북한의 주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도움을 주고 최신 관련 자료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지정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부는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남북 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과 연계하여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남북 해양접경해역을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148] 앞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비무장지대보다는 서해연안접경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EABRN와 같은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북한에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접경지역의 자연생태축(비무장지대)을 연안・해양지역까지 확대・연장함으로써 해양-연안-육상을 남북한 협력 하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

146) EABRN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의 소지역 네트워크임.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공동비교연구 회의에서 남한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원활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UNESCO가 이를 받아들여 1995년 남한에서 개최한 제3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비교연구 회의에서 EABRN가 공식 설립되었음. 사무국은 유네스코 북경사무소이며, 재정은 한국과 UNESCO가 50%씩 부담하여 $70,000으로 책정되어 있음.

147) 일본과 남한에서 개최한 경우 제외.

148) 연합뉴스, "DMZ 생태계 보전 기초조사 내년 착수", 2005. 8. 24일자

〈표 5-5〉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추진 현황

구분	시기・장소	주요내용
1회	’94.3, 북경	각국 생물권보전지역 현황, Wolong(중국) 생물권보전지역 평가
2회	’94.8, 백두산(중국)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관광관리, 장백산 생물권보전지역 평가
3회	’95.5, 설악산	EABRN 공식설립,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4회	’96.10, 가고시마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기능
5회	’97.8, 몽골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관광
6회	’99.9, 쥬자이구(중국)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관광과 보전정책
7회	’01.9, 블라디보스톡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능력배양
8회	’03.8, 울란바토르	접경보전 협력, 생태관광
9회	’05.8, 제주도	섬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 평가

나. YSLME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서해(황해)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1992년부터 남한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황해광역생태계(YSLME)사업’ 추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14년 만인 2005년 3월에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5년 동안 총 2천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상대방 해역의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황해에 관한 공동 관리 전략을 수립・시행할 목적으로 ‘황해광역생태계(YSLM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사업’에 착수하였다.

YSLME사업이 시행될 경우 황해생태계 보존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황해연안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다. 따라서 중국과 남한은 북한의 참여를 희망하였고, 북한은 2006년 11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중・조 해양과학기술 협력 제13차 회의’에서 YSLME 사업의 정식 참여결정을 중국 측에 통보하

였다.[149] 북한 측은 중국 측 사업조정자가 적당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중국이 제안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북황해 응용 연구 및 질량 평가법', '북황해 해수 순환동력학 및 침적동력학 합작조사연구'에 대해 북한은 사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북한은 중국 국가해양국 측에 물리해양학, 해양생물, 해양 위성 원격탐사, 디지털 시뮬레이션분야 인력 양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북한의 YSLME 사업 참여는 북한의 서해 연안 및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해양과학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이 YSLME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황해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자간 회의 틀 내에서 남한과 북한의 양자간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자문단의 일원인 YSLME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사항은 YSLME를 매개로 북한에 해양평화공원지정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알리고, 북한의 관심이 높은 해양전문 인력양성 및 선진 해양과학기술도입 분야에 과학기자재 제공,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 PEMSEA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PEMSEA[150]는 연안통합관리(ICM;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를 위한

149) 연합뉴스, "北, 황해 해양생태계사업 정식 참여결정", 2006. 11. 7.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1107/020400000020061107193555K2.html

150) PEMSEA는 1993년 중국 후우찌앤성(복건성) 샤먼(하문)에서 동아시아 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 the East Asian Seas)으로 출범하였음. 11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후 1994년 GEF의 재정 지원, UNDP의 사업관리, IMO(국제해사기구)의 프로그램 조직관리 형태로 사업이 시작되었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제1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2기 사업을 완료하였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3기 사업에 대한 예산(1억불)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회원국 직접 지원과 함께 관리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자립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해 프로그램이다. 현재 PEMSEA는 13개의 연안통합관리 시범해역(Demonstration Site)과 26개의 비교해역(ICM Parallel Site)을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다. 남한의 시화호는 비교해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북한의 남포지역은 시범해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다른 국제환경 프로그램이나 협의체와 달리 PEMSE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남북한은 PEMSEA의 정부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PSC; Program Steering Committee) 회의 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으며, 매우 우호적인 교교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PEMSEA 사무국도 적극적으로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12월 12~16일까지 중국에서 개최한 2006 PEMSEA 동아시아해 총회(EAS Congress)에 북한이 남한과 함께 연합통합관리 워크샵에 참석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향후 연안·해양 환경 및 공간관리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해양평화공원을 중심의제로 별도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EMSEA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환경 실무자들 간의 정기적 대화창구를 개발한다면,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북한 해양환경협력사업을 논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남포 시범해역과 남한의 시화호 비교해역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남북한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NOWPAP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현재 NOWPAP[151]은 참여국 사이에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

151) NOWPAP은 동북아 국가간 해양분야 환경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이며, UNEP의 지역해프로그램의(Regional Seas Programme)[1]의 일환으로 1994년 설치되었음. NOWPAP 해역(북위 33°~52°, 동경 121°~143° 사이의 황해와 동해해역)에 대한 오염방지 및 보전사업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며, 북한은 2002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음.

어 국가간 지역활동 센터의 선택,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RAC)의 역할, 신규사업의 채택 등에서 갈등이 잠재하고 있다. 더구나 대상해역의 가운데에 위치한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NOWPAP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남정호・강대석이 2003년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동북아시아지역 접경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NOWPAP의 지역활동센터를 북한 내에 별도 설치하거나 NOWPAP 4개 지역활동센터 중 연안환경평가 활동센터(CEARAC)의 분소를 북한 내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NOWPAP의 지역활동센터를 북한에 유치한다면 국제・지역적 환경 현안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OWPAP의 리더십 제고 및 활동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5-6 참조>).[152]

〈표 5-6〉 NOWPAP 지역활동센터 현황

센터명	약어설명	사업	비고
MERRAC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UNEP, IMO와 공동으로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협력 방법개발	남한, 대전 한국해양연구원
DINRAC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지역협력과 정보교환 증진을 위한 해양 및 연안 자료 및 정보 교환네트워크 개발	중국, 베이징 환경정보센터
CEARAC	Special Monitoring and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유해한 조류 모니터링, 원격탐사를 이용한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 개발	일본, 토야마 환경협력센터
POMRAC	Pollution Monitoring	대기기원, 육지기원, 해양투기 등과 같은 해양 또는 연안 오염과 관련된 협력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해양지질연구원

자료 : http://www.nowpap.org

152)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국제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참여국의 정치・외교적 합의, 이해당사자간의 사업경비 배분, 사업추진 요소별 법적 근거마련 등 실질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함(이명진, 2002).

NOWPAP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NOWPAP '해양쓰레기 사업(Marine Litter Activity: MALITA)'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NOWPAP은 제10회(2005년 11월) 정부간회의에서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사업'을 실시하기로 공동 합의하였고, 2006년 5월 제1차 해양쓰레기 워크숍을 인천에서 개최하였다. '해양쓰레기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해양쓰레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검토, 참여국 간 정보 공유 및 공동의 이해형성과 장기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 개최,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적 캠페인 실시, 해운업, 수산업, 관광업 등 분야별 쓰레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인접국 연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무엇보다 인접 국가들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의 연안 및 해양환경이 외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해양쓰레기로 인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북한 또한 중국을 포함한 남한, 일본, 러시아 등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도 인접국가간 공동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북한의 NOWPAP '해양쓰레기 사업' 참여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NOWPAP '해양쓰레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조사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과학기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술,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인센티브를 중국, 일본, 남한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③ 기존 국제 협의체 활용

남한과 북한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안으로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153]와 같은 국제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NEASPEC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6개국,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ADB, UNEP, UNDP, 세계은행 등 국

153) NEAC: North 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제기구가 참여하여,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수립을 통한 협력사업의 수행과 환경보전 전반을 포괄하는 환경협력체이다. 북한은 제2차, 3차, 4차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황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구성한 한・중・일 다자 협의체가 공동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가 북한의 NEASPEC 참여를 요청하고[154] 있어 북한의 참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NEAC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엄이 남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부처, 지자체 및 NGO간 정책포럼 성격으로 확대・발전한 회의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가별 환경현안과 대응정책 소개를 통한 정책학습,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접근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생물다양성 보존, 산성비,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청정기술 및 청정생산, 지구환경현안 등 역내 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교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NEASPEC와 달리 NEAC은 지자체 및 NGO, 연구기관, 전문가 등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가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NEAC은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북한과 자유롭게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4) 중앙일보, “중국에 황사외교 적극 펼쳐야”, 2006. 4. 12일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한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평화정착(Peace), 생물종다양성 및 환경보호(Protection),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일경제 기반조성(Prosperity)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틀이다. 이 지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가장 상징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조망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 핵실험이('06. 10. 9)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사일 실험 후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155] 핵실험 후에도 남한 지역 주민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현재 남북한 사이의 지원협력 중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적으로는 육상중심, 내용상으로는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구조가 해양수산분야 특히 해양환경보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해연안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다른 분야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국가아젠다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 구상을 실현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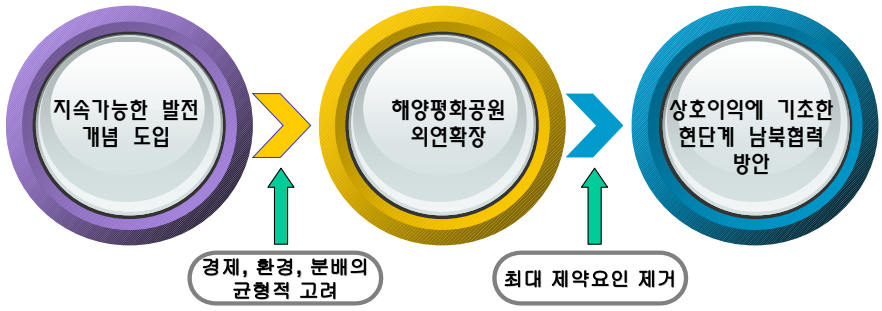
반면 북한이 해양환경분야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155) 남정호(2006)에 따르면 남한 지역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해양환경보전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함. 이는 남한에서 육상중심의 개발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었음을 인지한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있고, 국제기구 또한 북한사회가 국제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은 해양평화공원 구상에 강점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듯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로 인해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가열되는 취약한 구조를 벗어난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정례화된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반석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남정호・강대석(2003) 및 남정호 외(2005)는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 서해연안으로 개발압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개발압력과 보전수요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충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 부재한 현실에서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의 질을 고려한 발전', '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조화시키는 틀(framework)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 개발, 보전 사이의 상충을 최소화하되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을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하여 남북회담의 의제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2007년 이후 1~2년 사이에 남북한 사이의 회담에서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에 기초한 서해연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패키지를 정책제안 형태로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요구를 패키지화하는 것은 '해양평화공원' 구상의 외연을 확장하고, 제5장에서 제시한 추진 전략을 현 단계에서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에 기초한 정책제언('07~'08년)



2.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기초할 때, 현재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다. 남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결과는 원인진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이 지역의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77%의 응답자는 군사적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이 더디고 실무협의가 파행을 겪는 과정에서 NLL을 둘러싼 갈등이 이슈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서해 남북 경제벨트(수직 벨트)와 생태벨트(수평 벨트)의 공존」이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다. 현재의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사항이나 남북한이 관심이 있는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동조사를 거쳐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156]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패키지에 경제 외에 생태, 역사,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 제안한 추진전략은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 장에서 제안할 정책 제언은 2007년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남북회담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제안한 정책제언 중 일부는 제5장의 추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표 6-1> 참조). 일부 정책제언은 앞서 기술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해양평화공원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은 북한의 실리와 남한 사회 내부의 주요 요구가 현 단계에서 합치할 수 있는 내용을 회담의제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56) 현재 진행 중인 경제협력의 틀을 크게 조정·축소 또는 철회하는 방안은 남북한 모두 수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표 6-1〉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요

추진전략	주요 내용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 확보	○ 남북해양수산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 해운항만, 수산, 해양정책 분야 실무위원회 구성 ○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 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차관 남북관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서해연안 남북협력 국가 아젠다 확립 ○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선언문 채택 ○ 해양평화공원 및 공동어로 시범해역 지정 추진
개발 및 보전수요 조화 메커니즘 구축	○ 생태적, 경제적 가치조화를 위한 용도구역제도입 ○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시행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 남북 해양수산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개성시) ○ 권역별 관리목표에 기초하여 공동조사 추진 -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남한-북한 연안・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연석회의 구성 ○ 남한 내 지역주민 참여협력 및 인식 제고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국제자문단 회의(IAG) 활성화 ○ 국제기구 프로그램 활용 - EABRN, PEMSEA, YSLME, NOWPAP ○ 동북아시아 정부간 협의체 활용 -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1) 경제협력 분야

(1)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환경·역사문화 연안 크루즈 도입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남한과 북한이 해양문화를 공유했던 지역이다. 또한 한반도 서해안에서 하구역 중 인공구조물에 의한 체절이 없는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강화도~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삼각크루즈(Triangle Cruise) 항로를 개발하는 것은 평화정착의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군사정전 협정에 따르면 민용선박에 대해서는 쌍방이 항로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민용선박 중심의 남북협력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157] 삼각크루즈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 하류 신곡 수중보 하부에 중급규모 출항지를 관광 어메너티, 생태워터프런트와 연계하여 건설하도록 한다. 삼각크루즈에는 역사문화, 하구습지(한강, 예성강), 생활민속을 소재로 생태역사문화 관광을 주요 주제로 설정한다.

둘째, 크루즈 선박의 운항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남북한 정부당국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 및 크루즈 관련 의사결정에는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사전 준비과정에 참여시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셋째, 크루즈 선박과 육상관광, 외해관광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크루즈 선박의 생태문화 관광을 강화군, 예성강 하구, 개풍군일대 등 육상관광과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강화군~해주항~장산곶~백령도를 연계하는 외해 크루즈는 별도 노선으로 운행하며, 물범의 서식지 및 초여

157) 「한국 군사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름・가을 이동 경로를 활용한 생태관광은 별도로 추진한다.[158]

넷째,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성~해주~옹진군을 연결하는 육로관광' 및 '북한↔백령도 연계 관광'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인천항~백령도 항행시간이 최소 4시간으로 길고 기상에 크게 영향 받아 관광활성화를 통한 백령권역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육로관광~해상관광을 통합할 경우 북한 옹진군에서 백령도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이며, 기상상태 영향도 매우 적고, 황해남도 육로관광까지 수용할 수 있다.

(2) 남북해운협력 합의서 상의 서해 항로 활성화 및 해주항만 개발 지원

2004년에 발효한 남북해운협력합의서에는 서해상 항로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남정호 외, 2005 참조). 최근 들어 북한산 모래의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접경지역의 선박운항 증가 및 접경지역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항로를 활성화하고, 거점 항만으로서 해주항만을 확충・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선박수송과 남북교역 지원 등을 위한 항만활성화는 북한의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 이익을 북한에 가져다 줄 것이며,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159] 해주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주항만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waterfront)으로 조성하고, 다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쟁력 있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배후지인 해주공업단지 개발 및 남포항 개발지원과 연계하고, 해양관광 거점기능 및 남북교역・무역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160]

그러나 풍부한 갯벌자원을 자랑하고 있고, 제첩 등 수산생물 서식지로 알려진 해주만 항만개발과정에서 나타날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158) 백령도 물범은 북한의 서해안을 거쳐 중국 발해만으로 이동, 이동시기에 맞추어 한시적 관광 상품 운영.

159)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장전항이 금강산 관광용 항만으로 개발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입출항지로 변모하였고, 항만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160) 서해역사에서 나타난 뱃길 복원 및 생태・역사・문화관광과 연계.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갯벌 및 연안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선박운항 및 육상활동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방지대책을 시행하도록 한다.[161]

2) 환경보전 분야

(1) 남한 모래 수급 안정화 및 한강 하구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대체개발 지역 발굴

남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바다모래 자원을 채취하였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가 훼손되어 채취지역 주변의 수산물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남한의 모래수요에 비해 공급여건은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은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년 6월)에서 홍수피해 예방과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한강 하구 모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한강 하구의 모래를 공동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의 토착생물, 희귀생물, 습지 등 생태계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래수급 문제해결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이해관계자와 갈등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대체개발 지역을 발굴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생태 친화적 골재자원 개발을 위한 정밀조사 및 종합환경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특히 외해 하구 및 외해 서식지 영향, 국제멸종위기 종 영향, 특산 어종에 대한 서식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162]

둘째, 하천기인 연간 모래 유입량 및 외해 유출량을 조사하고, 대체 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육상지질 조사를 병행한다. 남북한 한강 하구 주변 육지부는 하천기인 모래가 공급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하구로

161) 난개발 또는 오염대책이 부재할 경우 반폐쇄성 내만해역인 해주만은 남한의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와 같이 훼손이 우려됨.

162) 이 지역에 대한 자연과학 조사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유입할 것으로 추정된다.[163] 현재 연안지역 주변 논은 평균 5m 깊이로 골재자원이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 골재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경우 하구역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남북공동 유류사고 대비 긴급계획(contingency plan) 및 실행계획 수립

유류오염사고는 보호가치가 높은 서해 연안지역 생태계와 서식지, 수산자원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 호와 적조로 인한 대규모 경제적, 생태적 피해가 발생하여 1996년 제1차 해양오염방지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실에서 유류오염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환황해 경제블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향후 남북한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유류사고 발생 확률은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류오염사고 대비 긴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164]

3) 긴장완화 분야 - 남북 공동 관리 평화수역 지정 및 공동어로 시범 실시

앞서 제시한 '남북한 서해상 평화정착 선언문(가칭)'을 구체화하고, 수산실무회담 합의 사항인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해 연평도 주변 해역의 북한주장 해상 일부 및 NLL 북방 일부 구역(남북 각 20㎢, 총 40㎢)을 평화수역(해양평화공원 1단계구역 및 공동어로 시범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구역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중국 어선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평화정착(peace) 및 지역경제발전(prosperity)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보호와 직접 연관이 있다. 남북접경지역 중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

163) 임진강을 통한 연간 유사(流砂)량은 810만㎥으로 추정됨.
164)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긴급계획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북한은 이 국제기구 프로그램의 참여국이 아님.

로 응답자의 67.6%가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긴장완화가 이 지역 현안해결의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서해상 공동어로, 바다모래 채취, 해운합의서 이행 등 남북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설문대상 국민의 65.7%가 NLL에 대한 북한의 입장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68.3%의 응답자가 남북한 상호양보를 통한 '평화수역'지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서해상 평화정착이라는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내용과 수산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통합할 경우 이 지역 중 일부 해역은 평화정착과 연계한 공동어로 시범해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어로 시범해역을 남북합의에 기초하여 지정하고, 민간인(어민) 및 조사연구 목적의 전문연구자(공동연구개발센터 소속)만 출입하도록 하여 평화적 이용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보불안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이 반발이 클 경우 주변 해역에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 국민 설문조사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을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 어업으로 인한 자원고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공동 관리를 통해 경제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미력리도를 거점으로 남북한 경비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상시에 한해 공동탑승을 전제로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공동경비정 운영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운영은 세부 실무협력회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다.

평화수역(해양평화공원 및 공동어로 시범해역)을 지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으며, 수역면적은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분야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식은 연평도 주변 NLL에 대한 남북한 이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총 면적 40㎢)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정대상 수역 내 미력리도를 공동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상징성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안보불안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남한 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수역을 지정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둘째, 미력리도를 제외한 연평도 주변 남북한 이견지역(총 면적 18.4㎢)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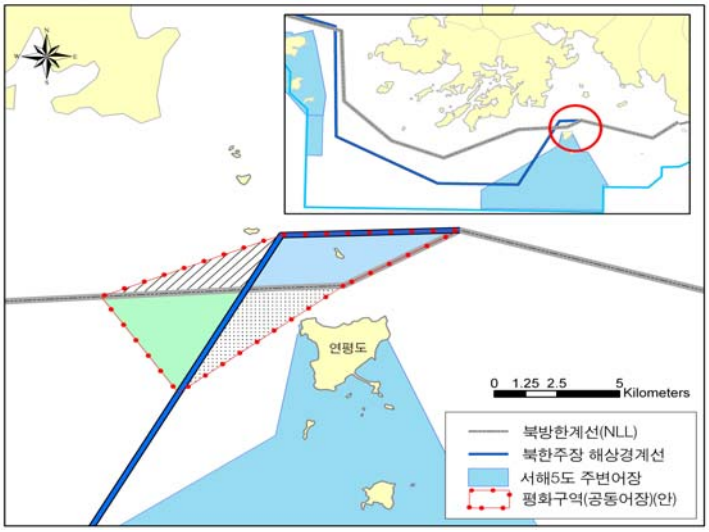
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안은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나 수역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상징성 있는 공동거점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측 관할 해역에서 연접한 동일한 면적을 지정(총 면적 44㎢) 하는 방식으로 큰 논란 없이 수역 면적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6-2〉 연평도 북부 NLL 북측 수역 내 미력리도 및 중국 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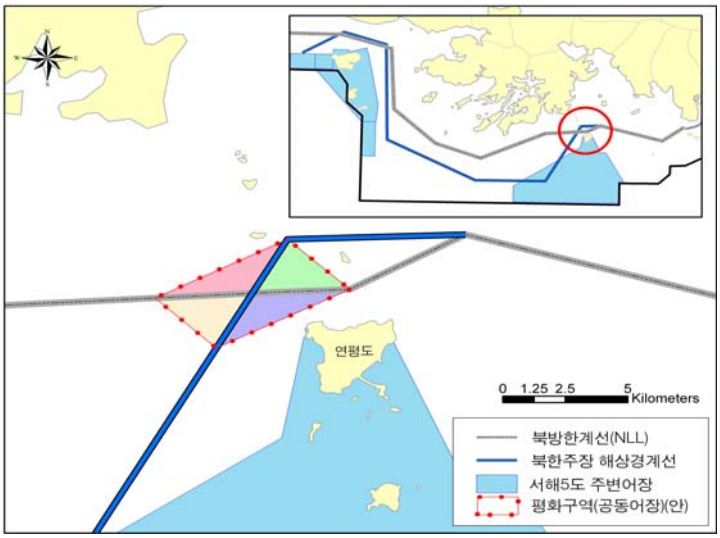


〈그림 6-3〉 연평도 주변 NLL 이견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총 면적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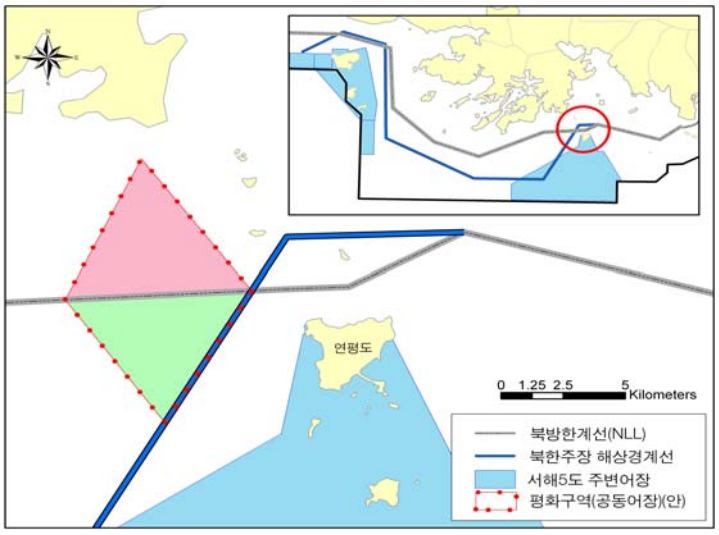
주 : 남북한 이견지역(녹색 및 청색지역) 각 13㎢ 및 현재 관할구역 각 7㎢

〈그림 6-4〉 미력리도 제외 연평도 주변 NLL 이견지역 지정(총 면적 18.4㎢)



주 : 4개 구역의 면적은 각 4.6㎢

〈그림 6-5〉 남북측 관할 해역에서 연접한 동일 면적을 지정(총 면적 44㎢)



주 : 남북 각 22㎢를 지정

참고문헌

강광규・김경술・손기웅・정회성・이창희・이미숙,「남북환경 및 에너지 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강광규・장기복, “동북아 환경협력의 기본방향”,「환경포럼」, 제4권 제10호, 2000.

강대균, “백령도 해안의 지형경관”,「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 환경부, 2000

강화군청,「통계연보」, 2005.

건설교통부,「GIS선도기술 동향・도입방안 및 국제협력 기반구축 : RS부문」, 2001.

건설부 국립지리원,「한국지지: 지방편Ⅰ」, 1984.

경기문화재단,「경기만의 갯벌」, 2000.

구자용,「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특성에 관한 연구 - 해안습지 토지피복 분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국토연구원,「북한포럼 정기세미나 : 북한의 자료・통계수집 및 관리」, 2006.

김경호, “동북아시아의 지역구조와 남북한 관계”,「21세기 정치학회보」, 제12집 2호, 2002.

김광남・박우일, “저어새의 분포와 마리수 변화에 관한 연구”,「과학원통보」, No. 1. 2001.

김기환, “우리나라 연안해양자료묶음 형성과 자료의 기지화”,「기상과 수문」, 제2호., 1992.

김영봉,「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 접경지역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4.

김영봉・이문원・조진철,「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4.
김정・박영호・박우일, “위성정보자료를 리용한 문덕철새보호구의 생태환경해석”,「과학원통보」, 제5호, 2000.
김정인, “북한의 환경관련 정책과 국제협력 전망”,「CEO Energy Briefs」, 에너지 경제연구원, 제2002-24호, 2002.
김포시청,「통계연보」, 2005.
나기창・이문원, “백령도에 분포하는 잔자갈(일명 콩돌)의 성인에 대하여”,「지구과학학회지」제8권 2호, 1992.
남정호 . 강대석,「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남정호, “해양환경보전 남북한 협력체계 구축방안”,「2005년도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2005.
남정호・장원근・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원갑,「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류병홍, “단군 및 고조선 시기의 유적유물 발굴성과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995-1, 1995.
리순진, “고조선의 질그릇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996-3, 1996.
리영희, “지명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적 특징”,「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3호, 2006.
림추련・신남희・정철, “노랑부리백로(Egretta europhotes)의 분포와이행에 대한 연구”,「과학원통보」, No. 5, 2004.
림추련・신남희・정철, “저어새의 분포와 생태에 관한 연구(제1보)- 저어새 분포와 마리수 조사”,「생물학」, No. 2, 1998.
문창현, “백령도지역의 관광지리적 특성과 관광개발의 잠재적 가능성 분석”,「관광연구저널」, 제19권 제2호, 2005.
문화재청,「문화재연감」, 2005.

민병미・노경임, “대청도 해안의 염생식물”,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 환경부, 2000.
박경수, 「한강하류 및 하구 어류 군집의 공간분포와 장기변동 패턴」,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박홍석,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와 한일협력관계의 미래”, 「평화연구」, 제13권 2호, 2005.
배성수, “숙종초 강화도 돈대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003.
사공호상・박성미・김영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2.
서영대, “강화도의 참성단에 대하여”, 「한국사론」, Vol. 41, 42, 1999.
손기웅, “남북 환경분야 협력 방안”, 「전자신문」, 통일칼럼, 2006.3.14일자.
손인섭,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송경록, 「북한 향토 사학자가 쓴 개성이야기」, 푸른숲, 2000.
양태진, “북한지명의 사적 고찰”, 「북한학보」, 제29권, 2004.
옹진군청, 「통계연보」, 2005.
옹진군청,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6.
윤성순・장학봉・최지연,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윤순옥, “대청도 해안의 지형경관”,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 환경부, 1999.
이명진,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02.
이상환, “북한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21세기 정책학회」, 2002.
이창희 외, 「지속 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섬」, 2004.
정회석・조규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수립」, 환경부 보도자료, 2006. 2 배포.

정희성, “북한의 환경수준과 남북환경협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_____, 「남북환경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통일부, 2003.
정홍락・양금철, “백령도(대청도, 백령도)지역의 식생”,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 환경부, 1999.
조봉희, 「대도시 부근 어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김포시 지역을 사례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06. 2.
최몽룡・노혁지・안승모, “백령, 연평도의 즐문토기유적”, 「한국문화」, 제3집, 1982.
최운식, “백령도 지역의 ‘심청전설’ 연구”, 「한국민속학보」, Vol, 7. 1996.
추장민・강광규・박경애・김선영・Hyesook Park・Chazhong Ge・Jamsaran Tsogtobaatar,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통일교육원, 「2005 통일교육지침서」, 2004.
통일부, 「2005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6.
_____, 「2006 통일백서」, 2006.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제5회 아리랑 1호 위성 자료활용 Workshop, 2000. 8.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서해해역(상))」, 2002.
홍성조・유호상, “백령도・대청도 지역의 지형경관”,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 환경부, 1997.
홍승용,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1992.
환경부, “연평도 해안의 지형경관”,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 2000

Coulter, M.C. “Black-faced spoonbill”, *Proceedings of 2006 International Symposium-Public Awareness and Communication on the Conservation of Black-faced Spoonbill*, 2006.
DPRK, UNEP, UNDP, *State of Environment*, 2003.
Mittermeier, R.A., C.F. Kormos, C.G. Mittermeier, P.Robles Gil, T. Sandwith, and C. Besancon, *Transboundary Conservation: A New*

Vision for Protected Areas, CEMEX-Agrupacion Sierra Madre-Conservation International, Mexico, 2005.

Won, C. and Byoung-Ho Yoo, "Abundance, Seasonal Haul-out Patterns and Conservation of Spotted Seals *Phoca largha* along the Coast of Bak-ryoung Island", *South Korea Oryx*, 38(1), 2004.

Zbicz, D.C. and M. Green, "Status of the World's Transfrontier Protected areas", In IUCN/WCPA,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as a Vehicl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ceedings, Parks for Peace Conference, Somerset West, South Africa, September 16-18, 1997.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03130093
http://www.konetic.or.kr/env_info/report/14-2.pdf
http://www.nktech.net/cooperate/support/support_l.jsp
http://en.wikipedia.org/wiki/Phoca_largha
NK테크(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남북협력센터 기술협력안내실
강화군청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위성영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simc.ngii.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nso2005/index.jsp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http://www.ggag21.or.kr/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http://egis.me.go.kr/

부록 A

서해연안 접경지역 문화재 분포현황

□ 남한(보물 및 사적)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면적(m2)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초축시기
보물	10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	1기	국유	강화군 하첩면 장정리 산 193	1963.1.21	고려후기
	11	사인비구주성동종	1구	국유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2000. 2.15	조선
	161	정수사법당	1동	정수사	강화도화도면 사기리 467-3	1963.1.21	조선
	178	전등사대웅전	1동	전등사	강화군 길상면	1963.1.21	조선
	179	전등사약사전	1동	전등사	강화군 길상면	1963.1.22	조선
	393	전등사 범종	1구	전등사	강화군 길상면	1963.1.22	고려
	615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1구	국유	강화군 하첩면 장정리	1977. 11.15	고려
	994	강화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1구	백련사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	1989.4.10	14C 후반 내지 16C 초의 작품으로 추정
사적	130	삼랑성	245,997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	1964.6.10	삼국시대
	132	강화산성	306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1964.6.10	고려
	133	강화고려궁지	7,534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	1964.6.10	고려
	136	참성단	5,603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 42-1	1964.7.11	고려시대 보수
	137	강화지석묘	598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6	1964. 7.11	청동시대
	224	고려고종홍릉	2,981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129-2	1971.12.28	고려
	225	초지진	4,241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1971.12.28	조선
	226	덕진진	15,018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	1971.12.28	조선
	227	광성보	6,102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	1971.12.28	조선
	259	강화선원사지	11,541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	1977.11.29	고려
	306	갑곶돈	45,339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0	1984.8.13	조선
	369	석릉	2,498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 182	1992.3.10	고려
	370	가릉	2,496		강화군 양도면 육내리 산 16-2	1992.3.10	고려
	371	곤릉	1,091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산 75	1992.3.10	고려
	424	성공회 강화성당	6,452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2001. 1. 14	대한제국시대

□ 북한(국보)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초축시기	재(개)건시기	비고
68	부용당(터)	황해남도 해주시 부용동	조선 1500년		
69	해주석빙고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	고려		
70	해주9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고려		
71	해주5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	고려		
72	순명문	황해남도 해주시 영광동	고려(1391년)		해주읍성 남문
77	강서사 대웅전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	고려	1665년	
78	룡동리 고인돌	황해남도 배천군 룡동리	청동기	1572년	
79	소현서원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리	조선(1575년-1582년)		
82	해주다라니석경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고려		
85	광조사 진철대사탑비	황해남도 해주시 학현동	고려(937년)		
86	연안읍성	황해남도 연안군 연안읍	고구려	1555년	2km
122	만월대	개성시 송악동	고려		
123	공민왕릉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고려(1365년-1375년)		
124	개성남문	개성시 북안동	조선(1391년-1393년)		
125	관음사대웅전	개성시 박연리 대흥산성내	고려(970년)	1646년	
126	대흥산성	개성시 박연리	고려		10.1km
127	개성 성균관	개성시 방직동	고려	1602-1610년	정몽주 집터
128	숭양서원	개성시 선죽동	고려말	1573년	높이 6-8m, 일명 보리참성, 밀떡성
129	발어참성	개성시 송악동	고려		외성 16km, 내성 8.5km
130	개성나성	개성시 송악동	고려(후삼국 896년)	1319-1393년	
131	개성첨성대	개성시 송악동	고려		원) 개성 만월동 동암 흥국사터(강감찬 발기)
132	흥국사탑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 951년	1960년	
133	령통사5층석탑	개성시 룔흥리 오관산 령통사	고려초		지공정혜조지탑
134	화장사부도	개성시 룡흥리 보봉산 화장사	고려 1370년경		원)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불일사터
135	불일사 5층탑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 951년	1960년	원) 개성 남산동 연복사터
136	연복사종	개성시 북안동(남대문 문루내)	고려(1346년)		
137	적조사석부처(철조여래좌상)	개성시 북안동(고려박물관내)	고려(1346년)		정몽주 기념비(2기)
138	표충비	개성시 선죽동	조선(1740년-1872년)		원)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헌화사터
139	현화사7층탑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1020년)		
151	현화사비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1022년)		
152	광통 보제선사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무선봉 남쪽	고려(1377년)		
153	오룡사법경대사비	개성시 룡흥리 용암선 오룡사터	고려(944년)		
155	영통사대각구사비	개성시 룡흥리 오관산 령통사	고려(1125년)		세계유산
159	선죽교	개성시 선죽동	고려		
179	왕건왕릉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고려(943년)	1993년	세계유산

부록 B

강도전도(江都全圖)



주 : 이 지도는 숙종 10년 병조판서가 實錄奉案使로 강화에 왔을 때 돈대 형세를 담아 제출한 것임.
자료 : 영남대학교 소장본(강화군, 「강화 옛 地圖」; 배성수, 2003 재인용)

부록 C

북한의 환경정책관련기관

□ 행정기관



□ 정당 및 단체

【 정당 및 대남 단체 】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남조선의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조선위원회	남조선의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대책위원회		

【 대외관련 단체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연대성조선위원회	조선외교협회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일제의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반핵평화를위한조선피폭자협회	아시아여성들과연대하는조선여성협회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	조선UN식량및농업기구민족위원회	조선유엔개발계획민족조정위원회	유엔아동기금민족조정위원회	인종격리제도반대조선위원회

【 사회 단체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조선적십자회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조선자연보호연맹중앙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조선학생위원회

【 경제 단체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무역촉진위원회	조선국제합영촉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종교 단체 】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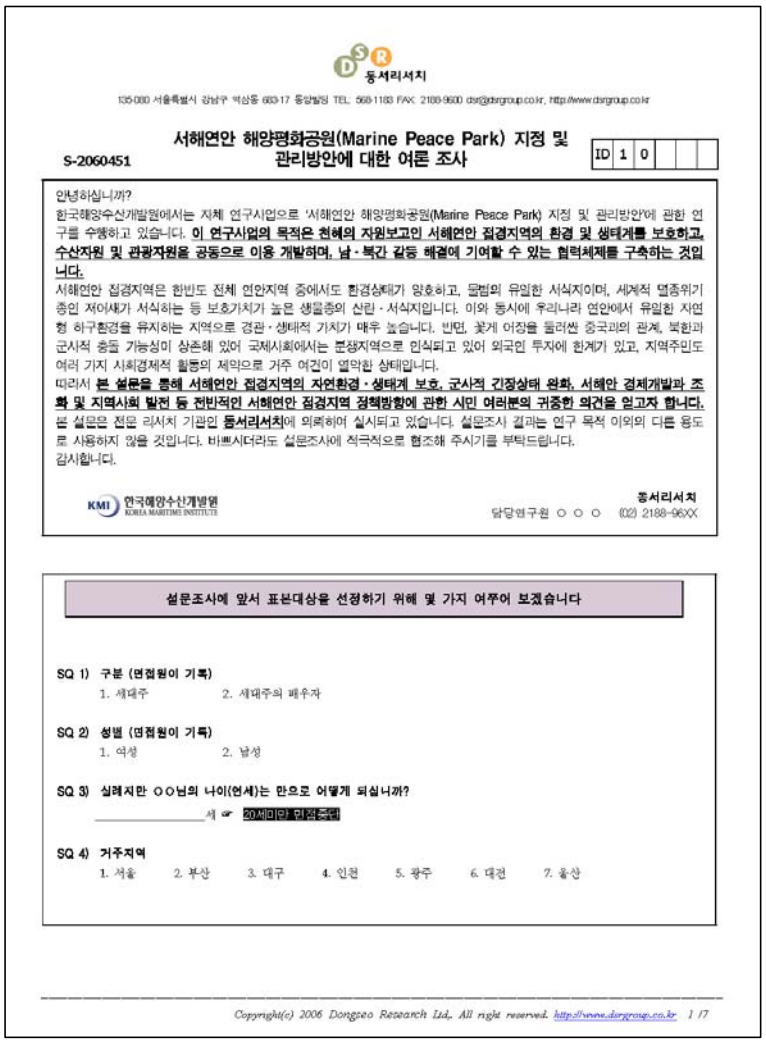
【 학술·체육 단체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중앙위원회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조선역사협회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연맹	조선올림픽위원회	조선태권도위원회	동아시아경기대회협의회

자료 : 통일교육원, 2005 통일교육지침서, 2004.

부록 D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동서리서치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3-17 동양빌딩 TEL: 568-1183 FAX: 2188-9600 dsr@dsrgroup.co.kr, http://www.dsrgroup.co.kr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여론 조사

S-2060451

ID 1 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지체 연구사업으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천혜의 자원보고인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 개발하며, 남·북간 같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한반도 전체 연안지역 중에서도 환경상태가 양호하고, 물범의 유일한 서식지이며,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산란·서식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유일한 자연형 하구환경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경관·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꽃게 어장을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거주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을 통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생태계 보호,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서해안 경제개발과 조화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전반적인 서해연안 접경지역 정책방향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전문 리서치 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동서리서치
담당연구원 ○ ○ ○ (02) 2188-96XX

설문조사에 앞서 표본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SQ 1) 구분 (면접원이 기록)
1.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SQ 2) 성별 (면접원이 기록)
1. 여성 2. 남성

SQ 3)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 20세미만 면접중단

SQ 4)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srgroup.co.kr 1 /7

Part A. 서해연안 평화공원에 관한 여론 조사

문1) ○○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협력 대상 ② 지원 대상 ③ 경쟁 대상
④ 경계 대상 ⑤ 적대 대상

문2) ○○님께서 평소 통일이나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점진적으로 서서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하다
⑤ 기타 (적을 것 : _____)

문3) ○○님께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교류
② 학계·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학술 교류
③ 예술·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④ 경제지원과 대북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
⑤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등 인도적, 사회문화 교류

문4) 다음과 같은 남북한 관계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안이 ○○님이 평소 생각하시기에 더 중요한 것들인지 순서에 따라 나열해 주십시오.

남북한 관계개선방안	우선순위
1.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교류	( )순위
2. 학계·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교류	( )순위
3. 예술·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교류	( )순위
4.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등 인도적, 사회문화 교류	( )순위
5. 경제지원과 대북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교류	( )순위

문5)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7월 9일) 시건을 계기로 ○○님의 평소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① 변화 있었다 → 문6으로 가십시오 ② 변화 없었다 → 문7로 가십시오

문6) 남북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변화가 있으셨습니까?

① 협력·지원의 대상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변화
② 협력·지원의 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변화
③ 협력·지원의 대상에서 적대적 대상으로 변화
④ 경쟁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변화
⑤ 경쟁대상에서 적대적 대상으로 변화
⑥ 경계·적대적 대상에서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변화

문7) (면접원 : <보기카드 1>을 제시해 주십시오) 남북접경지역 지도를 보시고 현재 북한과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권역과 10년 전에 비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권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1.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2.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
① 서해연안 접경지역	① 서해연안 접경지역
② 한강·예성강하구역과 서부내륙지역	② 한강·예성강하구역과 서부내륙지역
③ 중부내륙지역	③ 중부내륙지역
④ 동해연안 접경지역	④ 동해연안 접경지역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srgroup.co.kr

문8) 남북협력관리의 공간적 범위는 육상과 해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신업단지, 관광개발, DMZ 환경관리 등의 육상과 함만 · 해운, 공동어로, 수산자원 증 · 양식, 해양조사연구 등의 해양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 될 것이리고 생각하십니까? 합계가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공간부문	점수
1. 육상	(　　)점
2. 해양	(　　)점
합계	100점

문9)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리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 분야	순위
1. 항만 · 해운	(　　)순위
2. 공동어로	(　　)순위
3. 수산자원 증 · 양식	(　　)순위
4. 해양환경 · 생태계보호	(　　)순위
5. 해양자원개발	(　　)순위
6. 해양조사 · 연구	(　　)순위

문10) 서해접경 연안지역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리고 생각하십니까?
① 짖은 중국어선 출몰과 싹쓸이 어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②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북한과 무력 충돌 우려
③ 어구 · 어망 투기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④ 경제적 낙후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⑤ 연안 육지부(인천, 개성 등)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
⑥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 외국자본의 투자 활성화 미흡

문11) (면접원 : <보기카드 2>를 제시해 주십시오) <보기카드 2>의 서해연안 접경지역 지도를 보시고 현재 북한과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권역과 10년 전에 비해 긴장 강도가 가장 높아진 권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1.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2. 10년 전에 비해 긴장강도가 높아진 권역
① 백령 · 대청도 안근해역	① 백령 · 대청도 안근해역
② 연평도 어장 안근해역	② 연평도 어장 안근해역
③ 강화도 어장 안근해역	③ 강화도 어장 안근해역
④ 강화도 북단(한강 · 예성강 하구)지역	④ 강화도 북단(한강 · 예성강 하구)지역

문12)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는 1999년과 2002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리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제 다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②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③ 당장은 아니나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④ 가까운 시일 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문13)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군사적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리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체적인 대립상황
② 꽃게잡이 어선을 관리하는 중에 나타나는 우발적인 충돌
③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
④ 기타 (적을 것 : _____)

문14) 그럼, 이러한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 채택 및 서해 항행 보장, 2005년 서해 공동어로 합의, 2006년 한강하구 바다모래 채취 등을 남북한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련되지 않았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합의 후 후속대책이 미련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한다 → 문15로 가십시오
② 동의하지 않는다 → 문17로 가십시오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irgroup.co.kr

문15) **(면접원 : <보기카드 3>을 제시해 주십시오)** 북한은 남북한 해상경계를 다시 설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남북회담이 결렬될 때 이슈로 등장하는 것도 서해상 해상경계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현재 남한의 조업구역이나 어장구역과 일부 겹치는 구역이 있습니다만, 북한과 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이 구역(**<보기카드 3>에서 빗금친 부분**)을 **"비무장 민간인만 출입하는 평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인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해야 한다.

문16) 그렇다면, 평화구역 제안으로 서해해상 경계문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②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문17) ○○님께서는 서해안만 접경지역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북협력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꽃게 등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수산협력 분야
② 해양·연안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협력 분야
③ 한강하구 등에서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광물자원 개발 분야
④ 골벰, 저어새 등을 활용한 한강~서해뱃길 복원 및 해양생태/관광 협력 분야
⑤ 남북간 물자이동을 위한 항만조성 및 항로확보 등을 위한 해운·항만협력 분야
⑥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서해해상 경계설정

문18) 서해안만 접경지역을 남북이 협력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협력관리체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 연안·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와 D/B구축
③ 지역주민·지자체 등 지역자원의 교류·협력 추진
④ 국제기구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⑤ 지속적인 협력관리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⑥ 북한의 관심과 협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나 방안 개발

문19) **(면접원 : <보기카드 4>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서해안만 지역은 경제분야 협력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보호구역이 가장 밀집해 있을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고 전세계적으로 1,600마리만 생존하는 저어새 등의 세계적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물범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분야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향후 서해안만에서 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남북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치적 분야이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적극 추진
② 경제분야, 정치분야 협력, 서해상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
③ 북한의 관심이 경제적 실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제분야 협력이 완료된 후에 추진
④ 서해상 평화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

문20) ○○님께서는 서해안만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이 협력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지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면접원 : 아래 박스의 내용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 ※ 국제사회는 생태계·자원보호, 국가간 갈등해소,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관련 국가가 협력관리하는 평화공원(peace park)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평화공원을 지정한 사례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해역인 아카바만과 아임랫만에 지정한 홍해 해양평화공원(Red Sea Marine Peace Park)이 대표적입니다.

① 괜한 분쟁의 소지만 만드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
② 지정이 되더라도 남북관계나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좋은 방안이나 지정과정이 어렵고, 지정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④ 남북관계 개선이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문21) 서해안만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과 북한이 관할 해역범위를 각각 지정한다.
②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정한다.
③ IUCN,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가 상징적으로 지정한다.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orgroup.co.kr 4 /7

문22) ○○님께서는 서해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주관기관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부 ② 해양수산부 ③ 환경부
④ 국방부 ⑤ 인천광역시 ⑥ 기타 (적을 것 : _____)

문23)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우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외정책 및 남한에 대한 태도 등 북한태도가 변해야 한다.
②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③ 지역주민, 지자체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④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24) 북한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6자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 ·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거나,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가 현재처럼 악화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도 서해안 접경지역의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계악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북한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고려하되, 국제기구와 협력, 지료수집 등 기초적인 작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실제적으로 추진하기에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한다.

문25) 서해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게 된다면, 가장 큰 기대효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공동관리를 하여 어족자원 보호
② 지역주민(서해5도, 개성연인)의 안전한 어로행위와 부가적 관광수입으로 지역소득 증대
③ 해양쓰레기, 수질 관리 등을 통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④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기대감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⑤ 안보불안 해소로 인한, 개성 등지에 민간자본 ·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국내경제 활성화

문26) **(면접원 : <보기카드 4>를 제시해 주십시오)** 서해안 접경지역은 개성공단 운영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성~김포~인천광역시(송도, 영종도)로 연결되는 경제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운기능 강화를 위한 준설과 항만건설 등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반면에 보호가치가 높은 접경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수산자원 포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큰 영향을 있을 것이며, 특히 강화도 북단, 한강하구역, 예성강 하구역의 생태계(서식산란지) 훼손 및 수질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② 남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비 완비, 환경 및 생태계 영향 저감을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나 개성공단의 영향으로 수질환경 오염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③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영향이 있더라도 영향범위는 강화도 북단, 예성강 및 한강하구역에 한정될 것이다.
④ 기존의 개발로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27)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신입단지 등이 확장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척과 매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매립간척, 준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저감 ·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남한의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환경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북한에 대한 협력 ·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 입주업체의 자율에 맡기되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해서는 남한이 직접 지원하여 규제영향을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
④ 기타 (적을 것 : _____)

문28) 지난 6월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을 비롯한 접경해역에서 골재채취(바다모래 채취)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이고, 한강하구에만 서식하는 황복 등 보호어종 및 갯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훼손할 경우 ○○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고, 남한의 골재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골재채취는 불가피하다.
② 골재채취는 항로준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한다.
③ 보호생물종의 서식지와 갯벌생태계에 악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남북 공동으로 시행하고 골재채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srgroup.co.kr

문29) 남북한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첨단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기존의 구형 기자재(고장 없고 사용이 가능한)가 재고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잉여 연구기자재를 북한연구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에 대해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협력방안이 아니며 실현가능성도 낮다
② 적절한 협력방안은 아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다.
③ 좋은 협력방안이나 실현가능성은 낮다
④ 좋은 협력방안이며 실현가능성도 높다

문30) **(면접원 : <보기카드 5>를 제시해 주십시오)** 서해안만 접경지역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해해양평화공원과 연계하여 <보기카드 5>와 같은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실현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	실현가능성
1.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관광 사업 추진	① 있음 ② 없음
2. 모래채취	① 있음 ② 없음
3. 강화, 연평, 백령 권역별 생태협력사업 추진	① 있음 ② 없음
4. 평화구역 지정 및 민간기구 공동관리	① 있음 ② 없음
5. 북한의 해양연구 기자재 및 기술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6. 해주항 정비·확충 및 추가 항만 개발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7. 2004년 해운합의서상 항로 활성화	① 있음 ② 없음
8. 불법어로 및 기름오염사고 남북공동대처	① 있음 ② 없음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srgroup.co.kr 6 /7

Part B. 사회경제적 사항에 관한 설문

※ 다음의 질문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묻는 질문이오니,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DQ1) ○○님의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_____ 명)

DQ1-1) 그렇다면, 그 중에서 소득이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_____ 명)

DQ2) ○○님의 가족은 현 거주지역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DQ3)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어업, 임업 (가족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 (상점, 음식점, 운송업 등에서 종업원 9인 이하 경영자, 가족종사자, 개인택시 기사)
③ 판매/서비스직 (상점, 음식점, 경기장 등의 종업원, 판매원/이발, 미장원 등의 종업원/역무원 등)
④ 기능/작업직 (공원, 기계조작원/토목, 건축의 작업원/우편배달원/운전기사/노무자 등)
⑤ 일반작업직 (토목관계 현장직, 청소, 수위 등)
⑥ 사무/기술직 (사무, 기술관계사원(과장, 대리 포함)/종업원 49인이하의 관리직/조종사, 항해사/교사/간호사/약사)
⑦ 경영직/관리직 (관공서 또는 50인 이상 기업의 임원, 관리직/40-49인의 기업경영자/원장, 교장/기장, 선장 등)
⑧ 전문/자유직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연구원/교수/예술가/종교인/정치인 등)
⑨ 가정주부 (주로 가사에 종사하는 전업주부 등)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적을 것 : _____)

DQ4) ○○님의 가족 중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③ 없다

DQ5) ○○님의 최고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를 아래 숫자에 ○표 해주십시오)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Q6) 작년 한 해 동안 **○○님 가구의 월 평균소득**(세금 포함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_____만원)

DQ6-1) 만약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아래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Copyright(c) 2006 Dongseo Research Ltd.. All right reserved. http://www.dsrgroup.co.kr

【 표 1 】 북한의 의미

[문 1] ○○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지원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	(700)	25.9	24.3	1.4	35.1	13.3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27.7	22.5	1.0	34.8	13.9	100.0
배 우 자	(318)	23.6	26.4	1.9	35.5	12.6	100.0
▣ 성 별 ▣							
여 성	(350)	23.7	25.4	2.3	34.9	13.7	100.0
남 성	(350)	28.0	23.1	.6	35.4	12.9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22.0	28.0	.0	41.0	9.0	100.0
부산/대구/광주/대전	(100)	28.0	24.0	.0	41.0	7.0	100.0
인천/울산/경기/강원	(100)	25.0	15.0	.0	37.0	23.0	100.0
충청/전라/제주	(100)	31.0	21.0	1.0	25.0	22.0	100.0
경 북	(100)	45.0	30.0	3.0	18.0	4.0	100.0
경 남	(100)	10.0	36.0	4.0	39.0	11.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34.1	24.4	7.3	26.8	7.3	100.0
30 대	(262)	30.9	26.3	.8	33.2	8.8	100.0
40 대	(276)	22.8	26.1	1.1	34.1	15.9	100.0
50 대 이상	(121)	19.0	15.7	1.7	44.6	19.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23.4	22.7	1.3	37.7	14.9	100.0
4 년 ~ 5 년	(147)	25.2	28.6	.7	33.3	12.2	100.0
6 년 ~ 10 년	(206)	28.2	25.7	1.9	33.0	11.2	100.0
11 년 ~ 15 년	(79)	19.0	20.3	2.5	46.8	11.4	100.0
15 년 이 상	(114)	30.7	21.1	.9	29.8	17.5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23.9	18.6	2.7	37.2	17.7	100.0
3 명	(104)	28.8	27.9	1.9	26.9	14.4	100.0
4 명	(404)	24.5	25.2	1.0	36.4	12.9	100.0
5 명 이 상	(79)	31.6	22.8	1.3	36.7	7.6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23.8	23.3	.0	40.0	12.9	100.0
블루칼라	(164)	30.5	22.6	1.8	30.5	14.6	100.0
화이트칼라	(146)	26.8	24.7	2.1	32.2	12.3	100.0
가정주부	(141)	22.0	27.7	2.8	33.3	14.2	100.0
무직 / 기타	(9)	11.1	22.2	.0	66.7	.0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12.7	12.7	1.8	52.7	20.0	100.0
고졸	(353)	26.9	23.2	2.0	33.4	14.4	100.0
대 재 이 상	(292)	27.1	27.7	.7	33.9	10.6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다	(23)	30.4	17.4	.0	39.1	13.0	100.0
없다	(677)	25.7	24.5	1.5	35.0	13.3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21.8	14.5	1.8	36.4	25.5	100.0
200 ~ 299만원	(205)	22.9	25.9	2.0	40.0	9.3	100.0
300 ~ 399만원	(198)	29.8	27.8	1.5	30.8	10.1	100.0
400만원 이상	(187)	27.3	24.6	.5	33.7	13.9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25.0	15.3	5.6	40.3	13.9	100.0
100 ~ 199만원	(187)	27.3	21.4	.5	36.4	14.4	100.0
200 ~ 299만원	(179)	26.3	25.1	.6	37.4	10.6	100.0
300만원 이상	(262)	24.8	26.2	1.5	31.3	14.1	100.0

【 표 2 】 통일과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의견

[문 2] 문2) ○○님께서 평소 통일이나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하다		계
		%	%	%	%	%	
■ 전 체 ■	(700)	13.7	42.3	30.3	13.6	.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13.9	45.5	29.1	11.5	.0	100.0
배 우 자	(318)	13.5	39.4	31.8	16.0	.3	100.0
▣ 성 별 ▣							
여	(350)	13.4	38.0	32.3	16.0	.3	100.0
남	(350)	14.0	46.6	28.3	11.1	.0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6.0	53.0	33.0	7.0	1.0	100.0
부 산	(100)	9.0	47.0	37.0	7.0	.0	100.0
대 구	(100)	10.0	49.0	33.0	8.0	.0	100.0
인 천	(100)	9.0	36.0	29.0	26.0	.0	100.0
광 주	(100)	31.0	36.0	25.0	8.0	.0	100.0
대 전	(100)	6.0	31.0	33.0	30.0	.0	100.0
울 산	(100)	25.0	44.0	22.0	9.0	.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7.3	46.3	29.3	17.1	.0	100.0
3 0 대	(262)	13.4	42.0	30.9	13.4	.4	100.0
4 0 대	(276)	14.5	41.7	29.0	14.9	.0	100.0
5 0 대 이상	(121)	14.9	43.0	32.2	9.9	.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11.7	41.6	29.2	17.5	.0	100.0
4 년 ~ 5 년	(147)	12.2	45.6	28.6	12.9	.7	100.0
6 년 ~ 10 년	(206)	14.1	42.2	31.1	12.6	.0	100.0
11 년 ~ 15 년	(79)	8.9	50.6	30.4	10.1	.0	100.0
15 년 이 상	(114)	21.1	33.3	32.5	13.2	.0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12.4	46.0	26.5	14.2	.9	100.0
3 명	(104)	13.5	35.6	34.6	16.3	.0	100.0
4 명	(404)	13.4	41.3	31.2	14.1	.0	100.0
5 명 이 상	(79)	17.7	50.6	25.3	6.3	.0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10.8	44.6	36.3	7.9	.4	100.0
블 루 칼 라	(164)	13.4	45.7	25.6	15.2	.0	100.0
화 이 트 칼 라	(146)	17.1	39.7	24.7	18.5	.0	100.0
가 정 주 부	(141)	16.3	35.5	31.2	17.0	.0	100.0
무 직 / 기 타	(9)	.0	66.7	33.3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10.9	41.8	34.5	12.7	.0	100.0
고 졸	(353)	13.0	40.8	30.6	15.6	.0	100.0
대 재 이 상	(292)	15.1	44.2	29.1	11.3	.3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 음	(23)	4.3	47.8	39.1	8.7	.0	100.0
없 음	(677)	14.0	42.1	30.0	13.7	.1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12.7	41.8	30.9	14.5	.0	100.0
200 ~ 299만원	(205)	14.1	39.0	35.1	11.7	.0	100.0
300 ~ 399만원	(198)	11.6	44.9	32.3	11.1	.0	100.0
400만원 이상	(187)	16.0	43.3	22.5	17.6	.5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18.1	36.1	22.2	23.6	.0	100.0
100 ~ 199만원	(187)	7.0	43.9	35.3	13.4	.5	100.0
200 ~ 299만원	(179)	14.5	44.1	33.5	7.8	.0	100.0
300만원 이상	(262)	16.8	41.6	26.7	14.9	.0	100.0

【 표 3 】 가장 실현성이 높은 남북한 교류협력

[문 3] ○○님께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등 인도적·사회문화 교류	예술/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경제지원과 대북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교류	학계/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	계
		%	%	%	%	%	
■ 전 체 ■	(700)	44.0	22.9	19.1	7.1	6.9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43.2	22.3	20.7	7.1	6.8	100.0
배 우 자	(318)	45.0	23.6	17.3	7.2	6.9	100.0
▣ 성 별 ▣							
여 성	(350)	44.6	24.3	16.6	7.1	7.4	100.0
남 성	(350)	43.4	21.4	21.7	7.1	6.3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54.0	14.0	15.0	12.0	5.0	100.0
부 산	(100)	41.0	21.0	23.0	7.0	8.0	100.0
대 구	(100)	41.0	27.0	22.0	7.0	3.0	100.0
인 천	(100)	55.0	25.0	12.0	3.0	5.0	100.0
광 주	(100)	47.0	21.0	23.0	2.0	7.0	100.0
대 전	(100)	31.0	35.0	14.0	8.0	12.0	100.0
울 산	(100)	39.0	17.0	25.0	11.0	8.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39.0	19.5	22.0	7.3	12.2	100.0
3 0 대	(262)	42.4	23.7	21.8	5.0	7.3	100.0
4 0 대	(276)	40.6	26.4	19.1	9.4	5.4	100.0
5 0 대 이상	(121)	57.0	14.0	14.9	6.6	7.4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45.5	26.0	16.2	5.2	7.1	100.0
4 년 ~ 5 년	(147)	40.8	22.4	25.2	4.8	6.8	100.0
6 년 ~ 10 년	(206)	45.6	26.2	17.0	8.3	2.9	100.0
11 년 ~ 15 년	(79)	43.0	19.0	20.3	6.3	11.4	100.0
15 년 이 상	(114)	43.9	15.8	16.4	11.4	10.5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49.6	25.7	15.9	2.7	6.2	100.0
3 명	(104)	45.2	16.3	18.3	7.7	12.5	100.0
4 명	(404)	43.1	22.0	21.0	7.9	5.9	100.0
5 명 이 상	(79)	39.2	31.6	15.2	8.9	5.1	100.0
▣ 직 업 별 ▣							
전문/관리직	(240)	42.9	21.3	20.0	8.3	7.5	100.0
사 무 직	(164)	44.5	25.0	13.4	7.9	9.1	100.0
판매/서비스직	(146)	36.3	25.3	26.0	6.8	5.5	100.0
가 정 주 부	(141)	53.2	20.6	17.0	4.3	5.0	100.0
무직 / 기타	(9)	44.4	22.2	22.2	11.1	.0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54.5	16.4	10.9	7.3	10.9	100.0
고 졸	(353)	47.3	22.1	17.3	7.1	6.2	100.0
대 재 이 상	(292)	38.0	25.0	22.9	7.2	6.8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 음	(23)	43.5	26.1	17.4	4.3	8.7	100.0
없 음	(677)	44.0	22.7	19.2	7.2	6.8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48.2	23.6	14.5	5.5	8.2	100.0
200 ~ 299만원	(205)	45.9	22.4	21.0	4.4	6.3	100.0
300 ~ 399만원	(198)	44.9	22.7	18.2	7.6	6.6	100.0
400만원 이상	(187)	38.5	23.0	20.9	10.7	7.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45.8	19.4	20.8	5.6	8.3	100.0
100 ~ 199만원	(187)	40.6	26.2	17.1	7.0	9.1	100.0
200 ~ 299만원	(179)	41.3	24.0	19.0	8.9	6.7	100.0
300만원 이상	(262)	47.7	20.6	20.2	6.5	5.0	100.0

【 표 5 】 북한미사일 발사가 남북문제 인식에 미친 영향

[문 5]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7월 9일) 사건을 계기로 ○○님의 평소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사례수	변화 없었다	변화 있었다	계
		%	%	
■ 전 체 ■	(700)	73.1	26.9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74.9	25.1	100.0
배 우 자	(318)	71.1	28.9	100.0
▣ 성 별 ▣				
여 성	(350)	71.1	28.9	100.0
남 성	(350)	75.1	24.9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64.0	36.0	100.0
부 산	(100)	77.0	23.0	100.0
대 구	(100)	71.0	29.0	100.0
인 천	(100)	76.0	24.0	100.0
광 주	(100)	63.0	37.0	100.0
대 전	(100)	87.0	13.0	100.0
울 산	(100)	74.0	26.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75.6	24.4	100.0
3 0 대	(262)	74.8	25.2	100.0
4 0 대	(276)	71.4	28.6	100.0
5 0 대 이 상	(121)	72.7	27.3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76.0	24.0	100.0
4 년 ~ 5 년	(147)	73.5	26.5	100.0
6 년 ~ 10 년	(206)	76.7	23.3	100.0
11 년 ~ 15 년	(79)	59.5	40.5	100.0
15 년 이 상	(114)	71.9	28.1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79.6	20.4	100.0
3 명	(104)	74.0	26.0	100.0
4 명	(404)	70.8	29.2	100.0
5 명 이 상	(79)	74.7	25.3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72.5	27.5	100.0
블 루 칼 라	(164)	76.8	23.2	100.0
화 이 트 칼 라	(146)	74.0	26.0	100.0
가 정 주 부	(141)	68.1	31.9	100.0
무 직 / 기 타	(9)	88.9	11.1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72.7	27.3	100.0
고 졸	(353)	74.8	25.2	100.0
대 재 이 상	(292)	71.2	28.8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78.3	21.7	100.0
없 음	(677)	73.0	27.0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71.8	28.2	100.0
200 ~ 299만원	(205)	76.6	23.4	100.0
300 ~ 399만원	(198)	68.2	31.8	100.0
400만원 이상	(187)	75.4	24.6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80.6	19.4	100.0
100 ~ 199만원	(187)	69.5	30.5	100.0
200 ~ 299만원	(179)	74.9	25.1	100.0
300만원 이상	(262)	72.5	27.5	100.0

【 표 6 】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방향

[문 6] 남북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사례수	협력/지원의 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변화	협력/지원의 대상에서 적대적 대상으로 변화	경쟁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변화	경쟁대상에서 적대적 대상으로 변화	경/적대적 대상에서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변화	협력/지원의 대상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변화	계
		%	%	%	%	%	%	
■ 전 체 ■	(188)	47.9	19.1	12.8	10.1	7.4	2.7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96)	47.9	17.7	11.5	10.4	8.3	4.2	100.0
배 우 자	(92)	47.8	20.7	14.1	9.8	6.5	1.1	100.0
▣ 성 별 ▣								
여 성	(101)	44.6	21.8	12.9	11.9	6.9	2.0	100.0
남 성	(87)	51.7	16.1	12.6	8.0	8.0	3.4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36)	58.3	13.9	11.1	2.8	11.1	2.8	100.0
부 산	(23)	56.5	21.7	.0	8.7	13.0	.0	100.0
대 구	(29)	37.9	31.0	3.4	6.9	13.8	6.9	100.0
인 천	(24)	37.5	33.3	8.3	4.2	8.3	8.3	100.0
광 주	(37)	54.1	13.5	27.0	2.7	2.7	.0	100.0
대 전	(13)	46.2	15.4	23.1	15.4	.0	.0	100.0
울 산	(26)	38.5	7.7	15.4	38.5	.0	.0	100.0
▣ 연 령 별 ▣								
20 대	(10)	70.0	30.0	.0	.0	.0	.0	100.0
30 대	(66)	48.5	7.6	19.7	7.6	12.1	4.5	100.0
40 대	(79)	48.1	26.6	6.3	10.1	6.3	2.5	100.0
50 대 이 상	(33)	39.4	21.2	18.2	18.2	3.0	.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37)	35.1	16.2	18.9	18.9	8.1	2.7	100.0
4 년 ~ 5 년	(39)	59.0	17.9	15.4	.0	5.1	2.6	100.0
6 년 ~ 10 년	(48)	41.7	16.7	12.5	10.4	12.5	6.3	100.0
11 년 ~ 15 년	(32)	56.3	18.8	9.4	6.3	9.4	.0	100.0
15 년 이 상	(32)	50.0	28.1	6.3	15.6	.0	.0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23)	26.1	26.1	26.1	17.4	4.3	.0	100.0
3 명	(27)	55.6	14.8	11.1	7.4	7.4	3.7	100.0
4 명	(118)	53.4	20.3	11.0	6.8	5.1	3.4	100.0
5 명 이 상	(20)	30.0	10.0	10.0	25.0	25.0	.0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66)	48.5	18.2	10.6	12.1	6.1	4.5	100.0
블 루 칼 라	(38)	47.4	18.4	18.4	10.5	5.3	.0	100.0
화 이 트 칼 라	(38)	39.5	26.3	10.5	5.3	15.8	2.6	100.0
가 정 주 부	(45)	53.3	15.6	13.3	11.1	4.4	2.2	100.0
무 직 / 기 타	(1)	100.0	.0	.0	.0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5)	13.3	33.3	20.0	33.3	.0	.0	100.0
고 졸	(69)	46.1	20.2	11.2	11.2	9.0	2.2	100.0
대 재 이 상	(84)	56.0	15.5	13.1	4.8	7.1	3.6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 음	(5)	20.0	40.0	.0	20.0	20.0	.0	100.0
없 음	(183)	48.6	18.6	13.1	9.8	7.1	2.7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31)	38.7	29.0	9.7	12.9	6.5	3.2	100.0
200 ~ 299만원	(48)	54.2	14.6	12.5	8.3	6.3	4.2	100.0
300 ~ 399만원	(63)	49.2	14.3	19.0	7.9	7.9	1.6	100.0
400만원 이상	(46)	45.7	23.9	6.5	13.0	8.7	2.2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14)	21.4	21.4	7.1	35.7	14.3	.0	100.0
100 ~ 199만원	(57)	50.9	21.1	14.0	.0	10.5	3.5	100.0
200 ~ 299만원	(45)	46.7	17.8	13.3	15.6	4.4	2.2	100.0
300만원 이상	(72)	51.4	18.1	12.5	9.7	5.6	2.8	100.0

【 표 7-1 】 현재 북한과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

[문 7] 남북접경지역 지도를 보시고 현재 북한과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권역을 선택해주십시오

	사례수	서해연안 접경지역	동해연안 접경지역	한강/ 예성강하 구역과 서부내륙 지역	중부내륙 지역	계
		%	%	%	%	
■ 전 체 ■	(700)	67.6	12.6	11.4	8.4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71.2	12.0	9.7	7.1	100.0
배 우 자	(318)	63.2	13.2	13.5	10.1	100.0
▣ 성 별 ▣						
여 성	(350)	64.0	13.7	13.1	9.1	100.0
남 성	(350)	71.1	11.4	9.7	7.7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57.0	19.0	13.0	11.0	100.0
부천/구리/남양주	(100)	56.0	12.0	13.0	19.0	100.0
대전/청주/천안	(100)	69.0	13.0	15.0	3.0	100.0
인 천	(100)	79.0	5.0	11.0	5.0	100.0
대 구	(100)	70.0	17.0	11.0	2.0	100.0
울 산	(100)	83.0	5.0	5.0	7.0	100.0
부 산	(100)	59.0	17.0	12.0	12.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73.2	17.1	4.9	4.9	100.0
30 대	(262)	66.8	11.5	13.7	8.0	100.0
40 대	(276)	69.6	12.0	11.2	7.2	100.0
50 대 이상	(121)	62.8	14.9	9.1	13.2	100.0
▣ 거 주 기 간 별 ▣						
3 년 이 하	(154)	73.4	12.3	7.1	7.1	100.0
4 년 ~ 5 년	(147)	73.5	11.6	8.8	6.1	100.0
6 년 ~ 10 년	(206)	70.4	12.6	11.2	5.8	100.0
11 년 ~ 15 년	(79)	57.0	15.2	17.7	10.1	100.0
15 년 이 상	(114)	54.4	12.3	16.7	16.7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68.1	14.2	8.0	9.7	100.0
3 명	(104)	66.3	12.5	9.6	11.5	100.0
4 명	(404)	67.6	12.4	13.6	6.4	100.0
5 명 이 상	(79)	68.4	11.4	7.6	12.7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61.3	12.9	15.4	10.4	100.0
사무/기술직	(164)	72.6	12.8	6.1	8.5	100.0
블루칼라	(146)	72.6	12.3	9.6	5.5	100.0
화이트칼라	(141)	68.8	11.3	12.8	7.1	100.0
가정주부	(9)	44.4	22.2	11.1	22.2	100.0
무직 / 기타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63.6	14.5	7.3	14.5	100.0
고 졸	(353)	69.4	11.0	11.3	8.2	100.0
대 재 이 상	(292)	66.1	14.0	12.3	7.5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회원	(23)	73.9	8.7	4.3	13.0	100.0
비회원	(677)	67.4	12.7	11.7	8.3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64.5	18.2	9.1	8.2	100.0
200 ~ 299만원	(205)	68.8	10.7	11.2	9.3	100.0
300 ~ 399만원	(198)	69.7	12.1	10.6	7.6	100.0
400만원 이상	(187)	65.8	11.8	13.9	8.6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75.0	12.5	6.9	5.6	100.0
100 ~ 199만원	(187)	65.2	15.5	10.2	9.1	100.0
200 ~ 299만원	(179)	66.5	10.6	12.8	10.1	100.0
300만원 이상	(262)	67.9	11.8	12.6	7.6	100.0

【 표 7-2 】 10년전에 비해 북한과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

[문 7] 남북접경지역 지도를 보시고 10년 전에 비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권역을 선택해주십시오

	사례수	서해연안 접경지역	동해연안 접경지역	한강/예성강하구역과 서부내륙지역	중부내륙지역	계
		%	%	%	%	
■ 전 체 ■	(700)	65.9	15.6	11.6	7.0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자	(382)	70.2	14.1	9.9	5.8	100.0
배 우 자	(318)	60.7	17.3	13.5	8.5	100.0
▣ 성 별 ▣						
여 성	(350)	61.7	17.4	13.1	7.7	100.0
남 성	(350)	70.0	13.7	10.0	6.3	100.0
▣ 거 주 지 별 ▣						
서울시	(100)	58.0	17.0	16.0	9.0	100.0
부산시	(100)	64.0	19.0	12.0	5.0	100.0
대구시	(100)	65.0	18.0	10.0	7.0	100.0
인천시	(100)	84.0	5.0	8.0	3.0	100.0
광주시	(100)	76.0	13.0	7.0	2.0	100.0	
대전시	(100)	54.0	13.0	15.0	18.0	100.0
울산시	(100)	58.0	24.0	13.0	5.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68.3	26.8	2.4	2.4	100.0
30 대	(262)	66.0	14.1	11.8	8.0	100.0
40 대	(276)	63.4	14.9	14.9	6.9	100.0
50 대 이상	(121)	70.2	16.5	6.6	6.6	100.0
▣ 거 주 기 간 별 ▣						
3 년 이 하	(154)	73.4	9.7	7.8	9.1	100.0
4 년 ~ 5 년	(147)	61.9	17.7	11.6	8.8	100.0
6 년 ~ 10 년	(206)	63.6	15.0	14.6	6.8	100.0
11 년 ~ 15 년	(79)	67.1	17.7	11.4	3.8	100.0
15 년 이 상	(114)	64.0	20.2	11.4	4.4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64.6	15.9	11.5	8.0	100.0
3 명	(104)	69.2	16.3	6.7	7.7	100.0
4 명	(404)	64.4	16.1	12.6	6.9	100.0
5 명 이 상	(79)	70.9	11.4	12.7	5.1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65.4	15.4	11.7	7.5	100.0
블루칼라	(164)	66.9	17.1	8.5	5.5	100.0
화이트칼라	(146)	69.9	10.3	13.7	6.2	100.0
가정주부	(141)	60.3	19.9	12.1	7.8	100.0
무직 / 기타	(9)	44.4	11.1	22.2	22.2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69.1	21.8	7.3	1.8	100.0
고 졸	(353)	65.2	16.7	10.8	7.4	100.0
대 재 이 상	(292)	66.1	13.0	13.4	7.5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65.2	17.4	17.4	.0	100.0
없 음	(677)	65.9	15.5	11.4	7.2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63.6	18.2	9.1	9.1	100.0
200 ~ 299만원	(205)	67.3	17.1	9.8	5.9	100.0
300 ~ 399만원	(198)	68.2	15.2	10.6	6.1	100.0
400만원 이상	(187)	63.1	12.8	16.0	8.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75.0	11.1	9.7	4.2	100.0
100 ~ 199만원	(187)	66.4	16.0	10.2	5.3	100.0
200 ~ 299만원	(179)	60.3	18.4	12.3	8.9	100.0
300만원 이상	(262)	65.3	14.5	12.6	7.6	100.0

【 표 10 】 가장 심각한 서해접경 연안지역의 문제점

[문 10] 서해접경 연안지역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잦은 중국어선 출몰과 싹쓸이 어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북한과 무력 충돌 우려	어구/어망 투기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경제적 낙후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연안 육지부 (인천, 개성 등) 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 외국자본의 투자 활성화 미흡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	(700)	43.0	20.4	12.0	12.7	7.7	4.0	.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43.2	20.9	11.8	12.3	6.8	4.7	.3	100.0
배 우 자	(318)	42.8	19.8	12.3	13.2	8.8	3.1	.0	100.0
▣ 성 별 ▣									
여 성	(350)	43.1	19.4	12.6	12.9	8.3	3.7	.0	100.0
남 성	(350)	42.9	21.4	11.4	12.6	7.1	4.3	.3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47.0	22.0	10.0	12.0	6.0	3.0	.0	100.0
부 산	(100)	35.0	32.0	9.0	16.0	2.0	6.0	.0	100.0
대 구	(100)	61.0	13.0	13.0	5.0	6.0	2.0	.0	100.0
인 천	(100)	47.0	14.0	20.0	12.0	5.0	2.0	.0	100.0
광 주	(100)	58.0	10.0	7.0	8.0	8.0	9.0	.0	100.0
대 전	(100)	27.0	15.0	17.0	25.0	13.0	3.0	.0	100.0
울 산	(100)	26.0	37.0	8.0	11.0	14.0	3.0	1.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41.5	34.1	7.3	7.3	4.9	2.4	2.4	100.0
3 0 대	(262)	48.1	17.6	9.9	12.6	8.0	3.8	.0	100.0
4 0 대	(276)	41.7	18.8	13.4	13.0	8.0	5.1	.0	100.0
5 0 대 이상	(121)	35.5	25.6	14.9	14.0	7.4	2.5	.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41.6	24.7	11.7	12.3	5.2	3.9	.6	100.0
4 년 ~ 5 년	(147)	40.8	19.0	10.9	17.0	8.2	4.1	.0	100.0
6 년 ~ 10 년	(206)	46.1	16.5	13.6	11.7	8.7	3.4	.0	100.0
11 년 ~ 15 년	(79)	40.5	24.1	10.1	10.1	10.1	5.1	.0	100.0
15 년 이 상	(114)	43.9	21.1	12.3	11.4	7.0	4.4	.0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44.2	23.0	11.5	9.7	8.0	2.7	.9	100.0
3 명	(104)	36.5	26.0	14.4	18.3	3.8	1.0	.0	100.0
4 명	(404)	44.1	18.8	12.4	11.4	8.7	4.7	.0	100.0
5 명 이 상	(79)	44.3	17.7	7.6	16.5	7.6	6.3	.0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45.0	16.7	14.6	13.3	7.9	2.5	.0	100.0
블루 칼라	(164)	42.7	23.8	8.5	11.6	8.5	4.3	.6	100.0
화이트 칼라	(146)	41.1	19.9	13.0	13.0	6.8	6.2	.0	100.0
가 정 주 부	(141)	42.6	22.0	11.3	12.1	7.8	4.3	.0	100.0
무직 / 기타	(9)	33.3	44.4	.0	22.2	.0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20.0	20.0	18.2	25.5	10.9	5.5	.0	100.0
고 졸	(353)	43.9	21.0	11.6	12.5	7.9	3.1	.0	100.0
대 재 이 상	(292)	46.2	19.9	11.3	10.6	6.8	4.8	.3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 음	(23)	39.1	21.7	21.7	13.0	4.3	.0	.0	100.0
없 음	(677)	43.1	20.4	11.7	12.7	7.8	4.1	.1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41.8	20.0	10.0	15.5	9.1	3.6	.0	100.0
200 ~ 299만원	(205)	47.3	22.4	15.6	7.8	2.9	3.4	.5	100.0
300 ~ 399만원	(198)	44.4	20.7	9.6	11.1	9.1	5.1	.0	100.0
400만원 이상	(187)	37.4	18.2	11.8	18.2	10.7	3.7	.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56.9	15.3	11.1	6.9	4.2	5.6	.0	100.0
100 ~ 199만원	(167)	42.8	20.3	12.8	12.3	9.1	2.7	.0	100.0
200 ~ 299만원	(179)	39.7	20.7	11.7	13.4	10.1	3.9	.6	100.0
300만원 이상	(262)	41.6	21.8	11.8	14.1	6.1	4.6	.0	100.0

【 표 11-1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 현재 북한과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

[문 11] <보기카드 2>의 서해연안 접경지역 지도를 보시고 현재 북한과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권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례수	백령/대청도 인근해역	연평도 어장 인근해역	강화도 어장 인근해역	강화도 북단(한강 예성강 하구)지역	계
		%	%	%	%	
■ 전 체 ■	(700)	60.6	23.0	7.4	9.0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60.5	25.9	5.5	8.1	100.0
배 우 자	(318)	60.7	19.5	9.7	10.1	100.0
▣ 성 별 ▣						
여 성	(350)	60.6	20.3	9.7	9.4	100.0
남 성	(350)	60.6	25.7	5.1	8.6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48.0	25.0	18.0	9.0	100.0
부 산	(100)	69.0	12.0	10.0	9.0	100.0
대 구	(100)	62.0	21.0	9.0	8.0	100.0
인 천	(100)	39.0	52.0	1.0	8.0	100.0
광 주	(100)	55.0	30.0	3.0	12.0	100.0
대 전	(100)	87.0	10.0	2.0	1.0	100.0
울 산	(100)	64.0	11.0	9.0	16.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73.2	19.5	2.4	4.9	100.0
30 대	(262)	60.7	21.4	8.8	9.2	100.0
40 대	(276)	57.6	24.6	6.9	10.9	100.0
50 대 이 상	(121)	62.8	24.0	7.4	5.8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61.0	26.6	5.2	7.1	100.0
4 년 ~ 5 년	(147)	69.4	13.6	8.8	8.2	100.0
6 년 ~ 10 년	(206)	56.8	27.2	7.3	8.7	100.0
11 년 ~ 15 년	(79)	59.5	20.3	7.6	12.7	100.0
15 년 이 상	(114)	56.1	24.6	8.8	10.5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61.1	26.5	8.0	4.4	100.0
3	(104)	67.3	14.4	3.8	14.4	100.0
4	(404)	57.9	24.0	8.4	9.7	100.0
5 명 이 상	(79)	64.6	24.1	6.3	5.1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55.8	25.4	9.2	9.6	100.0
블 루 칼 라	(164)	65.2	20.1	7.9	6.7	100.0
화 이 트 칼 라	(146)	59.6	26.7	4.8	8.9	100.0
가 정 주 부	(141)	62.4	19.1	7.1	11.3	100.0
무 직 / 기 타	(9)	88.9	11.1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72.7	14.5	5.5	7.3	100.0
고 졸	(353)	58.6	25.5	6.8	9.1	100.0
대 재 이 상	(292)	60.6	21.6	8.6	9.2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입 회	(23)	78.3	17.4	.0	4.3	100.0
비 회 원	(677)	60.0	23.2	7.7	9.2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63.6	24.5	7.3	4.5	100.0
200 ~ 299만원	(205)	63.9	18.0	6.3	11.7	100.0
300 ~ 399만원	(198)	59.6	22.2	8.6	9.6	100.0
400만원 이상	(187)	56.1	28.3	7.5	8.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70.8	19.4	4.2	5.6	100.0
100 ~ 199만원	(187)	62.0	21.9	8.0	8.0	100.0
200 ~ 299만원	(179)	60.3	19.0	9.5	11.2	100.0
300만원 이상	(262)	56.9	27.5	6.5	9.2	100.0

【 표 11-2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 10년전에 비해 북한과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

[문 11] <보기카드 2>의 서해연안 접경지역 지도를 보시고 10년 전에 비해 긴장 강도가 가장 높아진 권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례수	백령/대청도 인근해역	연평도 어장 인근해역	강화도 어장 인근해역	강화도 북단(한강 예성강 하구)지역	계
		%	%	%	%	
■ 전 체 ■	(700)	53.9	26.4	10.6	9.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56.5	28.5	7.6	7.3	100.0
배 우 자	(318)	50.6	23.9	14.2	11.3	100.0
▣ 성 별 ▣						
여 성	(350)	51.4	24.3	13.7	10.6	100.0
남 성	(350)	56.3	28.6	7.4	7.7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52.0	21.0	16.0	11.0	100.0
부 산	(100)	62.0	16.0	7.0	15.0	100.0
대 구	(100)	50.0	28.0	11.0	11.0	100.0
인 천	(100)	31.0	57.0	8.0	4.0	100.0
광 주	(100)	66.0	23.0	3.0	8.0	100.0
대 전	(100)	58.0	25.0	13.0	4.0	100.0
울 산	(100)	58.0	15.0	16.0	11.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46.3	34.1	17.1	2.4	100.0
30 대	(262)	51.1	26.3	11.1	11.5	100.0
40 대	(276)	53.6	29.3	9.4	7.6	100.0
50 대 이상	(121)	62.8	17.4	9.9	9.9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하	(154)	53.9	31.2	11.7	3.2	100.0
4 년 ~ 5 년	(147)	60.5	21.8	10.2	7.5	100.0
6 년 ~ 10 년	(206)	51.0	29.1	10.2	9.7	100.0
11 년 ~ 15 년	(79)	51.9	19.0	16.5	12.7	100.0
15 년 이상	(114)	51.8	26.3	6.1	15.8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하	(113)	60.2	23.0	13.3	3.5	100.0
3 명	(104)	52.9	27.9	7.7	11.5	100.0
4 명	(404)	51.7	26.5	10.9	10.9	100.0
5 명 이상	(79)	57.0	29.1	8.9	5.1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54.2	25.4	12.1	8.3	100.0
블루칼라	(164)	59.1	24.4	9.1	7.3	100.0
화이트칼라	(146)	50.0	33.6	8.2	8.2	100.0
가 정 주 부	(141)	48.9	24.1	12.8	14.2	100.0
무직 / 기타	(9)	88.9	11.1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72.7	7.3	12.7	7.3	100.0
고 졸	(353)	51.8	29.2	9.6	9.3	100.0
대 재 이 상	(292)	52.7	26.7	11.3	9.2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56.5	21.7	13.0	8.7	100.0
없 음	(677)	53.8	26.6	10.5	9.2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60.0	24.5	8.2	7.3	100.0
200 ~ 299만원	(205)	57.6	22.4	8.8	11.2	100.0
300 ~ 399만원	(198)	53.0	25.3	12.1	9.6	100.0
400만원 이상	(187)	47.1	33.2	12.3	7.5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62.5	25.0	6.9	5.6	100.0
100 ~ 199만원	(187)	56.1	25.1	9.6	9.1	100.0
200 ~ 299만원	(179)	55.3	24.0	12.3	8.4	100.0
300만원 이상	(262)	48.9	29.4	11.1	10.7	100.0

【 표 12 】 차후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문 12]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는 1999년과 2002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아니나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시일 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계
		%	%	%	%	
■ 전 체 ■	(700)	5.4	17.4	71.7	5.4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5.0	18.6	70.7	5.8	100.0
배 우 자	(318)	6.0	16.0	73.0	5.0	100.0
▣ 성 별 ▣						
여	(350)	6.3	16.0	73.1	4.6	100.0
남	(350)	4.6	18.9	70.3	6.3	100.0
▣ 거 주 지 별 ▣						
서울	(100)	5.0	10.0	79.0	6.0	100.0
부천시	(100)	4.0	22.0	69.0	5.0	100.0
대전시	(100)	2.0	12.0	81.0	5.0	100.0
인천시	(100)	6.0	17.0	72.0	5.0	100.0
대구시	(100)	18.0	22.0	54.0	6.0	100.0
울산시	(100)	2.0	10.0	79.0	9.0	100.0
전주시	(100)	1.0	29.0	68.0	2.0	100.0
▣ 연 령 별 ▣						
20대	(41)	4.9	22.0	63.4	9.8	100.0
30대	(262)	3.8	16.0	74.4	5.7	100.0
40대	(276)	8.3	15.9	70.3	5.4	100.0
50대 이상	(121)	2.5	22.3	71.9	3.3	100.0
▣ 거 주 기 간 별 ▣						
3년 이하	(154)	3.2	19.5	71.4	5.8	100.0
4년 ~ 5년	(147)	4.8	15.6	75.5	4.1	100.0
6년 ~ 10년	(206)	6.8	18.9	68.9	5.3	100.0
11년 ~ 15년	(79)	6.3	17.7	69.6	6.3	100.0
15년 이상	(114)	6.1	14.0	73.7	6.1	100.0
▣ 총 가 족 수 별 ▣						
2명 이하	(113)	3.5	23.9	69.0	3.5	100.0
3	(104)	3.8	16.3	74.0	5.8	100.0
4	(404)	5.2	15.3	73.0	6.4	100.0
5명 이상	(79)	11.4	20.3	65.8	2.5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2.9	18.8	72.9	5.4	100.0
블루칼라	(164)	7.9	20.1	67.1	4.9	100.0
화이트칼라	(146)	7.5	14.4	73.3	4.8	100.0
가정주부	(141)	5.0	14.2	73.8	7.1	100.0
무직 / 기타	(9)	.0	33.3	66.7	.0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하	(55)	5.5	36.4	56.4	1.8	100.0
고졸	(353)	5.7	17.0	71.7	5.7	100.0
대재 이상	(292)	5.1	14.4	74.7	5.8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음	(23)	17.4	13.0	60.9	8.7	100.0
없음	(677)	5.0	17.6	72.1	5.3	100.0
▣ 가 구 소 득 별 ▣						
200만원 미만	(110)	2.7	21.8	72.7	2.7	100.0
200 ~ 299만원	(205)	2.4	15.1	76.6	5.9	100.0
300 ~ 399만원	(198)	7.1	18.7	68.2	6.1	100.0
400만원 이상	(187)	6.6	16.0	69.5	5.9	100.0
▣ 개 인 소 득 별 ▣						
100만원 미만	(72)	11.1	15.3	66.7	6.9	100.0
100 ~ 199만원	(167)	4.3	18.7	73.8	3.2	100.0
200 ~ 299만원	(179)	3.4	19.6	71.5	5.6	100.0
300만원 이상	(262)	6.1	15.6	71.8	6.5	100.0

【 표 13 】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의 가장 큰 원인

[문 13]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군사적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체적인 대립상황	꽃게잡이 어선을 관리하는 중에 나타나는 우발적 충돌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	국내/외 정치상황에 대한 대응	계
		%	%	%	%	
■ 전 체 ■	(700)	35.6	28.4	35.9	.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33.2	26.7	39.8	.3	100.0
배 우 자	(318)	38.4	30.5	31.1	.0	100.0
▣ 성 별 ▣						
여	(350)	37.7	31.1	31.1	.0	100.0
남	(350)	33.4	25.7	40.6	.3	100.0
▣ 거 주 지 별 ▣						
서부대인/청대동	(100)	22.0	29.0	49.0	.0	100.0
산구천주진산	(100)	37.0	21.0	42.0	.0	100.0
	(100)	40.0	17.0	43.0	.0	100.0
	(100)	12.0	48.0	40.0	.0	100.0
	(100)	50.0	20.0	29.0	1.0	100.0
	(100)	30.0	47.0	23.0	.0	100.0
	(100)	58.0	17.0	25.0	.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41.5	29.3	29.3	.0	100.0
3 0 대	(262)	33.2	29.0	37.4	.4	100.0
4 0 대	(276)	35.5	26.4	38.0	.0	100.0
5 0 대 이상	(121)	38.8	31.4	29.8	.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37.0	27.9	35.1	.0	100.0
4 년 ~ 5 년	(147)	29.3	27.9	42.9	.0	100.0
6 년 ~ 10 년	(206)	32.0	31.1	36.4	.5	100.0
11 년 ~ 15 년	(79)	44.3	22.8	32.9	.0	100.0
15 년 이 상	(114)	42.1	28.9	28.9	.0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34.5	34.5	31.0	.0	100.0
3 명	(104)	26.9	30.8	42.3	.0	100.0
4 명	(404)	36.9	27.5	35.4	.2	100.0
5 명 이 상	(79)	41.8	21.5	36.7	.0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31.7	30.0	38.3	.0	100.0
블루칼라	(164)	36.6	29.3	34.1	.0	100.0
화이트칼라	(146)	37.7	24.0	37.7	.7	100.0
가정주부	(141)	38.3	29.8	31.9	.0	100.0
무직 / 기타	(9)	44.4	22.2	33.3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38.2	40.0	21.8	.0	100.0
고 졸	(353)	37.1	28.3	34.6	.0	100.0
대 재 이 상	(292)	33.2	26.4	40.1	.3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21.7	26.1	52.2	.0	100.0
없 음	(677)	36.0	28.5	35.3	.1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29.1	30.9	40.0	.0	100.0
200 ~ 299만원	(205)	39.0	26.3	34.6	.0	100.0
300 ~ 399만원	(196)	36.4	27.3	33.8	.5	100.0
400만원 이상	(187)	32.6	30.5	36.9	.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40.3	34.7	25.0	.0	100.0
100 ~ 199만원	(187)	36.4	27.8	35.3	.5	100.0
200 ~ 299만원	(179)	38.5	23.5	38.0	.0	100.0
300만원 이상	(262)	31.7	30.5	37.8	.0	100.0

【 표 14 】 서해연안 관련 남북한 합의후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

[문 14] 그럼, 이러한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 채택 및 서해 항행 보장, 2005년 서해 공동어로 합의, 2006년 한강하구 바다모래 채취 등을 남북한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합의 후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사례수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계
		%	%	
■ 전 체 ■	(700)	65.7	34.3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66.5	33.5	100.0
배 우 자	(318)	64.8	35.2	100.0
▣ 성 별 ▣				
여 성	(350)	65.1	34.9	100.0
남 성	(350)	66.3	33.7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60.0	40.0	100.0
부산/울산/구/천/주/전/산	(100)	63.0	37.0	100.0
대 구	(100)	74.0	26.0	100.0
인 천/경 기	(100)	67.0	33.0	100.0
광 주	(100)	57.0	43.0	100.0
대 전	(100)	63.0	37.0	100.0
울 산	(100)	76.0	24.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70.7	29.3	100.0
30 대	(262)	62.6	37.4	100.0
40 대	(276)	65.9	34.1	100.0
50 대 이상	(121)	70.2	29.8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64.3	35.7	100.0
4 년 ~ 5 년	(147)	58.5	41.5	100.0
6 년 ~ 10 년	(206)	69.9	30.1	100.0
11 년 ~ 15 년	(79)	64.6	35.4	100.0
15 년 이 상	(114)	70.2	29.8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67.3	32.7	100.0
3 명	(104)	72.1	27.9	100.0
4 명	(404)	65.1	34.9	100.0
5 명 이 상	(79)	58.2	41.8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70.0	30.0	100.0
블루칼라	(164)	68.9	31.1	100.0
화이트칼라	(146)	57.5	42.5	100.0
가정주부	(141)	63.8	36.2	100.0
무직 / 기타	(9)	55.6	44.4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74.5	25.5	100.0
고 졸	(353)	66.3	33.7	100.0
대 졸 이 상	(292)	63.4	36.6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82.6	17.4	100.0
없 음	(677)	65.1	34.9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70.9	29.1	100.0
200 ~ 299만원	(205)	66.8	33.2	100.0
300 ~ 399만원	(196)	65.2	34.8	100.0
400만원 이상	(167)	62.0	38.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75.0	25.0	100.0
100 ~ 199만원	(167)	67.4	32.6	100.0
200 ~ 299만원	(179)	65.4	34.6	100.0
300만원 이상	(262)	62.2	37.8	100.0

【 표 15 】 해상경계선을 비무장 민간인만 출입하는 평화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문 15] 북한은 남북한 해상경계를 다시 설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남북회담이 결렬될 때 이슈화되는 남북한 해상경계는 서해상 해상경계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현재 남한의 조업구역이나 어장구역과 일부 겹치는 구역이 있습니다만, 북한과 교류협력 활성화및평화정착을 위해 이 구역(<보기카드 ⑤에서 빗금친 부분)을 "비무장 민간인만 출입하는 평화구역" 으로 지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안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해야 한다	계
		%	%	
■ 전 체	(460)	68.3	31.7	100.0
▣ 세대주 여부				
세대주	(254)	66.1	33.9	100.0
배우자	(206)	70.9	29.1	100.0
▣ 성별				
남성	(228)	71.9	28.1	100.0
여성	(232)	64.7	35.3	100.0
▣ 거주지별				
서울	(60)	63.3	36.7	100.0
부산/울산/경남	(63)	68.3	31.7	100.0
대구/경북	(74)	63.5	36.5	100.0	
인천/경기	(67)	59.7	40.3	100.0
광주/전라	(57)	70.2	29.8	100.0
대전/충청	(63)	71.4	28.6	100.0
강원/제주	(76)	80.3	19.7	100.0
▣ 연령별				
20대	(29)	51.7	48.3	100.0
30대	(164)	70.1	29.9	100.0
40대	(162)	67.0	33.0	100.0
50대 이상	(65)	72.9	27.1	100.0
▣ 거주기간별				
3년미만	(99)	63.6	36.4	100.0
4년 - 5년미만	(66)	70.9	29.1	100.0
6년 - 10년미만	(144)	69.4	30.6	100.0
11년 - 15년미만	(51)	70.6	29.4	100.0
15년 이상	(80)	67.5	32.5	100.0
▣ 총가족수별				
2명 이하	(76)	73.7	26.3	100.0
3명	(75)	77.3	22.7	100.0
4명	(263)	63.9	36.1	100.0
5명 이상	(46)	69.6	30.4	100.0
▣ 직업별				
화이트칼라(관리/전문/사무)	(168)	67.9	32.1	100.0
블루칼라(생산/노무/기술)	(113)	69.0	31.0	100.0
자영업	(84)	65.5	34.5	100.0
주부	(90)	70.0	30.0	100.0
무직/기타	(5)	80.0	20.0	100.0
▣ 학력별				
중졸이하	(41)	75.6	24.4	100.0
고졸	(234)	69.2	30.8	100.0
대재이상	(185)	65.4	34.6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가입	(19)	73.7	26.3	100.0
비가입	(441)	68.0	32.0	100.0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6)	64.1	35.9	100.0
200 - 299만원	(137)	63.5	36.5	100.0
300 - 399만원	(129)	76.7	23.3	100.0
400만원 이상	(116)	67.2	32.8	100.0
▣ 개인소득별				
100만원 미만	(54)	70.4	29.6	100.0
100 - 199만원	(126)	63.5	36.5	100.0
200 - 299만원	(117)	66.7	33.3	100.0
300만원 이상	(163)	72.4	27.6	100.0

【 표 16 】 평화구역 제안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 16] 그렇다면, 평화구역 제안으로 서해해상 경계문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계
		%	%	
■ 전 체 ■	(460)	59.1	40.9	100.0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254)	59.4	40.6	100.0
배우자	(206)	58.7	41.3	100.0
▣ 정당 별 정견 ▣				
정견 있다	(228)	60.1	39.9	100.0
정견 없다	(232)	58.2	41.8	100.0
▣ 거주 지 별 ▣				
서울	(60)	51.7	48.3	100.0
부산	(63)	68.3	31.7	100.0
대구	(74)	62.2	37.8	100.0	
인천	(67)	70.1	29.9	100.0
광주	(57)	61.4	38.6	100.0
대전	(63)	42.9	57.1	100.0
울산	(76)	56.6	43.4	100.0
▣ 연령 별 ▣				
20대	(29)	48.3	51.7	100.0
30대	(164)	59.8	40.2	100.0
40대	(182)	59.9	40.1	100.0
50대 이상	(85)	60.0	40.0	100.0
▣ 거주 기간 ▣				
3년 이하	(99)	63.6	36.4	100.0
4년 ~ 5년	(86)	55.8	44.2	100.0
6년 ~ 10년	(144)	58.3	41.7	100.0
11년 ~ 15년	(51)	52.9	47.1	100.0
15년 이상	(80)	62.5	37.5	100.0
▣ 총 가족 수 ▣				
2명 이하	(76)	67.1	32.9	100.0
3	(75)	58.7	41.3	100.0
4	(263)	55.5	44.5	100.0
5명 이상	(46)	67.4	32.6	100.0
▣ 직업 별 ▣				
자영업	(168)	63.7	36.3	100.0
블루칼라	(113)	59.3	40.7	100.0
화이트칼라	(84)	52.4	47.6	100.0
가정주부	(90)	56.7	43.3	100.0
무직 / 기타	(5)	60.0	40.0	100.0
▣ 학력 별 ▣				
중졸 이하	(41)	51.2	48.8	100.0
고졸	(234)	62.4	37.6	100.0
대졸 이상	(185)	56.8	43.2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다	(19)	73.7	26.3	100.0
없다	(441)	58.5	41.5	100.0
▣ 가구 소득 ▣				
200만원 미만	(78)	61.5	38.5	100.0
200 ~ 299만원	(137)	54.0	46.0	100.0
300 ~ 399만원	(129)	58.1	41.9	100.0
400만원 이상	(116)	64.7	35.3	100.0
▣ 개인 소득 ▣				
100만원 미만	(54)	51.9	48.1	100.0
100 ~ 199만원	(126)	62.7	37.3	100.0
200 ~ 299만원	(117)	59.0	41.0	100.0
300만원 이상	(163)	58.9	41.1	100.0

【 표 18 】 서해연안 접경직역을 협력 관리하기 위해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

[문 18]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남북이 협력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례수	협력관리 체제 운영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와 DB구축	지역주민 / 지자체 등 지역차원 의 교류/ 협력 추진	국제기구 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북한의 관심과 협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나 방안 개발	지속적인 협력관리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계
		%	%	%	%	%	%	
■ 전 체 ■	(700)	26.1	22.6	19.1	11.1	10.9	10.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27.2	22.0	18.6	10.7	12.3	9.2	100.0
배 우 자	(318)	24.8	23.3	19.8	11.6	9.1	11.3	100.0
▣ 성 별 ▣								
여 성	(350)	24.9	22.9	20.3	11.4	9.7	10.9	100.0
남 성	(350)	27.4	22.3	18.0	10.9	12.0	9.4	100.0
▣ 거 주 지 별 ▣								
서울	(100)	27.0	15.0	28.0	4.0	12.0	14.0	100.0
부천	(100)	21.0	26.0	23.0	8.0	10.0	10.0	100.0
인천	(100)	36.0	17.0	14.0	10.0	14.0	9.0	100.0
대전	(100)	36.0	30.0	12.0	8.0	5.0	9.0	100.0
광주	(100)	24.0	19.0	17.0	9.0	21.0	10.0	100.0
대구	(100)	23.0	24.0	21.0	19.0	6.0	7.0	100.0
울산	(100)	16.0	25.0	19.0	20.0	8.0	12.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26.8	26.8	14.6	12.2	12.2	7.3	100.0
30 대	(262)	27.1	23.7	19.5	9.9	9.9	9.9	100.0
40 대	(276)	23.9	23.6	18.1	11.6	11.6	11.2	100.0
50 대 이상	(121)	28.9	16.5	22.3	12.4	10.7	9.1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31.8	22.1	16.2	9.7	11.0	9.1	100.0
4 년 ~ 5 년	(147)	23.1	27.2	19.7	13.6	6.1	10.2	100.0
6 년 ~ 10 년	(206)	25.2	20.9	22.8	9.2	12.1	9.7	100.0
11 년 ~ 15 년	(79)	21.5	17.7	25.3	13.9	13.9	7.6	100.0
15 년 이 상	(114)	27.2	23.7	11.4	11.4	12.3	14.0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29.2	25.7	17.7	8.8	10.6	8.0	100.0
3 명	(104)	25.0	24.0	17.3	17.3	9.6	6.7	100.0
4 명	(404)	25.0	21.8	21.0	9.9	11.4	10.9	100.0
5 명 이 상	(79)	29.1	20.3	13.9	12.7	10.1	13.9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27.1	22.5	15.4	12.1	12.1	10.8	100.0
블루 칼라	(164)	29.3	18.9	20.1	16.5	7.9	7.3	100.0
화이트 칼라	(146)	21.9	25.3	21.9	6.8	15.1	8.9	100.0
가 정 주 부	(141)	26.2	24.8	21.3	7.8	7.1	12.8	100.0
무 직 / 기 타	(9)	11.1	11.1	22.2	11.1	22.2	22.2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25.5	21.8	21.8	18.2	3.6	9.1	100.0
고 졸	(353)	30.6	17.3	17.8	11.6	11.6	11.0	100.0
대 재 이 상	(292)	20.9	29.1	20.2	9.2	11.3	9.2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음	(23)	30.4	21.7	13.0	13.0	17.4	4.3	100.0
없음	(677)	26.0	22.6	19.4	11.1	10.6	10.3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34.5	20.0	21.8	5.5	11.8	6.4	100.0
200 ~ 299만원	(205)	26.8	24.4	17.1	9.8	11.7	10.2	100.0
300 ~ 399만원	(198)	25.8	19.2	18.2	11.6	11.1	14.1	100.0
400만원 이상	(187)	20.9	25.7	20.9	15.5	9.1	6.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23.6	20.8	26.4	11.1	12.5	5.6	100.0
100 ~ 199만원	(187)	27.8	21.4	20.3	9.1	10.7	10.7	100.0
200 ~ 299만원	(179)	23.5	24.0	15.6	14.5	14.0	8.4	100.0
300만원 이상	(262)	27.5	22.9	18.7	10.3	8.4	12.2	100.0

【 표 20 】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에 대한 의견

[문 20] ○○님께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이 협력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기1	보기2	보기3	보기4	계
		%	%	%	%	
■ 전 체 ■	(700)	11.1	29.6	39.9	19.4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13.1	25.9	40.6	20.4	100.0
배 우 자	(318)	8.8	34.0	39.0	18.2	100.0
▣ 성 별 ▣						
여	(350)	8.9	33.7	39.4	18.0	100.0
남	(350)	13.4	25.4	40.3	20.9	100.0
▣ 거 주 지 별 ▣						
서부대로	(100)	10.0	21.0	50.0	19.0	100.0
개화산구천주변간	(100)	8.0	23.0	38.0	31.0	100.0
김포대로	(100)	6.0	33.0	39.0	22.0	100.0
의병대로	(100)	20.0	29.0	34.0	17.0	100.0
양촌읍	(100)	5.0	27.0	43.0	25.0	100.0
대곶면	(100)	9.0	39.0	44.0	8.0	100.0
월곶면	(100)	20.0	35.0	31.0	14.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12.2	29.3	48.8	9.8	100.0
30 대	(262)	10.3	28.2	37.0	24.4	100.0
40 대	(276)	11.2	29.0	43.8	15.9	100.0
50 대 이상	(121)	12.4	33.9	33.9	19.8	100.0
▣ 거 주 기 간 별 ▣						
3 년 이 하	(154)	10.4	33.1	35.7	20.8	100.0
4 년 ~ 5 년	(147)	6.1	27.2	49.7	17.0	100.0
6 년 ~ 10 년	(206)	10.2	26.2	40.8	22.8	100.0
11 년 ~ 15 년	(79)	19.0	36.0	30.4	12.7	100.0
15 년 이 상	(114)	14.9	28.1	37.7	19.3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14.2	28.3	45.1	12.4	100.0
3	(104)	9.6	35.6	32.7	22.1	100.0
4	(404)	10.6	29.2	40.8	19.3	100.0
5 명 이 상	(79)	11.4	25.3	36.7	26.6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10.8	28.3	41.7	19.2	100.0
블루칼라	(164)	12.2	32.9	36.0	18.9	100.0
화이트칼라	(146)	15.1	24.7	42.5	17.8	100.0
가정주부	(141)	6.4	33.3	38.3	22.0	100.0
무직 / 기타	(9)	11.1	22.2	44.4	22.2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14.5	47.3	23.6	14.5	100.0
고 졸	(353)	10.5	32.0	37.1	20.4	100.0
대 재 이 상	(292)	11.3	23.3	46.2	19.2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8.7	26.1	30.4	34.8	100.0
없 음	(677)	11.2	29.7	40.2	18.9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10.9	30.0	41.8	17.3	100.0
200 ~ 299만원	(205)	10.2	30.7	40.5	18.5	100.0
300 ~ 399만원	(198)	8.6	27.8	41.4	22.2	100.0
400만원 이상	(187)	15.0	29.9	36.4	18.7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6.9	30.6	43.1	19.4	100.0
100 ~ 199만원	(167)	10.2	31.0	41.2	17.6	100.0
200 ~ 299만원	(179)	14.0	24.6	44.1	17.3	100.0
300만원 이상	(262)	11.1	31.7	35.1	22.1	100.0

【 표 22 】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주정기관

[문 22] ○○님께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주관기관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해양수산부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인천광역시	기타			계
		%	%	%	%	%	%	%	%	
■ 전 체 ■	(700)	42.7	20.9	15.7	15.4	4.6	.4	.1	.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43.5	20.9	13.6	14.7	6.0	.8	.3	.3	100.0
배 우 자	(318)	41.8	20.8	18.2	16.4	2.8	.0	.0	.0	100.0
▣ 성 별 ▣										
여 성	(350)	43.7	20.3	17.4	15.4	3.1	.0	.0	.0	100.0
남 성	(350)	41.7	21.4	14.0	15.4	6.0	.9	.3	.3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50.0	13.0	25.0	10.0	.0	2.0	.0	.0	100.0
부 산	(100)	45.0	23.0	19.0	12.0	1.0	.0	.0	.0	100.0
대 구	(100)	56.0	22.0	14.0	7.0	1.0	.0	.0	.0	100.0
인 천	(100)	45.0	12.0	11.0	7.0	25.0	.0	.0	.0	100.0
광 주	(100)	45.0	10.0	24.0	16.0	2.0	1.0	1.0	1.0	100.0
대 전	(100)	21.0	29.0	4.0	46.0	.0	.0	.0	.0	100.0
울 산	(100)	37.0	37.0	13.0	10.0	3.0	.0	.0	.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39.0	24.4	7.3	19.5	9.8	.0	.0	.0	100.0
3 0 대	(252)	39.3	24.8	14.5	16.8	3.4	.8	.4	.0	100.0
4 0 대	(276)	46.4	17.4	17.4	13.8	4.7	.0	.0	.4	100.0
5 0 대 이상	(121)	43.0	19.0	17.4	14.9	5.0	.8	.0	.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44.2	17.5	16.2	15.6	5.2	.6	.0	.6	100.0
4 년 ~ 5 년	(147)	36.7	25.2	15.0	17.7	4.8	.7	.0	.0	100.0
6 년 ~ 10 년	(206)	44.2	18.4	15.5	15.5	5.3	.5	.5	.0	100.0
11 년 ~ 15 년	(79)	44.3	26.6	15.2	12.7	1.3	.0	.0	.0	100.0
15 년 이 상	(114)	44.7	20.2	16.7	14.0	4.4	.0	.0	.0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44.2	18.6	14.2	15.0	7.1	.9	.0	.0	100.0
3 명	(104)	37.5	22.1	14.4	19.2	6.7	.0	.0	.0	100.0
4 명	(404)	43.6	20.3	16.8	14.9	3.5	.5	.2	.2	100.0
5 명 이 상	(79)	43.0	25.3	13.9	13.9	3.8	.0	.0	.0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44.6	22.5	17.9	10.8	3.3	.8	.0	.0	100.0
블 루 칼 라	(164)	40.9	22.0	11.6	18.9	6.7	.0	.0	.0	100.0
화 이 트 칼 라	(146)	37.7	21.9	13.0	18.5	6.8	.7	.7	.7	100.0
가 정 주 부	(141)	46.8	16.3	19.9	14.9	2.1	.0	.0	.0	100.0
무 직 / 기 타	(9)	44.4	11.1	11.1	33.3	.0	.0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50.9	14.5	14.5	16.4	3.6	.0	.0	.0	100.0
고 졸	(353)	41.6	21.5	15.0	16.4	4.8	.6	.0	.0	100.0
대 재 이 상	(292)	42.5	21.2	16.8	14.0	4.5	.3	.3	.3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 음	(23)	34.8	30.4	8.7	17.4	8.7	.0	.0	.0	100.0
없 음	(677)	43.0	20.5	16.0	15.4	4.4	.4	.1	.1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55.5	16.4	11.8	12.7	3.6	.0	.0	.0	100.0
200 ~ 299만원	(205)	40.5	21.5	16.6	18.5	2.4	.0	.0	.5	100.0
300 ~ 399만원	(198)	39.9	21.7	17.2	17.2	3.0	.5	.5	.0	100.0
400만원 이상	(187)	40.6	21.9	15.5	11.8	9.1	1.1	.0	.0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43.1	16.7	13.9	20.8	5.6	.0	.0	.0	100.0
100 ~ 199만원	(197)	49.7	17.6	15.5	14.4	3.2	.0	.5	.0	100.0
200 ~ 299만원	(179)	36.9	25.7	15.6	16.8	3.9	.6	.0	.6	100.0
300만원 이상	(262)	42.4	21.0	16.4	13.7	5.7	.8	.0	.0	100.0

【 표 23 】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 추진시 전제 사항

[문 23]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우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대외정책 및 남한에 대한 태도 등 북한태도가 변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 지자체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계
		%	%	%	%	%	
■ 전 체 ■	(700)	36.7	24.1	18.9	14.1	6.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39.5	23.0	17.3	14.7	5.5	100.0
배 우 자	(318)	33.3	25.5	20.8	13.5	6.9	100.0
▣ 성 별 ▣							
여 성	(350)	35.4	24.6	20.0	13.1	6.9	100.0
남 성	(350)	38.0	23.7	17.7	15.1	5.4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36.0	23.0	21.0	15.0	5.0	100.0
부 산	(100)	34.0	27.0	25.0	5.0	9.0	100.0
대 구	(100)	41.0	24.0	11.0	13.0	11.0	100.0
인 천	(100)	38.0	21.0	20.0	18.0	3.0	100.0
광 주	(100)	38.0	23.0	12.0	24.0	3.0	100.0
대 전	(100)	26.0	31.0	25.0	13.0	5.0	100.0
울 산	(100)	44.0	20.0	18.0	11.0	7.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31.7	24.4	17.1	19.5	7.3	100.0
30 대	(262)	32.1	27.1	16.8	14.1	9.9	100.0
40 대	(276)	39.1	24.3	19.6	13.4	3.6	100.0
50 대 이상	(121)	43.0	17.4	22.3	14.0	3.3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33.1	24.7	19.5	18.2	4.5	100.0
4 년 ~ 5 년	(147)	36.1	23.1	22.4	11.6	6.8	100.0
6 년 ~ 10 년	(206)	33.0	26.2	20.9	12.1	7.8	100.0
11 년 ~ 15 년	(79)	40.5	24.1	15.2	13.9	6.3	100.0
15 년 이 상	(114)	46.5	21.1	12.3	15.8	4.4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40.7	20.4	19.5	14.2	5.3	100.0
3 명	(104)	39.4	26.9	19.2	11.5	2.9	100.0
4 명	(404)	35.9	24.3	19.1	13.6	7.2	100.0
5 명 이 상	(79)	31.6	25.3	16.5	20.3	6.3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36.7	21.7	19.2	15.8	6.7	100.0
블 루 칼 라	(164)	37.2	29.3	16.5	12.2	4.9	100.0
화 이 트 칼 라	(146)	32.9	26.7	20.5	15.1	4.8	100.0
가 정 주 부	(141)	39.7	19.9	19.9	12.1	8.5	100.0
무 직 / 기 타	(9)	44.4	22.2	11.1	22.2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32.7	27.3	25.5	14.5	.0	100.0
고 졸	(353)	42.2	19.8	17.6	12.5	7.9	100.0
대 졸 이 상	(292)	30.8	28.8	19.2	16.1	5.1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 음	(23)	30.4	13.0	21.7	13.0	21.7	100.0
없 음	(677)	36.9	24.5	18.8	14.2	5.6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39.1	19.1	22.7	14.5	4.5	100.0
200 ~ 299만원	(205)	38.0	25.4	16.6	12.2	7.8	100.0
300 ~ 399만원	(198)	36.9	25.3	15.7	16.2	6.1	100.0
400만원 이상	(187)	33.7	24.6	22.5	13.9	5.3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33.3	23.6	19.4	16.7	6.9	100.0
100 ~ 199만원	(187)	36.9	24.6	19.3	15.0	4.3	100.0
200 ~ 299만원	(179)	34.1	29.1	19.0	13.4	4.5	100.0
300만원 이상	(262)	39.3	20.6	18.3	13.4	8.4	100.0

【 표 24 】 북한관계 악화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 필요성

[문 24] 북한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6자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거나,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가 현재처럼 악화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도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	%	%	계
■ 전 체 ■	(700)	29.7	60.1	10.1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29.8	59.4	10.7	100.0
배 우 자	(318)	29.6	61.0	9.4	100.0
▣ 성 별 ▣					
여	(350)	30.6	60.3	9.1	100.0
남	(350)	28.9	60.0	11.1	100.0
▣ 거 주 지 별 ▣					
서울	(100)	24.0	63.0	13.0	100.0
부산	(100)	21.0	66.0	13.0	100.0
대구	(100)	11.0	80.0	9.0	100.0
인천	(100)	52.0	44.0	4.0	100.0
광주	(100)	32.0	62.0	6.0	100.0
대전	(100)	39.0	56.0	5.0	100.0
울산	(100)	29.0	50.0	21.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39.0	48.8	12.2	100.0
30 대	(262)	28.6	63.0	8.4	100.0
40 대	(276)	31.9	58.0	10.1	100.0
50 대 이상	(121)	24.0	62.8	13.2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29.9	55.2	14.9	100.0
4 년 ~ 5 년	(147)	28.6	66.0	5.4	100.0
6 년 ~ 10 년	(206)	31.1	60.7	8.3	100.0
11 년 ~ 15 년	(79)	25.3	64.6	10.1	100.0
15 년 이 상	(114)	31.6	55.3	13.2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37.2	55.8	7.1	100.0
3 명	(104)	25.0	59.6	15.4	100.0
4 명	(404)	29.5	60.6	9.9	100.0
5 명 이 상	(79)	26.6	64.6	8.9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27.1	62.9	10.0	100.0
블루칼라	(164)	33.5	54.9	11.6	100.0
화이트칼라	(146)	32.2	60.3	7.5	100.0
주부	(141)	27.0	61.7	11.3	100.0
기타 / 무직	(9)	33.3	55.6	11.1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16.4	72.7	10.9	100.0
고졸	(353)	32.0	58.4	9.6	100.0
대 재 학 이 상	(292)	29.5	59.9	10.6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음	(23)	39.1	47.8	13.0	100.0
없음	(677)	29.4	60.6	10.0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26.4	60.9	12.7	100.0
200 ~ 299만원	(205)	25.4	63.4	11.2	100.0
300 ~ 399만원	(198)	27.3	66.7	6.1	100.0
400만원 이상	(187)	39.0	49.2	11.8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25.0	65.3	9.7	100.0
100 ~ 199만원	(187)	29.9	61.0	9.1	100.0
200 ~ 299만원	(179)	26.5	62.0	9.5	100.0
300만원 이상	(262)	31.7	56.9	11.5	100.0

【 표 25 】 서해연안 해양명화공원 지정시 가장 큰 기대효과

[문 25]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명화공원을 지정하게 된다면, 가장 큰 기대효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	%	%	%	%	계
■ 전 체 ■	(700)	19.4	22.1	27.1	22.0	9.3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382)	20.2	21.5	25.1	24.1	9.2	100.0
배 우 자	(318)	18.6	23.0	29.6	19.5	9.4	100.0
▣ 성 별 ▣							
여 성	(350)	19.1	21.1	30.0	20.0	9.7	100.0
남 성	(350)	19.7	23.1	24.3	24.0	8.9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24.0	19.0	31.0	21.0	5.0	100.0
부천/김포/강화	(100)	23.0	21.0	23.0	24.0	9.0	100.0
대 전	(100)	18.0	27.0	21.0	26.0	8.0	100.0
인 천	(100)	14.0	16.0	42.0	24.0	4.0	100.0
논산/대전/천안	(100)	31.0	29.0	16.0	17.0	7.0	100.0
대 구	(100)	6.0	32.0	34.0	13.0	15.0	100.0
울 산	(100)	20.0	11.0	23.0	29.0	17.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12.2	29.3	31.7	14.6	12.2	100.0
3 0 대	(262)	18.3	22.5	24.0	23.7	11.5	100.0
4 0 대	(276)	21.4	21.7	27.9	22.5	6.5	100.0
5 0 대 이상	(121)	19.8	19.8	30.6	19.8	9.9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18.8	22.1	29.2	20.1	9.7	100.0
4 년 ~ 5 년	(147)	15.6	26.5	29.3	19.0	9.5	100.0
6 년 ~ 10 년	(206)	21.4	20.9	30.1	20.4	7.3	100.0
11 년 ~ 15 년	(79)	22.8	15.2	27.8	25.3	8.9	100.0
15 년 이 상	(114)	19.3	23.7	15.8	28.9	12.3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15.0	17.7	31.9	26.5	8.8	100.0
3 명	(104)	20.2	24.0	29.8	13.5	12.5	100.0
4 명	(404)	21.5	22.8	25.2	21.5	8.9	100.0
5 명 이 상	(79)	13.9	22.8	26.6	29.1	7.6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21.7	21.7	30.0	20.8	5.8	100.0
블루칼라	(164)	21.3	23.2	25.0	17.7	12.8	100.0
화이트칼라	(146)	15.8	18.5	26.7	29.5	9.6	100.0
가정주부	(141)	17.0	26.2	25.5	19.9	11.3	100.0
무직 / 기타	(9)	22.2	11.1	22.2	44.4	.0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18.2	21.8	32.7	20.0	7.3	100.0
고 졸	(353)	20.7	23.2	24.6	21.5	9.9	100.0
대 졸 이 상	(292)	18.2	20.9	29.1	22.9	8.9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음	(23)	8.7	21.7	21.7	30.4	17.4	100.0
없음	(677)	19.8	22.2	27.3	21.7	9.0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19.1	26.2	21.8	19.1	11.8	100.0
200 ~ 299만원	(205)	21.0	23.9	24.9	19.0	11.2	100.0
300 ~ 399만원	(198)	19.7	22.7	26.8	22.2	8.6	100.0
400만원 이상	(187)	17.6	16.0	33.2	26.7	6.4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12.5	23.6	30.6	19.4	13.9	100.0
100 ~ 199만원	(187)	21.4	24.6	26.2	19.8	8.0	100.0
200 ~ 299만원	(179)	21.8	19.6	25.7	22.3	10.6	100.0
300만원 이상	(262)	18.3	21.8	27.9	24.0	8.0	100.0

【 표 26 】 서해연안 경제협력이 접경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문 26] 서해연안의 접경지역은 개성공단 운영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성~김포~인천광역시(송도, 영종도)로 연결되는 접경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운기능 강화를 위한 준설과 항만건설 등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반면에 보호가치가 높은 접경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수산자원 포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	%	%	%	계
■ 전 체 ■	(700)	32.4	49.1	15.6	2.9	100.0
▣ 세대주 여부별 ▣						
세 대 주	(382)	34.3	48.2	14.7	2.9	100.0
배 우 자	(318)	30.2	50.3	16.7	2.8	100.0
▣ 성 별 ▣						
여	(350)	29.4	51.4	16.0	3.1	100.0
남	(350)	35.4	46.9	15.1	2.6	100.0
▣ 거 주 지 별 ▣						
서울	(100)	41.0	42.0	16.0	1.0	100.0
부산	(100)	30.0	50.0	16.0	4.0	100.0
대구	(100)	39.0	42.0	16.0	3.0	100.0
인천	(100)	42.0	38.0	17.0	3.0	100.0
광주	(100)	29.0	54.0	17.0	.0	100.0
대전	(100)	29.0	61.0	7.0	3.0	100.0
울산	(100)	17.0	57.0	20.0	6.0	100.0
▣ 연 령 별 ▣						
20 대	(41)	48.8	36.6	14.6	.0	100.0
30 대	(262)	30.5	52.7	14.1	2.7	100.0
40 대	(276)	28.6	50.0	17.4	4.0	100.0
50 대 이상	(121)	39.7	43.8	14.9	1.7	100.0
▣ 거 주 기 간 별 ▣						
3 년 이 하	(154)	35.1	44.8	16.9	3.2	100.0
4 년 ~ 5 년	(147)	32.0	54.4	11.6	2.0	100.0
6 년 ~ 10 년	(206)	35.0	46.6	15.0	3.4	100.0
11 년 ~ 15 년	(79)	26.6	50.6	19.0	3.8	100.0
15 년 이 상	(114)	28.9	51.8	17.5	1.8	100.0
▣ 총 가 족 수 별 ▣						
2 명 이 하	(113)	35.4	47.8	13.3	3.5	100.0
3	(104)	34.6	50.0	13.5	1.9	100.0
4	(404)	30.2	49.3	17.1	3.5	100.0
5 명 이 상	(79)	36.7	49.4	13.9	.0	100.0
▣ 직 업 별 ▣						
자영업	(240)	38.3	44.2	13.8	3.8	100.0
블루칼라	(164)	26.8	56.7	13.4	3.0	100.0
화이트칼라	(146)	32.2	45.9	19.9	2.1	100.0
가정주부	(141)	29.1	52.5	16.3	2.1	100.0
무직 / 기타	(9)	33.3	44.4	22.2	.0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 하	(55)	18.2	61.8	16.4	3.6	100.0
고 졸	(353)	31.7	48.2	16.4	3.7	100.0
대 재 이 상	(292)	36.0	47.9	14.4	1.7	100.0
▣ 시민단체가입여부 ▣						
있음	(23)	56.5	17.4	26.1	.0	100.0
없음	(677)	31.6	50.2	15.2	3.0	100.0
▣ 가 구 소 득 별 ▣						
200만원 미만	(110)	30.0	50.9	14.5	4.5	100.0
200 ~ 299만원	(205)	34.6	50.2	13.7	1.5	100.0
300 ~ 399만원	(198)	30.8	50.5	15.7	3.0	100.0
400만원 이상	(187)	33.2	45.5	18.2	3.2	100.0
▣ 개 인 소 득 별 ▣						
100만원 미만	(72)	41.7	43.1	13.9	1.4	100.0
100 ~ 199만원	(187)	29.9	50.8	16.0	3.2	100.0
200 ~ 299만원	(179)	33.0	50.8	14.0	2.2	100.0
300만원 이상	(262)	31.3	48.5	16.8	3.4	100.0

【 표 29 】 유휴/잉여 연구기자재를 북한연구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

[문 29] 남북한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첨단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기존의 구형 기자재(고장 없고 사용이 가능한)가 재고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잉여 연구기자재를 북한연구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에 대해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적절한 협력방안이 아니며 실현가능성도 낮다	적절한 협력방안은 아니지만 실현가능성이 높다	좋은 협력방안이나 실현가능성은 낮다	좋은 협력방안이며 실현가능성도 높다	계
		%	%	%	%	
■ 전 체 ■	(700)	13.0	31.1	36.1	19.7	100.0
▣ 세대주 여부 ▣						
세 대 주 자	(382)	11.0	31.2	37.7	20.2	100.0
배 우 자	(318)	15.4	31.1	34.3	19.2	100.0
▣ 성 별 ▣						
여 성	(350)	15.4	30.3	36.0	18.3	100.0
남 성	(350)	10.6	32.0	36.3	21.1	100.0
▣ 거 주 지 별 ▣						
서 울	(100)	15.0	22.0	45.0	18.0	100.0
부 산	(100)	12.0	21.0	34.0	33.0	100.0
대 구	(100)	17.0	23.0	28.0	32.0	100.0
인 천	(100)	21.0	43.0	33.0	3.0	100.0
광 주	(100)	3.0	29.0	43.0	25.0	100.0
대 전	(100)	11.0	37.0	35.0	17.0	100.0
울 산	(100)	12.0	43.0	35.0	10.0	100.0
▣ 연 령 별 ▣						
2 0 대	(41)	7.3	43.9	39.0	9.8	100.0
3 0 대	(262)	10.7	28.2	34.7	26.3	100.0
4 0 대	(276)	14.9	33.3	36.6	15.2	100.0
5 0 대 이 상	(121)	15.7	28.1	37.2	19.0	100.0
▣ 거 주 기 간 ▣						
3 년 이 하	(154)	12.3	31.8	38.3	17.5	100.0
4 년 ~ 5 년	(147)	8.2	36.7	33.3	21.8	100.0
6 년 ~ 10 년	(206)	12.1	29.1	40.3	18.4	100.0
11 년 ~ 15 년	(79)	19.0	36.7	27.8	16.5	100.0
15 년 이 상	(114)	17.5	22.8	35.1	24.6	100.0
▣ 총 가 족 수 ▣						
2 명 이 하	(113)	18.6	25.7	44.2	11.5	100.0
3 명	(104)	7.7	36.5	42.3	13.5	100.0
4 명	(404)	12.9	32.2	32.7	22.3	100.0
5 명 이 상	(79)	12.7	26.6	34.2	26.6	100.0
▣ 직 업 별 ▣						
자 영 업	(240)	12.5	32.1	38.3	17.1	100.0
블 루 칼 라	(164)	11.6	31.1	38.4	18.9	100.0
화 이 트 칼 라	(146)	13.0	31.5	34.9	20.5	100.0
가 정 주 부	(141)	14.2	29.8	31.9	24.1	100.0
무 직 / 기 타	(9)	33.3	22.2	22.2	22.2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5)	10.9	30.9	49.1	9.1	100.0
고 졸	(353)	14.7	31.2	34.0	20.1	100.0
대 재 이 상	(292)	11.3	31.2	36.3	21.2	100.0
▣ 시민단체가입 ▣						
있 음	(23)	8.7	39.1	30.4	21.7	100.0
없 음	(677)	13.1	30.9	36.3	19.6	100.0
▣ 가 구 소 득 ▣						
200만원 미만	(110)	15.5	24.5	44.5	15.5	100.0
200 ~ 299만원	(205)	9.3	32.7	34.6	23.4	100.0
300 ~ 399만원	(198)	11.6	33.3	35.4	19.7	100.0
400만원 이상	(187)	17.1	31.0	33.7	18.2	100.0
▣ 개 인 소 득 ▣						
100만원 미만	(72)	12.5	27.8	40.3	19.4	100.0
100 ~ 199만원	(187)	12.3	33.7	36.9	17.1	100.0
200 ~ 299만원	(179)	10.6	29.1	40.8	19.6	100.0
300만원 이상	(262)	15.3	31.7	31.3	21.8	100.0

부록 E

국제자문단회의 초청편지

1. IUCN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Date: 25 April, 2006
To: Mr. David SHEPPARD
Head, Programme on Protected Areas,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
Rue Mauverney 28 Gland 1196, Switzerland
Fax: +41-22-999-0025

Subject: **Invitation to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Seoul, the Republic of Korea**

Dear Mr. David SHEPPARD

It is our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and invite IUCN, as an active participant of IAG of MPP. W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which develops national policies on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fisheries,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lution control,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and coastal areas, would like to cordially request you to recommend a representative from IUCN who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The IAG was proposed and mutually agreed to establish during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Sep 2005.

1

Background of the MPP Initiative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precious marin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because the region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owever,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threaten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foreign fishing vessels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supposed to be additionally affected by the demand of land-based developmen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gard, in 2003, KMI initially suggested a framework,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and its related practical initiative, a Marine Peace Park (MPP) in order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is region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4,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of ROK proactively review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as appropriate tools to address relevant issues o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Initiativ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PCSD report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to the President of ROK. In turn,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in 2005.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 basic principal of the establishment of MPP of KOREA is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under the close cooperation with and supports from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IAG will reinforce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The Main Goals of the Activities of IAG:

- To build a practic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for the MPP initiative,
-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ROK and DPRK through supports from the members of IAG,
-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and give appropriate consultations to the MPP initiative, as necessary
- To obtain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the conservation from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transboundary area.

Main agenda and detailed activities of the workshop would be referred in the Appendix. The IAG meeting participants will be informed of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at a later stage.

KMI hopes that the expert of your organization will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share precious experiences and invaluable insights for new challenges ahead of us.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in advance.

Yours Faithfully,

J. H. Lee

Jeong- Hwan, Lee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NOWPAP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Date: 25 April, 2006
To: Dr. Alexander Tkalin
UNE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5-5 Ushijimashin-machi Toyama City
930-0856 Japan
Fax: +81-76-444-2780

Subject: **Invitation to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Dr. Alexander Tkalin

It is our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and invite NOWPAP, as an active participant of IAG of MPP. W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which develops national policies on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fisheries,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lution control,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and coastal areas, would like to cordially request you to recommend a representative from NOWPAP who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The IAG was proposed and mutually agreed to establish during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Sep 2005.

1

Background of the MPP Initiative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precious marin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because the region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owever,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threaten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foreign fishing vessels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supposed to be additionally affected by the demand of land-based developmen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gard, in 2003, KMI initially suggested a framework,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and its related practical initiative, a Marine Peace Park (MPP) in order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is region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4,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of ROK proactively review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as appropriate tools to address relevant issues o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Initiativ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PCSD report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to the President of ROK. In turn,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in 2005.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 basic principal of the establishment of MPP of KOREA is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under the close cooperation with and supports from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IAG will reinforce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The Main Goals of the Activities of IAG:

- To build a practic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for the MPP initiative,
-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ROK and DPRK through supports from the members of IAG,
-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and give appropriate consultations to the MPP initiative, as necessary
- To obtain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the conservation from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transboundary area.

Main agenda and detailed activities of the workshop would be referred in the Appendix. The IAG meeting participants will be informed of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at a later stage.

KMI hopes that the expert of your organization will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share precious experiences and invaluable insights for new challenges ahead of us.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in advance.

Yours Faithfully,

J. H. Lee

Jeong- Hwan, Lee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UNESCO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Date: 25 April, 2006

To: Dr. Natarajan ISHWARAN
Director,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Secretary,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
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Fax: +33-1-45-68-58-04

Subject: **Invitation to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Seoul, the Republic of Korea**

Dear Dr. Natarajan ISHWARAN

It is our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and invite UNESCO, as an active participant of IAG of MPP. W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which develops national policies on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fisheries,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lution control,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and coastal areas, would like to cordially request you to recommend a representative from UNESCO who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The IAG was proposed and mutually agreed to establish during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Sep 2005.

1

Background of the MPP Initiative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precious marin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because the region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owever,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threaten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foreign fishing vessels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supposed to be additionally affected by the demand of land-based developmen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gard, in 2003, KMI initially suggested a framework,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and its related practical initiative, a Marine Peace Park (MPP) in order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is region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4,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of ROK proactively review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as appropriate tools to address relevant issues o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Initiativ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PCSD report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to the President of ROK. In turn,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in 2005.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 basic principal of the establishment of MPP of KOREA is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under the close cooperation with and supports from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IAG will reinforce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The Main Goals of the Activities of IAG:

- To build a practic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for the MPP initiative,
-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ROK and DPRK through supports from the members of IAG,
-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and give appropriate consultations to the MPP initiative, as necessary
- To obtain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the conservation from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transboundary area.

Main agenda and detailed activities of the workshop would be referred in the Appendix. The IAG meeting participants will be informed of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at a later stage.

KMI hopes that the expert of your organization will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share precious experiences and invaluable insights for new challenges ahead of us.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in ad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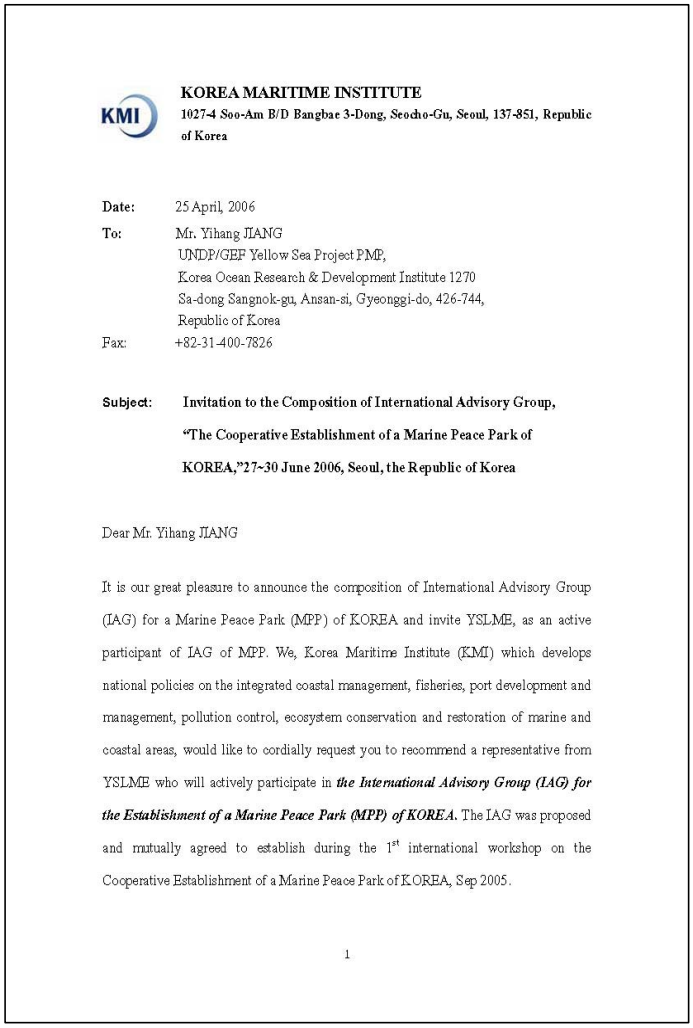
Yours Faithfully,

J. H. Lee

Jeong- Hwan, Lee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YSLME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Date: 25 April, 2006

To: Mr. Yihang JIANG
UNDP/GEF Yellow Sea Project PMP,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1270
Sa-dong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426-744,
Republic of Korea
Fax: +82-31-400-7826

Subject: **Invitation to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Seoul, the Republic of Korea**

Dear Mr. Yihang JIANG

It is our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and invite YSLME, as an active participant of IAG of MPP. W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which develops national policies on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fisheries,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lution control,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and coastal areas, would like to cordially request you to recommend a representative from YSLME who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The IAG was proposed and mutually agreed to establish during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Sep 2005.

1

Background of the MPP Initiative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precious marin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because the region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owever,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threaten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foreign fishing vessels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supposed to be additionally affected by the demand of land-based developmen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gard, in 2003, KMI initially suggested a framework,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and its related practical initiative, a Marine Peace Park (MPP) in order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is region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4,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of ROK proactively review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as appropriate tools to address relevant issues o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Initiativ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PCSD report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to the President of ROK. In turn,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in 2005.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 basic principal of the establishment of MPP of KOREA is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under the close cooperation with and supports from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IAG will reinforce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The Main Goals of the Activities of IAG:

- To build a practic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for the MPP initiative,
-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ROK and DPRK through supports from the members of IAG,
-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and give appropriate consultations to the MPP initiative, as necessary
- To obtain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the conservation from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transboundary area.

Main agenda and detailed activities of the workshop would be referred in the Appendix. The IAG meeting participants will be informed of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at a later stage.

KMI hopes that the expert of your organization will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share precious experiences and invaluable insights for new challenges ahead of us.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in ad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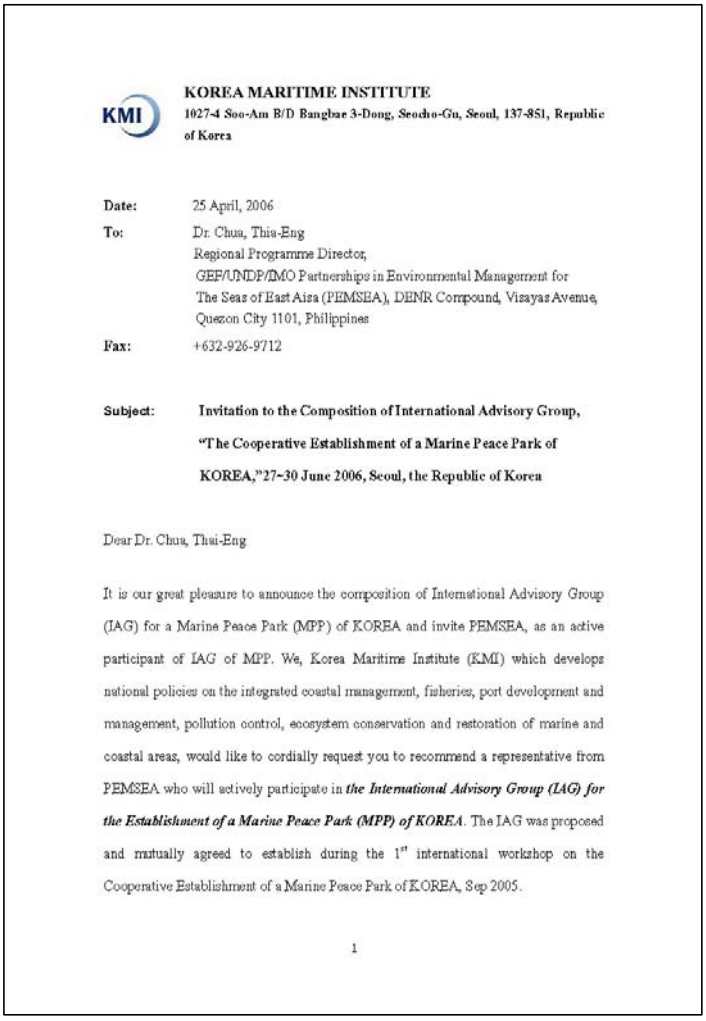
Yours Faithfully,

J. H. Lee

Jeong- Hwan, Lee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5. PEMSEA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Date: 25 April, 2006

To: Dr. Chua, Thia-Eng
Regional Programme Director,
GEF/UNDP/IMO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DENR Compound, Visayas Avenue,
Quezon City 1101, Philippines

Fax: +632-926-9712

Subject: **Invitation to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Seoul, the Republic of Korea**

Dear Dr. Chua, Thai-Eng

It is our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and invite PEMSEA, as an active participant of IAG of MPP. W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which develops national policies on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fisheries,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lution control,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and coastal areas, would like to cordially request you to recommend a representative from PEMSEA who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The IAG was proposed and mutually agreed to establish during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Sep 2005.

1

Background of the MPP Initiative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precious marin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because the region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owever,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threaten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foreign fishing vessels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supposed to be additionally affected by the demand of land-based developmen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gard, in 2003, KMI initially suggested a framework,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and its related practical initiative, a Marine Peace Park (MPP) in order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is region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4,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of ROK proactively review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as appropriate tools to address relevant issues o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Initiativ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PCSD reported the COMPAS and MPP initiative to the President of ROK. In turn,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in 2005.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 basic principal of the establishment of MPP of KOREA is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under the close cooperation with and supports from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IAG will reinforce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The Main Goals of the Activities of IAG:

- To build a practic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for the MPP initiative,
-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ROK and DPRK through supports from the members of IAG,
-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and give appropriate consultations to the MPP initiative, as necessary
- To obtain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the conservation from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transboundary area.

Main agenda and detailed activities of the workshop would be referred in the Appendix. The IAG meeting participants will be informed of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at a later stage.

KMI hopes that the expert of your organization will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share precious experiences and invaluable insights for new challenges ahead of us.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in advance.

Yours Faithfully,

J. H.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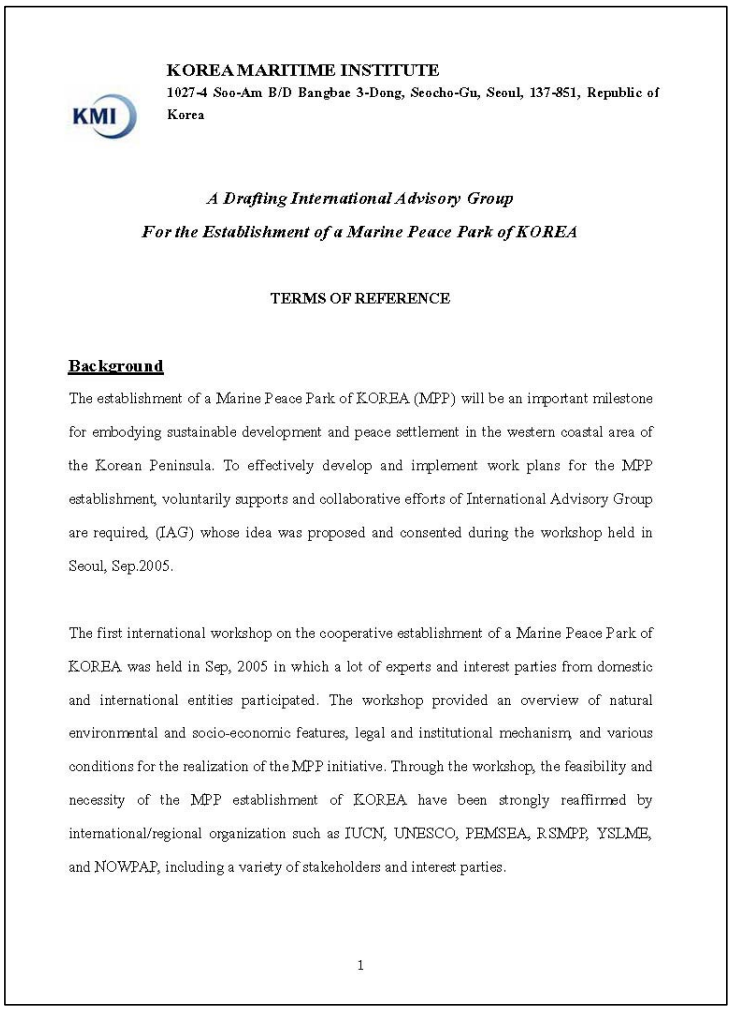
Jeong- Hwan, Lee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부록 F

국제자문단회의 의향서(Terms of Reference)

1. 초안 1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A Draftin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TERMS OF REFERENCE

Background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MPP) will be an important milestone for embody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settlement in the western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o effectively develop and implement work plans for the MPP establishment, voluntarily supports and collaborative efforts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are required, (IAG) whose idea was proposed and consented during the workshop held in Seoul, Sep.2005.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was held in Sep, 2005 in which a lot of experts and interest partie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tities participated. The workshop provided an overview of natur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and various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PP initiative. Through the workshop,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MPP establishment of KOREA have been strongly reaffirmed by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 such as IUCN, UNESCO, PEMSEA, RSMPP, YSLME, and NOWPAP, including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interest parties.

1

Overall Objectives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T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long-term ensuring **PROSPERITY** in the both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nd entire Korean Peninsula. The principal mechanism of the MPP initiative is to establish the firm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It is believed that a successful internation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will reinforce the national dialogue and further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between the two Koreas.

With formulating IAG,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can share their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with Korean people. We believe that IAG will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about the need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Specific Activities

In the first IAG meeting which will be hel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n 27~30 June 2006. After the successful launching of IAG, members of IAG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activities.

- Share the achievement and experience of the MPP initiative with other members, address constraints and weakness, and discuss a variety of solutions- political, legal, economic, financial aspects.
- Share collectiv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other members and build trust & cooperation in order to devote to the Korean Peninsula's peace promo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Consolidate the above analysis and outputs into the IAG operating mechanism and discussing the agenda for the next IAG meeting.

In the 1st IAG meeting, the following activities will be added in the above-mentioned activities.

- Formulate vision, mission, and goals of the IAG
- To build institutional IAG, followings should be clearly delineated:
  A. Objectives of the IAG
  B. Scope of activities and membership
  C. Functions and roles
  D. Operational procedures and methodology
  E. The number of plenary meetings per year

Drafting Group Membership

The IAG will be initially composed of members, the representative form IUCN, UNESCO, PEMSEA, YSLME, and NOWPAP whose expertise is drawn from the natural, social, and economic sciences. IAG membership will be expanded through the consensus among all existing members, if needed. The IAG will carry out its work in consultation with the full range of stakeholders by suggesting effective actions that need to be taken to ensure the MPP establishment and to promot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Drafting Group Operation

KMI will provide the IAG with operational support to enable the group to carry out their tasks. The IAG report will reflect the opinion of the IAG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views of the KMI or its members, or any organizations with which individual members of the IAG may be affiliated.

2. 초안 2(1차 국제자문단회의 논의내용 반영)

MPP KOREA
Protection, Peace & Prosperity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NOWPAP UNEP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DP Yellow Sea GEF | KMI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raft Terms of Reference

Background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will be an important mileston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settlement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held in Seoul, September 2005, provided an overview of natur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various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PP initiativ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MPP establishment in Korea have been strongly reaffirmed by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IUCN, NOWPAP, PEMSEA, UNESCO, RSMPP, and YSLME as well as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interest parties who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Considering the transboundary character of the MPP,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would facilitate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work plans for the MPP establishment, as proposed and consented during the workshop.

1

Overall Objectives of the MPP Initiative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T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long-term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The principal mechanism of the MPP initiative is a firm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uccessful international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would reinforce b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 on the MPP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e IAG would provide a venue for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the Marine Peace Park with Korean People. We believe that the IAG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peace, protection, and prosperity of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The Vision of the IAG

The IAG is to provide advices and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Peace Park between DPRK and ROK, and to foster bilateral and international dialogues and cooperation to support the MPP initiative.

Objectives of the IAG

The IAG will accomplish following objectives:

(a) To assist understanding and sharing of the overall goals of the MPP initiative

(b) To provide technical advices and guidanc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PP initiative

(c)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and to promote knowledge and project networking

(d)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wareness among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MPP initiative

Functions and Roles of the IAG

The IAG's specific functions and roles are to:

(a) provide strategic advic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PP initiative

(b) promote informal consultations on the MPP initiative through existing mechanisms

(c) draw attention on the MPP initiative among international entities

(d) identify appropriate expertise (legal, institu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e) identify relevant processes that may provide technical backstopping to the MPP initiative

(f) review progress and products, and to provide advices on how to adapt the MPP implementation strategy accordingly

(g) identify alternative approaches to overcome potential difficul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PP initiative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IAG

The IAG will be operated with following mechanisms;

1. **Secretariat**
   - The MPP project team of KMI will act as the IAG secretariat to arrange and serve meetings of the IAG
2. **Membership**
   - The nomination of new members will be considered by the IAG secretariat and all IAG members

3. Meeting

- Once per year, preferably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the annual report
- Meeting venue and date will be decided through the teleconference to maximize the participation
- Expenses will be covered by the secretariat on needs basis

4. Communication

- Establish an e-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KMI and the IAG members, if necessary,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further collaboration on the progress of the MPP implementation
- The secretariat jointly prepares communication on behalf of the IAG

부록 G

기구별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임명 관련 수신메일

○ NOWPAP- IAG 대표자 임명

Dear Jessie,

Thanks a lot for your message and fax signed by Jeong-Hwan Lee, KMI President.
Regarding your questions.

1. Our Scientific Affairs Officer, Dr. (Ms.) Jeung Sook Park, will represent NOWPAP in the IAG. She has attended the Workshop last September and she knows the issue.

2. She will also most probably attend the first IAG meeting in June 2006.

3. We will provide our comments regarding the draft TOR which you sent.

Thanks again for inviting NOWPAP to participate in the MPP project and its IAG.

Truly yours, Alex

Dr. Alexander TKALIN
Coordinator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of UNEP
Postal address: NOWPAP Regional Coordinating Unit
5-5 Ushijimashin-machi, Toyama 930-0856, Japan
Phone: (81-76)-444-1611, Fax: (81-76)-444-2780
E-mail: Alexander.Tkalin@nowpap.org
Http:// www.nowpap.org

○ UNSECO- IAG 대표자 임명

--- Original Message -----
From: Ishwaran, Natarajan
To: Korean MAB National Committee ; Han, Qunli
Cc: Arico, Salvatore ; Schaaf, Thomas
Sent: Wednesday, May 10, 2006 7:41 PM

Subject: R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ear Shim

I apologise for the delay on this matter. After consultations with my colleagues here, and subject to the agreement of Qunli, Salvator Arico from my Division is willing to represent us at the meeting organized by Korean Maritime Institute. We will be grateful for the Institute covering Mr. Arico's expnses (travel and expenses in ROK).

Mr. Arico, or Toti as well call him, is a marine ecologist and co-ordinates all our work on biodiversity issues including UNESCO relationships with the CBD Secretariat as well as some aspects of our work with UNEP. He is also our focal point for developing a programme of co-operation with IOC/UNESCO on marine biodiversity, genetics of marine diversity of deep sea-beds and protected areas in the ocean including those in the high seas beyond national EEZs. He will be ideal participant for this event and can connect the outcome of the meeting to many emerging initiatives in UNESCO and with some our important partners including UNU and UNEP.

Best regards

Ish

From: Suk-kyung SHIM [mailto:skshim@unesco.or.kr]
Sent: 03 May 2006 02:20
To: Ishwaran, Natarajan; Han, Qunli
Subject: R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 Original Message -----
From: Suk-kyung SHIM
To: Ishwaran N. ; Qunli Han
Sent: Wednesday, May 03, 2006 9:10 AM
Subject: Fw: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ear Ish and Qunli,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sent the e-mail message at below to you, but it seems that the Institute's e-mail could not get through to UNESCO's e-mail system again. Therefore, I assist to send the message to you. I heard that the economic airticket and accommodation will be funded by the Institute.

With my warm regards,

Suk-kyung Shim

○ IUCN- IAG 대표자 임명

Dear Jessie,

Greetings from the IUCN Asia Regional Office in Bangkok.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Dr. Trevor Sandwith will represent IUCN at the First IAG Meeting. He is the Deputy Chair of the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The following are his contact details. I would be grateful if you please share relevant information the meeting directly with Dr. Trevor.

Trevor Sandwith

Co-ordinator: Cape Action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Deputy Chair: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Tel: +27 (0)21 7998790
Fax: +27 (0)21 7973475
Mobile: +27(0) 82 3212747
e-mail: trevor@capeaction.org.za

I would also like to request you to extend all possible assistance to facilitate Dr. Trevor's participation at the Meeting. Regards.

Zakir

Dr. Zakir Hussain
Director, Constituency
IUCN Asia Region

63 Soi 39, Sukhumvit,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2 662 4308
Mobile: 661 844 8732
Fax: 662 662 4388

○ YSLME- IAG 대표자 임명

Dear Jessie,

This is to inform you that I will arrive the hotel tomorrow (27 July) morning, and will stay one night in the hotel only. Please make necessary arrangement adcordingly.

Regards,
Yihang

Yihang Jiang
Project Manager
UNDP/GEF Yellow Sea Project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R. Korea
Tel: (82-31) 400 7825
Fax: (82-31) 400 7826
email: yihang@yslme.org
yihang.jiang@undp.org
homepage: www.yslme.org

From: Jessie Lee [mailto:jessie@kmi.re.kr]
Sent: 2006 06 08 12:21
To: yihang@yslme.org; junghwa@yslme.org
Cc: jychoi@kmi.re.kr; chj1013@kmi.re.kr; shin@kmi.re.kr; wkchang@kmi.re.kr; jhnam@kmi.re.kr
Subject: Logistics information for the 1st IAG Meeting

Dear Mr. Yiang Jiang

Here below you find logistic information for the 1st IAG Meeting (27 June ~ 29 June). During the meeting, your accommodations and meals will be covered by Korea Maritime Institute.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feel free to contact us.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Seoul

With warm regards
Jessie Lee

○ IUCN- IAG 대표자 변경 요청

Dear Jessie

Sorry it has taken me so long to respond. I have made really superficial changes, mainly to make some language clear. The rest of this is fine. I have copied Peter Shadie who has just moved to Thailand for IUCN. It is possible that he will be able to participate more directly on behalf of IUCN, although I will remain available from the Transboundary Conservation Task Force to support the process technically.

I will ask Peter to introduce himself and his new role.

With best wishes

Trevor

Trevor Sandwith

Co-ordinator: Cape Action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Deputy Chair: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Tel: +27 (0)21 7998790

Fax: +27 (0)21 7973475
Mobile: +27(0) 82 3212747
e-mail: trevor@capeaction.org.za

○ IUCN- IAG 대표자 변경

Dear Jessie,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my slow response to you. Since returning from our two weeks in Korea I have very busy and unable to get to the bottom of my emails! We also greatly enjoye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you and KMI colleagues. Our visit to Korea was extremely productive – thank you for the kind welcome extended to Mr Thong and myself. I have copied this to Mr Nam to thank him also for organising the meeting and his hospitality.

I will arrange an updated letter from IUCN along the lines you have requested and send it to you. We agreed it makes more sense for me to become the IUCN representative on the IAG but we do hope to keep Trevor posted on developments and seek his input whenever possible.

Best regards

Peter

Peter Shadie

Co-ordinator Regional Protected Areas Programme

IUCN Asia Regional Office

63 Sukhumvit Soi 39 (Prompong)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 66 (0)2 662 4029 ext 302. Fax: + 66 (0)2 662 4387

Mobile: + 66 (0)81 373 1020. Email: shadie@iucnt.org

부록 H

기구별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임명 공식편지

1. IUCN



Asia Regional Office

63 Sukhumvit 39 Soi Prompong
Sukhumvit Road, Klongton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2) 662 4029
+(662) 662 4031 - 33 (Auto)
Fax: +(662) 662 4388, 662 4387
E-mail: iucn@iucnt.org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Ms.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 Coastal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1027-4 Soo-Am B/D 3-Dong,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13 November 2006

Dear Ms. Le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I understand that you were able to meet with Mr. Peter Shadie, Coordinator of Asia's Protected Areas Programme during his recent visit to Seoul.

Given Mr. Trevor Sandwith's distance from Korea (he is based in Cape Town, South Africa) we would like to nominate Mr. Shadie as representative of IUCN at the above-mentioned Advisory Group.

The contact details for Mr. Shadie are the following

Peter Shadie
Coordinator
Regional Protected Areas Programme, Asia
63 Sukhumvit Soi 39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 2 662 4029 ext. 302
Fax:+66 2 662 4387
Email: shadie@iucnt.org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IUCN input to this important initiative.

Yours sincerely,

Ms. Aban Marker Kabraji
Regional Director
IUCN Asia Regional Office

Asia Regional Sub-Office: 1, Bath Island Road, Karachi 75530, Pakistan. Tel.: ++92 21 586 1540/41/42; Fax:++92 21 587 0287
Headquarters: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 22 999 0000; Fax: ++41 22 999 0002; E-mail: mail@iucn.org

World Headquarters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0)22 999 00 00/01
Fax: +41(0)22 999 00 02
E-mail: mail@hq.iucn.org
www: http://iucn.org/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Ms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 Coastal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1027-4 Soo-Am B/D 3-Dong,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15 June 2006

Dear Ms Le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We have the pleasure of nominating Mr Trevor Sandwith, IUCN WCPA Deputy Chair and Leader of the IUCN WCPA Transboundary and Protected Areas Task Force as representative of IUCN and WCPA at the above-mentioned Advisory Group.

The contact details for Mr Sandwith are the following

Mr Trevor SANDWITH
Project Coordinator
IUCN WCPA Deputy Chair
CAPE Action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Private Bag X7
Claremont
Western Cape 7735
South Africa
Tel: ++27 (21) 799 8790
Fax: ++27 (21) 797 3475
Email: trevor@capeaction.org.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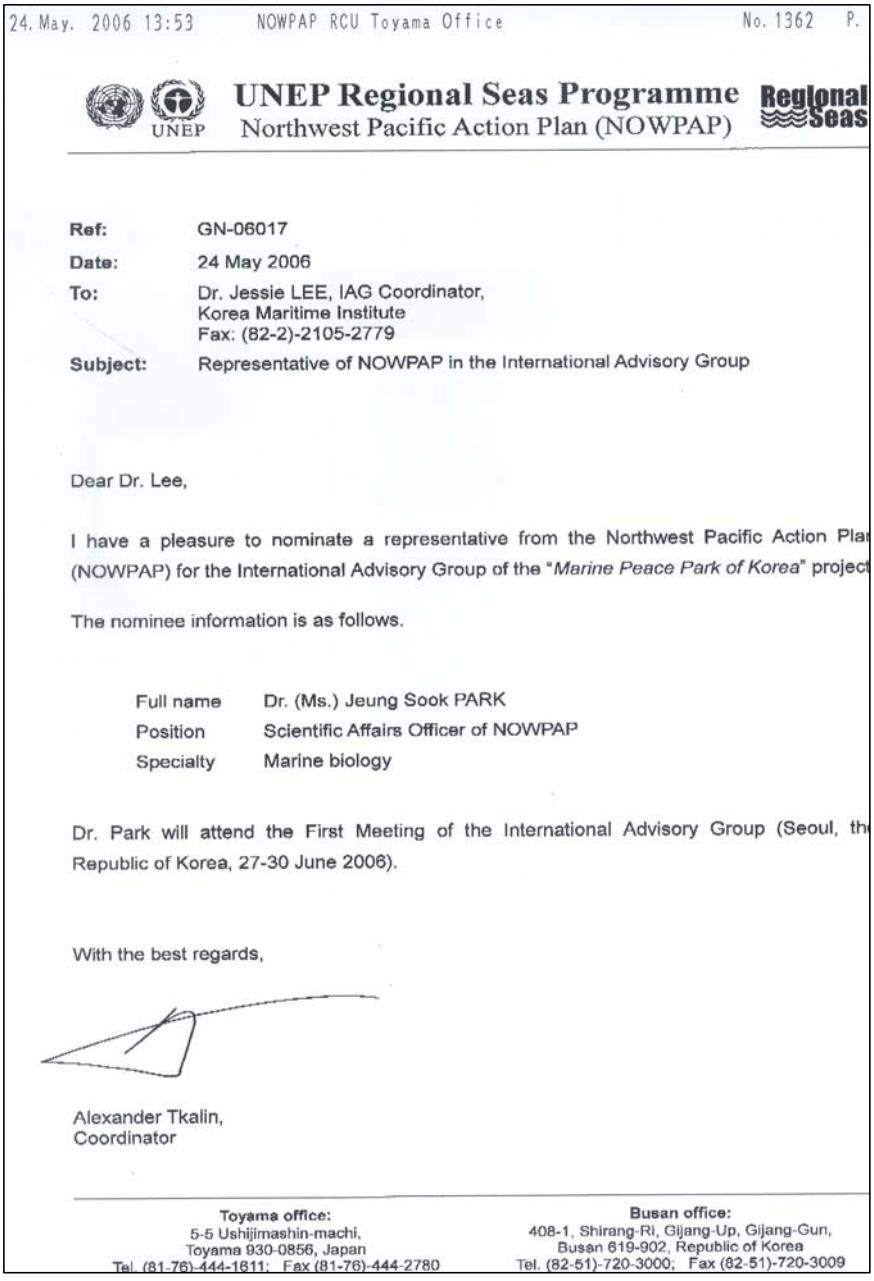
Please acknowledge our thanks in asking IUCN and WCPA to be part of such an important Group.

Best Regards

David Sheppard
Director, Protected Areas Programme
IUCN

Printed on Chlorine-free paper

2. NOWPAP



24. May. 2006 13:53 NOWPAP RCU Toyama Office No. 1362 P.

UNEP Regional Seas Programm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Regional Seas

Ref: GN-06017

Date: 24 May 2006

To: Dr. Jessie LEE, IAG Coordinator,
Korea Maritime Institute
Fax: (82-2)-2105-2779

Subject: Representative of NOWPAP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Dear Dr. Lee,

I have a pleasure to nominate a representative from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for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f the "*Marine Peace Park of Korea*" project

The nominee information is as follows.

Full name	Dr. (Ms.) Jeung Sook PARK
Position	Scientific Affairs Officer of NOWPAP
Specialty	Marine biology

Dr. Park will attend the 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Seoul, th Republic of Korea, 27-30 Jun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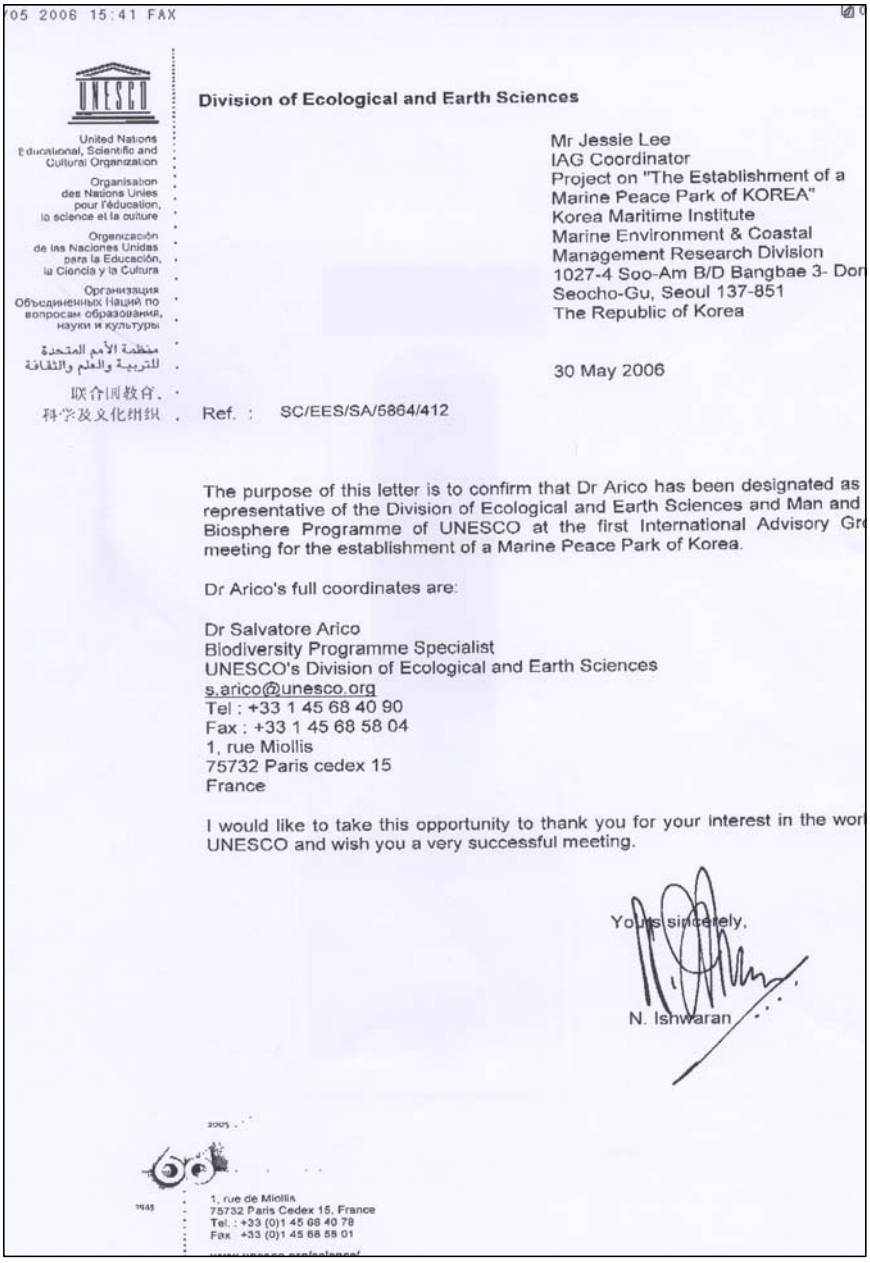
With the best regards,

Alexander Tkalin,
Coordinator

Toyama office:
5-5 Ushijimashin-machi,
Toyama 930-0856, Japan
Tel. (81-76)-444-1611; Fax (81-76)-444-2780

Busan office:
408-1, Shirang-Ri, Gijang-Up, Gijang-Gun,
Busan 619-902, Republic of Korea
Tel. (82-51)-720-3000; Fax (82-51)-720-3009

3. UNESCO



05 2006 15:41 FAX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منظمة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لتربية والعلم والثقافة

联合国教育、科学及文化组织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Mr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 Coastal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1027-4 Soo-Am B/D Bangbae 3- Dor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30 May 2006

Ref. : SC/EES/SA/5864/412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Dr Arico has been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of the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and Man and Biosphere Programme of UNESCO at the first International Advisory Gr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r Arico's full coordinates are:

Dr Salvatore Arico
Biodiversity Programme Specialist
UNESCO's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s.arico@unesco.org
Tel : +33 1 45 68 40 90
Fax : +33 1 45 68 58 04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wor UNESCO and wish you a very successful meeting.

Yours sincerely,

N. Ishwaran

1945

1, rue d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el. : +33 (0)1 45 68 40 78
Fax +33 (0)1 45 68 58 01

4. YSLME



부록 I

제1차 국제자문단회의 회의자료

1. 아젠다(가안)

Proposed Agenda for the 1st IAG Meeting

Tuesday 27 June, 2006

Registration **08:30 ~ 09:30**

Opening Ceremony
09:30 ~ 10:00 Opening Address

10:00 ~ 10: 30 Photo Session, Coffee Break, and MPP GIS Demonstration

Agenda 1: Approval of the Agenda
10:30 ~ 11:00 Approval of the Agenda
- Chairperson (KMI) briefly explains the agenda to the members for their consideration and states tha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meeting

Agenda 2: Approval of TOR (Terms of Reference)
11:00 ~ 12:30 Discussion and Approval of TOR
- IAG members reach an agreement on the contents of TOR and operational mechanism

Lunch 12:30 ~ 14:00 hosted by Korea Maritime Institute

Agenda 3: Summary of the MPP Project (1st Year)
14:00 ~ 15:30 Presented by Korea Maritime Institute
- After presentation, participants select appropriate subjects for discussion

Coffee Break 15:30~15:50

Agenda 4: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
15:50 ~ 18:00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
- IAG members and domestic experts exchange their views on the project

Dinner 18:30 ~ hosted by the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

Wednesday 28 June, 2006

■ **Field Trip**

There will be a one-day field excursion to Seokmo Island, Ganghwa County, one hour drive from Mayfield Hotel. The sites represent Coastal/Marine Protected Areas where birds on IUCN Red-List are observed in Korea, nearest from Yesong River of DPRK.

Thursday 29,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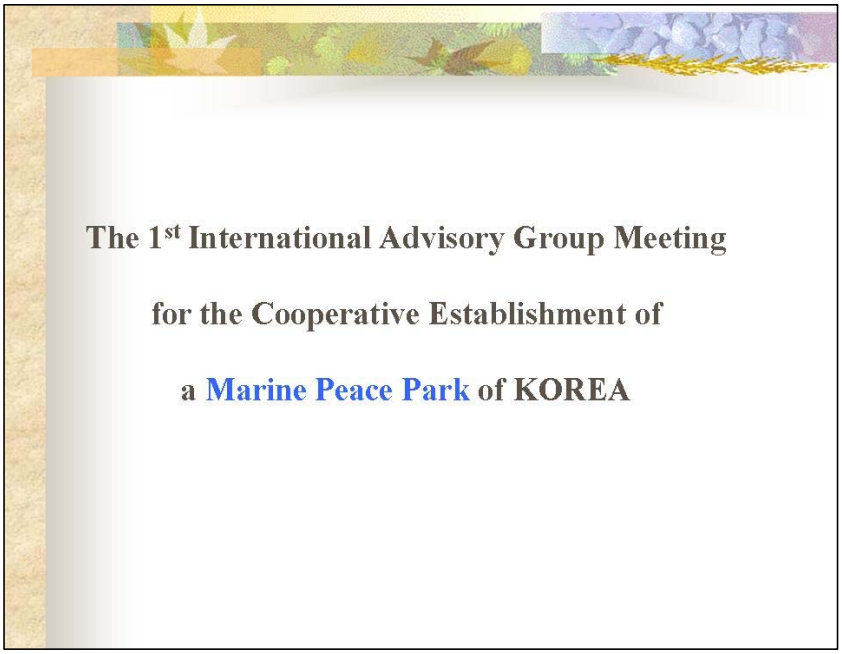
■ **Closure of the Meeting** **09:30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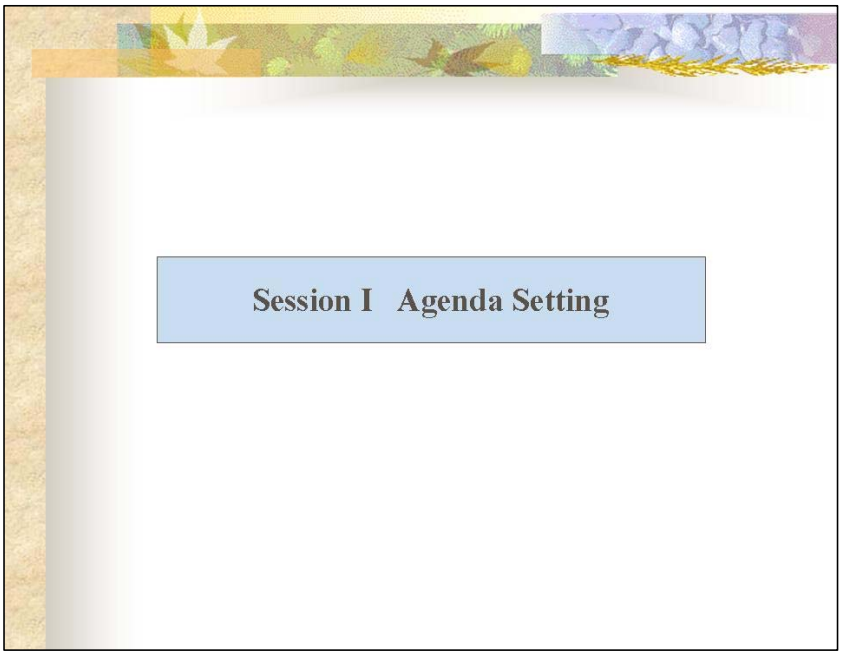
- Reach a Consensus on Defining IAG's Roles

  (Suggest IAG's mandate, organization, expected outcomes, scope of activities, duration,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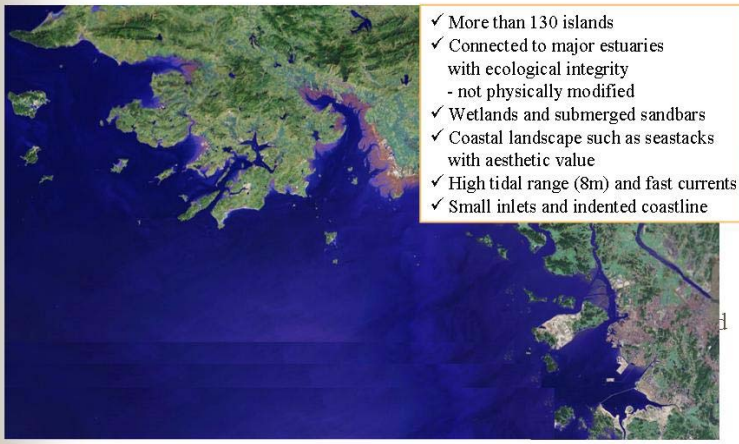
- Overview of the first IAG meeting
- Venue for the 2nd IAG meeting
- Set the next meeting agenda
- Activities to be implemented by the 2nd IAG meeting

2. 제1차 국제자문단회의 프로그램





Marine Peace Park Initiative of KOREA



- ✓ More than 130 islands
- ✓ Connected to major estuaries with ecological integrity - not physically modified
- ✓ Wetlands and submerged sandbars
- ✓ Coastal landscape such as seastacks with aesthetic value
- ✓ High tidal range (8m) and fast currents
- ✓ Small inlets and indented coastline

1st International WS in Seoul, September 2005

- Suggestion of IAG Organization in a Side-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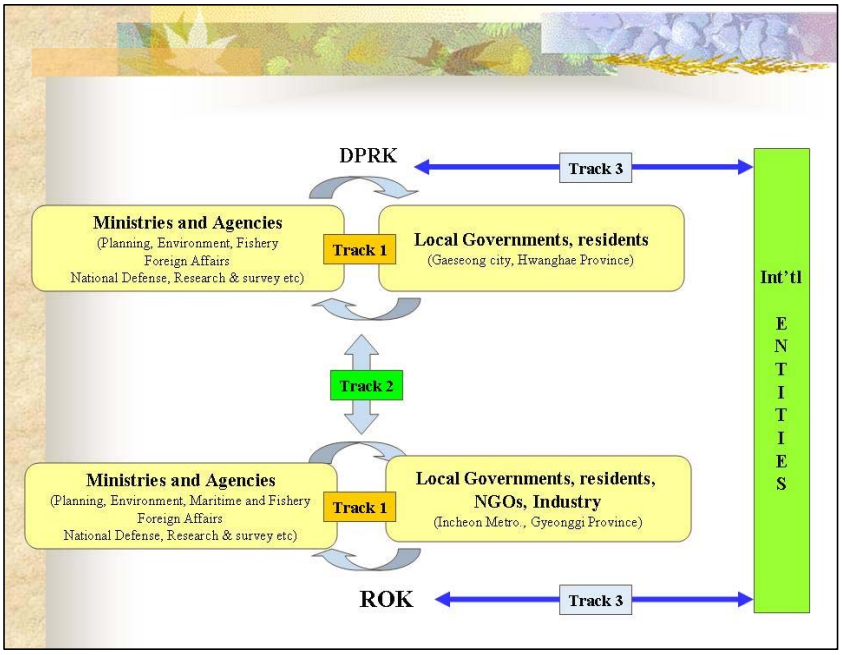






Three-Track Approach for the Cooperative Initiative (2005)

- Track 1 : National level
  → Enhancing cooperation and sharing awareness among stakeholders on MPP in DRPK and ROK respectively
- Track 2 : Peninsular level
  →Sharing MPP Initiative between two Koreas and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a work plan for the establishment
- Track 3 : international level
  → Close networking with, and supports from international and regional entities



Preparation of the draft IAG TOR, April 2006

Responses from IUCN, NOWPAP & UNESCO, May 2006

At the 1st IAG Meeting, followings will be done

- Formulate a very cooperative mechanism for MPP establishment in Korean Peninsula – finalizing the TOR
- Share ideas, information, achievements and experiences regarding MPP Initiative – MPP project consultation, and
- Discuss future activities of the IAG

To finalize the draft TOR of the IAG

Vision
Objectives
Scope of Activities and Membership
Functions and Roles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IAG***

Specification of future activities to further promote the MPP initiative at the closing meeting on 29th

Session II Approval of TOR

Vision

A Group to provide advisory views, advices in the project area, both on a cooperative approach, with a participation of both DPRK and ROK, to enhance Peace, Protection and Prosperity

IAG advises the preparatory procedures of the establishment of MPP, through the improvement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dialogue

The vision of the IAG is to provide advice and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MPP between DPRK and ROK, leading to peace, protection and prosperity.

Objectives

- To assist understanding & sharing of the overall goals of the MPP initiative - *political*
- To provide technical advice and guidanc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MPP- *technical*
-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 and to promote knowledge networking, and
-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wareness among all stakeholder involved in MPP initiative

Functions and Roles

- Promote informal consultation on MPP initiative through existing mechanism and encourage feedback
- Draw attention among int'l entities
- Identify appropriate expertise (legal, institutional, biological)

Membership

- Open-ended membership
- Expansion of other int'l entities including Int'l mass-media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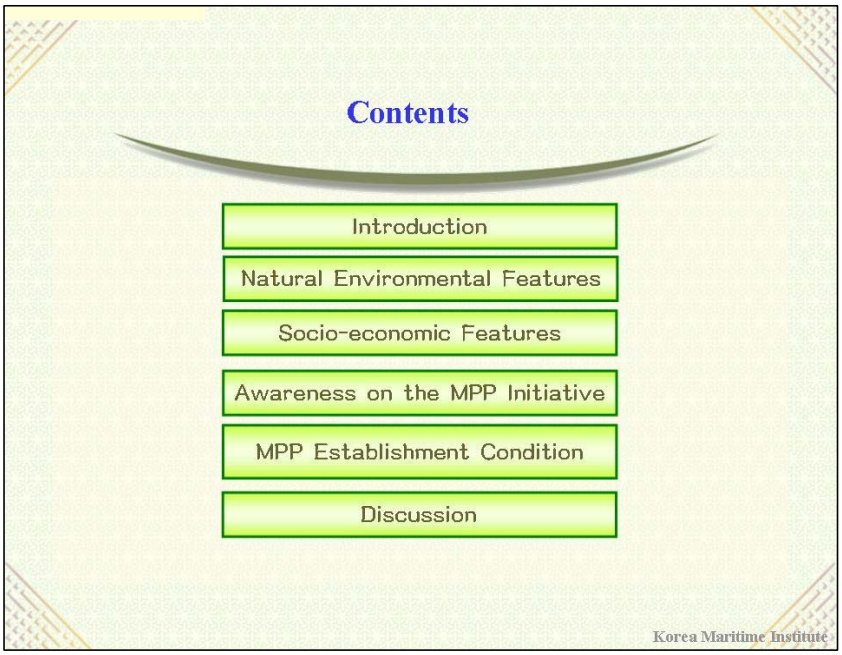
Operational Procedures

- Review on meeting agenda by, and setting the agenda based on consensus among representatives
- Preparation of the meeting materials by KMI, according to the review and consultation
- Korean Gov. covers all costs for the meeting and other subsidiary works
- Full agreement for membership expansion and TOR change, and
- Others, *to be put into through discussion*


Thank you
i

3. ‘서해해양평화공원’ 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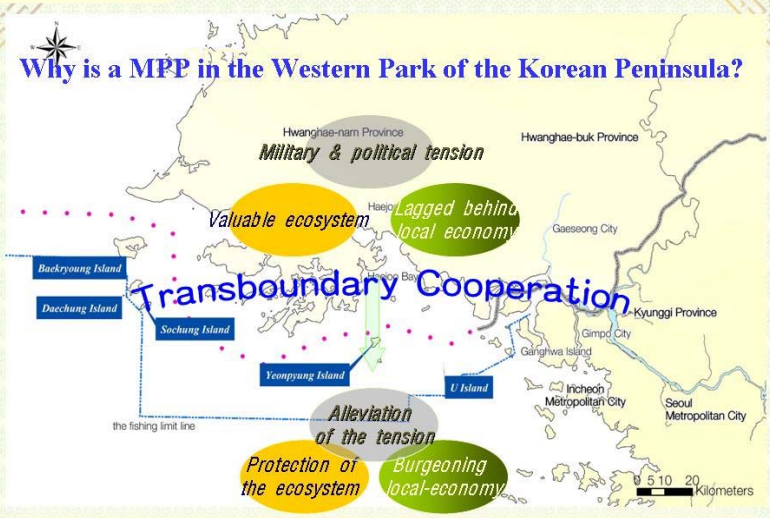




Introduction

Korea Maritime Institute

Why is a MPP in the Western Park of the Korean Peninsula?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establish a Marine Peace Park, and develop DPRK-ROK cooperation model in the field of marine & coastal sectors

What is a MPP of KOREA?

A co-managed multi-purpose area for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irm base on peach promotion & economic develop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Natural Features of the 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Korea Maritime Institute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Features

- Indented coastlines, mud-flats, coastal sand-dunes, unique gravel-stone beaches, seastacks etc
- Coastal cliffs (DPRK & ROK)
- Estuarine areas of three rivers (Han, Limjin, and Yeseong Rivers), not intervened by human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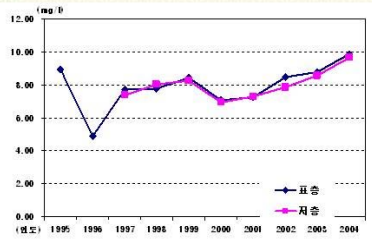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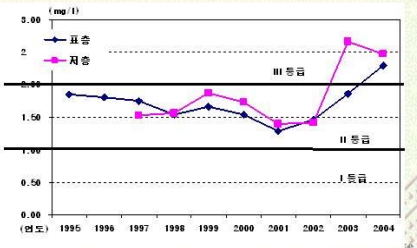


Photo : Our National Monuments (2006),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 Water quality data: neither available (DPRK) nor sufficient (ROK)
  extrapolation from monitoring results on the southern part of Kanghwa Island
  - Dissolved Oxygen conc. increasing
  - COD, increasing (< 2mg/L)
  - No environmental pollution events, red-tides, eutrophication, oil spills etc
  - Marin debris from fishing, tourism & land-based activities





Ecological Features

- Stop-over for water fowls from Europe & Asia region
- Habitats and laying eggs for endangered species such as black-faced spoonbills, white-tailed eagles,Chinese egrets, hawks, *Aquila chrzaeetos japonica* etc
- Nine natural monuments for birds (3 in ROK, 6 in DPRK) – the largest monument in ROK
- Mammals - spotted seals, whales
- Soft corals
- Fishing grounds of blue crabs, Pacific sand-eel



Photo: NFRDI, J.H.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Habitats – mudflats & sandb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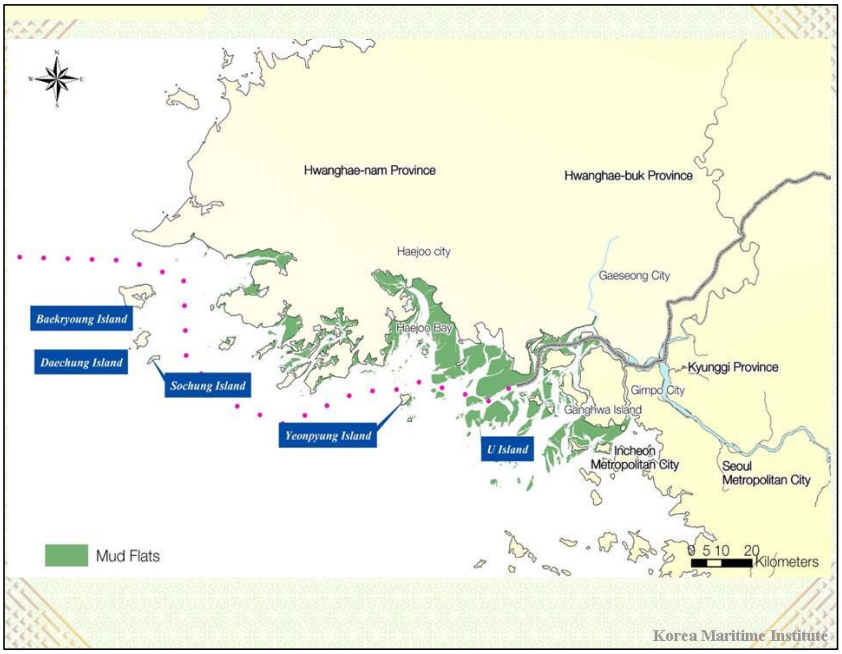
- Mudflats as stop-over areas for water fowls from Europe & Asia region (26% of total area in KOREA)
- Uninhabited islands for habitats and laying eggs for endangered birds, black-faced spoonbills
- Submerged sandbars and inlets for nursery and spawning for marine living resources
- Mammals - spotted seals & wh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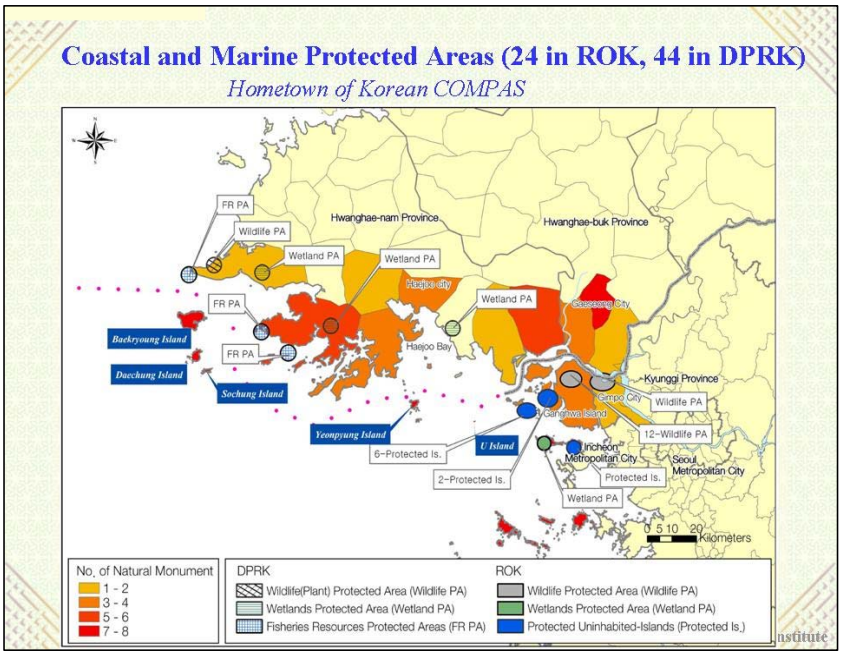


Classification		Area(㎢)	Proportion to total mud-flat area	비고
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DRPK	958	17.3%	30% of DPRK mud-flats
	ROK	487	8.7%	20% of ROK mud-flats
Total		1,445	26.0%	

Note : Total area of mud-flat is acquired from 3,000 ㎢ of DRPK and 2,550㎢ of ROK
Source : MOMAF (2005), Nam et al.(2005)

Korea Maritime Institute


Hwanghae-nam Province
Hwanghae-buk Province
Haejoo city
Gaeseong City
Baekryoung Island
Haejoo Bay
Daechung Island
Kyunggi Province
Sochung Island
Gimpo City
Ganghwa Island
Yeonpyung Island
U Isl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Seoul Metropolitan City
Mud Flats
0 5 10 20 Kilometers
Korea Maritime Institute


Coast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24 in ROK, 44 in DPRK)
Hometown of Korean COMPAS
FR PA
Wildlife PA
Hwanghae-nam Province
Hwanghae-buk Province
Wetland PA
Wetland PA
Haejoo city
Wetland PA
Gaeseong City
FR PA
Baekryoung Island
Haejoo Bay
FR PA
Daechung Island
Kyunggi Province
Sochung Island
Gimpo City
Wildlife PA
Ganghwa Island
Yeonpyung Island
12-Wildlife PA
6-Protected Is.
U Isl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Seoul Metropolitan City
2-Protected Is.
Protected Is.
Wetland PA
0 5 10 20 Kilometers
No. of Natural Monument
1 - 2
3 - 4
5 - 6
7 - 8
DPRK
Wildlife(Plant) Protected Area (Wildlife PA)
Wetlands Protected Area (Wetland PA)
Fisheries Resources Protected Areas (FR PA)
ROK
Wildlife Protected Area (Wildlife PA)
Wetlands Protected Area (Wetland PA)
Protected Uninhabited-Islands (Protected Is.)

Yellow Sea (PHS over the world)

Western part of Kor. Pen. (BHS) in Yellow Sea

Geographical diversity

Biological diversity

Habitats diversity

Political diversity ?

⇒ Pandora's Box ?

Korea Maritime Institute

Socio-economic Features

Korea Maritime Institut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Livelih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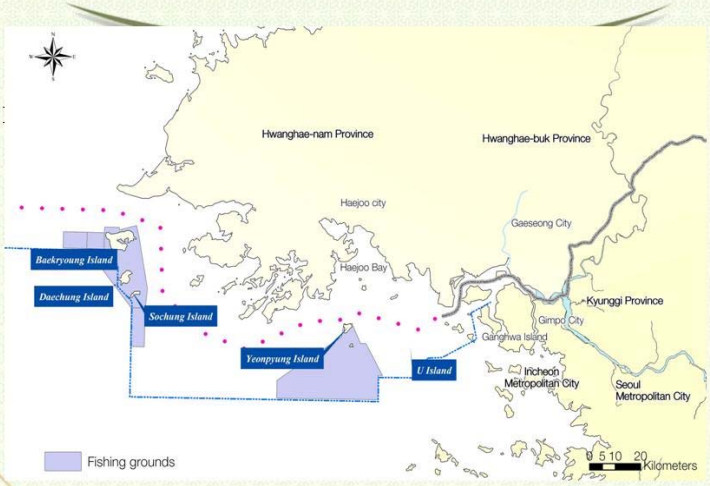
- **DPRK, 2.3million (as of 1993)**
  not available since 1994

- **ROK, 0.3 million (as of 2004)** including 80,000 in Ongjin and Ganghwa Counties
  - population increase rate 4.68%/year
  -0.87% and –0.17% per year of Ganghwa county and Ongjin county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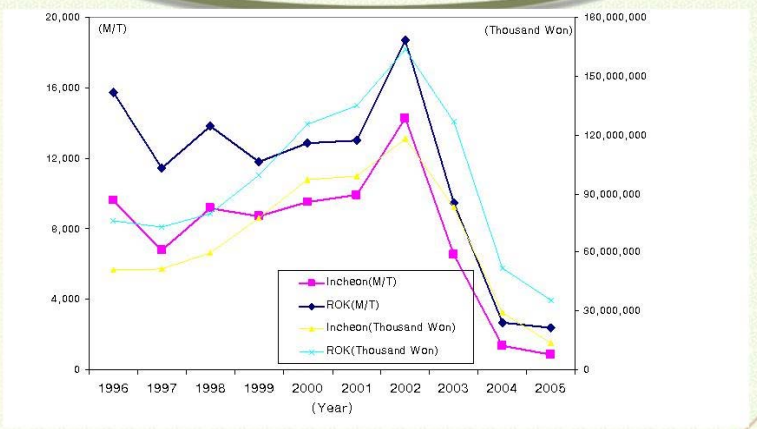
- **Residents, mainly dependent on fishery and agriculture**
  partially depend on coastal and marine tourism based on natural resources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Korea Maritime Institute



Korea Maritime Institute

Socio-economic features

- **Rapid urbanization → decrease of water area during the last decade**
  - potential threats for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from the analysis of land coverage using satellites
- **ROK,** population decrease
  - 0.87% and –0.17% per year of Ganghwa county and Ongjin county respectively

Korea Maritime Institute

Socio-economic features

- **Access to Islands**
  - Few passenger liner schedule : 1-2 per day
    * unpredictable cancellation of the liners due to weather conditions
- **Household Income**
  - Less than USD 40,000 (cf. USD 50,000 in urban areas of the main land)
  - Aggravation since 2003 due to foreign vessel intrusion, expansion of fishing prohibition period, marine pollution etc (ROK)

Korea Maritime Institute

Socio-economic features

- **Industrial complexes**
  - DPRK : Haejoo ind. complex & Gaeseong ind. complex
    * unpredictable cancellation of the liners due to weather conditions
  - ROK : Namdong ind. Complex distant from the transboundary area

Korea Maritime Institute

Development & Resource Utilization Initi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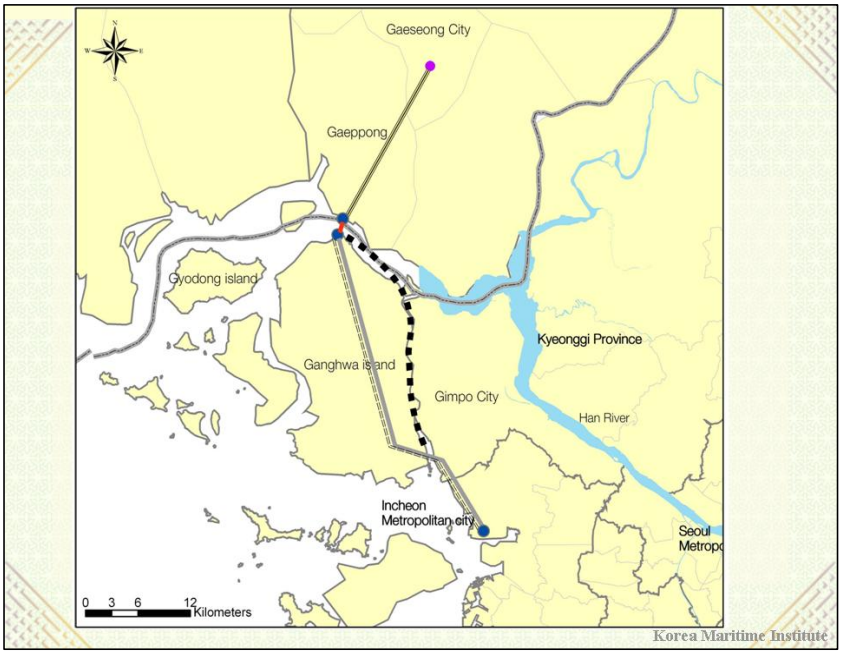
- **Establishment of Gaepoong Joint Development Area**
  - construction of a bridge between lands (1.4 km)
  - development of a industrial complex of 66 ㎢, equivalent to Gaeseong ind. Comp.
- **Marine Sand Mining**
  - Han river estuarine area
  . habitats for commercially valuable & endemic fishes such yellow swell fishes and eels
  . close to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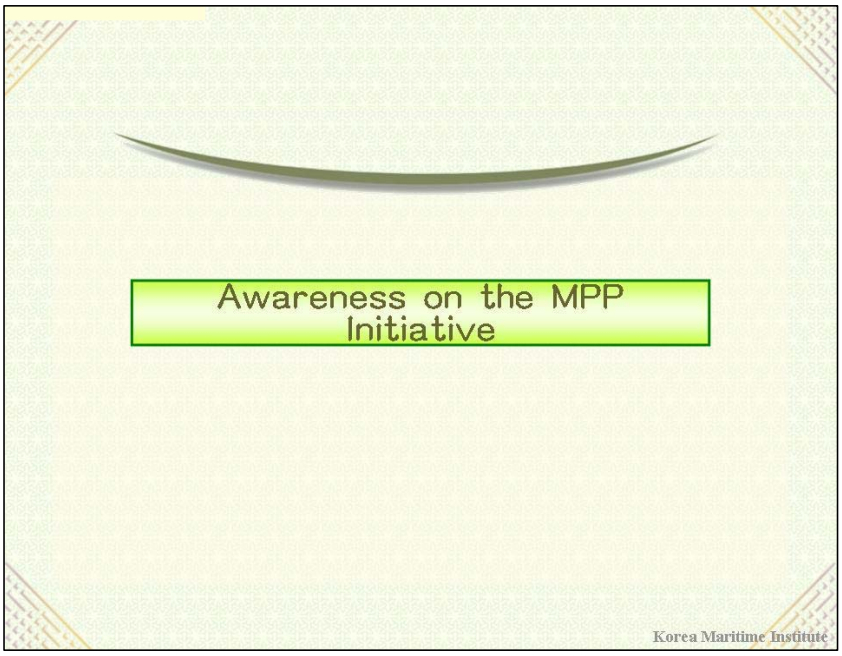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Development & Resource Utilization Initiatives

- **Ports Development**
  - Ganghwa island, Gyodong island etc
- **Joint Fishing Grounds**
  - agreement on the initiative in 2005

Korea Maritime Institute


Gaeseong City
Gaeppong
Gyodong island
Ganghwa island
Gimpo City
Kyeonggi Province
Han River
Incheon
Metropolitan city
Seoul
Metropo
0 3 6 12
Kilometers
Korea Maritime Institute


Awareness on the MPP Initiative
Korea Maritime Institute

Outline of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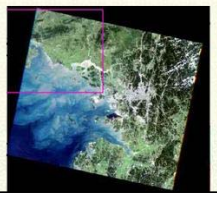
Targets	Island Resident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Time	2005. 7. 12~14	2005. 7. 26~8.5
Methods	Interview	E-mail
Responses	144 (return rate of 96%)	67 (return of 84%)
Major Questionnaires	•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y catch • Socio-economic conditions of residents • Possibility and cause of military collisions • Illegal intrusion of foreign vessels and countermeasures • Necessity of cooperative management • Necessity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Scope of governmental supports	• Condition and possibility of cooperative management • Feasibility of, and approach to MPP designation • Environmental impact from Gaeseong ind. Complex, and policy to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 Potential of cooperation between DPRK and ROK

Korea Maritime Institute

Brief Results of Survey on Residents' Understandings

- Continuation of fishery catch decrease (99% of respondents)
- Foreign vessel intrusion and fisheries, major cause of the catch decrease (80%)
- Need to control the vessels (64%)
- Cooperative management of the transboundary area (55%)

  → separation of management areas between DPRK and ROK (31%)



Korea Maritime Institute

Brief Results of Survey on Residents' Understandings

- Possibility of cooperative management (58%)
- Re-occurrence possibility of military collisions (60%)
- Pre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cooperative management

  - attitude change of DPRK (57%) > supports of ROK (35%) > supports of int'l entities (5%) > relationship improvement between DPRK and USA (3%)
- Implementation of strict protection regulation (42%) vs. Protection considering fishing activities (49%)
- Governmental supports : local economy development (36%) > better access to islands (21%)

Korea Maritime Institute

Brief Results of Survey on Experts' Understandings



Politico-military tension along the transboundary area between DRPK and R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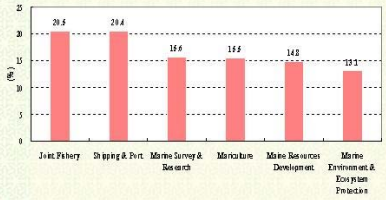
Highest tension around Baekryoung Island and Yeonpyeong Island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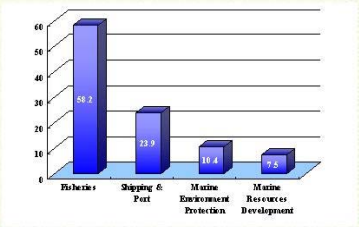
Brief Results of Survey on Experts' Understandings

- Prioritization on cooperation between DPRK and ROK
  - priority on economic cooperation among all sectors
  - shipping and ports > research and survey > fishery resources > marine resource >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 marine sector
  - fishery > port > environment > marine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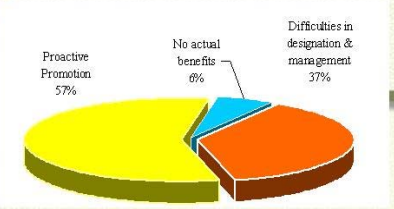
<Marine Sector>



<Western part of Korean Pen.>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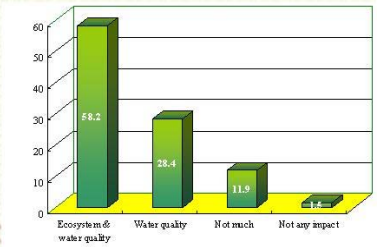
- Awareness on MPP Initiative
  - ✓ Affirmative aspect, proactive promotion (57%)
  - ✓ Affirmative, but difficult to designate and manage the MPP (37%)

- Precondition for MPP establishment
  - ✓ Change of attitude of DPRK (32.8%)
  - ✓ Improvement of a relationship between DPRK and USA (26.9%)
  - ✓ Proactive supports of ROK (20.9%)
  - ✓ Consensus and supports from local entities (10.4%)
  - ✓ Supports and cooperation from Int'l entities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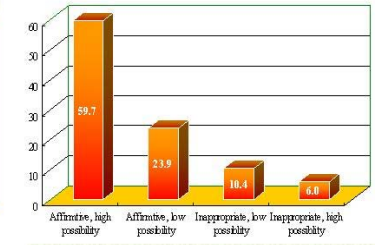
- Need to continue the establishment of a MPP, even though aggrav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DRPK, ROK and USA
- MPP establishment by DRPK and ROK

Korea Maritime Institute

- Environmental Impact and policy from industrial activities
  - ✓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marine and coastal ecosystem (58.4%)
  - ✓ Reinforcement of env. Regulation of DPRK, and technical supports and cooperation of ROK (over 60%)



- Providing of facilities and devices for research and survey activities of DPRK
  - ✓ Strong likelihood (58.4%)
  - ✓ Bad likelihood (over 60%)



Korea Maritime Institute

Establishment Condition Analysis for MPP

Korea Maritime Institute

Political Situation

- **Political conflicts on nuclear issues**
  - aggrav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DPRK and USA
  - low possibility for the issue settlement in the near future
- **Impasse of DPRK-ROK relationship since the 15th ministerial talk last year**
  - pros and cons on supports of ROK
  - No further progress of the relationship, despite of agreement on joint fishery zone establishment
  - highly dependent on 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east Asian region

Korea Maritime Institute

DPRK

-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 "Practical Socialism"**
  - shortage of energy and foods for sustaining domestic economy
  - partially open to foreign (ROK) direct investment
  - strong interest on the trandboundary area development such Gaeseong and Mt. Geumgang
- **Strong interest on the protection of ecosystem and living resources & peace promotion**
  -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protection
  -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int'l entities, although very limited
-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 very chronic, but very critical issue**

Korea Maritime Institute

ROK

-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 tourism, industrial complex expansion, sand mining etc
  - no further progress in shipping and port development, despite of agreements on those issues
- **Low interes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Not much empowerment to a responsible agency for MPP establishment**
- **Initiation of survey and monitoring**

Korea Maritime Institute

Priority to DPRK-ROK cooperation

- **Priority on economic sectors such tourism, industrial complexes construction etc – enactment of "Tidal Zone Development Act" in 2005**
- **Land-based cooperation**
- **Shipping and port development**
- **Marine resource development such sands and fishing resources**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never been official agenda at talks between DPRK and ROK

Korea Maritime Institute

SWOT Analysis

Strengths	Weaknesses
▪ Adoption of MPP Establishment into ROK marine policy regime ▪ Public will for peace of the area is Increasing ▪ Coast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transboundary area (DRPK, ROK) ▪ Strong interest of NGOs	▪ Insufficient mutual trust between two DPRK and ROK ▪ Lack of cooperation experiences in marine sector ▪ Low public awareness on MPP establishment ▪ Lack of information and data ▪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sectors
Opportunities	**Threats**
▪ Economic cooperation proliferation in transboundary land areas ▪ Adoption of the agreement on navigation and fishery cooperation ▪ Establishment of regional cooperation entities in the regional seas area(PEMSEA, YSLME, NOWPAP)	▪ DPRK nuclear issue and political tension ▪ Conflict surrounding NLL ▪ High likelihood of military collision re-occurrence ▪ Foreign vessel intrusion and illegal fishing ▪ Impact from coastal development activities

Korea Maritime Institute

Discus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Topic # 1

- Priority on protection, followed by peace and prosperity
  - considering the politico-military situation, not dependent on coincidence

Topic # 2

- Promotion of MPP establishment, despite of the aggravated politico-military situation

Topic # 3

- How to integrate needs from different sectors, such a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 application of zoning mechanism?

Korea Maritime Institute

Topic # 4

- concern about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MPP or not?

Topic # 5

- How to involve DPRK ? - from a joint expert forum, monitoring, training and education etc

Topic # 6

- To provide facilities and devices with DPRK, possible or not ?
  - how to coordinate current 'export control' mechanism such as COCOM

Korea Maritime Institute

Topic # 7

- Acquisition of data and information
  - initiation of survey and monitoring in 2006 (only in ROK) How to provide facilities and devices with DPRK ?

Topic # 8

- How to raise awareness on MPP at global and regional levels

Topic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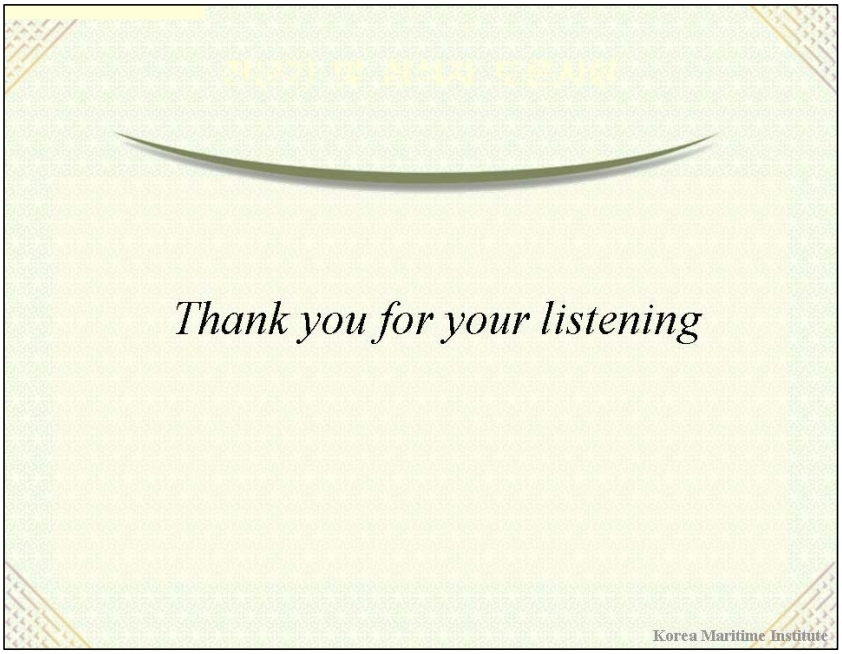
- How to secure funds for MPP establishment and operation
  - special funds, international donation,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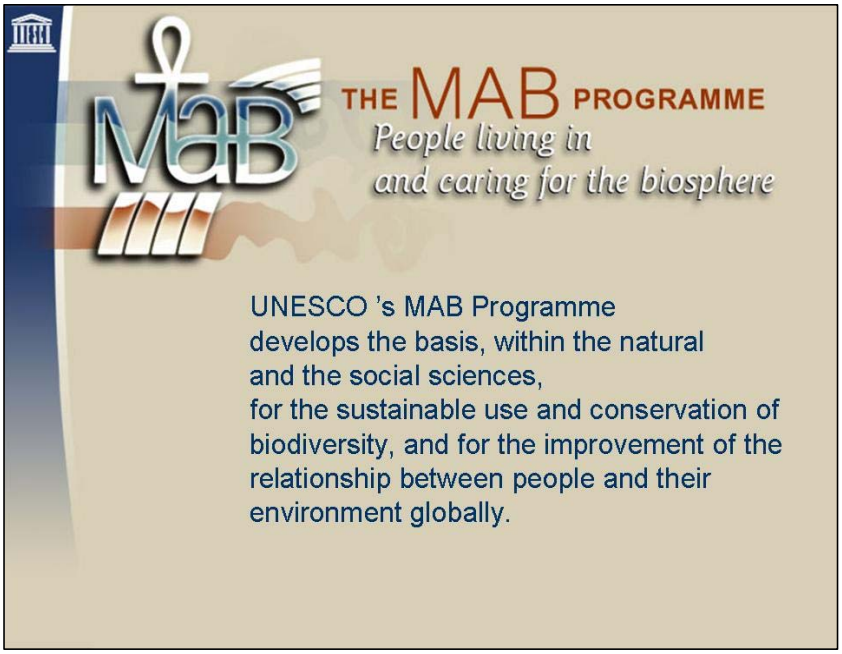
Topic # 10

- Research items in 2006
  - Consolidation of conditions
  - Strategies
    - . Zoning mechanism
    - . 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 . Harmonization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 . Integration of MPAs and DMZ
    - . Public Awareness
    - . Joint Activities between DPRK and ROK
    - . Building international partnership
    - . Etc.

Korea Maritime Institute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Korea Maritime Institute

4. UNESCO 대표자 발표 내용





Programme Structure

UNESCO 's intergovernmental structure gives MAB the potential to help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s.

MAB operates through 157 **MAB National Committees** and focal points for MAB activities. MAB National Committees involve various research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UNT PAEKDU

- Situated at the borde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hares the volcano mountain and mountain forest ecosystem with Changbaishan Biosphere Reserve in China
- Alpine tundra, a transitional alpine meadow-forests zone and a subalpine needle-leafed forest zone
- 132,000 hectares (core: 18,600; buffer: 29,700; transition: 83,700)
- About 35,000 people live within the biosphere reserve (2001) (agriculture, management of tourist sites and souvenir shops, cultivation of medicinal plants and wild fruit processing)
- About 200,000 tourists per year (2001) who are mostly visiting the Revolutionary Battle sites and climbing up Mount Paekdu

Republic of Korea



Programme Structure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CC):

- Consists of 34 Member States that meet every 2 years
- Is the governing body of MAB, responsible for guiding and supervising the MAB Programme

Programme Structure

The MAB Secretariat is provided by UNESCO 's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In 2006, some 40 persons are working in the Division, both in Paris and regionally.

Budget - MAB activities are mainly funded by the countries themselves. The regular budget of UNESCO provides seed money. There are also projects with funds-in-trust granted by member states and extra-budgetary funds.

Cooperation

The Major Conservation Conventions
The CBD, CITES, CCD, the Ramsar Conventi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etc.

Major NGO 's such as IUCN, ISSC, CI and WWF.

Global Change Programmes of ICSU, SCOPE, IUBS, IUMS and IG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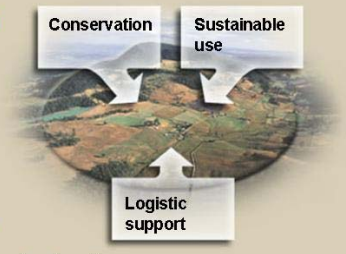
Others

Biosphere Reserves

- Are "*special places for people and nature*"
- Are areas of terrestrial and coastal ecosystems promoting solutions to reconcile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 its sustainable use
- Are nominated by national governments
- Remain under the sovereign jurisdiction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are situated

Biosphere Reserves

Biosphere reserves perform three main ro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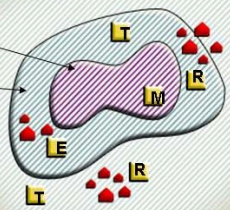


- Conservation *in situ* of natural and semi-natural ecosystems and landscapes
- Demonstration areas for ecologically and socio-culturally sustainable use and
- Logistic support for research, monitoring,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exchange

Biosphere Reserves - How are they organized?

These functions are associated through a zonation system including:

- Core area(s)
- Buffer zone(s)
- Transition area(s)



R Research station or experimental research site

M Monitoring

E Education/training

T Tourism

This schema can be adapted to various ecological, socio-cultural and legal contexts

THE MAB PROGRAMME – *People living in and caring for the biospher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 Today, the World Network is made up of almost 500 sites in more than 100 countries
- Is formally recognized by UNESCO Member States



THE MAB PROGRAMME – *People living in and caring for the biosphere*

Networking

The MAB programme is supported by **regional and sub-regional networks**

Currently active networks include:

-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EABRN),** amongst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Its activities span over 50 biosphere reserves across the region
- The **South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1998) is a subregional network proposed by China, Cambodia, Indonesia, Laos, Japan,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It was officially launched in Viet Nam in October 1998

THE MAB PROGRAMME – *People living in and caring for the bio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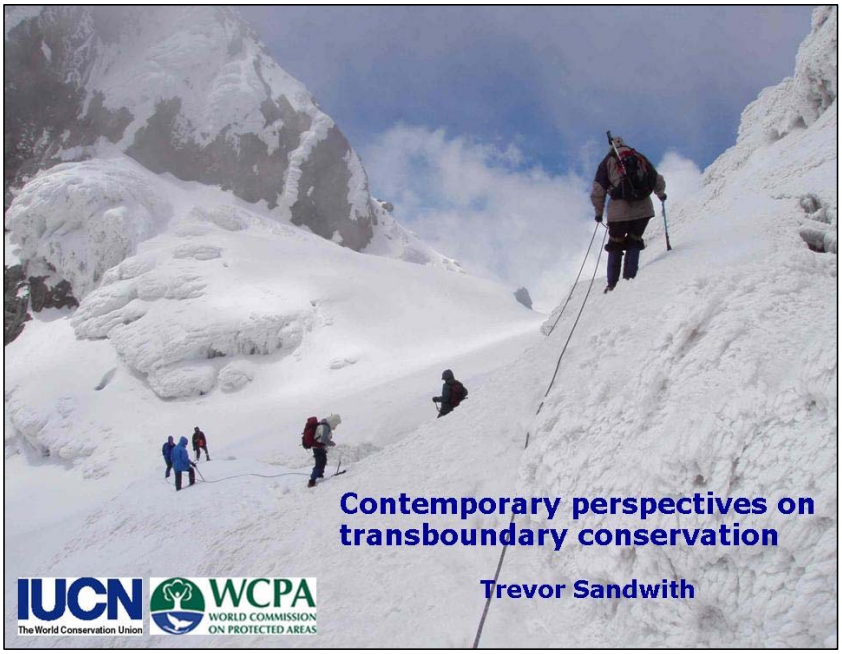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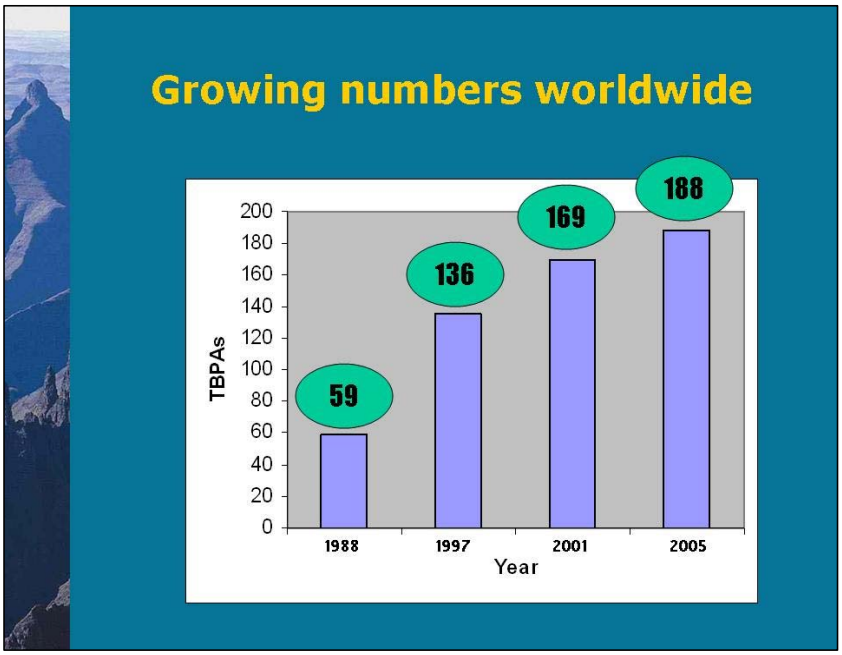
- Networking
- Capacity-building
- Research and monitoring
- Development
- Peace/dialogue
- Conservation

THE MAB PROGRAMME – *People living in and caring for the biosphere*


Please visit our website
www.unesco.org/mab
THE MAB PROGRAMME – People living in and caring for the biosphere

5. IUCN 대표자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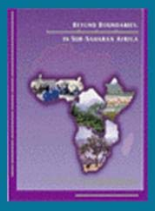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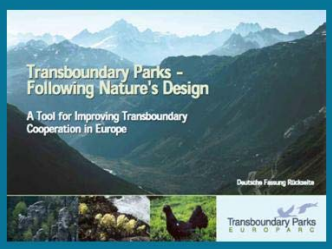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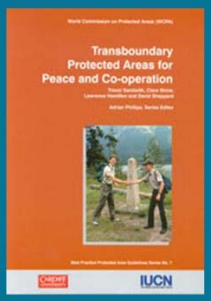
- biodiversity conservation
- cultural heritage and exchange
- wilderness preserv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restitution of property rights
- local economic development
- poverty alleviation

Developing gui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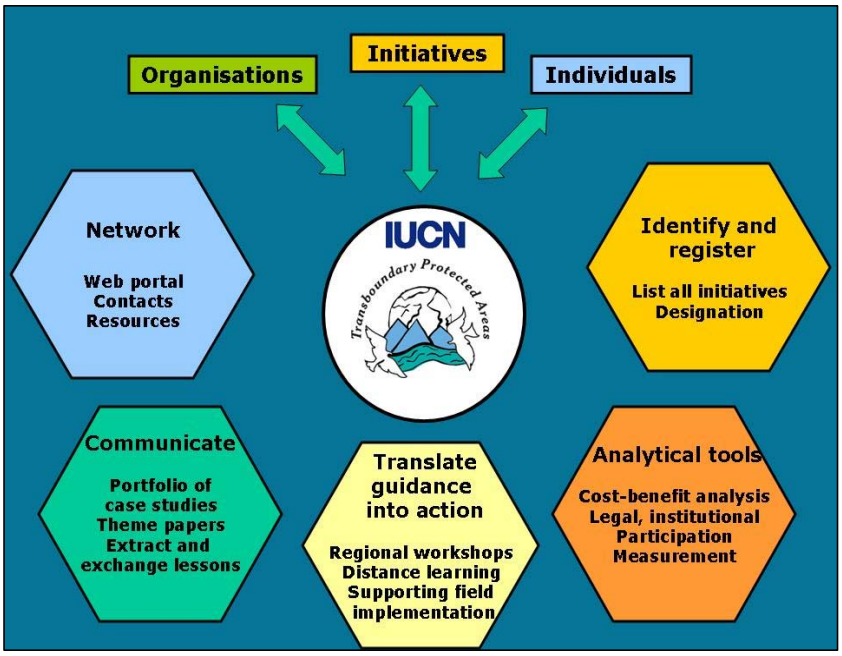
Pioneered by Jim Thorsell and Larry Hamilton








9 topics to guide managers
• Identifying and promoting common values
• Involving and benefiting local people
• Obtaining and maintaining support of decision-makers
• Promoting co-ordinated and co-operative activities
• Achieving co-ordinated planning and protected area development
• Developing co-operative agreements
• Working towards funding sustainability
• Monitoring and assessing progress
• Dealing with tension or armed conflict


Organisations
Initiatives
Individuals
Network
Web portal
Contacts
Resources
IUCN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Identify and register
List all initiatives
Designation
Communicate
Portfolio of case studies
Theme papers
Extract and exchange lessons
Translate guidance into action
Regional workshops
Distance learning
Supporting field implementation
Analytical tools
Cost-benefit analysis
Legal, institutional
Participation
Measurement

Four types

1.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2. 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3. Parks for peace
4. 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1.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Pyrenees – Mont Perdu Transboundary World Heritage Site

1.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An area of land and/or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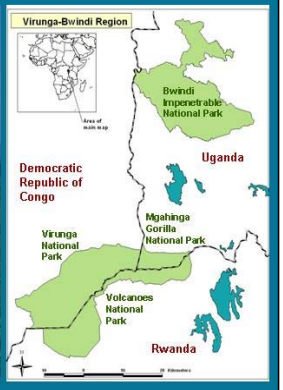
that straddles one or more boundaries between states or sub-national units such as provinces and regions, autonomous areas and/or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sovereignty or jurisdiction…

whose constituent parts are especi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managed co-operatively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

2. 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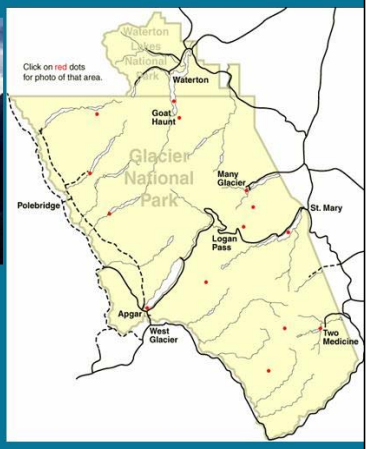
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are areas of land and/or sea that straddle one or more borders between states, sub-national units such as provinces or regions, autonomous areas and/or areas beyond the limit of national sovereignty or jurisdiction,

whose constituent parts form a matrix that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which are managed co-operatively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

3. Parks for Peace





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

Parks for Peace:

ar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hat are form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to the promotion of peace and co-operation

4. 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european greenbelt



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are areas of land and/or sea in two or more countries, **which are not necessarily contiguous, but are required to sustain a biological migratory pathway**, and where co-operative management has been secured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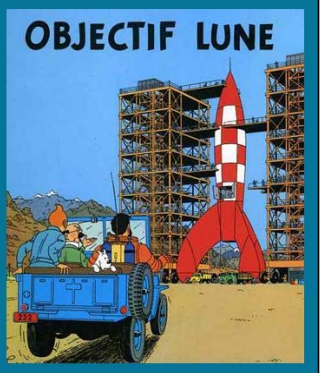
CBD COP7 Programme of Work



- Develop TBPAs and PAs in marine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transboundary inland water ecosystems, and migratory corridors for key species
- establish new TBPAs and strengthen effective collaborative management of existing TBPAs
- Compil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TBPAs
- Provide an enabling policy,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for TBPAs
- Develop and adopt minimum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 Establish frameworks for monitoring, evaluating and report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BPAs

Is our goal clear?

- Multiple goals
- Conflicting goals
- Determining the need for transboundary programme
- Determining the type of transboundary programme
- Setting standards for implementation
-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 Ensuring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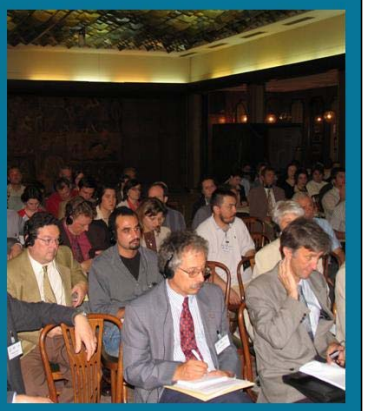
Can we agree?

- Diplomatic relationships among the involved countries
- Existing or potential conflict
- Informal and formal agreements
- The role of the security community
- Forms of agreement (handshake, joint protocol, MoU, treaty)



How will we manage it?

- Regional agreements
- Bilateral and multilateral steering committees
- Co-ordinators
- Projects versus ongoing programmes
- Institutional home



How will we balance needs?

- Levels and actors
-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voice
- Centralised versus local authority
- A rights-based approach
- Equity considerations



How well are we d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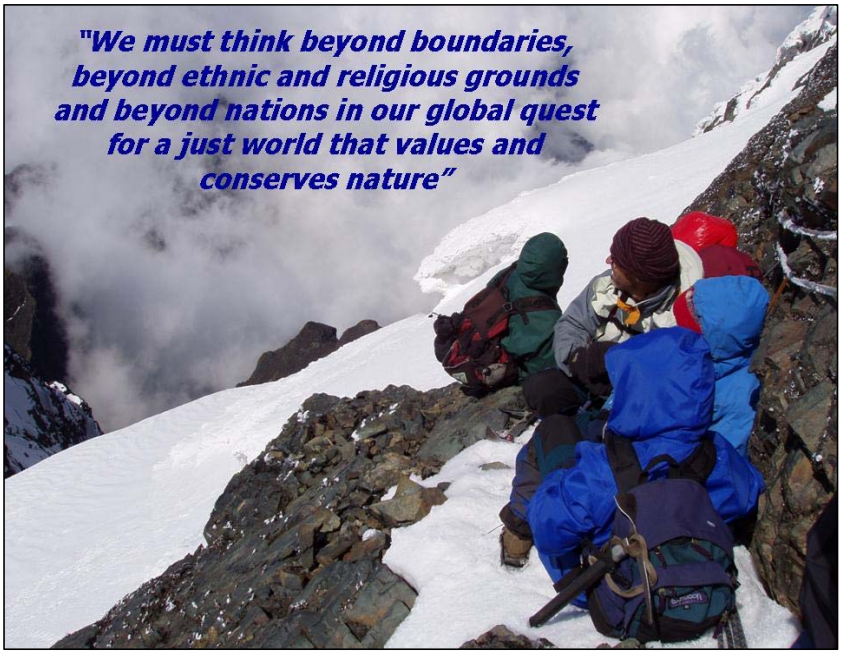
- Diverse goals, diverse measures
- Accountability to donors, partners, govts, communities
- Techniques for measuring peace and co-operation
- Tracking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 Measuring social and economic impact



Can we learn and communicate?

- The global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network
- Initiativ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 A learning network
- www.tbpa.net




"We must think beyond boundaries,
beyond ethnic and religious grounds
and beyond nations in our global quest
for a just world that values and
conserves nature"

6. Closing 회의


Closing Session of 1st IAG Meeting


What we have done
TOR Review
Presentation of, and Discussion on 1st year Research
Field Trip to Ganghwa and Seokmo Islands

TOR Finalization

Vision

A Group to provide advisory views, advices in the project area, both on a cooperative approach, with a participation of both DPRK and ROK, to enhance Peace, Protection and

The vision of the IAG is to provide advice and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MPP between DRPK and ROK, and to foster bilateral and international dialogue and cooperation to support the initiative

dialogue

The vision of the IAG is to provide advice and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MPP between DPRK and ROK, leading to peace, protection and prosperity.

Objectives

- To assist understanding & sharing of the overall goals of the MPP initiative
- To provide technical advice and guidanc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MPP
-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and to promote knowledge and project networking, and
-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wareness among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MPP initiative

Functions and Roles

- Provide strategic advice (main function)
- Meet periodically and review progress and program
-
- Promote informal consultation on MPP initiative through existing mechanism and encourage feedback
- Draw attention among int'l entities
- Identify appropriate expertise (legal, institutional, biological)

Membership

- Membership is open to relevant organiz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objectives of the IAG

What is To Be Done?

Korea Maritime Institute

News Letters – a draft title "MPP KOREA"

Agenda at talks between DPRK and ROK

Public Awareness : nationwide questionnair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MPP Establishment

Next Meeting

Date

Venue Place : Seoul or ?

Agenda

Recommendation of new Members

7. 서해해양평화공원 1차년도 사업결과 요약(영문)

The Summary of the 1st Year Project

Background

There are a lot of instances worldwide of long-standing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wo or more adjoining areas that are divided by international or sub-national boundaries.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such areas have symbolic value for peaceful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s well as practical benefit for coordinated or joint conservation management. For instance, Rea Sea Marine Park in the Gulf of Aqaba (Gulf of Eilat) has been built to protect valuable coral reef ecosystem that attracts large number of visitors and associated coastal development in the cities of Eliat, Israel and Aqaba, Jordan. As for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has a unique trans-boundary area where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hared its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each other.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a rich heritage of natural resources and marine biodiversity because the region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OK and DPRK. However, the valuable ecosystems and local economy in the area have been deteriorated by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foreign vessels in recent years and are supposed to be adversely affected by unchecked and unmitigated human activities including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o strengthen collaborative cooperation so as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to lessen the politico-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ncrease the mutual economic benefits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region,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responsible for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on the marine sector and funded by the government of ROK, initially suggested a framework,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COMPAS) and its practical initiative, the designation of a Marine Peace Park (MPP) in 2003. In 2005,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by the government of ROK.

The establishment of a MPP of KOREA is a 5-year project. The work undertaken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activity was mainly devoted to the acquisition of the basic data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studies through the research on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depth interview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and the feasibility study by means of SWOT analysis. In addition, in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efforts were made to build international

1

partnerships with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and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project by holding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in September 2005.
During the 1st year of the project, outstanding outcomes are the adoption of the MPP initiative as a national marine policy of ROK, the establishment of common ground amo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keholders through the international workshop, building the groundwork for the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and data acquisition of natur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and conditions of the western transbounary costal area.

The Objectives of the 1st Year Project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precious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Korea. In particular, the main purpose of the first year of the MPP initiative i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in the need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region to effectively conserve marine and costal ecosystems and wisely use of their resources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under close collaboration with and support from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Research Methods Employed during the 1st Period

In order for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interested parties to understand long-term trends and cycles in conditions of the region and determine the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impacts of various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MPP initiative, essential data must be gathered. To make an acquisition of information and data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an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following materials and methods were employed.

A. Collection, coll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and data;
   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DPRK were mainly obtained from academic publications and materials published by foreign institut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dedicated to th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are all important information and data providers for pursuing the MPP project in Korea.
B. The in-depth interview with the local residents of the region;
   The goal of the in-depth interview was to deeply explore the local residents' point of view, feelings and perspectives on subjects regarding degradation of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regional tourism, household income,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in the region.
C. The comprehensive survey conducted by local residents and expert groups;
   144 local residents in the region and 67 experts from national institutes, civic group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via direct interview, e-mail, and fax.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overcome constraints in collecting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due to the transboundary are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local residents and experts' perception upon the MPP initiative and co-managed coastal area program between ROK and DPRK.*

D. Case-study: Red - Sea Marine Peace Park;
Binational Red Sea Marine Peace Park in the Gulf of Aqaba (Gulf of Eilat), an exemplary case, is benchmarked to in order to develop the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its own Marine Peace Park.

E. The feasibility study through SWOT analysis;
SWOT analysis, a useful method for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and information, was applied to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success of the establishment of a MPP of KOREA. Resources concerning natur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of the area and findings from the comprehensive survey are used as basic data for the analysis.

F. International workshop;
Through the international workshop,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has been strongly reaffirmed by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IUCN, UNESCO, PEMSEA, RSMPP, YSLME, and NOWPAP including local major stakeholders such as NGOs, industries, local communities.

E. The composition of domestic expert group;
Experts on intra-Korean cooperation were appointed as members of expert group. Expert group supported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and gave consultations about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 the meeting.

Results of the 1st Year Project

1. The status of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Korea

1.1. Natural Features

The transboundary area of the western sea in the Korean Peninsula is composed of more than 130 islands including main 5 islands, Bakryeong, Daecheong, Socheong, Yeonpyeong, and Udo and connected to major estuaries which are not artificially modified and preserving ecological integrity. It has not only a high tidal range (8M) and fast tidal current but also a plenty of small inlets for nursery and spawning of marine living resources, rich wetlands, and indented coastline with aesthetic value. According to environmental resources from the two Koreas, the quality of water in this area is maintaining 1~2mg/L in COD (Chemical Oxygen Demand) basis which is optimal for multipurpose uses (swimming, fishing, and breeding ground). In addition, environmental pollution events such as red-tide, eutrophication, and oil-spill have not been found yet.

Ecologically, this area has divers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such as black-faced spoonbills, Chinese egrets, cranes, and spotted seals. Especially, over 600 black-faced spoonbills are living in this area. At present, about 900~ 100 black-faced spoonbills are known to be alive in the world. And Baekryeong Island, one of major islands in the region, is the only habitat of spotted seals in Korea. In addition, this area is a very important fishing ground of blue crabs for the both Koreas' fisheries.

1.2. Socio-Economic Features

In the region, fishing is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common economy of the both Koreas' residents. In terms of the economic size of fisheries, this area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e other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ependency of the local residents on the fishing economy is very high and other industries don't much contribute to its local economy.

Meanwhile, in these days, foreign vessels are illegally intruding into the area and over-fishing fishery resources. Because of foreign vessels' over-fishing practices, ROK's fishing outputs were drastically decreased in 2004. Since the sea around the region plays a vital role for preserving fishing ground for blue crabs, occupying 60% of total catch in ROK, over-fishing by foreign vessels has harmfully impacted on the whole Korean fishery industries. As a result, the living condition of local residents *(about 291,292)* of the region in the ROK districts lags badly behind in that of the urban areas.

Along with over-fishing activities, land-based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Kaesung industrial complex, new Song-do city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Kimpo reclamation site are also supposed to threaten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productivity of fisheries in the area. Besides, military tension in the sea borderline between the two Koreas is another vital factor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the life of the local residents.

There are 4 provinces are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region. They are Gyeonggi-do, Incheon Metropolitan, Hwanghaenam-do, and Hwanhaebuk-do. Gyeonggi-do and Incheon Metroplotian belong to the ROK's territory, while Hwanghaenam-do and Hwanghaebuk-do belong to the DPRK's territory. In the light of changes of the land usage in these provinces, urban areas have been increased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of the land usage in the whole country. Moreover, the buffer zone which prevents pollutants from running into the sea has been drastically declined in Hwanghaebuk-do, Incheon Metropolitan, and Gyeonggi-do provinces. Additionally, the survey shows that the land of this area is densely utilized and the amount of polluters which will adversely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The size of mud-flats is 1,445㎢ which accounts for 26 % of total Korean Peninsula's mud-flats. So

far, DPRK has reclaimed 14% of mud-flats in the area. But the reclamation project has been temporarily postponed due to their land reallocation project. However, DPRK will resume the reclamation project as soon as the land reallocation project is completed. Also, the reclamation of mud-flats in Incheon Metropolitan and Gyeonggi-do has been considerably in progress owing to the land use planning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irport facilities and urban areas development activities.

2. The Survey Results of Resident and Expert Groups of ROK

2.1. Key Survey Findings: Resident Group

According to the survey, 99%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 total fish catch of blue crabs has been greatly decreased. 80% of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primary reason of the decrease is foreign vessels' illegal fishing.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blue crab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think that strengthening supervision against foreign vessels' bad fishing activities must be precedent in the first place. The question regarding the supervision body for foreign vessels, one-half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ROK and DPRK should jointly manage it.

Approximately, 58%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implementation of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program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31 % of respondents fully agreed with the objects of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program, but they are skeptical of its realization. In particular, 60% of respondents are afraid that military conflicts between ROK and DPRK could recur in the future.

The quest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program, 99% of respondents replied that each government of ROK and DPRK must access to issues actively and make consistent efforts to the issues. Besides, most of respondents said that environment in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has been deteriorated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And 49% of residents answered that natural resources and endangered species such as spotted seals and black-faced spoonbills should be protected unless the level of protection doesn't heavily impact on the local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36% of respondents hope that governmental investment will be effectively allocated to boost the local economy of the region.

2.2. Key Survey Findings: Expert Group

A lot of experts of ROK think that the western transbounary coastal area is the most politically uncertain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y foresee the politico-military tension in the area would remain continuously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two military collisions in 1999 and 2002 in the area, one –half of experts believe that it was mainly caused by the different perception of the two

Koreas on the sea borderline.

Besid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economic cooperation that can br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to the both Koreas must be sought with the first priority. In the maritime area, building cooperation in marine transportation, joint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nd harbor express service sectors can be achieved, majority of experts say.

57% of respondents showed positive views on the establishment of MPP in terms of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living conditions in the area. And 95 %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 establishment of MPP should be proceeding continually, although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encompass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ggravated in the future.

3. The Feasibility Study -SWOT Analysis

3.1. Strengths

In 2005, the MPP initiative has been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of ROK. It is a major breakthrough in protecting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promoting the peace, and assuring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Korea. Also,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local residents of the area and related experts are strongly supporting the idea of MPP.

Moreover, both ROK and DPRK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a variety of reserves in order to conserve marine environment. Recently, ROK is intensify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to designate coastal and marine protected area and DPRK has invested in developing their own national coastal strategies and enacting policy reforms to directly address their specific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3.2. Weaknesses

To implement the MPP initiative successfully,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is essentially required. However,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hasn't sufficiently built. Especially, there has been little cooperation experiences in the marine sector.

Besides, different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between the two Koreas, lack of public awareness of the MPP establishment,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sectors, and lack of 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the region (limited access to the DPRK's

information and data) are also weaknesses to obstruct the success of the MPP establishment in Korea.

3.3. Opportunities

The recent proliferat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transboundary land areas, keeping up with the diffusion of neo-liberal economic system will bring up DPRK's interest on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marine sector. The adoption of agreements on ROK-DPRK Navigation (2004) and Fishery-Cooperation (2005) is a significant bolster in realizing the peace in the area and enhanc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fishermen of the both Koreas.

Furthermore, more intensifie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ctivities over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ill smoothly lead DPRK's participation into the conversation table.

3.4. Threats

As the survey results show, 60% of the local residents believe that military conflicts surrounding the sea borderline will recur in the future. And majority of experts agree with the local residents' view on the likelihood of military collision re-occurrence in the region. Therefo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PP in Korea, well-coordinated efforts to reduce uncertainty of the security in the area must be thoroughly taken.

Meanwhile, continued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negatively affect the MPP program. In addition, increased inflow of pollutants into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due to the accelerated urbanization and human development activities has added to the extent of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e area.

After scrutinizing circumstances regarding the MPP establishment through the SWOT analysis,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are predominant over Weakness and Threat factors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Alth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6-party talks) over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t a deadlock, currently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in the economic sector and social-cultural exchange, and Korean people's strong will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in the Korean Peninsula brighten the future of the MPP establishment in Korea.

However, this project is very sensitive to the status of the two Koreas' future relationship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fore, it must be gradually driven forward in a long- term base, closely conside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Policy Directions and Work Plans for the 2nd Year Project

Gradual progress, sustaining, and nonpolitical approach throug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and building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re applied to project activities as basic principals. Along with these basic principals, following 7 policies are recommended to be accomplished in the next phase of the project by ROK, taking account of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surrounding conditions for the MPP establishment in the Korean Peninsula.

- Defining geographic scope designation of MPP
- Establishing zoning scheme for multiple-purpose uses
- Prepar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 Strengthening knowledge base &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 Integration of marine/coastal protected areas and DMZ issues
- Enhancing multi-stakeholders' participation
- Building international partnership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Being consistent with above policy directions, it is believed that practical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should be pursued for further research of the project. Specific work plans for the 2nd year are as follows:

- Foster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place the MPP initiative on the agenda for the inter-Korean meeting and multilateral approaches must be undertaken by form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working –level officials of DPRK
- Formulat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so a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PP initiative among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gain full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 Development of PR materials designed to show not only the ecological value of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Korea but also th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region
- Development of conflict - management strategies which are intended to mitigate or eliminate conflicts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region

8. 제1차 국제자문단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국제자문단회의 개최결과

The 1st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Meeting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Ⅰ. 국제자문단회의 개요 ····· 2

Ⅱ. 국제자문단회의 주요 내용 ····· 3

Ⅲ. 현장 답사 및 Closing 회의 ····· 5

Ⅳ. 향후 추진계획 ····· 6

해양정책연구본부

Ⅰ. 서해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국제자문단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6. 27(화)~29(목)

○ 장소 : 서울 메이필드 호텔 Violet Room

2. 참석자 현황 : 25여명

○ 국내참석자 : 11명

- 참석자 : 해양수산부,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부경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통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연구기관, UNESCO한국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 국제기구: 4명

- IUCN(세계자연보호연맹), UNESCO, NOWPAP(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YSLME(황해광역생태계관리프로그램)

3. 주요 행사

▷ 국제자문단회의 개최 : 6. 27(8:30~18:00)

- 국제자문단회의 의향서(Terms of Reference) 논의
- 1차년도 사업결과 발표 및 토론

▷ 서해연안 접경지역(강화도 석모도 및 강화갯벌센터 방문) 답사: 6. 28

- 국제기구: 4인, KMI 연구진 7인, 강대석 교수. 강화갯벌센터 사무국장(장동용) 등 13인

▷ 국제자문단 Closing 회의 : 6. 28(9:30~12:30)

- 국제기구 4인, KMI 연구진 6인, 강대석 교수(좌장) 등 11인

II. 국제자문단회의 주요 내용

□ 제1부: 국제자문단회의 안건승인

○ 국제자문단회의 안건 소개: 좌장
○ 국제자문단회의 안건 승인: 국제기구 및 국내 참석자

□ 제2부: 국제자문단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지침 논의

○ 국제자문단 의향서 (Terms of Reference) 구성요소 및 내용 소개: 좌장
○ 국제자문단 설립목적 설명: 좌장, KMI

□ 제3부: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1차년도 사업결과 발표

○ 서해해양평화공원 1차년도 사업결과 발표: KMI
○ 접경지역 보호에 대한 見관점: IUCN
○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 소개: UNESCO

□ 제 4부: 종합토론 및 시사점

○ 토론 참석기관: IUCN, UNESCO, NOWPAP, YSLME,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UNESCO 한국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일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인하대학교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국제기구: 국제자문단은 비공식적, 중립적, 독립적 기구이어야 함

○ 국제기구: 국제자문단은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아닌 자문그룹임
→ 서해해양평화공원 설립의 당사자인 북한의 참여가 없는 현시점에서 국제기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실무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프로젝

트의 효과적 발전 및 시행을 위한 전략적 정책 자문 및 기술 자문을 해주는 자문그룹 형태가 적합함

○ UNESCO:

- 서해해양평화공원의 설립을 위한 국제적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 주제와 관련된 국제기구들과의 자원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개발 및 시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강력한 상호적 운영 메커니즘이 필요함
- 서해해양평화공원 프로젝트 또한 국제적 규범과 메커니즘을 따라야함

○ IUCN:

- 국제기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향상시켜 남북한 대화채널을 마련해야함
- 궁극적으로 서해해양평화공원 설립 사업은 남북한 정부의 공동 승인(endorsement)을 추구해야함
-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방법으로 향후 국제자문단 회의를 제3국에서(중국 등) 개최

○ YSLME:

- 사업 시행 시 남북한 양자간 메커니즘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메커니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을 구성하는 단계별 계획들은 연속적인 순서(Sequence Order)로 진행되어야함
- 기본적인 북한과 남한의 정책 및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아가야함

○ NOWPAP:

- 북한의 참여가 필수 요건이므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함
- 정부기관 및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함

○ 대통령자문지속발전위원회: 북한이 서해해양평화공원 사업에 참여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임. 따라서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 단계를 먼저 밟은 후 과학적·환경적 접근단계를 밟아가는 전략이 필요함

○국립수산과학원: 남북한 교류협력은 아래의 3단계로 발전해 나아가야함
- 1단계: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식·정보 교류
- 2단계: 남북한 현장 공동조사
- 3단계: 1단계·2단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한국해양연구원: 현시점에서 북한과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음.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보호 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비무장지대(DMZ)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는 사업과 더불어 서해해양평화공원 사업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함

○인하대학교: 남북한 환경관련 지식·정보 공유가 필요함

○환경운동연합: 남북한 정부간 미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NGOs는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해양평화공원과 같은 남북한 공동사업에 NGOs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III. 현장 답사 및 Closing 회의

□ 현장 답사 개요

○ 국제기구 전문가, KMI 연구진, 좌장(강대석 교수), 강화갯벌 센터 사무국장(장동용) 등 12명 참여

○ 답사지역
- 서해연안 접경지역: 강화도 석모도
- 강화갯벌센터

○ 답사내용
- 서해연안 접경지역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 강화도 및 석모도 일대 조류서식지 관측(짙은 안개로 관측이 어려웠음)
- 한국전통 문화의 이해(석모도 내 보문사 답사)
- 강화갯벌센터 방문을 통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 국제자문단 Closing 회의

○ 개요
- 일 시 : 2006년 6월 29일 09:30~12:30
- 장 소 : 메이필드 호텔 소회의실
- 참석자 : 국제기구 4인, KMI 연구진 6인, 강대석 교수(좌장) 등 11인

○ 회의 내용
- 국제자문단 의향서(Terms of Reference) 세부내용 합의
  (국제자문단 비젼, 목적, 기능 및 역할, 운영 절차 등)

※ 세부내용은 첨부된 의향서 참조

IV. 향후 추진 계획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해양협력 관련 뉴스레터 제작 배포

○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협력 관련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정기 배포
- 영문 뉴스레터로 제작
- 뉴스기사 및 기타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성

□ 서해연안 접경지역 생태적 가치 및 정치군사적 현황 편람(국 · 영문) 제작

○ 해양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편람 제작
- 국문, 영문으로 요약형식으로 제작(2007년 상반기내 제작 · 배포)

□ **국제자문단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구축방안 마련**

○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방안 마련

- e-Communication Network 구축(list serve, Webpage)
- Teleconference의 적극적 활용

□ **국내 연구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강화**

○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구협력 강화

-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조사와 연계

※ 붙임 「제 1차 국제자문단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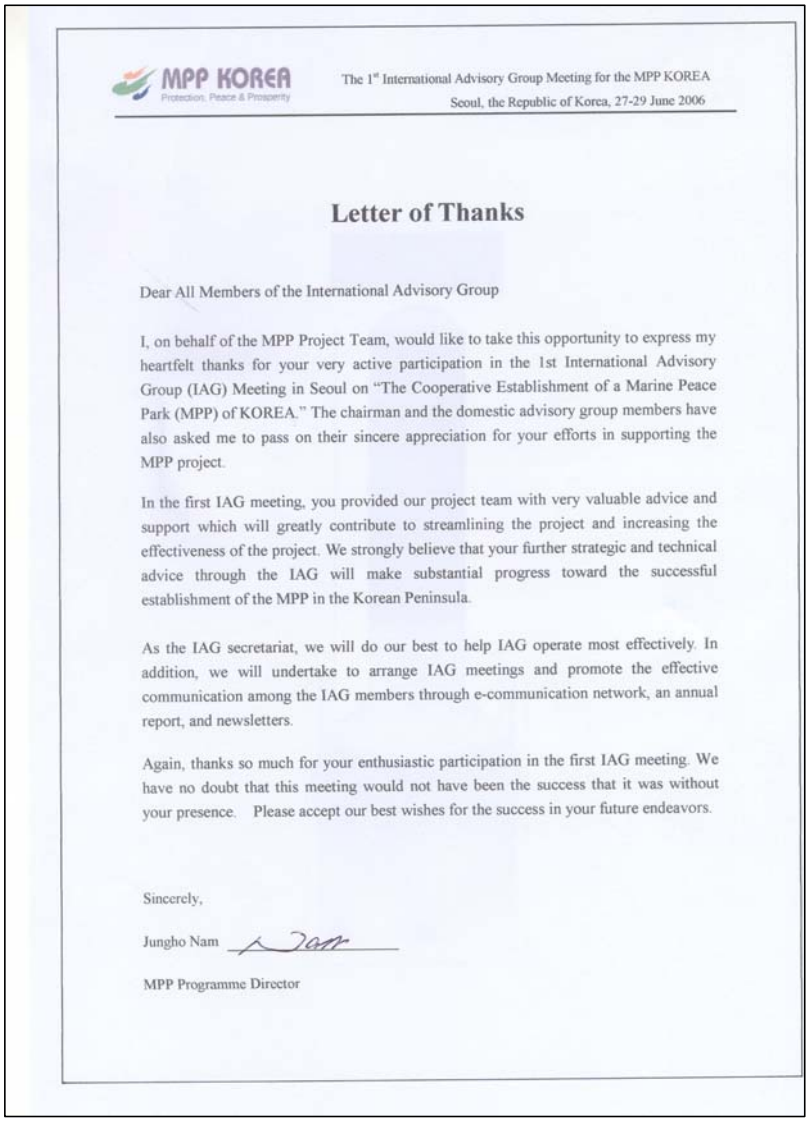






부록 J

감사편지(Thanks Letter)



MPP KOREA
Protection, Peace & Prosperity

The 1st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Meeting for the MPP KOREA
Seoul, the Republic of Korea, 27-29 June 2006

Letter of Thanks

Dear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 on behalf of the MPP Project Team,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for your very active participation in the 1st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Meeting in Seoul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The chairman and the domestic advisory group members have also asked me to pass on their sincere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in supporting the MPP project.

In the first IAG meeting, you provided our project team with very valuable advice and support which will greatly contribute to streamlining the project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We strongly believe that your further strategic and technical advice through the IAG will make substantial progress toward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MPP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IAG secretariat, we will do our best to help IAG operate most effectively. In addition, we will undertake to arrange IAG meetings and promote th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the IAG members through e-communication network, an annual report, and newsletters.

Again, thanks so much for your enthusiastic participation in the first IAG meeting. We have no doubt that this meeting would not have been the success that it was without your presence. Please accept our best wishes for the success in your future endeavors.

Sincerely,

Jungho Nam

MPP Programme Director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II)

2006年 12月 26日 印刷
2006年 12月 28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 正 煥

發行處 韓 國 海 洋 水 産 開 發 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